

#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연구

연구책임자 | 이상훈  
공동연구원 | 최동선  
김종욱  
류지은  
김남희



# 제 출 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5월 31일

-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연구기간 : 2024. 11. 8.~2025. 5. 31.
- 주관연구책임자 : 이상훈(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참여연구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연구원 : 최동선
  - 연구원 : 김종욱
  - 연구원 : 류지은
  - 연구원 : 김남희
  - 연구보조원 : 김영서

※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연구원은 실제 연구에 참여한 기관 및 참여자의 명의로 함

- 이 연구는 2024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연구되었음
- 이 연구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책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이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들의 개인 견해를 밝힘

# 목 차

## 제1장 서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1
제3절 연구 방법 .....	15

## 제2장 직업교육의 현황과 정책 대응\_21

제1절 직업교육의 현황 .....	23
제2절 직업교육의 정책 대응 동향 .....	35
제3절 소결 .....	72

## 제3장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의 역할\_77

제1절 저출생시대의 직업교육 환경 변화 .....	79
제2절 해외 직업교육체제의 미래사회 대응 동향 .....	110
제3절 소결 .....	144

## 제4장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체제의 현안과 미래 방향\_149

제1절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체제 현안과 미래 방향 도출 개요 .....	151
제2절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체제의 현안 진단 .....	159
제3절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의 미래 방향 탐색 .....	183
제4절 소결 .....	229

## 제5장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체제의 혁신 방안\_237

제1절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안 도출 개요 .....	239
제2절 직업교육체제의 주요 현안과 이상적 미래상 .....	242
제3절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과 정책 방안 .....	256
제4절 소결 .....	285

**제6장 결론 및 제언\_299**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 301  
제2절 한계 및 향후 과제 ..... 313

**참고문헌\_315**

**부록\_331**

1. 1차 델파이 조사지(중등) ..... 333  
2. 1차 델파이 조사지(고등) ..... 341  
3. 2차 델파이 조사지(중등) ..... 347  
4. 2차 델파이 조사지(고등) ..... 354  
5. 3차 델파이 조사지(중등) ..... 360  
6. 3차 델파이 조사지(고등) ..... 363

## 표 목차

〈표 1-1〉 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 유형별 입학생 수 및 비율 변화	4
〈표 1-2〉 2023년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 후 현황	5
〈표 1-3〉 포괄적 관점의 직업교육체제 구성요소 및 정의	12
〈표 1-4〉 직업교육 정책 동향 분석 대상	17
〈표 1-5〉 전문가 협의회 참여자 정보	19
〈표 2-1〉 직업교육의 광의/협의의 개념 구분	24
〈표 2-2〉 직업교육 혁신지구 현황	50
〈표 2-3〉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운영 현황(가나다순)	59
〈표 2-4〉 지역별 라이즈 기본계획의 대표(시그니처) 과제	71
〈표 3-1〉 평균 초혼 연령(2013~2023년)	81
〈표 3-2〉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82
〈표 3-3〉 기대수명 추계 결과(2022~2072년)	82
〈표 3-4〉 연령 및 연도별 출생연도	83
〈표 3-5〉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2023년 합계출산율	87
〈표 3-6〉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위상(2021년 기준)	90
〈표 3-7〉 산업 부문별 AI 강도	93
〈표 3-8〉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수와 비중	95
〈표 3-9〉 학력수준별 비정규직 근로자 수	95
〈표 3-10〉 기업규모별 일자리 수 현황	97
〈표 3-11〉 기업규모별 - 연령대별 일자리 수 현황	98
〈표 3-12〉 직능수준별 미충원 인원(2023년 3분기 기준)	99
〈표 3-13〉 주요 플랫폼 종사자 직종별 규모	100
〈표 3-14〉 플랫폼 종사자 근무 형태별 규모	101

〈표 3-15〉 플랫폼 종사자 학력 수준별 규모 .....	101
〈표 3-16〉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	103
〈표 3-17〉 2025년 비전문 인력(E-9) 업종별 도입 인원 .....	104
〈표 3-18〉 AI 시대의 교육적 어젠다 .....	104
〈표 3-19〉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역량의 주요 항목과 핵심 내용 .....	108
〈표 4-1〉 전문가 심층 면담 참여자 정보 .....	152
〈표 4-2〉 전문가 심층 면담 주요 질문(중등직업교육) .....	153
〈표 4-3〉 전문가 심층 면담 주요 질문(고등직업교육) .....	154
〈표 4-4〉 중등직업교육 주요 현안(초안) .....	159
〈표 4-5〉 고등직업교육 주요 현안(초안) .....	175
〈표 4-6〉 중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초안) .....	183
〈표 4-7〉 고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초안) .....	188
〈표 4-8〉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동등성(초안) .....	192
〈표 4-9〉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다양성(초안) .....	202
〈표 4-10〉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전문성(초안) .....	208
〈표 4-11〉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유연성(초안) .....	214
〈표 4-12〉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연계성(초안) .....	222
〈표 5-1〉 전문가 델파이 추진 내용 .....	240
〈표 5-2〉 전문가 심층 면담 참여자 정보 .....	240
〈표 5-3〉 중등직업교육 주요 현안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	242
〈표 5-4〉 중등직업교육 주요 현안(최종안) .....	244
〈표 5-5〉 중등직업교육 주요 현안의 중요도-시급도 .....	245
〈표 5-6〉 고등직업교육 주요 현안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	247
〈표 5-7〉 고등직업교육 주요 현안(최종안) .....	249
〈표 5-8〉 고등직업교육 주요 현안의 중요도-시급도 .....	250
〈표 5-9〉 중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	252

〈표 5-10〉 중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최종안) .....	253
〈표 5-11〉 고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	254
〈표 5-12〉 고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최종안) .....	255
〈표 5-13〉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동등성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257
〈표 5-14〉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동등성(최종안) .....	258
〈표 5-15〉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다양성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259
〈표 5-16〉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전문성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261
〈표 5-17〉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전문성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	262
〈표 5-18〉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전문성(최종안) .....	262
〈표 5-19〉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유연성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263
〈표 5-20〉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유연성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	264
〈표 5-21〉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유연성(최종안) .....	264
〈표 5-22〉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연계성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	266
〈표 5-23〉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연계성(최종안) .....	266
〈표 5-24〉 직업교육체제 정책 방안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	270
〈표 5-25〉 직업교육체제 정책 방안에 대한 3차 델파이 조사 결과(중등직업교육) ···	276
〈표 5-26〉 중등직업교육의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정책 방안 우선순위 ···	279
〈표 5-27〉 직업교육체제 정책 방안에 대한 3차 델파이 조사 결과(고등직업교육) ···	281
〈표 5-28〉 고등직업교육의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정책 방안 우선순위 ···	284

## 그림 목차

[그림 1-1] 직업교육 특징 구분을 위한 개념틀(CEDEFOP, 2017) .....	8
[그림 1-2] 저출생에 대응하는 직업교육체제의 미래 방향(안) .....	13
[그림 1-3] 연구 절차 .....	15
[그림 2-1] 고교 및 대학 단계의 직업교육 비중 .....	25
[그림 2-2] 직업계고 유형 변동 추이(2012~2023년) .....	26
[그림 2-3] 직업계고 및 일반계고 학생 수 변화 추이: 비율 및 증가율 .....	27
[그림 2-4] 15~24세 인구 대비 직업교육 참여율 비교 .....	28
[그림 2-5] 교과군별 직업계열 학과의 학생 수 변화 추이(2008~2022년) .....	31
[그림 2-6] 전공 분야별 전문대학 학과의 재학생 수 변화 추이(2008~2022년) .....	32
[그림 2-7] 직업교육 이수자의 고용률 및 실업률: 일반교육 이수자 등과의 비교 .....	33
[그림 2-8] 직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진로 현황 변화 추이 .....	34
[그림 2-9] 제1~18차 지정 마이스터고 현황 .....	36
[그림 2-10]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개요 .....	38
[그림 2-11] 2024년 일학습병행 성과관리 체계 .....	44
[그림 2-12] 직업교육 혁신지구 개요도 .....	48
[그림 2-13]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 방향 .....	51
[그림 2-14]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추진 방향 .....	53
[그림 2-15] 마이스터대 교육과정 운영 .....	57
[그림 2-16]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추진 방향 .....	61
[그림 2-17]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추진 방향 .....	66
[그림 2-18]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개요 .....	70
[그림 3-1] 출생아 수 추이 변화(1970~2024년) .....	80
[그림 3-2] 인구 피라미드 변화 .....	83
[그림 3-3] 전국 청년인구 비율 변화 .....	85

[그림 3-4] 도시경제 기반 모형 .....	86
[그림 3-5] 지방 인구 유출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국가 인구 감소 .....	87
[그림 3-6]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GDP 변화(1970~2023년) .....	88
[그림 3-7] 산업 부문별 GDP 비율 .....	89
[그림 3-8] 전체 GDP 대비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 .....	90
[그림 3-9] 국가별 AI 분야 민간 투자 현황(2022년 기준) .....	92
[그림 3-10] 2025~2030 비즈니스 변화를 이끄는 기술 동향 .....	94
[그림 3-11]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추이(2015~2024년) .....	96
[그림 3-12] 기업규모 간 일자리 이동 현황(2021→2022년) .....	98
[그림 3-13] 연도별 성인(25세 이상 64세 미만) 교육 및 훈련 참여율(EU) .....	119
[그림 3-14] COVID-19 전후 디지털화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평균 비중 .....	130
[그림 3-15] EU 국가의 VET 졸업자 중 일 기반 학습 경험 비중 .....	141
[그림 4-1] 포괄적 직업교육체제 모형 .....	156
[그림 4-2] 직업교육체제 현안과 미래 방향 도출을 위한 분석틀 .....	158
[그림 5-1] 중등직업교육 주요 현안의 중요도-시급도 .....	246
[그림 5-2] 고등직업교육 주요 현안의 중요도-시급도 .....	251
[그림 5-3]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중등직업교육의 혁신 방향 .....	288
[그림 5-4]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중등직업교육의 정책 로드맵 (단기 추진 과제) .....	289
[그림 5-5]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중등직업교육의 정책 로드맵 (장기 추진 과제) .....	290
[그림 5-6]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고등직업교육의 혁신 방향 .....	293
[그림 5-7]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고등직업교육의 정책 로드맵 (단기 추진 과제) .....	294
[그림 5-8]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고등직업교육의 정책 로드맵 (장기 추진 과제) .....	295



## 요 약

### 1. 서론

- 본 연구는 저출생과 인구구조의 변화, 기술 전환 등 급변하는 사회적·경제적·교육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의 구축을 위한 혁신 로드맵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생산가능인구 축소는 직업교육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입학생 수 감소, 취업률 저하, 미취업자 증가 등의 지표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그리고 기술 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할 때, 직업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저출생시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직업교육체제의 구축 필요성이 높음.
- 이를 위해 직업교육의 현황 및 직업교육체제를 진단하고 직업교육체제 변화 방향을 탐색함으로써 직업교육체제 혁신 로드맵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문헌 분석, 해외 사례 조사, 전문가 심층 면담, 델파이 조사, 전문가 협의회를 수행함.
  - 특히 중등직업교육 전문가 10명, 고등직업교육 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과 각각 20명과 17명이 참여한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직업교육체제 관련 주요 현안, 이상적 미래상, 개선 방향성, 정책 방안을 탐색하였음.

### 2. 직업교육의 현황과 정책 대응

#### 가. 직업교육의 현황

- 우리나라 직업교육체제의 주요 변화는 규모의 축소라 할 수 있음.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중등 및 고등 단계의 직업교육 학생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전반적인 학령인구 감소 등의 환경 변화 속에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다변화에 따른 인력수요 변화에 의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더불어 중등직업교육의 경우 2005년의

직업교육 혁신 방안에 이어 2010년 이후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및 선취업-후진학 정책 등의 일련의 정책을 기반으로 노동시장 이행 기능 확충 등 정예화를 강조하였다는 정책적 영향이 있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러한 환경적 변화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학령인구 감소에 비해 더 빠른 규모의 축소 현상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직업교육의 양적 규모 감소 상황에서 우리의 특성을 기반으로 직업교육의 독자성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
- 직업교육의 현황으로서 학과 구성을 살펴보면, 직업계고와 전문대학에는 전통적으로 직업교육을 통해 인력을 양성해 온 산업 전반의 범용 인력 양성 분야에 많은 학생이 분포하고 있음. 최근에는 간호·보건 및 일부 디지털 관련 분야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경영·금융,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는 재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임. 특히 디지털 전환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직업계고의 정보·통신 분야는 축소되고 있으며, 전문대학은 간호·보건 분야 중심의 빠른 성장세가 특징적임.
- 직업교육 이수자의 노동시장 이행 현황을 해외 국가와 비교해 보면, 우리의 직업교육 역시 청소년 등의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성과를 보여 왔으며, 직업교육 이수자의 고용률 및 실업률이 일반교육 이수자보다 양호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함.

#### 나. 직업교육의 정책 대응

-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그간의 직업교육 정책 대응을 살펴보면, 중등직업교육 영역에서는 현장성 강화 전략, 선취업-후학습 경로 정착 전략, 지역인재 육성 강화 전략이 추진되었으며, 고등직업교육 영역에서는 전문대학의 실무인재 양성기능 강화 전략,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전략, 고등직업교육의 지역혁신 주체 역할 강화 전략을 중심으로 각종 재정지원 사업이 추진되었음.
-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교육 정책은 중등과

고등의 교육 단계별로 다른 전략과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영역별 정책은 대응 방향과 실천 방식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임.

- 먼저 중등직업교육 정책은 직업적인 교육과정 및 제도 운영 개선에 초점을 둔 하향식 접근의 성격이 강하였음. 즉 현장성 강화, 선취업-후학습 경로 구축, 지역인재 육성 등 3가지 전략 축을 중심으로 직업계고 자체의 교육내용과 운영 방식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통해 직업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방향성을 보여줌.
- 고등직업교육 정책은 재정지원과 구조개혁을 통한 기능 강화 및 체제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음. 실무인재 양성,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지역혁신 거점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주요 축으로 하여, 전문대학을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교육공급자이자 지역사회의 전략적 자원으로 전환하려는 방향성을 보임. 특히 최근의 RISE 체계 등은 전문대학으로 하여금 지역산업 혁신과 연계된 교육 생태계 조성의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기능 재정립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이러한 정책 차이는 각 단계가 직면한 과제와 기능적 정체성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이를 통해 향후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의 구조적 연계성과 체계적 조정이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음.

### 3.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의 역할

#### 가. 저출생시대의 직업교육 환경 변화

-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직업교육의 특성상, 저출생시대의 직업교육의 역할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구조와 기술환경의 변화, 노동시장과 일자리의 변화, 교육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직업교육 환경 변화를 분석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인구, 산업, 노동, 교육 등 다층적인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 먼저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직업교육은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로 인한 공급 기반 약화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특히 직업계고와 같은 학교 기반

직업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인구 유출 역시 지역 기반 직업교육의 지속가능성에도 위협이 되고 있었음. 따라서 직업교육은 지역 정주성과 산업 연계성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설계가 요구되며, 정년 연장과 고령자 고용 확대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고령 인력에 대한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둘째, 직업교육은 산업구조와 기술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저성장 국면 진입, 제조업 구조의 전환, 디지털 기반 고생산성 서비스업 확대에 직면하고 있었으며, 이는 직업교육의 직무 및 산업 연계성 재편을 요구하고 있었음. 특히 제조업은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의 주축이나 글로벌 공급망 변화, 노동력 부족, 생산성 저하 등의 복합적 이슈에 따라 디지털 전환과 연계한 고속련 인력 양성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셋째, 노동시장과 일자리의 변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로 심화되고 있었으며,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확산됨에 따라 직업 안정성과 소득 안정성이 낮은 새로운 노동 형태가 등장하고 있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국내 부족인력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의 적극적 유입이 확대되며 저숙련 인력 비중이 증가하고 있었음. 최근에는 첨단 산업 분야에도 외국인 근로자 및 전문인력 확보가 추진됨에 따라 직업교육의 역할과 입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마지막으로, 교육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이라는 트윈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내용과 방식의 변화와 함께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단위학교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또한 횡단적 역량과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역량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확대되면서 직업교육 교사의 전문성 개념 역시 달라질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 나. 해외 직업교육체제의 미래사회 대응 동향

- 직업교육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 만큼, 해외 직업교육체제의 미래사회 대응 동향을 확인함으로써 직업교육체제에 관한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다양한 국가의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직업교육체제 구축 방향을 검토하여

직업교육의 위상 제고 및 평생학습 체계 구축, 직업교육의 유연성과 개인화 강화, 기술 혁신 대응을 위한 디지털 인력 양성, 일 기반 학습과 산학협력 확대 등 4가지 대응 동향을 정리하였음. 즉 해외 주요국들이 저출생, 고령화, 기술 혁신과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교육체제를 다층적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이는 곧 직업교육이 더 이상 청년층의 초기 노동시장 이행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친 역량 개발과 경력 전환을 지원하는 기반 체제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함.

- 이러한 해외 직업교육체제의 미래사회 대응 동향을 통해 직업교육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학력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학습자 중심의 유연한 경로 설계와 개인 맞춤형 역량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더불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합한 직업교육의 디지털화를 가속해야 하며, 직업교육과 산업 간 경계를 허무는 실질적 산학협력 구조를 토대로 직업교육체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 4.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체제의 혁신 방안

□ 본 연구의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의 혁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과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업교육체제의 주요 현안, 이상적 미래상, 개선 방향성,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 타당화하는 과정을 거쳤음.

- 이 결과는 궁극적으로 이상적 미래상, 주요 현안, 개선 방향성을 중심으로 하는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향 모형과 정책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로드맵으로 구체화되었음. 혁신 방향이 큰 틀에서 직업교육체제의 개선을 위한 장기적 여정의 출발점과 지향점, 방향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책 로드맵은 이러한 여정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가. 중등직업교육체제의 혁신 방안

□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중등직업교육의 혁신 방향은 다음 [그림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그림 2]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중등직업교육의 혁신 방향

<b>미래상</b>	<b>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및 직무역량 형성을 중심으로 산업수요와 연계된 다양한 성장경로를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중등직업교육</b>					
<b>핵심 키워드</b>	직무역량 기반 진로설계 중심	직무 연계형 학생 성장 중심	유연한 경로 기반 직업이행 지원	경력 생애설계 및 지속 성장 지원	포용적 직업교육 보장체계	지역사회 협력 기반 공동 시스템

<b>개선 방향성</b>	[동등성] 직업교육의 동등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전문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유연성] 학생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적 진로설계 및 학습경로 다각화	[연계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 생태계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다층적 연계 및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li> <li>▶ 학력·경력·자격의 사회적 인정 및 동등성 확보</li> <li>▶ 직업교육 성장경로 확보 및 사회진출 기회 확대</li> <li>▶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성과 인정 강화</li> <li>▶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교육 혁신 학과 지원 강화</li> <li>▶ 국가전략산업 및 뿌리산업 분야의 직업교육 지원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취업 수요 기반의 직업교육 개편 및 운영 전문성 강화</li> <li>▶ 직업교육기관의 내실화를 통한 복합적 교육 지원 기능 강화</li> <li>▶ 직업교육 전문성을 위한 교원 역량 개발 기반 마련</li> <li>▶ 직업교육의 전문성 및 혁신성 강화를 위한 유연한 교육 운영 추진</li> <li>▶ 소규모 학교의 특성화 및 인력 양성 기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 특성과 진로목표 기반의 유연한 직업교육 체계 구축</li> <li>▶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및 성장경로 가시화</li> <li>▶ 선취업 후학습 제도의 내실화 및 경로 다양화</li> <li>▶ 고졸자 취업경로 확대 및 안정적 진입과 정착 지원 강화</li> <li>▶ 직업교육 학습자의 다양성 확대와 평생 직업교육 기능 강화</li> <li>▶ 직업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접근 여건 개선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지자체, 기업)의 역할 강화</li> <li>▶ 직업교육기관의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 및 지역사회 기여 확대</li> <li>▶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의 연계 강화 및 역할 명확화</li> <li>▶ 직업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li> </ul>

<b>주요 현안</b>	거시적·구조적 현안	학교운영·교육과정 현안	학교 내부 구성원 현안	학생 성장경로 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교육의 선호도 감소와 지속가능성 위기</li> <li>▶ 직업교육의 거점화 전략과 구조적 난제</li> <li>▶ 직업계고의 인력양성 분야 불균형과 산업수요 미스매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편적 직무역량 함양 교육과 구체적 직무기술 함양 교육의 딜레마</li> <li>▶ 직업교육과정의 유연성 부족과 산업현장 대응의 한계</li> <li>▶ 현장실습 운영의 구조적 한계와 교육적 활용 제약</li> <li>▶ 학교-기업 협력의 불균형과 직업교육 왜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계고 교사의 역할 과부하와 수업 전문성 침식</li> <li>▶ 직업계고 입학생의 누적된 기초학력부진과 학습 결손 심화</li> <li>▶ 심리·사회적 취약 학생 증가와 직업교육 기능 약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계고의 진학 딜레마: 취업 우선 원칙과 진학 수요 사이의 괴리</li> <li>▶ 직업계고 학생의 진로설계 미흡과 성장경로 단절 문제</li> </ul>

- 먼저 중등직업교육의 주요 현안은 거시적·구조적 현안, 학교운영·교육과정 현안, 학교 내부 구성원 현안, 학생 성장경로 현안으로 구분됨. 이는 궁극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의해 유발되는 중등직업교육 규모 감소의 복합적인 원인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의미함.

- 이러한 현안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하는 중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은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및 직무역량 형성을 중심으로 산업수요와 연계된 다양한 성장경로를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으로 규정되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핵심 키워드가 제시되었음.
  - 최종적으로 이러한 현안과 미래상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동등성, 전문성, 유연성, 연계성의 4가지 개선 방향성 아래 다양한 전략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 중등직업교육체제의 혁신 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은 다음과 같이 정리됨.
- 정책 로드맵은 크게 단기 추진 과제와 장기 추진 과제로 구분되었으며, 각 과제는 우선 추진 과제와 보완 과제로 구분되었음.
  - 단기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보면, 동등성 측면에서 중등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초중학교 대상 직업교육 인식 개선 등이 우선 추진될 필요가 있었음. 전문성 측면에서 중등직업교육에 인프라 구축에 대한 재정 투자의 확대 및 내부 구성원의 역량 개발이 필요하였으며, 기관 차원에서의 선도모델 질 관리 강화가 필요하였음. 유연성 측면에서 고졸자를 위한 취업처 발굴과 같은 전통적 선취업 정책과 함께 후학습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였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특성의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 모델의 도입이 필요함이 확인되었음. 연계성 측면에서 지역과 연계한 직업교육, 그리고 이를 위한 지역사회의 책무성 강화와 연계 협력 강화가 필요하였으며, 이는 중앙정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음.
  - 장기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보면, 먼저 동등성 측면에서 직업교육 성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의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변화, 전문성 측면에서 학교 내 다양한 전문가 배치, 유연성 측면에서 고졸 취업자의 취업, 정주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 연계성과 관련하여 지역에서의 직업교육 졸업자에 대한 정주 지원, 지역 맞춤형 교육 운영 등은 효과성은 높으나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단기간에 직업교육기관 내부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정책 방안들로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보완 과제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과제들에 비해 효과성이 낮은 정책 방안들로, 향후 논의 및 연구를 통해 보완 및 개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을 의미함.

### 나. 고등직업교육체제의 혁신 방안

□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고등직업교육의 혁신 방향은 다음 [그림 2]와 같음.

[그림 3]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고등직업교육의 혁신 방향

<b>미래상</b>	<b>다양한 학습자(학령인구, 성인학습자, 외국인 등)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산업수요 기반 맞춤형 고등직업교육</b>					
<b>핵심 키워드</b>	지역 기반 인재 양성	평생직업교육 강화	학습자 맞춤형 직업교육	산업수요 기반 고숙련 인재 양성	산업 변화 선제 대응	사회통합 및 개방성

<b>개선 방향성</b>	[동등성] 직업교육의 동등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전문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유연성] 학생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적 진로설계 및 학습경로 다각화	[연계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 생태계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다층적 연계 및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li> <li>▶ 학력·경력·자격의 사회적 인정 및 동등성 확보</li> <li>▶ 직업교육 성장경로 확보 및 사회진출 기회 확대</li> <li>▶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성과 인정 강화</li> <li>▶ 산·산업·신기술 분야 직업교육 혁신과 지원 강화</li> <li>▶ 국가전략산업 및 뿌리산업 분야의 직업교육 지원 확대</li> <li>▶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학위구조 및 교육체계 개편</li> <li>▶ 전문대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재정 지원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취업 수요 기반의 직업교육 개편 및 운영 전문성 강화</li> <li>▶ 직업교육기관의 내실화를 통한 복합적 교육 지원 기능 강화</li> <li>▶ 직업교육 전문성을 위한 교원 역량 개발 기반 마련</li> <li>▶ 직업교육의 전문성 및 혁신성 강화를 위한 유연한 교육 운영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 특성과 진로목표 기반의 유연한 직업교육 체계 구축</li> <li>▶ 성인·다문화 학습자 대상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li> <li>▶ 전문대학 체제 다양화 및 실무 중심 학위 체계 고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지자체, 기업)의 역할 강화</li> <li>▶ 직업교육기관의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 및 지역사회 기여 확대</li> <li>▶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의 연계 강화 및 역할 명확화</li> <li>▶ 대학 간(일반대학, 전문대학 등) 수직·수평적 연계를 통한 성장경로 확보</li> </ul>

<b>주요 현안</b>	거시적·구조적 현안	전문대학 정체성과 고등교육체제 변화	학교운영·교육과정 현안	지역사회 연계·협력 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학자원 감소로 인한 경영난과 교육의 질 하락의 악순환</li> <li>▶ 수직적 진학 선택에 따른 지방 전문대학의 위기 심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 교육 영역 중첩 및 고등교육 위계화 현상 심화</li> <li>▶ 비전통적 학습자 및 비학위 과정 증가에 따른 전문대학의 정체성 재정립 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학자원 확보 중심의 학과 개편에 따른 지역 산업 인력 양성 기능 약화</li> <li>▶ 고숙련 직업교육과정의 사회적 인식 및 타당성 정립 부족에 따른 수준별 학위과정 정착 지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ISE 체계 내 전문대학의 역할 인식 부족 및 지역협력 체계의 한계</li> </ul>

- 먼저 고등직업교육의 주요 현안은 거시적·구조적 현안, 전문대학 정체성과 고등교육체제 변화, 학교운영·교육과정 현안, 지역사회 연계·협력 현안으로 구분되었음. 고등직업교육 역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경영난과 교육의 질 하락의 문제를 시작 지점으로 촉발되는 다양한 문제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산업 인력 양성 기능 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 강화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지적되었음.
  - 이러한 현안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하는 고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은 '다양한 학습자(학령인구, 성인학습자, 외국인 등)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산업수요 기반 맞춤형 고등직업교육'으로 설정하였으며, 6가지 핵심 키워드로 구체화되었음.
  - 최종적으로 이러한 현안과 미래상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중등직업교육과 동일하게 동등성, 전문성, 유연성, 연계성의 4가지 개선 방향성을 설정하였고, 해당 방향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였음.
- 고등직업교육체제의 혁신 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은 다음과 같이 정리됨.
- 단기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보면, 동등성 측면에서 직업교육에 대한 비전과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전문성 측면에서 학교의 인적·물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이 확인되었음. 더불어 유연성을 위해서 교육과정의 유연화와 함께 고숙련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학위 체계 고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연계성을 위해서는 전문대학과 지역 연계 사업 및 프로그램의 지원 필요성과 더불어 중등직업교육과의 연계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직업교육 인식 개선 사업 추진과 직업교육법 제정 등 사회적·제도적 차원의 개선이 동등성 차원에서 필요하며, 교원 임금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전문대학의 전문성 확대, 직업교육 이수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유연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연계성 측면에서 지자체의 직업교육 책무성 강화와 이를 위한 중앙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였음.
  - 이러한 정책 방안들은 많은 부분에서 중등직업교육과 유사한 성격을 보였음. 대표적으로 동등성 확보를 위한 직업교육의 사회적 위상 확보와 제도적 기반 강화, 전문성 제고

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형성 지원 확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직업교육체제의 협력 체계 강화 등에서 상호 유기적 연관성을 갖고 있었음.

## 5.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의 결과는 직업교육체제가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 무엇인지, 이러한 현안을 극복하고 도달해야 하는 이상적 미래상은 무엇인지, 이 미래상에는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직업교육체제의 현안(무엇을 해결해야 하는가?):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체제의 공통된 현안은 저출생으로 인한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규모 축소였지만, 이는 단순히 정량적 차원의 위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업교육기관의 정체성과 운영 측면에 이르기까지 내부적 변화를 불러오는 간접적 영향까지 파생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안이 확산되고 있었음.
  - 직업교육체제의 이상적 미래상(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직업교육체제는 학습자 특성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유연한 진입 및 이행 경로 보장,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수요 대응력 강화, 비전통적 학습자와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공공성 기반의 교육 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 등 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과정과 인프라 마련을 핵심 방향으로 지향해야 함.
  -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 및 정책 방안(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동등성, 전문성, 유연성, 연계성에 기초한 개선 방향성과 정책 방안은 직업교육체제의 정당성과 기반 마련, 인적·물적 인프라 강화를 통한 내실화, 다양한 학습자의 진입과 직업교육을 통한 경력설계 지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확장성 강화로 요약할 수 있음.
  - 직업교육체제 전환을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무엇이 변화의 걸림돌인가?): 직업교육체제 개선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은 법적·제도적 기반, 정책 주체와 거버넌스, 사회적 인식과 위계적 구조의 문제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직업교육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요구됨.

- 결론적으로, 직업교육체제가 저출생시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렴적이고 닫힌 경로가 아닌, 발산적이고 확산적인 교육체제로서 의미를 확보해야 하며, 경력경로의 장기적 관점에서 육성되어 다양한 직업적 삶을 보장하는 포괄적 교육체제로 전환해야 함.

# S U M M A R Y

## 1. Introduction

- This study seeks to establish an innovation roadmap and propose policy enhancements for constructing a sustainable vocational education system capable of responding to the rapidly evolving social, economic, and educational landscape shaped by declining birth rates, demographic shifts, and technological transformations.
  - The decline in school-age and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s—driven by low fertility—has led to a contraction in vocational education, as seen in decreased enrollment and employment outcomes. However, with ongoing demographic shifts and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the strategic importance of vocational education is growing, underscoring the urgent need to establish a resilient system adapted to the realities of the low birthrate era.
  
- To this end, the study conducted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 current status of vocational education and explored pathways for reform. Based on this analysis, it formulated a forward-looking innovation roadmap and set of improvement measures, drawing on literature reviews, international case studies, expert interviews, Delphi surveys, and expert panels.
  - In particular, the study conducted structured interviews with 15 experts and three rounds of Delphi surveys with 37 participants, helping to identify key challenges, define an aspirational vision, and develop feasible strategies for vocational education reform.

## 2. Current Status of Vocational Education and Policy

### A. Status of Vocational Education

- A major trend observed in the Korean vocational education system is the reduction

in its overall scale. Since the early 2000s, both secondary and higher vocational education sectors have experienced a consistent decline in student enrollment.

- This phenomenon can be interpreted as the result of structural shifts in labor market demands brought about by the overall decrease in school-age population and the increasing sophistication and diversification of the industrial structure. In the case of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the emphasis on quality enhancement—such as policies promoting work first-then to college pathways—must also be taken into account.
- However, even when factoring in these structural changes, the pace of decline in vocational education enrollment has been steeper than that of the school-age population itself. As such, there is a growing need to reinforce the distinct identity of vocational education in Korea through targeted strategies that build on its unique characteristics.
- In terms of program composition, vocational high schools and junior colleges in Korea have traditionally concentrated on supplying talent for general industrial sectors. Recently, however, the proportion of students in fields such as nursing, healthcare, and select digital domains has been increasing, while enrollment in business, finance,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has been declining. Notably, despite the growing emphasis on digital transformatio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field in vocational high schools has been shrinking, while junior colleges are showing rapid growth in the nursing and healthcare sectors.
- When compared internationally, Korea's vocational education system has played a positive role in expandi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youth and facilitating transitions into the labor market. Vocational education graduates often exhibit higher employment rates and lower unemployment rates relative to those from general education pathways.

#### B. Policy Responses to Vocational Education

- In response to demographic decline and technological change, vocational education policies have been tailored separately to the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levels. For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key strategies have included strengthening practical training, establishing work first-then to college pathways, and enhancing

local talent development. For higher vocational education, strategies have focused on strengthening the practical training function of junior colleges, promoting lifelong vocational learning, and reinforcing their role as agents of regional innovation.

- These strategies have exhibited distinct characteristics at each education level in terms of policy orientation and implementation methods.
  -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policy has tended to adopt a top-down approach centered on systemic improvements to curricula and institutional operations. These efforts have focused on three main areas: enhancing workplace relevance, building work first-then to college pathways, and cultivating regional human resources, with the overall aim of boosting the effectiveness of vocational high schools.
  - Conversely, higher vocational education policy has emphasized restructuring and investment through financial support initiatives. The main objectives have been to reposition junior colleges as comprehensive providers of education for diverse learners and strategic assets within their local communities. Recent developments such as the RISE initiative (Regional Innovation System for Education) reflect efforts to redefine the functional role of junior colleges within a regionally integrated educational ecosystem.
- These policy divergences stem from the differing challenges and institutional identities associated with each education level. Going forward, the structural linkage and systemic coordination between secondary and higher vocational education must be prioritized as a core agenda in building a sustainable vocational education system.

### **3. The Role of Vocational Education in the Era of Low Birth Rates**

#### **A. Changes in the Vocational Education Environment**

- Given the nature of vocational education to be highly responsive to socio-economic shifts, it is essential to examine the broader environmental chang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role vocational education must play in the era of low birth rates. This study analyzes environmental shifts in four major domains: demographic structure,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landscape, labor markets and employment, and the broader educational environment. A holistic understanding of these multi-layered dynamics is vital for redefining the role of vocational education.

- In terms of demographics, vocational education is under increasing pressure from a shrinking school-age population and rapid aging—especially in school-based institutions like vocational high schools. Regional disparities caused by urban concentration and rural depopulation further threaten local programs, calling for policies that integrate settlement patterns and industrial needs. As discussions around extending retirement and senior employment expand, the need for a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framework is also growing.
  - From an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standpoint, vocational education must adapt to low growth, manufacturing transition, and the rise of digital high-productivity service sectors. These shifts demand that training systems be realigned with changing job and industry demands. Although manufacturing remains vital to Korea’s economy, the growing need for high-skilled workers amid labor shortages and global supply chain changes highlights the urgency of linking vocational education with digital transformation.
  - Regarding labor markets and employment, Korea’s dual labor market—with widening gaps between regular/irregular and large/small firms—is becoming more entrenched. New digital platform-based jobs, often lacking in security, are expanding. With domestic labor shortages, reliance on foreign labor is increasing—even in high-tech sectors—reshaping the expected role of vocational education.
- In terms of educational environment, the twin transitions of digital and green innovation are demanding significant changes in curricula and pedagogical methods. Amid declining student populations, individual schools must enhance competitiveness. There is also growing international emphasis on transversal competencies and employability skills, which necessitates a redefinition of vocational teachers’ professional roles and capabilities.

#### B. Global Trends in Vocational Education in Response to Future Societies

- Since these environmental shifts are not unique to Korea, examining global trends provides valuable insights into how vocational education systems can evolve. This

study identifies four key global trends: enhancing the stature of vocational education and embedding it in lifelong learning systems; promoting flexibility and personalization; developing digital talent to respond to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expanding work-based learning and industry-education collaboration. These trends reflect efforts by leading nations to adapt vocational systems to low birth rates, aging populations, and technological disruption—repositioning vocational education as a system for lifelong competency development and career mobility, rather than merely a transition tool for youth entering the labor market.

- These international trends suggest that enhancing the social status of vocational education, shifting from academic credentials to competency-based policies, and enabling flexible, learner-centered pathways are critical. Accelerating digitalization within vocational education and dismantling boundaries between education and industry through meaningful collaboration are also necessary steps for reforming vocational systems in the digital age.

#### **4. Innovation Strategies for Vocational Education Systems**

- Chapters 4 and 5 of this study outline innovation strategies for building a sustainable vocational education system in response to low birth rates. Through expert interviews and a three-round Delphi survey with experts in secondary and higher vocational education, the study identified critical challenges, envisioned ideal future states, and proposed targeted improvement strategi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 The findings culminated in two key outcomes: a vocational education innovation framework centered on future vision, challenges, and improvement directions; and a policy roadmap focused on actionable strategies. The innovation framework defines the strategic orientation and goals for system transformation, while the roadmap presents concrete policy tasks for implementation.

##### **A. Innovation Strategies for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 The innovation direction for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Key challenges were categorized into macro-structural issues, school and curriculum operations, internal stakeholders, and student growth pathways. These

challenges stem primarily from declining school-age populations and their ripple effects on institutional operations and identity.

- The envisioned future of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was defined as a sustainable model that ensures diverse growth pathways aligned with industry demand, centered on personalized career planning and skill development.
  - To bridge the gap between current challenges and the future vision, four core improvement directions were identified: equity, professionalism, flexibility, and connectivity.
- The policy roadmap for reforming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includes both short-term and long-term strategies, further divided into priority and supplementary tasks.
- In the short term:
- Equity: Establishing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to improve societal perceptions of vocational education; promoting awareness of vocational pathways in primary and middle schools.
  - Professionalism: Expanding financial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and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internal stakeholders; enhancing quality assurance for leading school models.
  - Flexibility: Reinforcing work first-then to college pathways and post-secondary learning systems; introducing customized educational models for diverse student needs.
  - Connectivity: Strengthening vocational education in connection with local communities, enhancing the accountability of regional stakeholders, and applying similar expectations to central government agencies.
- In the long term:
- Equity: Institutional reforms to establish social recognition systems for vocational education outcomes.
  - Professionalism: Deployment of diverse professionals within schools.
  - Flexibility: Support policies for employment and settlement of high school graduates.

- Connectivity: Settlement support for graduates in local areas and implementation of region-specific education programs.

#### B. Innovation Strategies for Higher Vocational Education

- The innovation direction for higher vocational education is defined as follows:
  - Key challenges include macro-level structural issues, shifting institutional identity in junior colleges, operational and curricular constraints, and weak regional collaboration—largely driven by financial instability, declining education quality, and insufficient industry-community linkages.
  - The ideal vision for higher vocational education is a demand-responsive system that supports the continuous growth of diverse learners—including youth, adults, and foreigners—through industry-linked, customized programs.
  - Similar to secondary education, four improvement directions were established: equity, professionalism, flexibility, and connectivity.
  
- The policy roadmap for higher vocational education is as follows. In the short term:
  - Equity: The need for national vision-setting and planning for vocational education.
  - Professionalism: Increased investment in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 Flexibility: Curriculum reform and development of advanced degree pathways to foster highly skilled talent.
  - Connectivity: Support for regional projects and programs, and stronger linkages with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 In the long term:
  - Equity: Implementation of nationwide awareness campaigns and enactment of a Vocational Education Act.
  - Professionalism: Enhancing faculty compensation and working conditions.
  - Flexibility: Improving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for vocational graduates to support long-term settlement.
  - Connectivity: Strengthening local governments' accountability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ensuring inter-ministerial collaboration.

- Many of these strategies align with those for secondary education. These include securing institutional legitimacy and legal foundations, expanding infrastructure for quality delivery, and reinforcing cooperative systems rooted in regional needs.

## 5.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 This study offers key insights into the challenges confronting vocational education, the ideal future it should pursue, and the practical strategies needed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current state and that vision.
  - Challenges to Be Addressed: Both secondary and higher vocational education systems are facing a common challenge—namely, the reduction in student enrollment due to declining birth rates. However, this phenomenon is not limited to a mere quantitative contraction. It also generates a cascade of indirect effects that disrupt institutional identities, operational models, and educational outcomes.
  - Ideal Future Vision: The vocational education system should aim to ensure flexible entry and transition pathways that consider learners' diverse characteristics and life stages. It must strengthen its responsiveness to regional industry demands and establish an inclusive educational system that accommodates non-traditional learners and vulnerable groups. Moreover, it should proactively adapt to industrial transformations by providing agile curricula and infrastructure tailored to the digital era.
  - Improvement Directions and Policy Strategies: The four core directions—equity, professionalism, flexibility, and connectivity—serve as pillars for advancing the vocational education system. These directions support legitimacy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promote robust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enable diverse learner trajectories, and expand regional engagement.
  - Structural Constraints to Reform: Reform of the vocational education system is hindered by weak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fragmented governance, and social hierarchies that marginalize vocational pathways. Addressing these issues requires legal improvements, integrated governance, and broader public recognition of vocational education's value.

- In conclusion, to ensure its sustainability in the era of declining birth rates, the vocational education system must move beyond a closed, linear model and evolve into an open, diversified system that supports long-term career development and diverse life trajectories. It should ultimately serve as a comprehensive platform for lifelong learning and inclusive growth.

#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 제1장 |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연구의 필요성

-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경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직업교육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그리고 지역 불균형 심화와 같이 저출생이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업교육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임. 특히 저출생으로 인한 변화가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과 같은 세계적 경제 환경 변화와 맞물려 일어나고 있어 직업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 특히 저출생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 3,760만 명을 정점으로 매년 33만 명씩 감소하고 있으며, 2030년대 이후에는 매년 52만 명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대한민국정부, 2020).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reskilling과 upskilling만큼이나 전문기술 인력의 양성과 청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한 직업교육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음.
- 더불어 저출생의 근원적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교육에서의 경쟁 심화, 노동 생애를 중시하는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 등이 지목됨에 따라(대한민국정부, 2020),

#### 4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연구

직업교육에 진입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도 특히 의미가 있음.

- 저출생에 대한 사회적 대응 및 대처로서 직업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직업교육의 위축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학습자가 느끼는 직업교육의 매력도가 과거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직업교육이 적절한 운영체제를 갖추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2005년 이후 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의 유형별 입학생 수 및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과 같음. 중등교육에서 일반교육의 입학생 수가 2005년 약 43만 8천 명에서 2024년 약 34만 2천 명으로 21.9%가 감소한 것에 비해 특성화고 입학생 수는 약 17만 명에서 약 6만 명으로 65.2%가 감소하였음. 또한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 입학생 비율은 2005년 39.5%였던 것에 비해 2024년에는 17.6%로, 우리나라 교육 체계 속에서 직업교육의 비중이 매우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음.
  - 고등교육 역시 이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데, 일반대학의 경우 2005년 입학생 수가 약 32만 6천 명에서 2024년 약 33만 7천 명으로 오히려 3.4% 증가한 것에 비해 전문대학은 약 25만 1천 명에서 약 16만 명으로 36.2%가 감소하였음. 일반대학 대비 전문대학의 비율 역시 2005년 77.0%에서 47.6%로 비중이 감소하였음.

**<표 1-1> 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 유형별 입학생 수 및 비율 변화**

(단위: 명, %)

연도	중등			고등		
	일반고(A)	특성화고(B)	비율(B/A)	대학(C)	전문대학(D)	비율(D/C)
2005	438,357	173,039	39.5	326,284	251,283	77.0
2010	506,315	157,142	31.0	358,511	249,144	69.5
2015	416,697	100,140	24.0	355,772	214,466	60.3
2020	320,416	70,433	22.0	342,699	188,533	55.0
2024	342,455	60,140	17.6	337,338	160,406	47.6
2005년 대비 2024년 감소율	21.9	65.2	-	-3.4	36.2	-

자료: 일반고, 특성화고: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유초중등통계. 입학 및 졸업 후 상황.

일반대, 전문대: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대학통계. 입학정원/모집인원 및 입학자.

참고: 2010년 이하에서는 일반계고와 전문계고의 수치이며, 2011년 이후에는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수치임.

- 이상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 교육 생태계에서 직업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일반교육에 비해 저출생에 의한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력을 더욱 크게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더욱이 중등직업교육을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률이 하락하고 미취업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는 현재의 직업교육이 오늘날의 사회·경제적 배경 속에서 충분한 효과성을 보이고 있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2023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학생 총 68,782명 중 취업자는 19,156명으로 졸업자의 27.9%이며, 이보다 많은 31,885명(46.4%)이 진학하였음. 특히 특성화고 졸업자의 50.0%가 진학하는 데 비해 마이스터고 졸업자의 7.2%만 진학함으로써 대표적인 두 유형의 직업계고가 보이는 특성 차이가 큼을 확인할 수 있음.
  - 더불어 미취업자가 전체 졸업자의 21.7%를 차지함으로써 직업교육을 수료한 이후 어떠한 방향으로도 진출하지 못하는 비율이 취업자의 비율만큼이나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1-2〉 2023년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 후 현황

(단위: 명, %)

구분	졸업자	취업자 (비율)	진학자(비율)			미취업자 (비율)	기타
			합계	전문대학	대학		
합계	68,782	19,156 (27.9)	31,885 (46.4)	18,644 (27.1)	13,241 (19.3)	14,898 (21.7)	2,843 (4.1)
특성화고	62,853	15,496 (24.7)	31,456 (50.0)	18,353 (29.2)	13,103 (20.8)	13,595 (21.6)	2,306 (3.7)
마이스터고	5,929	3,660 (61.7)	429 (7.2)	291 (4.9)	138 (2.3)	1,303 (22.0)	537 (9.1)

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3). 2023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연보.

- 직업교육에 대한 입학생 수의 감소와 취업률 감소 등의 지표는 우리나라 직업교육 전반의 매력도와 효과성이 감소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미래 저출생시대에

## 6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연구

적합한 직업교육체제를 조속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의 양분화 구도 속에서 직업교육은 더욱 빠른 위축 현상을 보이게 될 것이며, 국가 차원의 경쟁력 약화 현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 즉 저출생에 대응하는 교육시스템에 관한 논의의 핵심 중 하나는 우리나라 전체 교육시스템 속에서 직업교육이 적절한 비중을 유지하여 향후 더욱 심화될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오늘날의 교육시스템이 국가 교육 정책의 의도적 조정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와 같은 교육 수요자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들의 직업생애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직업교육체제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으로서 어떻게 매력도를 지닐 것인가, 일반교육과 대비하여 어떻게 교육적 동등성을 획득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즉 오늘날과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매력도와 효과성을 지닌 직업교육은 어떠한 방향성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이 요구됨.
- 저출생시대에 따른 직업교육의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직업교육이 충분한 매력도와 효과성을 보이지 못하고 위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부족한 상황임.
- 저출생에 의한 인구감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시도로 2006년 이후 총 4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이후 인구정책 TF를 통한 범 정부 차원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을 4차례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정책 방안 차원에서 직업교육체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 더욱이 2023년 발표된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관계부처합동, 2023. 8.)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뚜렷한 전략 부족을 현재 중등직업교육의 첫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하였음.
  - 저출생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중등교육 차원에서의 미래학교 시나리오(김현미 외, 2022), 소규모 학교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권순형 외, 2021)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기는 하였으나, 직업계고를 중심으로 중등직업교육의 대응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흡한 상황임.

- 더불어 고등직업교육의 경우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체제 혁신 방안(이희경 외, 2020), 구조개혁 방안(강경중 외, 2022) 등이 연구되었으나, 중등을 포괄하는 직업교육체제 전반의 방향성 내에서 논의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즉 고등직업교육이 중등직업교육과 함께 직업교육이라는 큰 개념 아래 함께 논의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러한 현상은 직업교육체제를 운영기관, 공간, 이해관계자, 교수학습 활동 등의 교육시스템으로서의 요소, 교수학습 과정으로서의 요소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때문임. 따라서 직업교육이 우리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고 중등 및 고등의 교육 단계를 포괄하는 효과적인 직업교육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체제를 사회 전반의 포괄적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
- 직업교육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시스템과의 공동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직업교육의 사회적 역할 및 관점에서의 이해가 이루어져야 함. 즉 우리나라의 현재 및 미래 상황에서 직업교육은 어떠한 목적을 지니며, 어떻게 정당화되며, 어떻게 관리되는지, 직업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어떠한 위상을 갖는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따라서 Cedefop(2017)가 제시한 직업교육의 개념틀과 같이 사회·경제적 관점, 교육시스템 관점, 교수학습 관점을 포함하는 포괄적 관점에서 직업교육체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그림 1-1] 참조).
  - 즉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상황에서 분명한 목적과 정당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됨으로써 직업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높은 위상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직업교육체제의 마련이 가능할 때 일반교육과 동등성을 지닌 교육의 한 분야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임.

[그림 1-1] 직업교육 특징 구분을 위한 개념틀(CEDEFOP, 2017)



출처: Cedefop(2017). The Changing Nature and Role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Europe. Volume 1: Conceptions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 Analytical Framework. p. 31.

-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그리고 기술 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할 때 직업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저출생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와 지역 불균형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교육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업교육체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업교육의 상대적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직업교육의 매력도와 효과성이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함.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의 입학생 수와 취업률 감소, 그리고 직업교육을 졸업한 후의 미취업자 비율 증가 등은 직업교육체제가 현재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임.
  - 저출생시대에 직업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직업교육체제의 필요성이 절실함.
  - 이를 위해 직업교육이 일반교육과 동등한 교육적 가치를 가지도록 하고, 직업생에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포괄적 관점에서 직업교육체제를 마련해야 함.

##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생과 인구구조의 변화, 기술 전환 등 급변하는 사회적·경제적·교육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방향성과 정책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에 있음.
  -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직업교육의 위축 현상을 분석하고, 저출생시대에 적합한 직업교육체제의 정비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발전 방안을 탐구함.
  - 직업교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제고하고, 일반교육과의 동등한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 간의 연계성 및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방안을 제시함.
  - 직업교육의 매력도와 효과성을 높여 청년층 고용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을 탐색함.

## 3. 연구의 기대효과

- 저출생시대의 도래를 고려한 직업교육체제 진단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본 연구는 저출생시대의 예상되는 변화와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업교육체제의 진단 요소를 도출함. 직업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직업교육체제의 주요 진단 요소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문헌 연구 및 정량적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직업교육체제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진단 자료는 정책 입안자뿐만 아니라 직업교육기관 및 연구자들이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미래 직업교육체제 방안 제시 및 정책 활용
  - 연구에서 제시된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안은 단계별 실행 전략으로 제시함으로써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직업교육 강화 방안으로 활용되도록 할 수 있음. 특히 저출생시대에 직업교육이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함.

## 10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연구

- 혁신 방안은 혁신 방향과 정책 로드맵으로 구체화하여 정책 입안자, 직업교육기관, 학교 현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직업교육 개선을 위한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
- 저출생시대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구축에 기여
-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저출생시대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성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으로써 직업교육의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
  - 이를 통해 직업교육이 청년층의 고용 안정성 확보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직업교육이 일반교육과 동등한 교육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업교육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임.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 연구의 내용

- 직업교육 현황 및 직업교육 정책 대응 분석
  -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 현황 분석
    - 직업교육체제의 규모, 직업계고와 전문대학의 학과 구성 변화, 직업교육 이수자의 노동시장 이행의 관점에서 변화 동향 분석
  - 직업교육의 정책 대응
    -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에서의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응 탐색
  
-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의 역할 분석
  -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의 환경 변화 분석
    -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의 역할 탐색을 위한 외부 환경 분석: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와 기술환경 변화, 노동시장과 일자리 변화, 교육환경 변화 등
  - 해외 직업교육체제의 미래사회 대응 동향
    - 해외 주요국 직업교육체제의 미래사회 대응 동향 탐색
  
-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체제의 현안과 미래 방향 탐색
  - 직업교육체제 현안 분석
    - 사회·경제적 관점, 교육시스템 관점, 교수학습 관점 등 포괄적 관점(〈표 1-3〉 참조)에서의 직업교육체제 진단을 통한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향성에 관한 시사점 획득
  - 직업교육체제 이상적 미래상과 방향성 탐색
    - 직업교육체제의 현안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이상적 미래상을 도출하며, 이에 도달하기 위한 개선 방향성 탐색

12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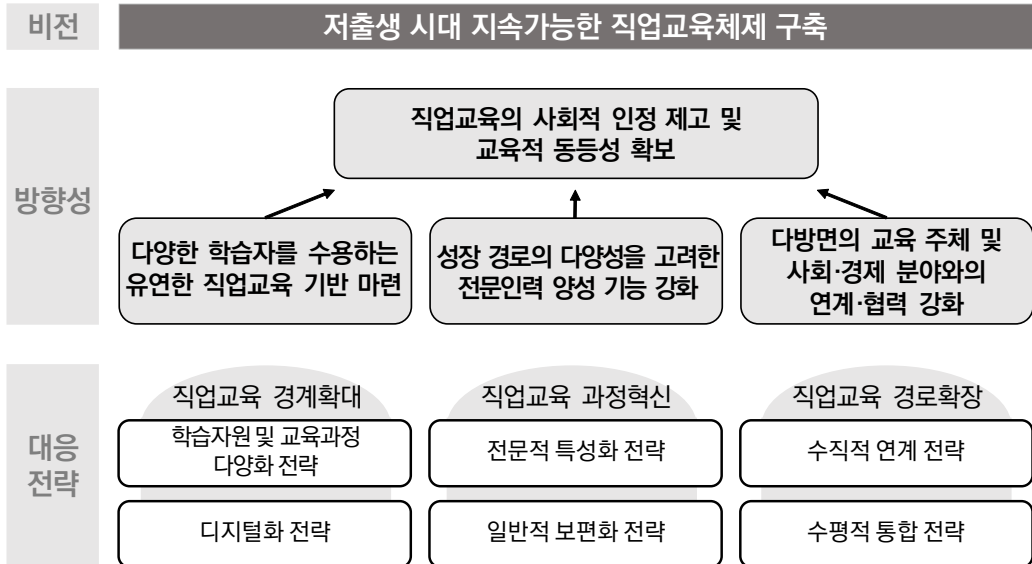
- 직업교육체제 개선 방향성을 탐색하기 위해 저출생에 대응하는 직업교육체제의 미래 방향(안)의 방향성과 대응 전략([그림 1-2] 참조)에 기반하여 분석

**<표 1-3> 포괄적 관점의 직업교육체제 구성요소 및 정의**

MACRO 사회경제적/노동시장 관점		MESO 교육시스템 관점		MICRO 페даго지적/교수학습 관점	
요소	정의	요소	정의	요소	정의
정당성	국가나 사회 전반에서 직업교육의 필요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정도	교육 단계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교육 단계와 수준	학습 내용	직업교육에서 다루는 실질적인 학습 내용과 주제
목적과 초점	직업교육이 추구하는 주요 목표와 이를 위한 주요 집중점	학습자 범위	직업교육이 대상으로 하는 학습자 집단의 범위와 특성	교수 학습 방법	직업교육에서 사용되는 학습 방식과 방법론
거버넌스	직업교육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체제 및 구조	학습결과 및 자격	직업교육을 통해 얻는 기대 결과와 이에 따른 자격 및 인증	교수자 역할	직업교육을 진행하는 교사나 강사의 역할과 기능
직무체계 및 수준	직업교육에서 지원하는 직무의 종류와 해당 직무의 수준	교육제공자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기관 및 조직	학습 장소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소와 환경
학습자 지위	직업교육 학습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와 역할	일반교육과의 동등성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사이의 평등하고 상호 보완적인 위치	학습 결과 특성	직업교육을 통해 얻는 지식, 기술 및 태도의 특성과 품질
재정 부담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책임과 자원 배분	-	-	직업 윤리	직업교육에서 강조되는 윤리적 가치와 기준

출처: 이상훈 외(2024). 인구감소 시대의 직업교육 정책 연구: 저출생에 대응하는 직업교육체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6장의 내용 정리.

[그림 1-2] 저출생에 대응하는 직업교육체제의 미래 방향(안)



출처: 이상훈 외(2024). 인구감소 시대의 직업교육 정책 연구: 저출생에 대응하는 직업교육체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p. 294.

□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안 도출

-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향 모형 도출
  - 직업교육체제의 주요 현안, 이상적 미래상, 개선 방향성을 중심으로 하는 직업교육체제 개선을 위한 장기적 방향성 모형 도출
-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체제 정책 로드맵 도출
  -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정책 방안을 탐색 및 타당화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이상적 미래상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과제 도출

**2. 연구의 범위**

- 본 연구는 저출생시대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연구의 주요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중등직업교육을 중심으로 연구 수행

#### 14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연구

- 연구는 중등직업교육체제에 핵심 초점을 맞추어 진행됨. 특히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분석하며, 이들 학교의 운영 방식과 역할을 중점적으로 탐색함.
- 중등직업교육이 청소년의 직업 성장경로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을 규명하고, 저출생시대의 변화에 맞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며, 직업계고 졸업생의 진로선택과 취업, 상급학교 진학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함.
- 고등직업교육도 연구 범위에 포함되나, 부분적 논의에 한정
  - 고등직업교육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연구가 아닌,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함. 특히 전문대학이 중등직업교육 이후의 직업 성장경로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춤.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전문대학 진학 및 취업과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육경로를 제시하고자 함. 따라서 고등교육 정책 전반에 걸친 고등직업교육 전체 구조를 탐구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

### 제3절 연구 방법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한 연구 내용과 연계된 연구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1-3]과 같음.

[그림 1-3] 연구 절차



## 1. 문헌 분석

### □ 직업교육 운영 현황 분석

- 직업교육의 운영 현황은 다양한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음. 이에 직업교육 운영 현황을 중등 및 고등, 특히 직업계고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직업교육체제의 규모, 직업계고 및 전문대학 학과 구성의 변화, 직업교육 이수자의 노동시장 이행을 중심으로 분석함.

### □ 직업교육 정책 대응

- 저출생 및 산업 환경 변화 등 사회·경제·교육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추진되었던 직업교육 정책을 통해 현황 및 성과, 사례를 분석함.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의 핵심 정책 자료 및 행정 자료 분석
- 주요 직업교육 정책을 각 영역의 정책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각 3가지 동향으로 정리하였음. 직업교육 정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1-4〉 직업교육 정책 동향 분석 대상

중등직업교육	고등직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등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 전략</li> <li>• 마이스티고등학교 정책</li> <li>•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정책</li> <li>• 직업계고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정책</li> <li>•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대학의 실무인재 양성기능 강화 전략</li> <li>•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li> <li>•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li> <li>• 마이스터대 지원 사업</li> <li>•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등직업교육의 선취업-후학습 경로 정착 전략</li> <li>• 일학습병행 정책</li> <li>• 재직자 특별전형 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전략</li> <li>•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III유형: 후진학 선도형 지원 계획)</li> <li>•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LiFE 2.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등직업교육의 지역인재 육성 강화 전략</li> <li>•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li> <li>•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직업교육의 지역혁신 주체 역할 강화 전략</li> <li>•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 사업 (LINC 3.0)</li> <li>•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li> <li>•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li> </ul>

출처: 연구진 작성.

## □ 미래사회 변화 요인

- 과거의 직업교육 운영 현황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직업교육 정책의 배경을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향후 직업교육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미래사회 변화 요인을 탐색함.
- 직업교육과 관련되는 주요 환경을 1) 인구구조 변화, 2) 산업구조와 기술환경 변화, 3) 노동시장과 일자리 변화, 4) 교육환경의 변화로 구조화하고, 이에 따른 관련 문헌을 분석함.

## 2. 해외 사례 조사

- 우리나라 직업교육체제 관련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직업교육체제의 주요 동향을 조사함. 다중 사례 연구 접근법을 활용하여 주요 국가별 직업교육체제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각국의 정책적 특징을 비교함으로써 공통점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 18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연구

- 조사 대상국은 직업교육체제 개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와 비교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대상 국가는 다음과 같음.
  - 노르웨이, 독일, 미국, 스코틀랜드, 싱가포르, 영국,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호주 등(가나다순)
- 이상의 과정을 통해 1) 직업교육의 위상 제고 및 평생학습 체계 구축, 2) 유연성과 개인화 강화, 3) 기술 혁신 대응을 위한 디지털 인력 양성, 4) 일 기반 학습 및 산학협력 확대의 4가지 동향으로 구조화하여, 그에 따른 사례를 분석하였음.

### 3. 전문가 심층 면담

-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탐색하기 위해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의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면담을 실시하였음. 면담의 개요는 아래와 같음.<sup>1)</sup>
  - 대상: 직업교육 현장 전문가 15명(중등직업교육: 10명, 고등직업교육 5명)
  - 내용
    - 직업교육의 현 상황 평가: 직업교육의 운영 실태, 주요 변화, 어려움
    - 이상적인 직업교육 모습: 목적, 학습자, 동등성, 교수학습 과정·내용·방법, 성과 등
    - 정책 방안: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개선점
    - 미래 발전 방향: 향후 10년간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 방법: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비대면 개별 면담

### 4. 전문가 델파이 조사

- 전문가 면담을 통해 도출된 주요 현안(이슈), 이상적 미래상, 개선 방향성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상대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현안을 판단하며, 최종적으로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의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를 추진함. 전문가 델파이의 개요는 아래와 같음.<sup>2)</sup>

1) 전문가 심층 면담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4장 제1절 직업교육체제 혁신과 미래 방향 분석 개요에 기술되어 있음.

2)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5장 제1절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안 도출 개요에 기술되어 있음.

- 대상: 직업교육 전문가 37명(중등직업교육: 20명, 고등직업교육 17명)
- 내용: 전문가 면담 결과의 타당화부터 정책 방안의 도출 및 실행가능성, 효과의 즉각성 검토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 방법: 델파이 조사지를 활용한 총 3차례 서면 조사
  - 1차 델파이 조사: 주요 현안, 이상적 미래상, 개선 방향성 등의 타당성 검토, 정책 방안에 관한 개방적 의견 수렴
  - 2차 델파이 조사: 주요 현안, 이상적 미래상, 개선 방향성 등의 수정안 검토, 주요 현안의 중요도-시급도 검토, 정책 방안 타당성 검토
  - 3차 델파이 조사: 정책 방안의 효과성-실행가능성 검토

## 5. 전문가 협의회

-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세부 정책과제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추진할 예정임. 이 과정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실행가능성이 낮은 정책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함.
  - 대상: 직업교육 관련 전문가 10명(중등직업교육: 5명, 고등직업교육 5명)
  - 내용: 연구 결과 공유 및 세부 정책과제 탐색
  - 방법: 중등직업교육 및 고등직업교육 개별 온라인 협의회(2025. 5. 16.)

〈표 1-5〉 전문가 협의회 참여자 정보

구분	소속	직급	성별	구분	소속	직급	성별
중등 직업 교육	일반대학	교수	남	고등 직업 교육	전문대학	부총장	여
	일반대학	교수	남		전문대학	부총장	남
	공립 특성화고	교장	남		전문대학	기획처장	남
	공립 마이스터고	교장	남		전문대학	교수	남
	사립 특성화고	교장	남		전문대학	교수	여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속 및 직급은 일반전인 범주로 축약하여 제시함.



## 제2장

# 직업교육의 현황과 정책 대응

제1절 직업교육의 현황

제2절 직업교육의 정책 대응 동향

제3절 소결



## 제2장 | 직업교육의 현황과 정책 대응

### 제1절 직업교육의 현황

- ‘직업교육체제’는 여타의 교육 영역에서와 같이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되는 개념 가운데 하나임. 직업교육이 운영되는 제도 또는 전반을 언급하기도 하고, 교육경로의 네트워크로 설명하기도 하며, 구성요소 간 상호관계로 설명하기도 함(이상훈 외, 2024: 34-35).
  - 직업교육체제는 직업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그 범위와 요소를 달리하는 인식의 틀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제도의 관점에서는 어떠한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직업교육이 운영되는지의 논의로 확대될 수도 있고, 교육시스템 안에서 직업교육 운영에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국한할 수도 있을 것임.
  
- 직업교육의 개념이나 의미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설명되어 왔으며, 특히 경제·사회 환경 변화와 함께 광의의 개념 또는 협의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음. 예를 들어 Cedefop(2020)의 개념 정의를 차용하면, 직업교육은 인력 양성을 위한 초기직업교육(IVET)과 계속직업교육(CVET)을 포함하여 교육체제 내에서 고등교육까지 연계된 많은 하위 영역들과의 관련성을 형성하는 광의의 개념과 형식교육 위주의

초기직업교육 중심의, 즉 교육체제 안에서도 특정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는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되었음(최동선 외, 2021: 20-21).

〈표 2-1〉 직업교육의 광의/협의의 개념 구분

구분	광의의 개념	협의의 개념
주된 학습 유형	형식교육 및 비형식(non-formal) 교육	형식교육 위주
초기직업교육 및 계속직업교육	초기직업교육(IVET) 및 계속직업교육(CVET)을 모두 포함	초기직업교육(IVET) 위주로 운영
계속직업교육의 범위	직무 관련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직업교육까지 포함	직무 관련 계속직업교육만을 강조
교육체제 내에서의 영역	교육체제의 여러 하위 영역에서 다양한 상관관계를 형성(고등교육도 포함)	교육체제의 특정한 하위 영역으로 존재(고등교육과는 구분되는 경우로 해석되기도 함)

자료: Cedefop(2020).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Europe, 1995-2035. p. 33.

출처: 최동선 외(2021). 미래 환경 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에서 평생직업교육 내실화 방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pp.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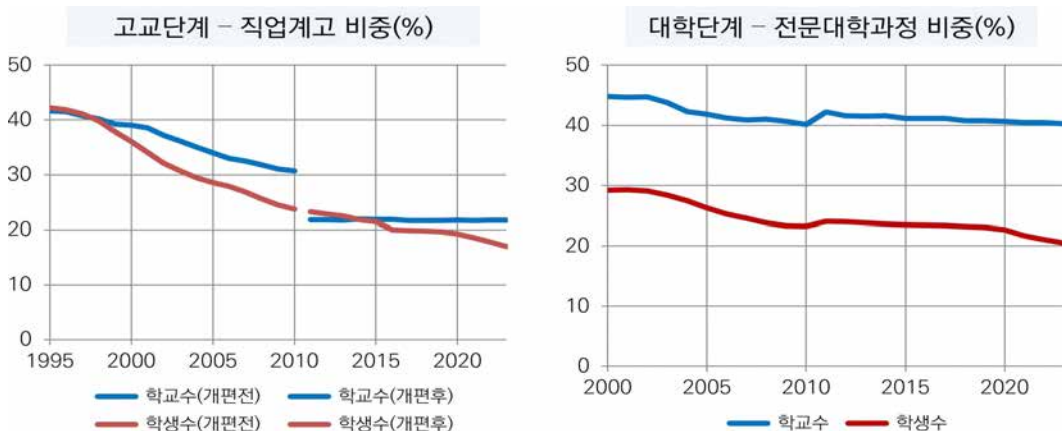
- 거대한 사회 환경 변화 속에서 개인의 삶의 양식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직업교육 역시 특정한 낮은 수준의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훈련으로 규정되기보다는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개념 및 범위가 변화될 필요가 있음. 즉 산업구조가 고도화·다변화되고 평생 학습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종전과 같은 청년층 대상의 인력 양성(initial VET)이라는 협의의 개념에서 벗어나 계속직업교육(continuing VET)까지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는 것임. 이와 함께 고등교육 영역에서는 직업교육적 요소를 확대(vocational drift)하려는 경향성도 존재함.
-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교육시스템 전반에 걸친 변화에 대한 논의로 확대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임. 또한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 초점을 두는 경우 직업교육체제를 통한 인력 양성으로 범위를 국한할 필요도 있음.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청년층의 첫 번째 노동시장 이행과 관련한 직업교육의 기능, 즉 구체적으로는 중등 및 고등교육 단계에 집중하고자 함.

### 1. 직업교육체제의 규모

- 우리의 직업교육체제가 갖는 변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규모의 축소라 할 수 있음.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중등 및 고등 단계의 직업교육 학생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중등 단계에서는 전체 고등학생 가운데 직업계고 학생 비율이 2000년 36.1%에서 2023년 17.0%로 감소하였고, 고등 단계에서는 전문대학과정 학생 비율이 2000년 29.2%에서 2023년 20.4%로 감소하였음.
- 이는 전반적인 학령인구 감소 등의 환경 변화 속에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다변화에 따른 인력수요 변화에 의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2-1] 고교 및 대학 단계의 직업교육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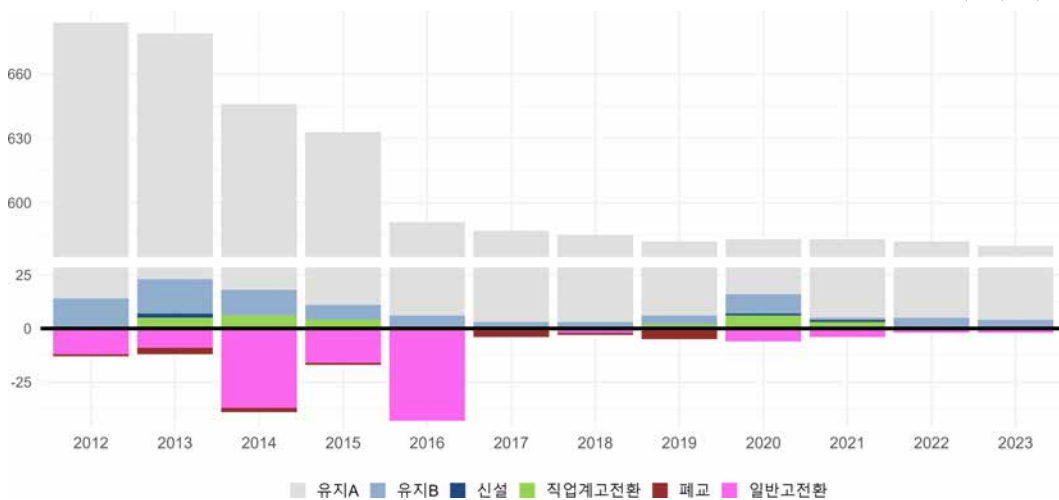
주: 1. 201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등학교 유형이 개편됨에 따라 2010~2011년 사이에 직업계고 학교 수 비중의 시계열이 중단됨.  
 2. 대학 단계의 전문대학 과정은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사이버대학, 사내대학, 전공대학, 기능대학의 2~3년제 과정을 의미함.  
 자료: 1.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3).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고등교육통계편.  
 2. 한국교육개발원(1995~2023). 교육통계연보.

- 특히 중등 단계 직업교육 규모는 지난 20여 년간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2005년의 직업교육 혁신 방안에 이어 2010년 이후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및 선취업-후진학 정책 등의 일련의 정책을 기반으로 노동시장 이행 기능 확충 등 정예화를 강조하였다는 정책적 영향이 있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실제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등의 고교 직업교육 정책에 따라 직업계고에는 지속적인 변화가 전개되었는데, 전체 총량에서 직업계고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직업계고 내부에서는 매우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임. 즉 전반적인 직업계고 규모는 유지 또는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전환, 일반고→특성화고 전환, 직업계고→일반고 전환, 폐교, 학교 신설 등의 학교유형 변화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것임.
- 특히 2010년대 초중반에는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등에 따라 직업계열 학과를 설치한 일반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변화와 직업계고 내에서의 체제 개편(예: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등)이 두드러진 반면, 201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일부 직업계고 내에서의 체제 개편 및 직업계고 전환 등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그림 2-2] 직업계고 유형 변동 추이(2012~2023년)

(단위: 개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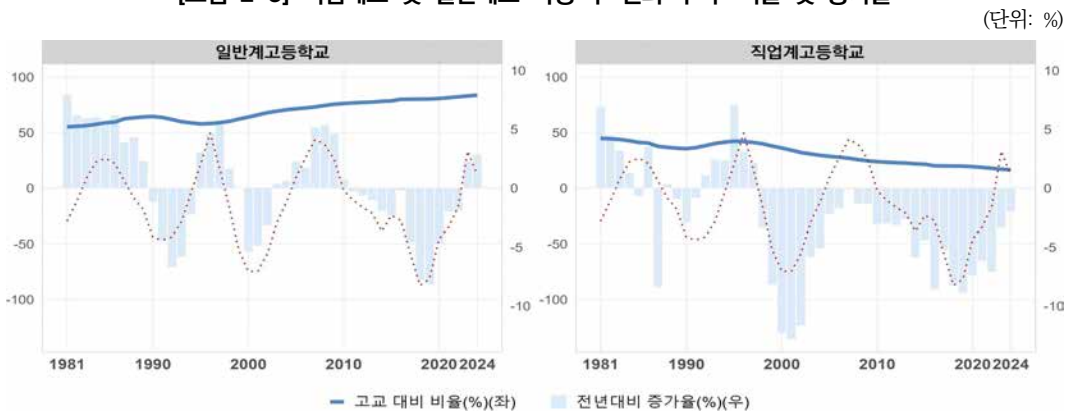
주: 유지A는 직업계고 유형의 유지, 유지B는 직업계고 내 체제 개편(예: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등)을 의미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8~2024). 유·초등·중등학교/학과별 데이터셋. <https://kess.kedi.re.kr>(검색일 2023. 9. 6).  
 출처: 최동선, 변숙영 외(2023). 2023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2. 직업계고 재구조화 모니터링. 교육부, 전라북도교육청, 한국직업능력연구원. p. 18.

□ 중등 단계의 직업교육 규모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학령인구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임. 현행 학제의 특성상 학령인구의 증가 또는 감소와 직업계고 학생 규모 사이에는 밀접

한 관계가 발견되고 있음. 다만 일반계고와 달리 직업계고에서는 최근 학령인구가 잠시 증가하는 상황에도 학생 규모가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차이점도 발견됨.

- 1981년 이후 학령인구 변화와 고등학교 학생 수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특히 2000년 또는 2020년 부근에서 직업계고 학생 수는 급감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양상은 무엇보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추정됨. 직업계고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2000년 또는 2020년 부근에 일반계고 학생 수 역시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임. 또한 1990년 이후의 학생 수 증가율 양상이 15~17세 고등학교 학령인구의 증가율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도 직업계고 학생 수와 학령인구 규모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최동선 외, 2024: 18-19). 다만 2000년 이후 고등학교 학령인구가 잠시 증가하던 시기에 일반계고와 달리 직업계고 학생 수가 증가하지 않은 것은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2000년대 이후 직업계고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여 직업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정책 추진에 의한 영향일 수도 있음.

[그림 2-3] 직업계고 및 일반계고 학생 수 변화 추이: 비율 및 증가율



주: 붉은색 점선은 통계청(2024)의 「장래인구추계: 2022 인구총조사 기준」에 따라 1980~2024년의 15~17세 인구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도식화한 것임.

자료: 1.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1980~2022).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검색일 2024. 8. 1.).

2. 한국교육개발원(2008~2024). 유·초등·중등학교/학과별 데이터셋. <https://kess.kedi.re.kr>(검색일 2024. 9.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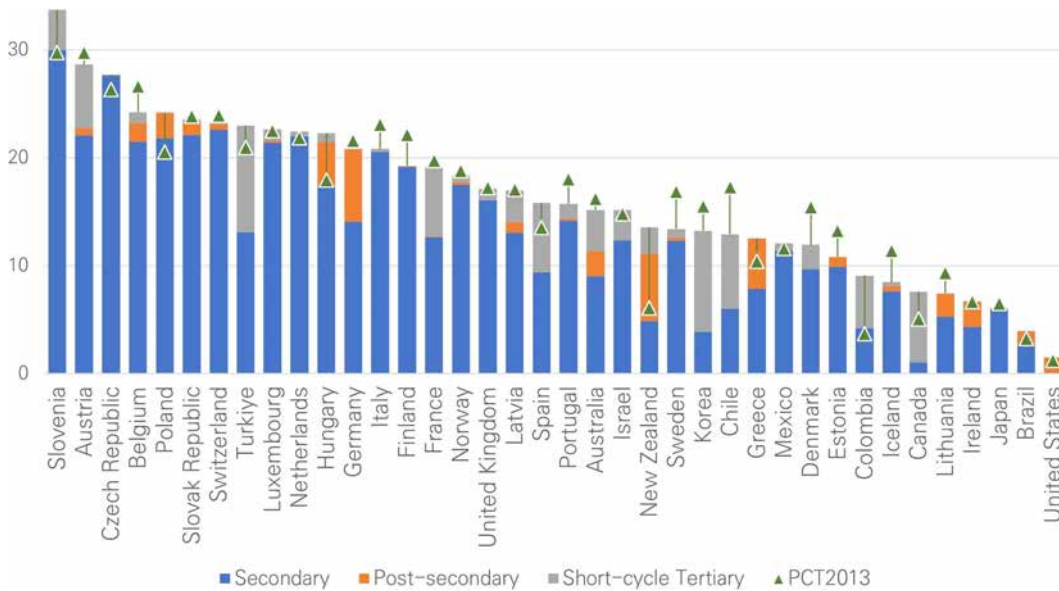
3. 통계청(2024). 장래인구추계: 2022 인구총조사 기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2)(검색일 2024. 10. 25.).

출처: 최동선 외(2024). 2024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5.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방안. 교육부, 광주광역시교육청, 한국직업능력연구원. p. 19.

□ 직업교육 규모의 감소 현상은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음. 특히 산업구조가 고도화·다변화되면서 인력수요에 있어 변화가 전개되고, 이러한 변화에 교육체제 전반에 걸친 대응이 이루어지면서 일정한 재구조화는 필연적일 수 있음. 실제 15~24세 인구 가운데 직업교육 참여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13년 15.5%에서 2020년 13.2%로 감소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다른 OECD 국가에서도 발견할 수 있음. 다만 단순한 양적 규모의 감소가 아닌 우리 특성을 기반으로 직업교육의 독자성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러한 노력에는 기술 변화를 비롯한 사회 변화 또는 인력수요에 적절하게 부응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그림 2-4] 15~24세 인구 대비 직업교육 참여율 비교

(단위: %)



주: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2011)에 따라 중등(ISCED 25 및 ISCED 35), 중등 이후 비고등(ISCED 45), 단기고등(ISCED 55)으로 구분하고, 국가별 15~24세 인구 대비 등록생 비율을 도식화한 것임.

자료: 1. OECD(2023a). Education Database: Enrolment by age. OECD Education Statistics (database). <https://doi.org/10.1787/71c07338-en>(검색일 2023. 5. 25.).

2. OECD(2023b). Labour Force Statistics: Historical population data.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 <https://doi.org/10.1787/4cf3d106-en>(검색일 2023. 5. 25.).

출처: 최동선, 류지은 외(2023).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 변화와 학교 직업교육의 대응. 한국직업능력연구원. p. 91.

## 2. 직업계고 및 전문대학 학과 구성의 변화

- 산업수요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직업교육의 특성상 지속적인 변화는 필연적임. 실제 직업교육기관은 학과 개편 또는 재구조화 등을 통해 꾸준히 변화하고 있고, 직업교육기관에서 어떠한 학과를 설치·운영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몇 가지 변화의 특징을 추출할 수 있음(최동선, 류지은 외, 2023: 92-94).
- 첫째, 직업계고는 경영·금융, 디자인·문화콘텐츠,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 많은 학생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전문대학은 경영·경제, 사회과학(가족·사회·복지, 행정 등), 유아교육, 기계·금속, 컴퓨터·통신, 생활과학(식품·조리), 간호, 치료·보건, 디자인, 응용예술 등의 분야에 많은 학생들이 재학 중임. 이들 분야는 산업 범용적인 지원 인력과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중간 수준의 숙련형성 등 전통적으로 직업교육기관을 통해 인력을 양성한다고 인식되어 왔던 분야들임(최동선, 류지은 외, 2023).
  - 둘째, 경영·금융 또는 경영·경제 분야의 재학생 규모가 최근에 빠르게 감소하는 것도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임. 인력 양성 방향이 특화되지 않은 경우에 직업교육기관에서의 독자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최동선, 류지은 외, 2023).
  - 셋째, 직업계고의 기계 및 전기·전자 분야, 전문대학의 기계·금속 및 전기·전자 분야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성장과 관련하여 직업교육기관의 대표적인 분야로 간주되어 왔음. 최근 이들 분야에서도 재학생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이들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유지되거나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최동선, 류지은 외, 2023).
  - 넷째, 최근 디지털 전환 등이 강조되는 경향에 비해 정보·통신 또는 컴퓨터·통신 분야의 재학생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직업계고의 경우 정보·통신 분야의 학생 규모 감소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보통신업의 고도화와 산업의 디지털화가 진전되는 것과는 다른 방향이라 할 수 있음. 오히려 직업계고에서는 전기·전자 분야의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고, 전문대학에서는 응용소프트웨어, 전산·컴퓨터 분야의 학생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최동선, 류지은 외, 2023).
  - 다섯째, 전문대학의 경우 간호·보건 등 분야의 학생 수 증가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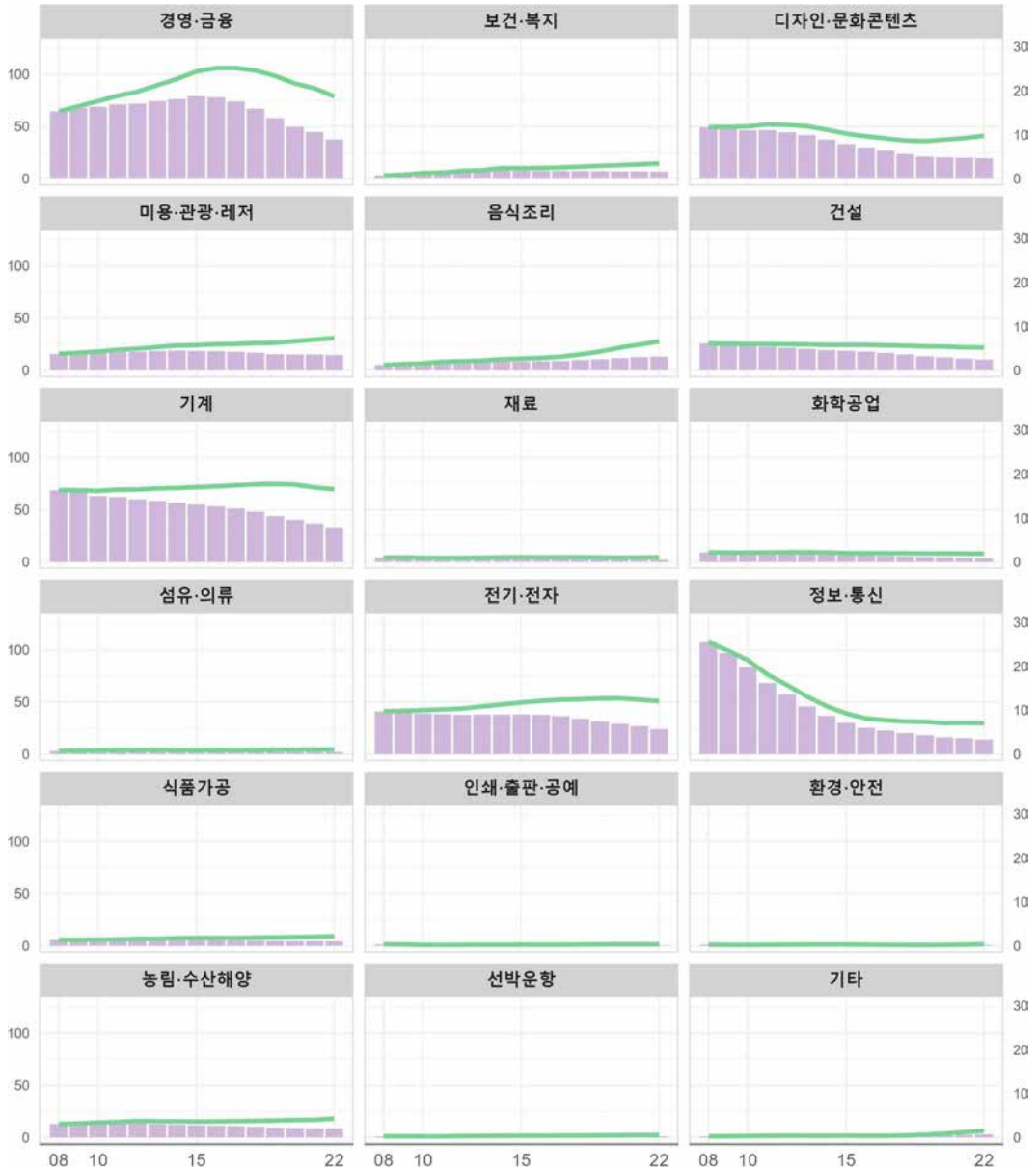
### 30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연구

있음. 직업계고도 전체 학생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간호 분야 학과의 학생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산업적으로도 보건·사회복지 분야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최동선, 류지은 외, 2023).

- 여섯째, 비록 전체에서 차지하는 규모나 비중은 작지만 직업계고의 농림·수산해양 또는 전문대학의 농림·수산 분야가 다시 확장하는 경향도 특징적이라 할 수 있음(최동선, 류지은 외, 2023).

[그림 2-5] 교과군별 직업계열 학과의 학생 수 변화 추이(2008~2022년)

(단위: 천 명, %)



주: 1. 막대그래프는 연도별·교과군별 학생 수(단위: 천 명)를, 선그래프는 연도별 전체 학생 수 대비 교과군별 학생 수의 비율(단위: %)을 의미함.

2. 공통모집 학과 또는 일반계열 학과는 제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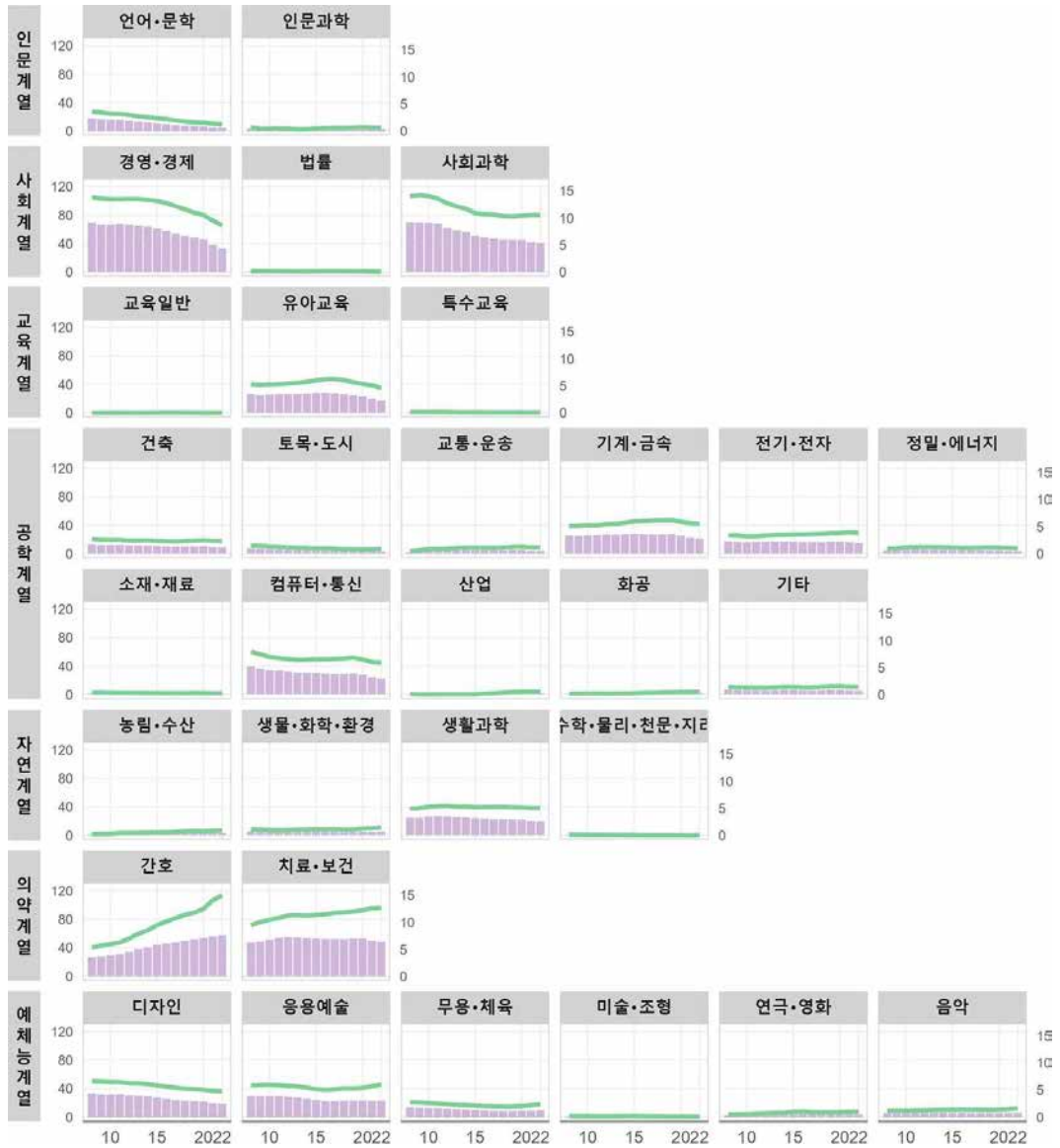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2013~2022). 직업계고 학교별·학과별 현황. 유·초등·중등 교육통계 DB.

2. 학교알리미(2020~2022). 학교현황 정보공시 자료. <https://schoolinfo.go.kr/>(검색일 2022. 7. 4.).

출처: 최동선 외(2023).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 변화와 학교 직업교육의 대응. 한국직업능력연구원. p. 92.

[그림 2-6] 전공 분야별 전문대학 학과의 재학생 수 변화 추이(2008~2022년)

(단위: 천 명, %)



주: 막대그래프는 연도별·중계열별 재학생 수(단위: 천 명)를, 선그래프는 연도별 전체 재학생 수 대비 중 계열별 학생 수의 비율(단위: %)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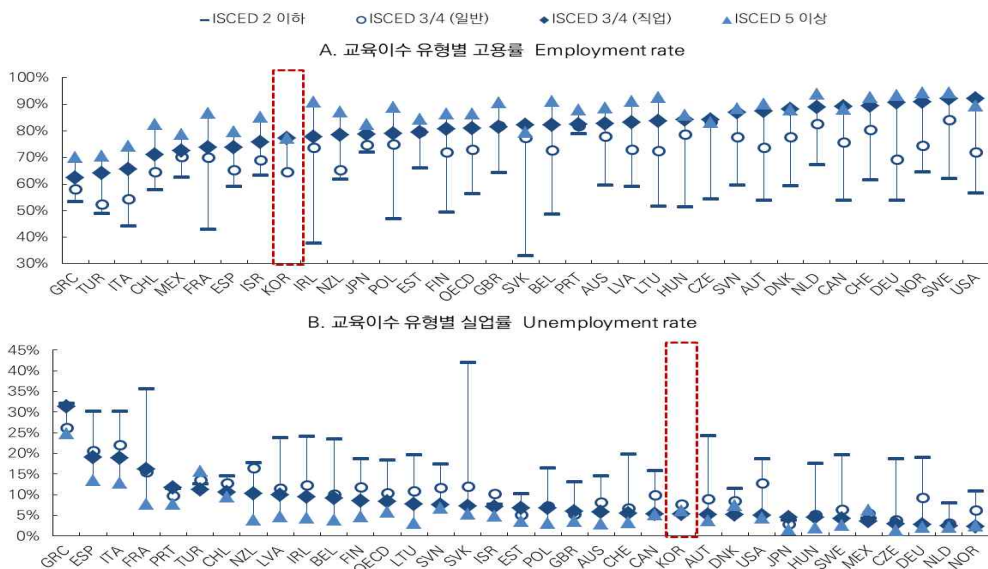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8~2022). 대학/학교별·학과별 데이터셋. <https://kess.kedi.re.kr>(검색일 2023. 5. 22.).

출처: 최동선 외(2023).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 변화와 학교 직업교육의 대응. 한국직업능력연구원. p. 93.

### 3. 직업교육 이수자의 노동시장 이행

- 직업교육 체계는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중간 숙련 수준의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경로 제공을 통한 사회통합의 기반을 제공함. 우리의 직업교육 체계도 청소년 등의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성과를 보여 왔으며, OECD 2020년 고용전망 보고서(Employment Outlook 2020)에서는 15~34세 인구(형식교육 참여자는 제외)의 고용률 및 실업률을 교육이수 유형에 따라 비교한 결과, 많은 국가에서 직업교육 이수자의 고용률 및 실업률이 일반교육 이수자보다 양호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함.
- 한편 OECD의 2020년 고용전망 보고서에서는 ① 직업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직무(예: 기계조작직 등)의 경우 잠재적인 성장기회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고, ② 전이가능 역량보다는 특정 직무에 특화된 역량을 강조하고 있으며, ③ 직업교육 이수자의 재직 중 재교육 등에의 참여도가 낮아 기술 변화 등에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도 지적하였음.

[그림 2-7] 직업교육 이수자의 고용률 및 실업률: 일반교육 이수자 등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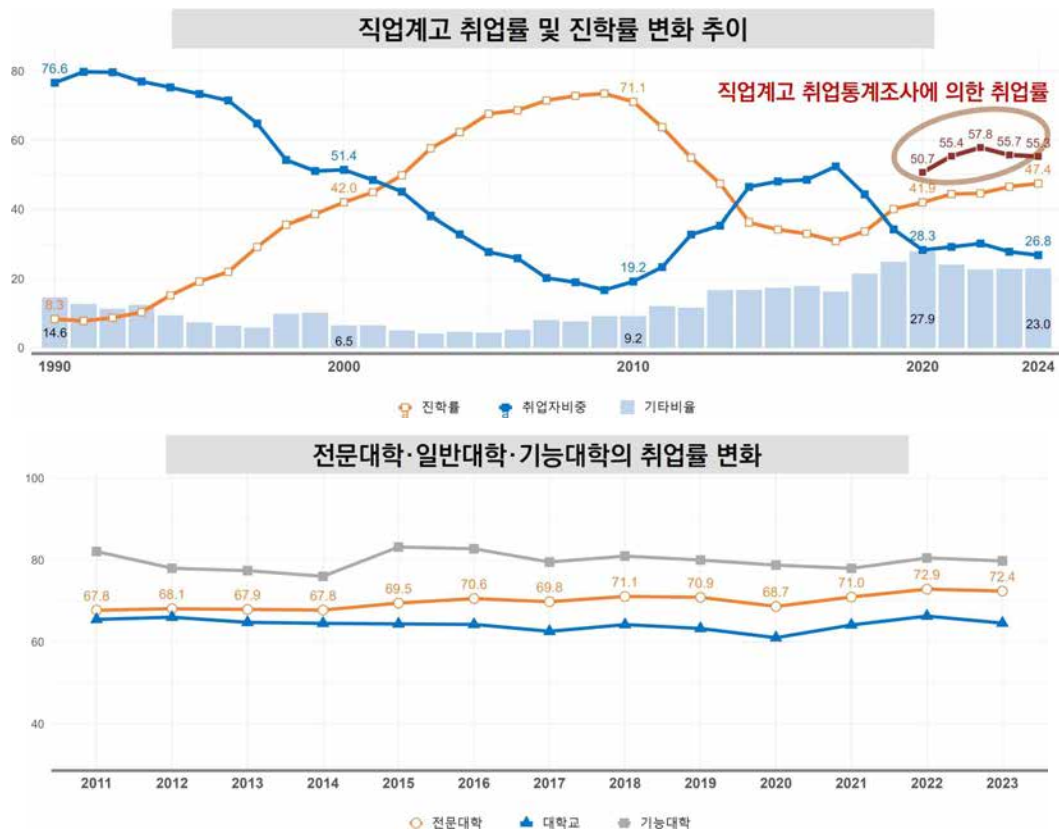


자료: OECD(2020). OECD Employment Outlook 2020: Worker Security and the COVID-19 Crisis, p. 272.

- 직업교육기관 졸업자의 일부 양적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직업계고의 노동시장 이행 성과의 악화,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차별성 약화, 직업교육에 대한 비우호적 사회 인식에 따라 청년층의 직업교육 비선호도 가중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직업교육을 종국교육(dead-ends)으로 인식하여서는 안 되며, 직업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진로경로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관심이 중요함.

[그림 2-8] 직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진로 현황 변화 추이

(단위: %)



주: 1. (직업계고)취업자 비중(%) = 취업자 / 졸업자  
 2. 직업계고 취업통계조사에 의한 취업률(%) = 취업자 / [졸업자 - (진학자+입대자+제외인정자)]  
 3. (고등교육기관)취업률(%) = 취업자 / [졸업자 - (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인정자)] (매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1.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1991~2007). 교육통계연보.  
 2. 한국교육개발원(2008~2024). 유·초·중·중등학교/학과별 데이터셋. <https://kess.kedi.re.kr>.  
 3.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0~2024).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연보.  
 4. 한국교육개발원(2011~2022). 대학 취업통계 학교별 데이터셋. <https://kess.kedi.re.kr>.

## 제2절 직업교육의 정책 대응 동향

### 1. 중등직업교육 정책

#### 가. 중등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 전략

##### 1) 마이스터고등학교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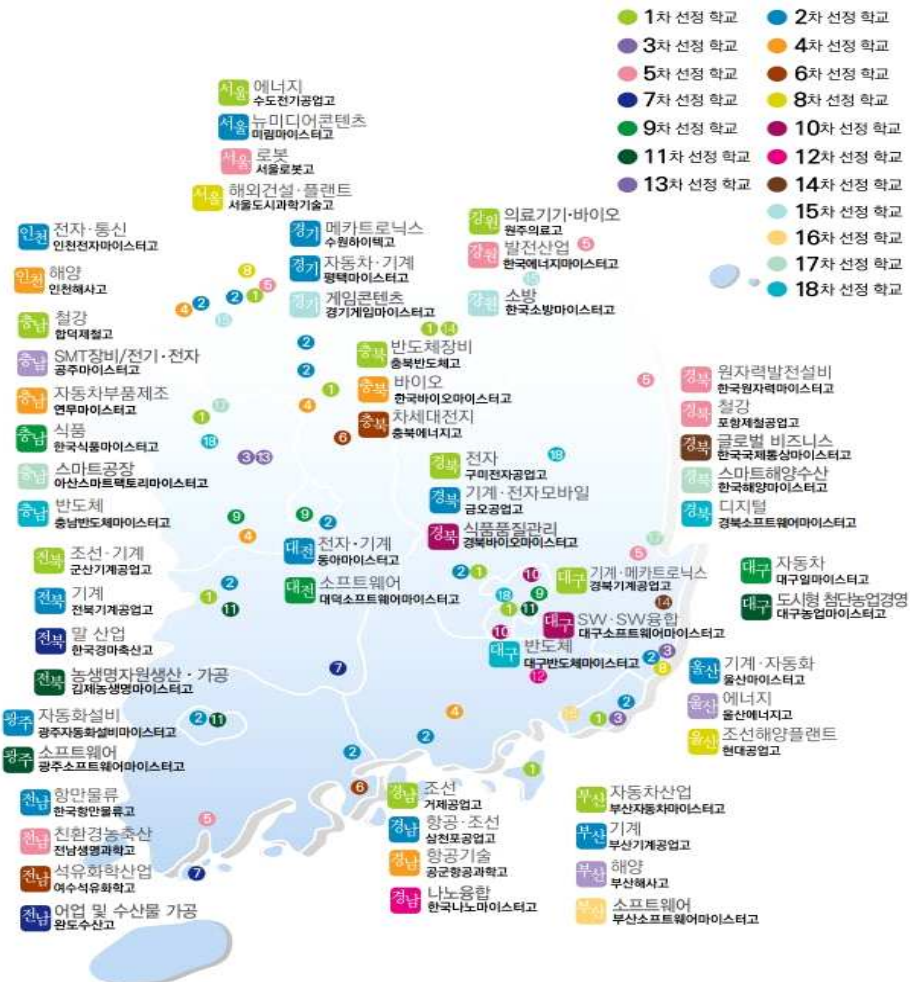
#### □ 마이스터고등학교 정책 개요

- 중등직업교육은 과거 경제·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경제환경의 변화와 지식·기술 발전의 가속화에 부합된 인력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산학연계가 산발적·형식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현장 기술 습득과 취업을 제고에 한계가 있었고, 기업은 병역을 마친 (초)대졸 인력을 선호했으며, 학생들도 단순·단기 업무 중심의 취업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음. 특히 전공과 무관한 진학이나 특성화고 교육의 반복 등 비효율성도 지적되었음.
-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08. 7. 8.)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소질과 적성에 따라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계고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주는 데 취지가 있음.
- 마이스터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해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 제시되어 있음.
- 마이스터고는 2008년 이후 지정 학교 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18년 51개교가 지정됨으로써 당초 육성계획에 제시된 50개교 지정 목표를 초과 달성함. 2019년 부산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구 부산산업과학고), 2020년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구 아산전자기계고)와 한국해양마이스터고(구 포항해양과학고)가 신규 지정되었으며, 2023년에 대구전자공업고, 예산전자공업고, 경북소프트웨어고가 신규 지정되어 2025년 개교 예정이고, 2024년에는 서울반도체고, 경주공업고가 신규 지정되어 2026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마이스터고등학교 정책 성과 및 사례

- 취업계약 입학제도를 통해 산업체와 취업(현장교육)계약을 체결하고 학생을 선발하여 현장교육과 학교 교육을 병행하며, 취업인턴제를 통해 마이스터고 재학생의 현장경험 강화, 취업 확대 및 기업의 현장 인력난을 해소함.
- 산학협력을 확충하고 산업수요에 기반한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계 주도의 현장 직업교육 관리체제를 구축함.

[그림 2-9] 제1~18차 지정 마이스터고 현황



출처: 김성남 외(2024). 2024년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사업 1.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및 개교 준비 지원. 교육부, 광주광역시교육청, 한국직업능력연구원. p. 46.

-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사례
  - 교육과정 내 기계·메카트로닉스 분야에서 AI·SW 융합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제조 데이터 수집, AR 설계, 디지털 교과서, 디지털 트윈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음. 학생 측면에서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학생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졸업생 취업 DB 기반의 AI 진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였음.
- 충북반도체고등학교 사례
  - AI·SW 융합 교육과정을 정규,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방과 후 프로그램과 전공동아리, 프로젝트 수업 발표회 등을 운영하였음. 이 외에 학교 밖 교육과정과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도 운영함. 시설·기자재 측면에서는 교육과정 개편과 시설·기자재 개선 계획의 연계성을 위해 실습실 및 동아리실을 신설하고 노후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지역사회 연계 첨단 시설·기자재를 활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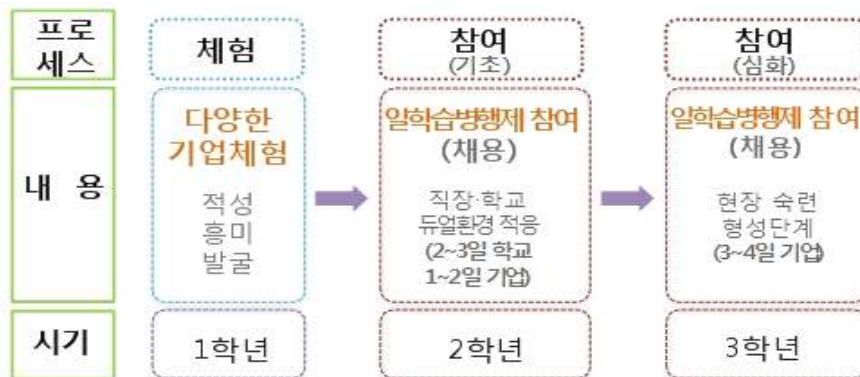
## 2)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정책

###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정책 개요

- 국내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기업들은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기존의 학교 교육은 이론 중심으로 운영되어, 학생들이 졸업 후 기업에서 즉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기업들은 신입직원의 재교육 비용 증가와 숙련도 향상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겪고 있음.
- 기존 직업교육은 산업현장의 빠른 변화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교육과정 이 기업의 기술 변화 및 요구 사항을 즉시 반영하지 못해 기업이 원하는 인력과 학교가 배출하는 인력 간의 미스매치(mismatch)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과 학교가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는 모델이 필요함.
- 독일, 스위스 등 선진국에서는 도제식 직업교육(Apprenticeship)을 통해 학생들이 기업에서 직접 실무를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높은 취업률과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이러한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학교 교육과 기업현장 교육을 결합한 새로운 직업교육 모델을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됨.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일학습병행 관련 정책사업 중 하나로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학생들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현장실무를 배우는 한국형 도제교육 모델임.

[그림 2-10]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개요



출처: 교육부, 고용노동부(2016. 4. 8.). 기업과 학교가 손잡고 미래의 기술 명장을 기른다.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p. 6.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NCS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함께 운영하는(학교: 이론 및 기초실습, 기업: 심화실습) 학교와 기업, 지역산업계의 협업을 기반으로 함.
  - 2014년 9개의 시범학교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는 참여학교가 198개교로 확대되었고, 2023년에는 72개 사업단, 143개 특성화고(170개 과정)에서 도제학교를 운영하고, 2,200여 개 기업에서 5,2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함(강경중 외, 2023).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정책 성과 및 사례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제도는 취업률에서 높은 성과를 나타냄. 2022년 기준으로 전국 도제학교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일반반은 26.1%인 반면에 도제반은 60.2%로 나타나 취업률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또한 도제반 취업자 중 96.6%가 전공-직무 일치도가 높은 동일계로 취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음(강경중 외, 2023).

- 전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졸업생 중 P-TECH 연계율은 2022년 기준 약 45.3%로 나타났다. 이는 도제 졸업생 중 절반 정도가 고교 졸업 후에도 후학을 통해 전문성 개발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강경종 외, 2023).
-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사례(고용노동부, 교육부, 2015. 10. 10.)
  - 2학년부턴 주 3일은 학교에서, 주 2일은 기업에서 현장훈련을 실시하며, 기업 배치를 앞둔 3~4월에는 사전 직무교육을 집중 운영함. 이로 인해 학생들의 현장 적응력과 기업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주)큐인테크는 인천기계공고 학생 3명을 도제 방식으로 채용하여 1:1 멘토-멘티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장 유대감과 기술 전수 효과를 높이고 있음.
- 경기자동차과학교등학교(부천공업고, 산본공업고) 사업단 사례(고용노동부, 교육부, 2015. 10. 10.)
  - KCC오토(주)를 포함한 44개 기업과 협력하여 일학습병행을 운영 중이며, 학생들은 2학년 때 주 1일, 3학년 때 주 2일씩 기업현장 훈련에 참여함. 공동훈련센터에는 정비, 도장, 차체수리 등 분과를 마련하고 각 분야의 명장을 책임 훈련교사로 배치하여 수준 높은 실무 중심 훈련을 제공함. 고교 단계에서 일학습병행 훈련을 마친 학생들은 폴리텍대학, 한국산업기술대 등에서 중·고급 기술 교육과 기업현장 훈련을 병행하며 고속로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개발 경로를 확보함.
- 원주공업고등학교(영월공업고, 강릉중앙고) 사업단 사례(고용노동부, 교육부, 2015. 10. 10.)
  - (주)이프로를 포함한 30개 기업과 함께 일학습병행을 운영하며, 학생들은 2개월 간격으로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훈련에 참여함. 공동훈련센터 내에 '생산작업실'을 구축하고, 학생들이 기업현장교사의 지도 아래 실제 제품 생산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현장 적응력을 강화함.

### 3) 직업계고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정책

#### □ 직업계고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정책 개요

- 국가기술자격은 산업과 직결된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으로, 산업현장 및 노동시장과의

#### 40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연구

연계성이 필수적임. 이에 2007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현장성 강화와 활용도 제고를 목표로 한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직무능력 반영 미흡과 낮은 활용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등 미래 변화는 산업 및 직업 구조를 재편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새로운 직무역량 반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국가기술자격제도 개편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질 제고와 검정의 공정성 확보 등도 함께 요구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노동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인정받는 자격이자 혁신 성장을 이끄는 인재 양성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이 마련·추진되고 있음.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육훈련과정 이수 후 평가를 거쳐 합격 기준을 충족한 이수자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2015년~)를 말함. 2025년 기준으로 검정형 자격 총 540개 종목 중 201개 종목이 과정평가형과 병행 운영되고 있으며,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201개 종목(2024년 대비 15개 종목 추가)에 대한 운영기관(총 504개)과 교육훈련과정(1,683개)을 지정함(고용노동부, 2025. 1. 23.).

#### □ 직업계고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정책 성과 및 사례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산업현장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실무 중심의 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검정형 자격과 비교하여 취득자 및 기업으로부터 높은 효용성을 인정받음.
  - 과정평가형 취득자의 취업률(43.4%)이 검정형 취득자의 취업률(29.1%)보다 14.3%p 높고, 취업 소요 기간은 약 10일이 짧음(고용노동부, 2025. 1. 23.).
-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의 역량이 우수함.
  - 5년 경력자 대비 신입사원 역량(5년 경력자=100) 측면에서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의 역량(60.0%)이 상대적으로 우수(검정형 54.1%)하고, 현장 적응 기간도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2.2개월)가 상대적으로 짧음(검정형 3.6개월)(고용노동부, 2025. 1. 23.).

- 관계부처와 산업현장의 요구를 토대로 매년 인기 종목을 중심으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종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년 종목에 더해 로봇기구개발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산업기사(태양광),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기능사 등 15개 종목을 새롭게 개설하여 과정평가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 ('21년) 167개 → ('22년) 178개 → ('23년) 179개 → ('24년) 186개 → ('25년) 201개
-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컴퓨터응용가공 산업기사) 사례
  -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교육훈련과정을 설계하여 산업현장의 실제 직무역량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기술 연수 프로그램 참여와 현장 적용 사례 학습 등을 통해 내부 강사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함. 이러한 노력으로 훈련생의 실무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외부평가 응시자의 93.1%가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포스코 및 계열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주요 기업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둠(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24).
-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생산자동화 산업기사) 사례
  - 기계·메카트로닉스 분야 마이스터고인 경북기계공고는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산업기사 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있음. 특히 자동화시스템과에서 운영 중인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과정은 2022년 합격률 81.25%에서 2023년 94%로 크게 향상되어 성과를 인정받음(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24).

#### 4)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

##### □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 배경

- 최근 산업구조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및 모바일 기술 등 첨단 기술의 혁신과 융합이 더욱 중요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우리나라의 일자리 및 중등직업교육 정책에도 많은 변화와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고졸 인력 수요 증대를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최동선, 변숙영 외, 2023).
- 고졸 인재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고졸 취업 문화 확산을 위한 많은 노력이 지속되어 왔음

## 42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연구

에도 불구하고 직업계고 간 양극화, 직업교육과 산업수요 간 인력 수급 불일치 등은 우리나라 중등직업교육의 발전과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됨.

- 2016년에 직업계고 학생 비중 관리 지원 사업으로 시작하여 2018년부터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직업계고의 학교 및 학과 개편을 통한 내실화를 중점 지원함(최동선 외, 2024).
- 2023년에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2.0 지원 기본계획'(교육부, 2023. 3. a)에서는 ① 직업계고에서 신산업·신기술·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트랙 1)을 지원하고, ② 각자 전공 영역과 신산업·신기술 분야가 융복합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모듈형 교육과정(트랙 2)을 도입하며, ③ 지역 특색을 반영한 학교별 자체 발전전략(트랙 3)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을 개편하는 것으로 기존의 직업계고 재구조화 학과 개편 지원 사업에 변화를 주었음.
- 2024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에서는 60개교 86개과가 최종 선정되었고, 선정된 학과 개편 대상학과는 신산업·신기술 및 지역전략산업(트랙 1)에 39개교 54개과, 학교 자체 발전전략(트랙 3)에 29개교 32개과임.

### □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 성과 및 사례

- 2016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이 시작된 이후 2017년부터 해당 사업을 통해 개편 또는 증설한 학과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음. 2017년 23개 직업계고에서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개편·증설한 학과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기 시작하였고, 2024년에는 359개교가 재구조화에 따른 신입생 모집 및 학과 운영을 추진함.
- 재구조화 개편 학과와 전체 직업계고의 신입생 충원율을 비교해 보면, 2017년 재구조화 개편 학과는 98.5%이고, 전체 직업계고 충원율은 96.3%로 재구조화 개편 학과의 충원율이 약간 높게 나타남. 2020년, 2021년, 2022년에도 재구조화 개편 학과의 충원율이 전체 직업계고 충원율보다 높게 나타남.
- 재구조화 개편 학과의 졸업자 중 취업자 현황을 보면, 2019학년도(2020년 2월) 37.7%, 2020학년도(2021년 2월) 36.7%, 2021학년도(2022년 2월) 34.2%임. 이를 전

체 직업계고의 취업자 비율과 비교해 보면, 재구조화 개편 학과의 취업자 비율이 전체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보다 약 5~10% 정도 높게 나타남.

-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신기술·신산업 분야) 사례
  - 인천전자마이스터고 인공지능전자과는 AI 기술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2020년 전자제어·전자회로과를 개편하여 신설된 학과임. 해당 학과는 인천경총, 인천테크노파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등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우수 AI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함.
  -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펌웨어와 AI 기술을 융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ARM 펌웨어, AI 플랫폼, AI 펌웨어, AI 모델링 등 신기술 중심의 교육과 인공지능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졸업 후 곧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실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함.
-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지역산업 연계형) 사례
  - 지역산업 수요에 맞춰 스마트팜 구축 및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스마트팜관리사, 품질관리사, 농기계정비사 등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편함.
  - 스마트팜관리과는 지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농생명 계열 스마트팜 분야의 창의·융합형 기능 인재를 양성하며, 자격 취득과 현장 중심 취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지역 연계형 직업교육 모델을 제시함.

#### 나. 중등직업교육의 선취업-후학습 경로 정착 전략

##### 1) 일학습병행 정책

###### □ 일학습병행 정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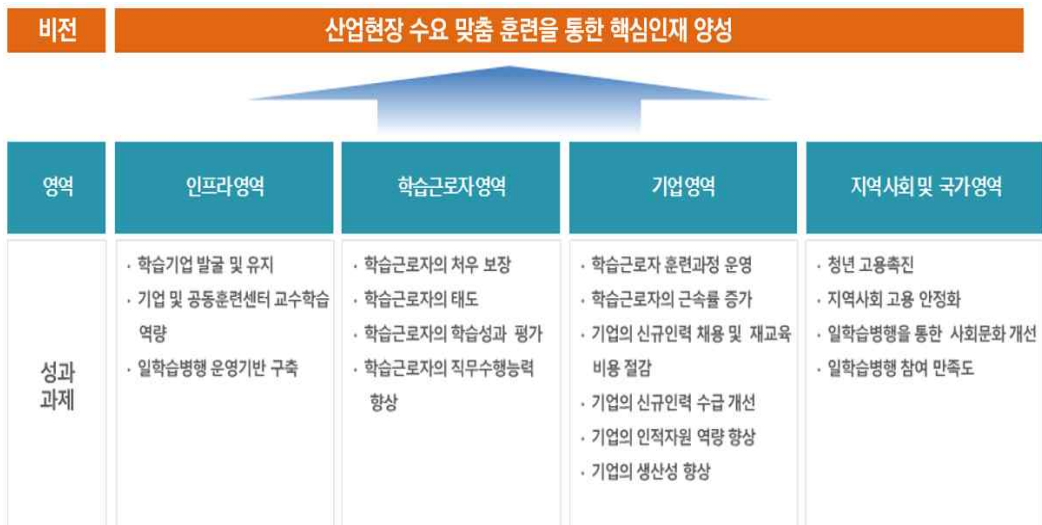
- 많은 기업이 지식경영활동을 통해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자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며, 그중 하나로 조직 내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무교육훈련체계 구축이 강조됨. 기업들은 직무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취업 기피, 신입사원의 조기 퇴사,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인력 손실 문제가 여전히 존재함.
- 일학습병행은 산업현장의 직무와 학교 교육의 불일치 해소, 청년 실업 문제 개선, 인재 양성에 대한 기업 인식 부족 개선, 기업의 재교육 비용 절감, 신규 입직자의 직무수행능

44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연구

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도입함(관계부처합동, 2013. 8. 29.).

- 한국형 도제훈련제도라 불리는 ‘일학습병행’은 독일과 스위스 등의 도제훈련제도를 한국 현실에 맞게 설계한 것으로, 기업이 주체가 되어 학습근로자에게 체계적인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실무에 필요한 이론교육은 공동훈련센터(특성화고/전문대학/대학교)에서 제공하여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학습근로자를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학습근로자에게 국가 차원의 자격(또는 학위)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훈련제도임.
- 일학습병행은 2013년 9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2014년부터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2019년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8. 27.)되고, 2020년 관련법이 시행(8. 28.)됨에 따라 한국식 일학습병행은 직업훈련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일학습병행 추진계획 수립)에 근거하여 제1차(’21~’23)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었으며, 2024년에 제2차(’24~’26)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이 수립됨.
- 2024년 9월 기준으로 약 21,265개의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약 156,536명의 학습근로자가 훈련에 참여 후 종료하였거나 참여 중임.

[그림 2-11] 2024년 일학습병행 성과관리 체계



출처: 박종성 외(2024), 2024년 일학습병행 성과관리 지원사업 2-2. 일학습병행 성과진단.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연구원. p. 40.

## □ 일학습병행 정책 성과 및 사례

- 학습근로자의 관점에서 보면 일학습병행 이수 후 임금 수준 향상, 학습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동종 산업 정착률 향상, 동종 직종 근속률 향상 등의 다양한 성과가 나타남.
- 기업 입장에서 기업 필요 숙련인력 조기 양성, 기업의 생산성 향상, 일학습병행 시작 전에는 구축되지 않았던 교육훈련체계 구축, 일학습병행 실시 이후 신규 근로자들의 이직률 감소 등의 성과를 보임.
- 인력양성체계 구축 및 재교육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등 고품질 훈련으로 인식되어 기업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며 학습기업의 훈련 재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또한 산업현장 중심 교육으로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 경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청년의 조기 입직을 지원하기도 함.
-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사례
  -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는 2014년 일학습병행 제도 도입 초기부터 참여한 우수 운영 학교로, 지금까지 총 553명의 숙련 기능인력을 배출하였으며, 이 중 90명은 기업 내 중간관리자로의 성장을 위해 후학습에 참여 중임. 재학생 양○○, 방○○은 2학년 재학 중 일학습병행 훈련을 시작하여, 졸업 후에는 대구수성대 P-TECH(고숙련 일학습병행) 과정에 참여해 병역혜택과 기계 전공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2024년에는 경북대학교의 일학습병행 경력개발고도화 과정에 진학하여 학사 수준의 교육훈련을 통해 엔지니어로의 성장을 준비하고 있음(고용노동부, 2024. 3. 21.).
-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사례
  - 2015년 전국 최초로 자동차 분야 산학일체형 도제 거점학교로 지정된 데 이어, 2017년부터는 독일의 일학습병행제도인 아우스빌동 프로그램 참여학교로도 선정됨. 소수 정예 학생을 선발해 맞춤형 정비시스템을 적용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자동차 실습시설을 기반으로 개별 학습이 가능한 환경에서 맞춤형 실습을 운영함(고용노동부, 2024. 3. 21.).

## 2) 재직자 특별전형 정책

### □ 재직자 특별전형 정책 개요

- 과거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는 산업인력 양성과 기능인력 양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최근 대학 진학이 상대적으로 쉬워지게 되어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의 졸업 후 대학 진학률이 높아짐에 따라 특성화고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 고등교육이 대중화되고 학력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현대 사회의 실태를 고려할 때,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의 고등교육 진학 욕구를 강제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또는 진학이라는 양극화된 기존의 진로경로를 '졸업→취업→계속교육' 등으로 다각화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재직자 특별전형 정책이란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졸업자와 직업교육훈련 과정(위탁교육을 수료한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 이수자 중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말함.
- 재직자 특별전형에 관련된 운영 지원 사업은 목적 및 사업 내용에 따라 시기별로 명칭이 변경되어,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재직자특별전형 운영 지원 사업'이었으며, 2015년부터 2016년에는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 사업'이었고, 2017년부터는 평생학습중심대학과 평생학습 단과대학 사업이 합쳐져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음.
- 재직자 특별전형은 2010년에 수도권 소재의 2개 대학과 지방 소재의 1개 대학, 총 3개 대학이 처음 도입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2023년 기준 수도권 재직자 특별전형 개설 대학은 31개이며, 수도권 외 35개 대학이 운영하고 있음.

### □ 재직자 특별전형 정책 성과 및 사례

- 재학생들의 적응 및 학습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업과 실무 병행이 가능함.

- 현장실습 과목 비중 확대 등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재학생 특성에 맞는 유연한 학사관리 도입, 재학생의 경력개발을 위한 진로상담, 취업지원 등 지원, 재학생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성과가 나타남.
-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령기 학생 중심의 고등교육 체계를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체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여 선취업·후진학을 활성화함으로써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됨
- 경북비즈니스고등학교 임○○ 사례
  - 경북비즈니스고등학교 2020년 졸업생인 임○○는 고등학교 시절에 IT비즈니스과를 전공하였고, 현재는 CJ ENM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 인사 직무를 맡고 있음. 임○○는 재직자 특별전형 제도를 통해 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에 입학하였음. 임○○는 특성화고 진학을 목표로 했던 가장 큰 이유로 ‘재직자 특별전형’ 제도를 들면서 후배들에게 제도 적극 추천한다고 했음. 고등학교 시절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취업과 진학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현재 대학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음. 경북비즈니스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사무행정’ 과목의 실습시간에 기안문서나 공문서 작성 방법을 배웠는데,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학교에서 배운 기초적인 실무지식의 중요성을 느꼈다고 함.
- 미림마이스터고등학교 박○○ 사례
  - 미림마이스터고등학교를 졸업한 박○○는 홍익대학교 디자인경영융합학부를 다니면서 신영증권 브랜드전략팀에서 근무하고 있음. 증권사와 고객에게 필요한 웹서비스 디자인과 기업 브랜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미림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경험한 UIUX 디자인 프로젝트 주도 경험이 현재 회사 직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함. 박○○는 인생 최고의 선택 중 하나는 미림마이스터고등학교 뉴미디어디자인과 진학이었다고 하면서 최고의 선생님, 커리큘럼, 시설을 갖춘 학교에서 IT 기업 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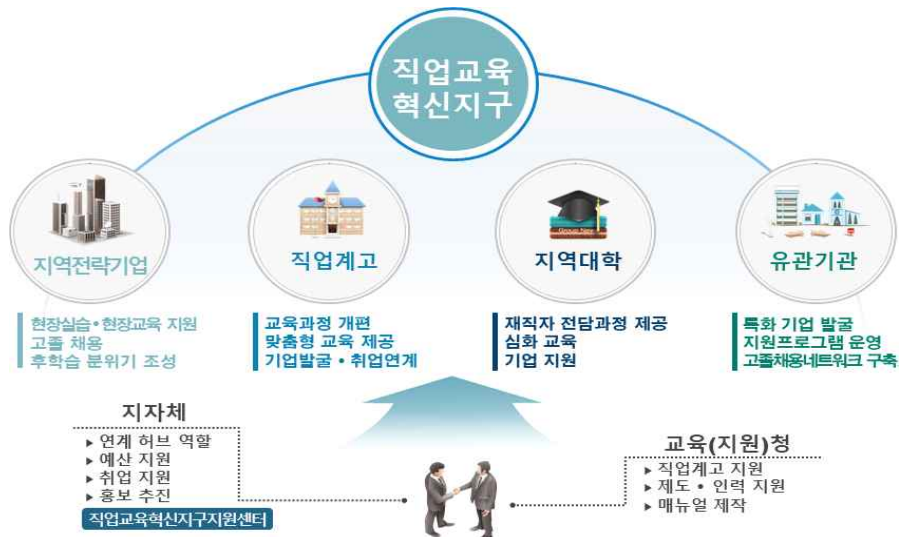
다. 중등직업교육의 지역인재 육성 강화 전략

1)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배경

- 직업계고 졸업생은 지역 정주 경향이 높고 우수한 역량을 입증하고 있어 지역인재로 자라나도록 각종 지원이 필요함. 유사한 정책적 배경을 가진 협약형 특성화고, 교육발 전특구, RISE 등 정책과 연계해 지자체-교육청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또한 요구됨.
- 지역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과거와 달리 고졸 인력의 지역 취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요구되고, 지역 내에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미 노동시장에 진출한 고졸 근로자에게 양질의 재직자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함.
- 중등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한 단위학교 차원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졸 기술 인 력은 여전히 부족하므로 단위학교를 넘어선 체계적인 중등직업교육 플랫폼 구축·확산 이 필요함.
-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목적은 '지자체-교육청 간 직업교육 플랫폼'을 통해 직업계 고-지역 기업-대학이 참여하는 지역 고졸 인재 성장경로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임.

[그림 2-12] 직업교육 혁신지구 개요도



출처: 교육부(2020. 11. 25). 직업계고-지역협업 기반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공고. 교육부 보도자료. p. 2.

-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내용은 지자체·교육청이 운영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 센터’ 중심으로 기업, 직업계고, 대학, 유관기관과 연계·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축, 지역전략·특화 산업 분야에서 기업, 대학 등과 협력하여 직업계고 학생 대상 교육과정·취업·후학습 관련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자립형 혁신지구 추가·확대 운영, 타 사업과의 연계 등 직업교육 혁신지구의 자생적 운영체계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됨.

#### □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성과 및 사례

- 산업맞춤형 전문기술인재 양성(산업체 연계)
  - (진주·사천·고성) 100여 개 항공 분야 산업체 협의체와 연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우수 항공정비 기업(KAEMS)과 연계한 취업연계형 현장실습, 지멘스와 연계 운영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인원 전원 독일 기업 취업 확정 등
- 일학습병행 모델(대학 연계)
  - (대구) 대학·기업·직업계고 간 일학습병행 MOU를 체결하여 160여 명 학생의 일학습병행 취업 완료, 스마트팩토리 교육을 실시하여 제조업 등 지역기업에 160여 명이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일학습병행 추진
- 정주여건 마련 우수사례(지자체 등 연계)
  - (창원) 지자체 정책과 연계하여 채용장려금 지급, 고용 우수기업 선정, 청년 월세 지원, 맞춤형 청년 주택 지원 사업 운영 등 지역 내 정주 지원

〈표 2-2〉 직업교육 혁신지구 현황

선정연도	지역		지역 전략·특화 산업
2021	광역	부산	지능형제조, 글로벌관광
		대구	지능형 공장
		인천	항공 MRO, 바이오
	기초	천안	반도체·디스플레이
		사천·진주·고성	항공 산업
2022	광역	광주	미래형 운송기기, 에너지산업
		울산	그린 모빌리티
		경북	첨단신소재부품 가공
	기초	창원	스마트제조
		김해	미래자동차·의생명
2023	광역	전북	스마트 농생명·바이오
	기초	당진	철강, 에너지
2024	광역	서울	철도, 인공지능, 콘텐츠, 로봇

출처: 교육부(2024. 3. 8.). 직업교육 혁신지구에 서울특별시 선정, 지역 특화·전략 산업 분야 고졸 인재 키워낸다. 교육부 보도자료. p. 6.

## 2)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정책

### □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정책 개요

- 인구소멸지역 특성화고등학교의 입학자원 축소가 현실화되면서 일반고 대비 특성화고의 감축 추세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 예상되고, 동일 지역 정착 경향이 높은 청년들의 지역 이탈을 가속화시키며 지역 내 인력난 증가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인재의 양성·성장 경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짐.
- 2023년에 발표된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관계부처합동, 2023. 8.)에서는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을 대비한 기술인재 양성’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한 8대 과제를 제시하고,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 도입 및 35개교 육성’을 처음 제안하였음. 이후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추진을 위해 「지역 거버넌스 중심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교육부, 2024. 1. a)이 후속적으로 발표되었음.
-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 분야, 지역기반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새로운 유형의 학교운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비전과 추진 방향은 ‘협약’이라는 기제를 통한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의 요구 또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학교를 육성하며, 운영 방향과 내용 설정에 있어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2024년 1기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는 총 15개 지역, 37개 컨소시엄이 참여하였으며, 37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9개 지역, 10개 컨소시엄이 선정되었고, 2027년까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35개 육성하여 지역에서 시작되는 교육혁명의 확산을 지원할 예정임.

[그림 2-13]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 방향



출처: 교육부(2024. 1. a). 지역 거버넌스 중심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 p. 5.

□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정책 성과 및 사례

- 지역의 전략 산업과 연계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특성화고 학생의 지역 취업률 및 정주율 제고에 기여함.
- 기업과 협약을 통해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협약 기업과 연계한

조기 취업 및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졸업 후 실무 적응 기간 단축으로 현장 투입이 가능한 인재를 배출함.

- 학생은 협약 기업을 통한 취업 보장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은 맞춤형 인재 확보로 채용 비용 절감 및 인력 수급 안정성을 확보함.
-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대전) 사례
  - 방산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인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는 대전방위산업연합회와 방위산업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교육과정 변혁을 꾀하고 있음. 대전교육청은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제도적 지원을 추진 중이며, 한밭대학교는 방위산업 프로젝트 과제 개발을, 대전광역시 방위산업 채용 정보 제공과 협약 기업 발굴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충남) 사례
  - 기업 소프트웨어(SW)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인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는 충남교육청, 에스에이피(SAP) 코리아,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협업하여 교육과정 설계를 추진하고 있음. 충남교육청은 교원 배치와 비즈니스 플랫폼 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리아이즈(RISE) 추진계획과 연동한 후학습 지원 과제 발굴을 지원함.

## 2. 고등직업교육 정책

### 가. 전문대학의 실무인재 양성기능 강화 전략

#### 1)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 디지털 산업의 발전과 저탄소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 추세에서 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인재 양성이 시급하고, 우리 산업의 허리인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적용·확산을 주도하는 전문기술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른 우수한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 전문대학 혁신방안(교육부, 2019. 12. 23.)에서는 ① 고등직업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미래 신직업 수요 대비 교육과정 혁신과 중등-고등 단계 직업교육 연계 강화, ② 평생 직업교육기관으로의 기능 강화를 위해 직업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새로운

고등직업교육 모델 ‘마이스터대학’ 도입, ③ 미래사회 대응 직업교육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와 효율적 직업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함(교육부, 2019. 12. 23.).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자율협약형(I 유형), 역량강화형(II 유형), 후진학 선도형(III 유형) 등 총 3개 유형으로 구성됨. 자율협약형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혁신 기반 구축에 방점이 있고, 역량강화형은 적정 규모화 유도과 특화 발전 지원에, 후진학 선도형은 지역 주민과 재직자 등 다양한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후학습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대학-산업체 간 연계 강화에 집중함.

[그림 2-14]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추진 방향



출처: 교육부(2024. 2. a). 2024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일반재정지원 기본계획. p. 4.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 및 사례(교육부, 2024. 2. a)

- 각 대학의 인재상 등을 반영하여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근거해 사업계획을 수립·운

영함으로써 자율적 혁신을 강화하고, 대학별 발전 전략에 따른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투자를 지원하여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함.

-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 및 교수학습법 개발·적용 등을 통해 우수 전문기술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신산업 등 산업 변화를 반영한 교과·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으로 산업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각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기자재 구축을 지원함.
- 졸업생들이 졸업 후에 산업현장에 투입되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진로 및 취업 내실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양질의 일자리 취업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요소를 실제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졸업 후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전문대 졸업생들이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전반의 과정을 지원함.
- 학사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시스템 유연화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도모함.
  - (A 대학) 학사제도 개선을 통해 3개 대학 공동 융합 교양 교과목 개발·운영 및 학생 선택형 유연 학기제(다학기, 집중이수, 계절학기) 운영을 통해 창의·융합형 우수인재 양성
- 대학 특성을 반영한 산학협력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과 연계한 성인학습자 과정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산업-대학 간 특성화 분야를 연계함으로써 지역 특화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함.
  - (B 대학) 틈새·융합직무 교육을 위해 2개 이상의 산업체로부터 직무를 주문받아 신산업 수요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및 직무능력 향상 도모
- 다양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실무역량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현장직무역량 및 취업역량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 취업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함.
  - (C 대학) 산업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고교-전문대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연계 기업 취업 시 서류전형 면제 등 혜택 제공을 통해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취업역량 제고

## 2)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 □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개요

- 지역소멸 위험 확대와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비수도권 대학의 학생충원 어려움으로 인해 지역과 지방대학 공동위기가 가속화되고, 비수도권 사립대학의 학습여건·교육환경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음.
- 지역인재가 지역에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 산업·학생 수요 맞춤형 특성화 인재 육성 전략 마련 및 추진이 필요함.
-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은 지역소멸 위험과 지방대학 공동위기에 대응하여 비수도권 사립대학이 여건 개선 및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지자체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에 추진됨(교육부, 2024. 3.).
-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은 지자체와 대학이 상생·협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자체-대학 파트너십을 고도화하고, 비수도권 사립대학의 여건 개선 및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국고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산업·학생 수요 맞춤형 특성화 성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추진됨.
-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방대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운영,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성화 전략·계획 수립 및 추진, 지역·학생 수요 맞춤형 특성화 인재 육성임.

### □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성과 및 사례

- 지자체와 지역 소재 지원 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지역 내 총괄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여 지역별·대학별 특성화 분야 및 특성화 계획 수립을 통한 협력을 확대함.
- 지역 수요 맞춤형 특성화 인재 육성 및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전공·학과 간 벽을 허무는 학과구조 개편 및 학사제도를 유연화함.
- 대학·지자체·지역산업계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특성화 분야 지역 연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청년의 정주를 지원함.

- 지자체-대학 간 거버넌스를 통한 협력
  - (A 대학) ○○도 상생발전협의회 산하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실무협의회 거버넌스 구축 및 학내 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역 내 환경 분석 및 수요를 바탕으로 바이오 헬스 및 커뮤니티 케어 특성화 방향·전략을 도출함.
- 학과구조 개편 및 학사제도 유연화
  - (B 대학) 학생의 전공 선택권 보장을 위해 無학과 계열단위 입학 후 소단위 전공을 선택하는 학사구조로 개편하고, 다전공 진입의 수월성을 제공하기 위한 모듈형 연계 전공을 신설함.
- 대학-지자체-지역산업계 연계 체계 구축
  - (C 대학) ○○시경력개발센터, ○○시창업교육센터와 지자체·지역산업계의 연계 체계 구축 및 특성화 분야(사이버보안, 미래차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스마트시티) 지역 연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

### 3)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 □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개요

-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해당 분야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고숙련(Upskill) 전문직업인(최고기술자)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전문대 졸업생 입직 비율이 높은 중소기업 등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교육과정 수준의 고도화가 요구됨.
- 직업계고-전문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 미흡으로 비효율이 발생하고 고숙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체계적 직업교육체제 구축에 있어 한계 상황을 겪게 되면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을 졸업한 실무 전문가의 지속적 성장과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해짐.
- 마이스터대는 대학의 일부 학과(또는 전체)에서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단기-전문학사-전공심화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대학을 말함. 마이스터대 모델은 새로운 고등직업교육 모델로서,

「고등교육법」 개정(2021. 3.)으로 마이스터대 1차 시범 운영 대상을 선정하고 20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를 통해 마이스터대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로의 성장경로를 제시하고 체계적·장기적 역량개발을 지원함(교육부, 2023. 3. b).

- 교육부는 2021~2022년에 5개교(3개 연합체, 대학 2개교)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하였고, 2023년에는 6개교를 마이스터대로 선정·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신규로 인가받은 대학 중 3개교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 9개교(2023년 6개교+신규 3개교)를 지원함.

[그림 2-15] 마이스터대 교육과정 운영



출처: 교육부(2024. 1. 24.). 전문기술석사 최초 배출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성과토론회 개최. 교육부 보도자료. p. 1.

□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성과 및 사례(교육부, 2024. 1. 24.)

- 미래 산업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현장 밀착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며, 일반대학원과는 차별화된 '비논문 학위 취득 과정' 중심으로 운영함.
- 선행경험학점인정제(RPL), 마이크로 디그리, 집중이수제 등을 제도화하여 근로자 학생의 일학습병행을 지원하고, 기업의 애로기술 컨설팅 및 연구 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기업 투자 유치 및 수주 확대에 기여함.
- 마이스터대 조기 정착을 위한 학사제도 연구개발
  - (A대학) 마이스터대 도입 및 운영을 통해 학제 간 연계 교육모델을 구축하여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함. 학위과정에서는 정규·비정규 프로그램 참여를 바탕으로 기술개발 및 연구 역량, 고숙련 현장실무능력, 산학협력 역량, 지역사회 기여 및 글로벌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문기술석사 학위를 부여함.

- 산업체 및 대학 협력 체계 구축
  - (B 대학) 재정지원의 효율성 사용 및 지속성 증대를 위해 폴리텍대학(부산, 항공, 로봇 캠퍼스)의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클러스터 체제를 구축함.
- 현장밀착형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 (C대학) 3D CAD, CNC 가공 등 현장실무 중심 교과와 3D 측정, 5축 가공 등 산업체 선도 기술 교과를 포함한 현장밀착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여 단계별 교육 연계를 강화하고 있음.
- 기업연계 프로젝트 중심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 (D대학)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중심으로 산업체 경력자에게 석사학위를 부여하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졸업예정자 기준 총 20개 프로젝트, 137억 원 규모의 기술 해결 및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기업과 학생의 동반성장을 유도함.
- 산업체 자문 및 애로기술 지원 프로그램 운영
  - (E대학) 진단검사 기술과 연계된 반려동물 배변관리용 자가분석 배변패드 개발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핵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지역기업의 애로기술을 해소함.

#### 4)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 □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개요

- 산업계가 신산업으로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술 등에 특화된 인재 양성 확대 및 산업현장 투입이 절실하고, 신산업 분야의 인력 부족, 미스매치 문제 해소를 위해 전문대학을 통한 현장맞춤형 신산업 전문기술인재 양성 확대가 필요함.
- 전문대학은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우수한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강조됨.
-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 변화에 부합하는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지원함.
-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되어 ‘학과 개편 현장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사 운영 유연화’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 실무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였고, 2024년부터 시작한 2주기 사업(2024~2026년)에서는 다양한 신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 분야를 항공·우주, 미래 이동수단, 생명건강, 첨단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으로 확대하였음.

-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의 1주기(2021~2023년)에서는 총 14개 전문대학이 선정되고, 2주기(2024~2026년)에서는 지원 대상이 17개 전문대학으로 확대되어 142억 원을 지원하고 있음.

〈표 2-3〉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운영 현황(가나다순)

구분	연번	전문대학	신산업 분야	연번	전문대학	신산업 분야
1주기 (21~ '23)	1	경남정보대	차세대 반도체	8	영남이공대	미래 자동차
	2	대구보건대	맞춤형 건강관리(헬스케어)	9	오산대	차세대 반도체
	3	대림대	차세대 반도체	10	울산과학대	스마트·친환경선박
	4	동서울대	미래 자동차	11	유한대	생명건강(바이오헬스)
	5	동양미래대	인공지능	12	전남과학대	미래 자동차
	6	안동과학대	혁신신약	13	조선이공대	차세대 반도체
	7	연암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14	청강문화산업대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2주기 (24~ '26)	1	강원도립대	지능형(스마트)건설	10	연성대	클라우드
	2	경남도립거창대	항공·드론	11	영남이공대	미래자동차
	3	계명문화대	인공지능	12	오산대	차세대반도체
	4	대구보건대	생명건강(바이오헬스)	13	울산과학대	지능형(스마트)·친환경선박
	5	대림대	차세대반도체	14	유한대	생명건강(바이오헬스)
	6	동원과학기술대	지능형 농장(스마트 팜)	15	전주비전대	이차전지
	7	부천대	지능형(스마트)공장	16	조선이공대	차세대반도체
	8	서일대	인공지능	17	한국영상대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9	순천제일대	이차전지			

출처: 교육부(2024. 1. 23.). 현장직무능력 갖춘 신산업 전문기술인재 양성.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2025. 2. 6.). 지역사회에 필요한 신산업 인재 양성 전문대학이 앞장섭니다. 교육부 보도자료

-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은 디지털 전환 등 산업 변화에 따른 신산업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전문대학이 현장 직무역량을 갖춘 전문기술인재 양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은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신산업 변화 추세에서 전문대학이 선도적인 역할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음(교육부, 2024. 1. 23.).

□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성과 및 사례(교육부, 2024. 1. b)

- 신산업 분야 학과 신설·변경·융합 전공 개설 등 산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전문대학의 학과 구조조정을 실시함.
  - 학과신설(3개교), 전공융합(4개교), 학과 변경(2개교) 등 9개교 학과 개편 및 2개교 정원 증원
- 수요조사를 통해 현장 친화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혁신적 교수학습법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신산업 분야 역량 함양을 지원함.
  - 교과목 개발·개편(424건 이상), 산학공동과정·단기직무과정 개발 운영(62건 이상), 학습콘텐츠 개발(196건 이상)
- 신산업 분야에 걸맞은 교원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교원 확보 및 연수 확대, 학칙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신산업 교육 성과 제고를 위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신산업 분야 인력 양성 기반을 구축함.
- 신산업 분야 학과 신설·변경·융합 전공 개설
  - (A 대학)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과를 신설하고, 입학정원 증원 및 대학의 학과구조를 신산업 기반으로 개편하는 등 사업성과의 학내 확산을 추진함.
- 현장 친화적 교육과정 설계 및 혁신적 교수학습법 적용
  - (B 대학) 현장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AD(Adventure Design), 과제형 현장실습, 캡스톤 디자인을 포함한 스마트팜 리빙랩 교육시스템을 구축·운영함.
- 신산업 분야에 걸맞은 교원역량 강화 지원
  - (C 대학) 교수자의 경력 및 교수역량에 따라 교원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지원함.
- 신산업 교육 성과 제고를 위해 교육환경 개선
  - (D 대학) 반도체 장비 요소기술 실습실 및 실습장비 구축, 현장실무 중심의 기자재 도입(32건)을 통한 로봇 실습실 구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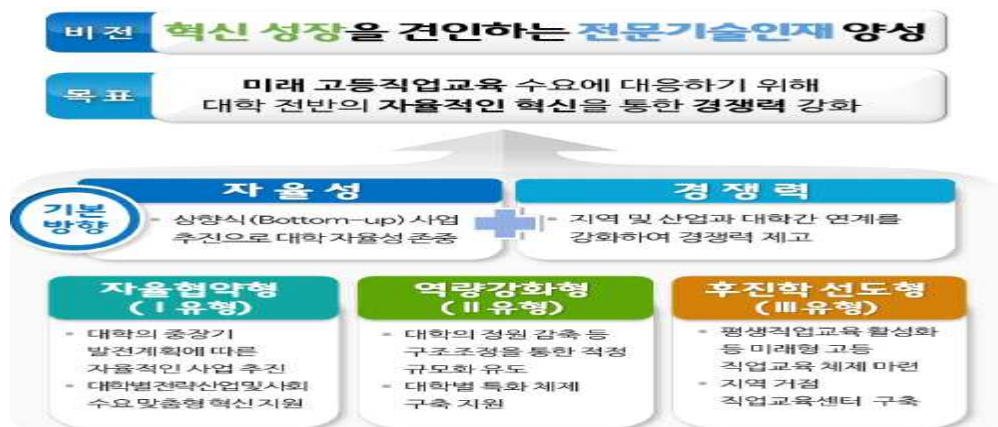
나.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전략

1)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Ⅲ유형: 후진학 선도형 지원계획)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Ⅲ유형: 후진학 선도형 지원계획) 개요

- 미래 유망직종과 연관된 현장성 높은 실무교육 및 교수학습 방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평생직업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기능 정립을 위해 2019년 12월에 전문대학 혁신방안(교육부, 2019. 12. 23.)을 수립함.
- 전문대학 혁신방안에서는 추진 과제 및 세부 과제로 ① 고등직업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미래 신직업 수요 대비 교육과정 혁신과 중등-고등 단계 직업교육 연계 강화, ② 평생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직업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새로운 고등직업교육 모델인 ‘마이스터대학’ 도입, ③ 미래사회 대응 직업교육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직업교육혁신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와 효율적 직업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함(교육부, 2019. 12. 23.).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2019~2021년)의 후진학 선도형 사업(Ⅲ 유형)은 지역 평생 직업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자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 사회-산업계 간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2019년에는 15개교, 2020년에는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의 25개 사업단이 참여함.

[그림 2-16]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추진 방향



출처: 교육부(2020. 2.). 2020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p. 1.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Ⅲ유형: 후진학 선도형) 성과 및 사례

- 전문대학의 자발적인 혁신 지원
  - 전문대학 자체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상향식(Bottom-up)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 대학의 실험실습,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비 투자 확대로 산업체·현장 중심 맞춤형 실용교육 기반을 마련함.
- 성인학습자 등의 후학습 활성화
  - 후진학 선도 전문대학을 통해 성인학습자 대상 맞춤형 단기 비학위 과정 등 후학습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지자체-대학-산업체 협력이 강화됨.
  - 재직자·자영업자·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다양한 평생직업 고등교육 수요를 흡수하여 지역 내 교육기회가 확대됨.
- 전문대학 혁신 프로그램 운영
  - (A 대학) '융합전공(Beyond+전공) 트랙 교육과정 개발' 프로그램: 실질적인 취업맞춤 교육과정 마련을 위해 최근 3년간의 졸업자 취업처 분석, 취업 분야별 102개 교과목·51개 트랙 개발, 교육과정 가이드북 제작
- 후진학 선도형 프로그램 운영
  - (B 대학)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지역 내 마을 의사결정권자(이장, 주민자치위원 등)가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활동가 양성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낙후 마을 개선 및 관광 명소 발굴 추진

2)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 개요

- 인구구조 변화와 AI·디지털 전환 등으로 평생학습사회가 도래하면서 학령기 교육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청장년층의 직무 전문성 유지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대학이 지역 평생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성인의 고등교육 참여는 여전히 저조하며, 지식·기술 변화에 따른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역 성인의 재교육을 위한 대학의 자율적 체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long education at universities for the Future of Education, LiFE)은 직장인 성인학습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내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고, 학과 및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대학체제를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이 사업은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대표 정책으로, 2019년부터 다년도 체계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제2주기 사업인 LiFE 2.0이 추진 중임(교육부, 2023. 2.).
  - LiFE 2.0 사업은 대학을 지역의 평생교육 상시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학 내 평생교육 운영체제 구축, 성인친화적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확산,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의 3가지 과제로 추진되며, 평생교육체제 구축형, 평생교육체제 고도화형, 광역지자체 연계형 등 3가지 모델로 운영됨(교육부, 2023. 2.).
  - LiFE 2.0 사업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년간 진행되며, 사업 예산은 총 510억으로 학교당 평균 10억 원이 지원됨. 전문대학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기반을 구축하는 평생교육체제 구축형과 기구축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를 고도화하고 성과를 확산하는 평생교육체제 고도화형에만 참여가 가능하여 구축형에 11개 전문대학, 고도화형에 8개 전문대학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교육부, 2023. 2.).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 성과 및 사례(교육부, 2023. 2.)
- 성인 전담 학과 수와 모집인원 수의 지속 확대로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접근성 향상 및 후진학 활성화에 기여함.
  - 전일제 과정에 부담을 느끼는 성인을 위한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 등 유연한 학사제도가 대학에서 작동·확대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됨.
  - 구직·창업 욕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개발·개편 및 야간·주말 수업, 원격수업 등 수업 방식이 다양화됨.

- 지역주민과 산업의 수요에 기반한 학과·전공 개설, 교육과정 운영 등 사업 참여 대학 단위의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을 지원함.
- 총장 직속 또는 단과대학 내 성인학습자의 적응과 학업 안착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 구축·운영을 지원함.
- 학교 교육 및 기타 영역에서 습득한 학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성인학습자의 중복학습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지자체-LiFE 대학 간 협력 체계 구축
  - (A대학) 전라북도, 군산시 등 인근 지자체 및 대학 평생교육원과의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여 지역사회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학과별 인재 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성인학습자의 고등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 (B대학) DIT-QLM 체계 도입을 통해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장학 혜택을 확대함. 또한 모바일 기반 LMS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병행 학습환경을 구축하고, 다양한 취·창업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성인학습자 맞춤형 교육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 다. 고등직업교육의 지역혁신 주체 역할 강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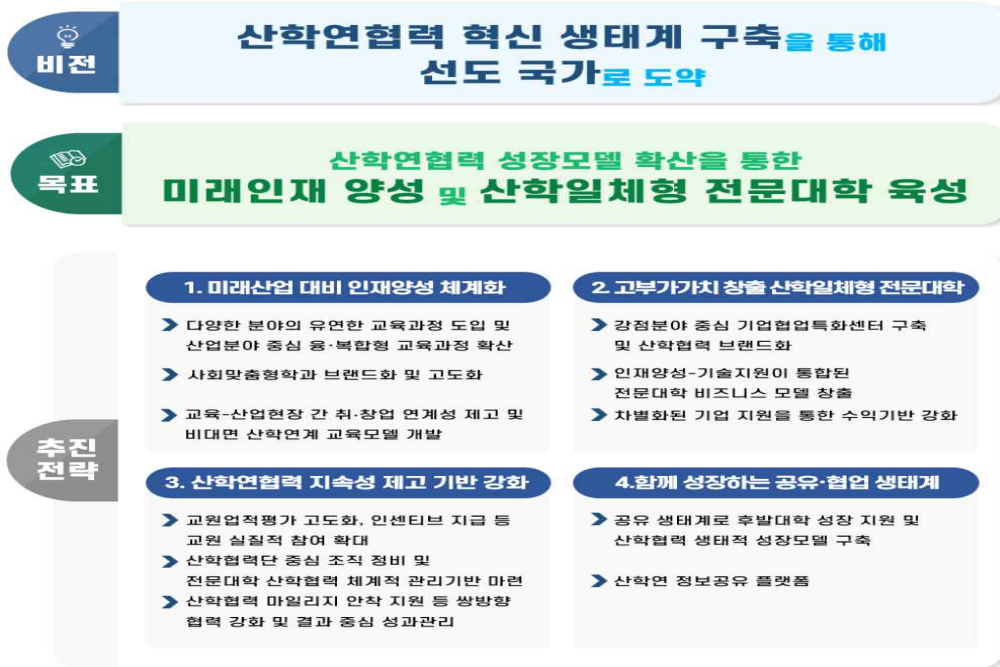
##### 1)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개요

- AI,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따라 산업지형 및 일자리 재편 등 경제·사회적 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발생함.
  - 급격한 사회 변화 속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의 산학연협력 확대를 통한 신기술 신산업 주도권 확보가 필요함.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학연체계 고도화 및 지역 정주 유도로 지역경제발전 선도를 위한 역량 제고가 필요함.

- 현장 친화형 실무인력을 매개로 한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혁신 전초기지'로서 전문대학의 능동적 역할 강화가 시급함.
- 2011년까지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학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의 3개 산학협력 사업(지역거점 연구단 육성사업, 광역 경제권 선도산업 인재 양성 사업,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을 통합·개편하여 2012년부터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LINC)이 출범됨.
-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2월 17일 제1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19~'23) 수정(안)(관계부처합동, 2020. 12. 17. a)과 동시에 발표된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 효과성 제고 방안(관계부처합동, 2020. 12. 17. b)에 기반하여 전문대학의 재정지원사업으로 연계되었으며, LINC, LINC+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을 추진함.
- LINC 3.0 사업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 추진되며, 2024년 기준 사업 예산은 총 1,045억 원으로, 수요 맞춤 성장형에 44개교, 협력 기반 구축형에 15개교 등 총 59개 전문대학이 참여하고 있음(교육부, 2022. 5. 4.).

[그림 2-17]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추진 방향



출처: 교육부(2022. 1.).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p. 5.

□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 성과 및 사례(교육부, 2024. 2. c).

- RISE 전면 도입(25~)에 대비하여 사업성과의 지속과 지역 중심의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 연계 권고 및 소통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 발전전략 및 특성화 산업에 기초한 지자체-대학 공동사업 발굴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기획·추진을 위한 지·산·학 협력 협의체를 구성함. 전국 17개 시도 광역지자체별 ICC 협의체 구성을 통한 지역 산업·기업 혁신지원 및 인력 양성 등 지역-대학 간 파트너십을 구축함.
- 대학 내외의 소통채널 및 성과공유 플랫폼을 다각화하여 산학협력선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 및 확산함. 이를 위해 산학협력정보담당관 성과공유회 및 산학협력 EXPO 개최, 산학협력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채널링크 3.0 운영 및 언론홍보 등을 추진함.
- 미래 산업 중심 융복합 교육, 전공 중심의 산학연계 확대, 지역기업 연계 강화를 통한 산학연계 교육과정을 고도화하고, 첨단·신산업을 중심으로 ICC(기업협업센터) 기반 산학협력 체제를 안착시킴.

- 반도체, AI, 빅데이터,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실감미디어, 지능형 로봇, 에너지 신산업 등 총 159개 ICC를 구축·운영함('23년 기준).
- 산학연계 교육과정 및 산-학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 등 가치창출 고도화 및 산업혁신에 기여함.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A 대학) 저장성이 낮은 전북 익산 생마의 장기 보존과 판매 문제 해결을 위해 PBL 기반 캡스톤 디자인 교과를 통해 기술을 개발·이전하여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함.
- 전문대학 강점 분야 중심 특화 산학협력 모델 창출
  - (B 대학) 방송·영상 특화대학으로서 전 학과에 캡스톤 디자인을 확산 운영하고, 학생 성과를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확보로 연계하여 융합교육을 강화함.

## 2)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개요

-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학생 미충원 등으로 지자체와 전문대학의 위기는 점차 심화되고 있음.
- 일반대 졸업생 대비 전문대 졸업생의 동일지역 내 취업률이 높아 지역 정주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의 역할이 중요해짐.
- 디지털 기술 발전은 SW, AI 등 디지털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 및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디지털 역량을 보유한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이로 인해 디지털 전환 교육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참여 인력 및 훈련기관은 부족한 실정임.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gher Vocational Education hub district, HiVE)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전문대학 육성을 위해 전문대학의 '지역밀착형 고등직업교육 거점화'를 목표로 함. 청년인재 지역 정주를 위한 특화 분야 인력 양성 지원, 전 생애 역량 개발을 위한 지역 기반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신중장년 재취업 지원을 위한 디지털 전환 교육 활성화를 중점 전략으로 수립함(교육부, 2024. 2. b).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의 유형은 2개 유형으로 구성됨. 1유형은 전문대학과 기초

자치단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하는 유형으로 지역 내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맞는 대학의 교육체계 연계·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함. 2유형은 전문대학에서 지역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수준별 DX 역량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지역산업체 수요 맞춤형 재직자 DX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디지털 전환 시대를 대비한 신중장년의 직업전환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함(교육부, 2024. 2. b).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의 1유형은 총 45개 컨소시엄으로 2022년 30개, 2023년 15개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3년 및 2년의 사업기간으로 추진되고, 2유형은 전문대학과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사업단위로 하며, 총 2년간 5개 컨소시엄을 지원하고 있음(교육부, 2024. 2. b).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성과 및 사례(교육부, 2024. 2. b)

- 고등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전문대학과 기초지자체의 협력 모델 발굴을 위해 다양한 시도 및 평생직업교육 체계를 구축함.
- 기초자치단체 주력사업과 연계하여 참여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협력으로 지역 특화 분야 연계 인력 양성과 정주를 위한 선순환 체계의 기반을 구축함.
- 지역 특화 분야 학과의 교육과정과 지역 특화 분야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연계를 바탕으로 평생직업교육을 고도화함.
- 기초지자체-전문대가 공동으로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성 높은 모델을 개발함.
- DX 직업전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신중장년 맞춤형 교육·진로컨설팅 지원 조직을 구성함.
- 지역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지역기업 맞춤형 역량 강화 및 DX 교육과정 이수자의 취업을 지원함.
- 지역 특화 분야 선정 및 특화 분야 인력 양성
  - (A 대학·B 대학-안양시) 지역산업체 의견을 반영하여 응용 SW 전공 수요 확인, 협약 기업과 공동 교육 운영 및 취업 약정 추진, 지역산업체 문제해결 PBL 교육 운영

- (C 대학-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주력산업인 안경산업과 연계하여 컨소시엄 참여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협력으로 안경산업 분야 디지털화 및 인력 양성
-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기획·개발
  - (D 대학-영주시) 지역 특화 분야 학과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 초고령층 대상 화재 예방, 구강 건강 지킴이 등 ‘찾아가는 로컬케어’ 프로그램 운영
- 신중장년 맞춤형 DX교육 컨설팅
  - (E 대학-F 대학-G 대학-부산)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컨설팅 전문가 POOL 및 지원 조직 구성을 통해 신중장년 수요 맞춤형 DX 교육·진로 컨설팅 지원
- 지역산업체 맞춤형 DX교육
  - (H 대학-I 대학-J 대학-충북) 디지털 전환이 시급한 지역산업체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 수립 및 다각적 분석(정량·정성)을 바탕으로 한 질 관리 계획을 통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 제고

###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개요

- 학령기 인구 감소와 함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과 대학의 공동위기 극복이 필요함. 이에 지역발전과 연계한 대학의 역할 강화, 지역 특성화 분야를 고려한 대학의 혁신, 지역 현안·수요와 연계한 대학 기능 전환 등 다양한 형태의 대학 차원의 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함. 즉 대학이 지역혁신 생태계의 허브가 되어 지역인재 양성과 취·창업, 정주의 선순환 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 주도로 지역-대학-산업 간 협력과 연계 강화가 필요함.
- 교육부는 지역-대학의 공동위기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의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역주도의 대학 지원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왔음. 이에 2023년 2월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음.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여 지역

과 대학이 처한 공동위기를 극복하고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체계를 말함 (교육부, 2023. 2. 1.).

[그림 2-18]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개요

<b>목표</b>	“대학이 살리는 지역” <b>대학의 지역발전 허브화</b> + “지역이 키우는 대학” <b>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b>		
<b>중앙·지방 역할 분담</b>	<table border="1"> <tr> <td style="text-align: center;"> <b>교육부</b>                      대학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 지원                      첨단인재 양성    학술진흥·연구개발    일반재정 지원                 </td> <td style="text-align: center;"> <b>지방자치단체</b>                      지역 맞춤 대학 지원                      지역 혁신    산학협력·직업교육    대학 평생교육                 </td> </tr> </table>	<b>교육부</b> 대학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 지원 첨단인재 양성    학술진흥·연구개발    일반재정 지원	<b>지방자치단체</b> 지역 맞춤 대학 지원 지역 혁신    산학협력·직업교육    대학 평생교육
<b>교육부</b> 대학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 지원 첨단인재 양성    학술진흥·연구개발    일반재정 지원	<b>지방자치단체</b> 지역 맞춤 대학 지원 지역 혁신    산학협력·직업교육    대학 평생교육		
<b>재정</b>	<b>RIS(지역혁신)</b> 등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b>50% 이상(2조원+)</b> 을 <b>지자체</b> 주도로 전환 ※ 타 부처 대학재정지원 사업도 지역주도성이 높은 사업은 단계적으로 RISE와 연계		
<b>로드맵</b>	('23년-'24년) 시범지역 운영 및 추진기반 마련 → ('25년) 전 시도 RISE 시행		

출처: 교육부(2023. 9.).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p. 1.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에 따른 지방대학 위기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시범지역 운영을 거쳤으며, 2025년부터는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을 통합 운영함.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지역과 대학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동반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체계 구축·운영, 계획 수립, 사업 운영, 성과관리 체계 구축·운영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됨.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성과 및 사례(교육부, 2024. 12. 26.)
- RISE 시범지역 지정 및 지자체 전담부서·RISE센터·RISE계획('25~'29) 등 추진체계 구축 및 사업 모델 마련('23. 3.~), 시범지역 모델을 기초로 전 시도의 RISE 기본계획 수립(~'23. 12.), 지자체 전담부서 정비·RISE센터 지정(~'24. 9.)

- RISE 생태계 속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다른 대학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대학을 2026년까지 30개 지정
- 시도별 라이즈 기본계획은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의 비전,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의 특색과 정책 수요, 지역대학이 기존 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축적한 강점·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마련한 다양한 추진 과제들로 구성됨. 지역별 라이즈 기본계획의 대표(시그니처) 과제는 다음 <표 2-4>와 같음.

**<표 2-4> 지역별 라이즈 기본계획의 대표(시그니처) 과제**

시도	대표(시그니처) 과제	시도	대표(시그니처) 과제
서울	글로벌 산학협력 선도	강원	지-랩(G-Lab) 기반 강원엘알에스(LRS) 공유대학 운영
부산	글로벌인재 허브도시를 위한 부산형 오픈 유아이시(Open UIC) 조성	충북	충북 3대 전략산업(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핵심인재 양성
대구	디(D)5 프런티어 현장캠퍼스 운영	충남	지역취업 보장 충남형 계약학과 운영
인천	제물포 르네상스 연계 원도심 가치 재창조	전북	제이비(JB)-스타트업(새싹기업) 캠퍼스 구축
광주	연구개발(R&D) 기반 혁신 실증 스튜디오 운영	전남	전남·시군 동반성장 프로젝트
대전	출연연 연구 협력	경북	케이(K)-유(U)시티 프로젝트
울산	지역산단 고위험 복합재난 대응 안전교육 플랫폼 구축	경남	지(G)-10 지역전략산업 특성화 대학 육성
세종	한두리캠퍼스(One-Campus) 구축 및 운영	제주	글로벌 케이(K)-교육 연구 런케이션 플랫폼 조성 사업
경기	초격차 산학연 얼라이언스(GAIA) 고도화		

출처: 교육부(2024. 12. 26.).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2025년 전국 시행. 교육부 보도자료.

### 제3절 소결

#### 1. 직업교육의 현황과 정책 대응

- 직업교육체제를 통한 인력 양성, 즉 중등 및 고등교육 단계의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주요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우리의 직업교육체제가 갖는 변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규모의 축소라 할 수 있음. 이는 전반적인 학령인구 감소 등의 환경 변화 속에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다변화에 따른 인력수요 변화에 의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특히 중등 단계 직업교육 규모는 지난 20여 년간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2005년의 직업교육 혁신 방안에 이어 2010년 이후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및 선취업-후진학 정책 등의 일련의 정책을 기반으로 노동시장 이행 기능 확충 등 정예화를 강조하였다는 정책적 영향이 있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처럼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등의 고교 직업교육 정책에 따라 직업계고에는 지속적인 변화가 전개되었음. 즉 전체 총량에서 직업계고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직업계고 내부에서는 매우 다양한 변화를 겪어 왔던 것임.
  - 다만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중등 단계 직업교육 규모와 학령인구 사이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현행 학제의 특성상 학령인구의 증가 또는 감소와 직업계고 학생 규모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일반계고와 달리 직업계고에서는 최근 학령인구가 잠시 증가하는 상황에도 학생 규모가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차이점도 발견됨. 여기에는 2000년대 이후 직업계고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여 직업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정책 추진에 의한 영향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직업교육 규모를 논의할 때 단지 학령인구 감소만을 변수로 고려하기보다 다양한 정책적·환경적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또한 직업교육 규모의 감소 현상은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음. 특히 산업구조가 고도화·다변화되면서 인력수요에 변화가 전개되고, 이러한 변화에 교육체제 전

반에 걸친 대응이 이루어지면서 일정한 재구조화는 필연적일 수 있음. 즉 단순한 양적 규모의 감소가 아닌 우리 특성을 기반으로 직업교육의 독자성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러한 노력에는 기술 변화를 비롯한 사회 변화 또는 인력수요에 적절하게 부응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산업수요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직업교육의 특성상 지속적인 변화는 필연적임. 실제 직업교육기관은 학과 개편 또는 재구조화 등을 통해 꾸준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직업교육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학과의 변화 흐름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산업수요의 변화와 학과(전공), 즉 직업교육 내용 사이의 밀접한 관계가 여전히 중요함을 의미함. 직업교육의 영역을 특정한 분야에 한정하는 것도 현재의 시대적인 변화에서는 부적절한 접근이며, 사회 환경의 변화에 단순 편승하는 것 역시 산업 수요-교육내용 연계의 관점에서 재고해야 할 여지가 있음. 결국 기술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산업수요는 지속적인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직업교육체제가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다양한 기제를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
  - 비록 학과(전공)의 변화만으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학과(전공) 간 융합 등 유연한 접근 역시 최근에 고려해야 할 요소라 할 수 있음. 특히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 수요가 특정한 직종의 성장이나 쇠퇴로만 귀결되지 않고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으로 전개된다고 볼 때, 다양한 학과(전공) 분야와 직업교육 내용에서 이를 융합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강조될 수 있는 것임.
- 직업교육 체계는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중간 숙련 수준의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경로 제공을 통한 사회통합의 기반을 제공함. 우리의 직업교육 체계도 청소년 등의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성과를 보여 왔음.
  - 직업교육기관 졸업자의 일부 양적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직업계고의 노동시장 이행 성과의 악화,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차별성 악화, 직업교육에 대한 비우호적 사회 인식에 따라 청년층의 직업교육 비선호도 가중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따

라서 직업교육을 종국교육(dead-ends)으로 인식하여서는 안 되며, 직업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진로경로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관심이 중요하다.

## 2. 직업교육의 정책 대응 동향

-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산업기술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직업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 정책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중등직업교육 정책은 산업현장의 수요와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현장성 강화, 선취업-후학습 경로 정착, 지역인재 육성 전략 정책이 추진되어 왔음. 이러한 정책들은 교육내용 및 운영 방식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직업교육의 내실화와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 성과를 보여줌.
    - 현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은 마이스터고 육성,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제도,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 등을 통해 이론과 실무의 괴리를 줄이고 실질적인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음. 특히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고졸 취업의 경쟁력을 높였으며, 도제학교는 기업현장과 연계된 실습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률 및 전공 일치도를 향상시켰음.
    - 선취업-후학습 경로 정착 정책은 일학습병행 및 재직자 특별전형 제도를 중심으로 취업과 진학을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경력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경로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음. 이는 직업계고 졸업생이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학습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지역인재 육성 강화 정책은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과 협약형 특성화고 정책 등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직업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자체-교육청-기업-학교 간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지역 직업교육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정주 인재 양성을 촉진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중등직업교육 정책들은 교육과정과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 하향식 접근의 특성을 가짐. 그러나 교육-산업 간 미스매치, 지역 간 편차, 직업교육에 대한 낮은 사회

적 인식 등의 구조적 과제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현장 중심의 정책 개발과 실행력 있는 지원 방안이 요구됨.

- 고등직업교육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재정지원 확대와 구조개혁을 통해 실무인재 양성 기능을 강화하고, 성인학습자 중심의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확대하며, 지역혁신 거점으로서의 전략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 왔음. 이는 학령기 학생뿐 아니라 성인학습자, 재직자 등 다양한 학습자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문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 성과를 보여줌.
  - 실무인재 양성기능 강화 정책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산업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 학사제도 유연화,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 등 산업현장과의 정합성을 강화함.
  -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정책은 다양한 생애주기별 학습 수요자에게 장기적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특히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III유형(후진학 선도형)과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은 성인학습자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였음.
  - 지역혁신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정책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3.0),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을 통해 지역산업 생태계와 연계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문대학을 지역 기반의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음. 특히 RISE 체계는 지역 주도형 직업교육 모델의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음.
  - 이러한 고등직업교육 정책은 전반적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강화 및 체제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전문대학을 단순한 직업교육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와 산업 발전의 동반자로 재정립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나타냄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프라 격차, 성인학습자 친화적 교육체계의 미흡 등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됨.
- 이처럼 직업교육 정책은 저출생,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

등과 고등 단계 간 교육과정 연계 및 후학습 경로의 제도화를 통해 중등-고등 직업교육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아울러 지역 중심의 직업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직업교육이 단순한 기능 훈련을 넘어 고부가가치 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전략적 교육체제임을 사회 전반에 인식시키는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임.

## 제3장

#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의 역할

제1절 저출생시대의 직업교육 환경 변화

제2절 해외 직업교육체제의 미래사회 대응 동향

제3절 소결



## 제3장 |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의 역할

### 제1절 저출생시대의 직업교육 환경 변화

-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직업교육의 특성상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의 역할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구조와 기술환경의 변화, 노동시장과 일자리의 변화, 교육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직업교육 환경 변화를 분석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인구, 산업, 노동, 교육 등 다층적인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 1. 인구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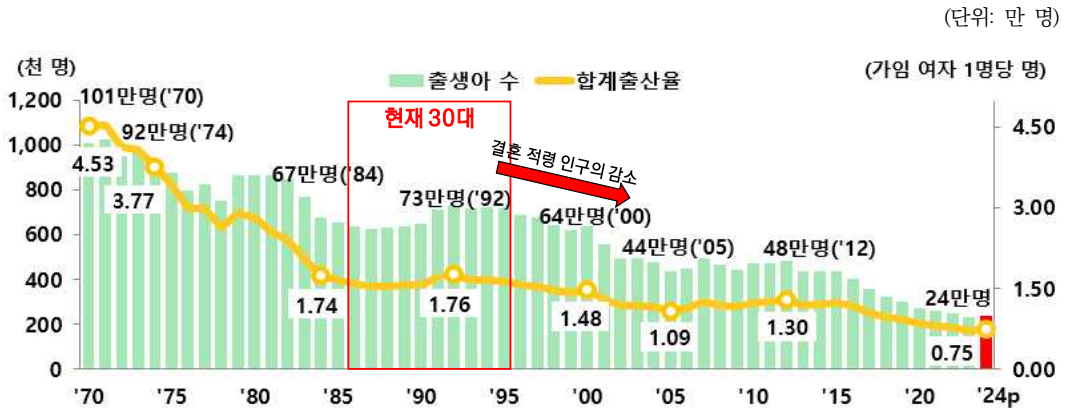
##### 가. 저출생과 축소사회

-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의 지속적 감소
  -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에는 0.72명의 최저점을 기록하였고, 2024년에는 소폭 상승하여 0.75명으로 집계됨. 2025학년도에는 2018년 출생아가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로 학교 현장에는 본격적으로

저출생 상황을 맞이하게 됨.

- 통계청(2023. 12. 14.)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2년 출생아 수가 25만 명에서 2072년에는 16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이는 중위 추계에 따른 것으로 저위 추계에 따르면 2027년 9만 명 수준, 고위 추계에 따르면 2072년 26만 명 수준으로 예측함.

[그림 3-1] 출생아 수 추이 변화(1970~2024년)



출처: 통계청(2025. 2. 26.)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통계청 보도자료 p. 1. 연구진 일부 수정.

- 현재의 저출생 현상은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만, 부모 세대의 절대적 인구감소도 함께 맞이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특징임. 우리나라는 1960년 초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급속히 출산율이 저하되는 제1차 출산력 변천기를 겪었고, 1985년부터 1995년까지 한 번 더 출산율이 떨어지는 변천기를 겪은 바 있음(김두섭, 2010).
- 그러나 1차와 2차의 변화 양상과 원인은 사뭇 다름. 1차는 산업화와 도시화, 정부의 가족계획 등에 의한 것이었다면, 1980년대 중반부터 나타난 2차 변화는 세계화에 의한 자본과 노동의 이동 → 국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구조조정 → 가족 형성의 시기와 정도에 영향을 주는 흐름으로 전개되었고, 동시에 여성의 사회진출과 지위 향상과 같은 사회 변화도 맞물려 나타남(김두섭, 2010).

- [그림 3-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태어난 세대가 현재의 30대(1985~1995년 출생)로 성장하였고, 해당 세대의 결혼과 출산이 지연되면서(〈표 3-1〉 참조) 현재의 저출생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표 3-1〉 평균 초혼 연령(2013~2023년)

(단위: 세)

구분	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3
	남자		32.2	32.4	32.6	32.8	32.9	33.2	33.4	33.2	33.4
여자		29.6	29.8	30.0	30.1	30.2	30.4	30.6	30.8	31.1	31.3

출처: 통계청(2024. 3. 19.). 2023년 혼인·이혼 통계. 통계청 보도자료.

- 저출생 현상이 미래사회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저출생 현상은 가시적으로는 학령인구의 감소, 병력자원 감소, 노동시장의 인력 감소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전개되면서 교육재정, 복지재정 등 국가 재정 배분에 대한 이슈, 노동생산성 감소, 세대 간 갈등,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에 대한 이슈 등으로 그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음.
  - 특히 교육 분야는 저출생의 영향을 가장 처음으로 직면하는 영역이 되고 있음. 출산율 제고를 위해 영유아를 위한 돌봄과 보육 정책은 현재보다 더 강화되는 기조를 취하는 반면(박종서 외, 2022),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분야의 정책은 교원 수급을 줄이거나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교육재정 구조를 개선하는 등 축소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논의가 더 주를 이룸.
    - 특히 우리나라의 초·중·고 교육은 대부분 공적 재원에 의해 운영되는 구조임(〈표 3-2〉 참조). 즉 내국세에 교육재정이 연동된 구조를 취하고 있어 국가 경제성장 규모가 커지고 세수가 늘어날수록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이 늘어나는 상황임.<sup>3)</sup> 이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거나 해당 재원을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음(김현아 외, 2022). 이 과정

3)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세부 일부 합계로 정해지고 있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에서 학교를 기반의 직업교육인 직업계고에 대한 재정 투자는 위축될 수 있는 반면, 성인 대상의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가 확대될 여지도 있음.

〈표 3-2〉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단위: %)

구분	초·중등교육과정			고등교육과정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2021	한국	3.6	3.4	0.2	1.5	0.7	0.9
(2024)	OECD 평균	3.4	3.2	0.3	1.5	1.0	0.5

출처: OECD(2024a).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주1) 2021년 기준 통계를 2024년에 발표하였기에 연도에 2가지를 모두 표기함.

2) GDP 대비 공교육비 = (정부부담 금액 + 민간부담 금액 + 해외부담 금액) / GDP

#### 나. 고령화와 생산가능연령 인구 변화

##### □ 평균 수명의 연장

-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의 특징은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화 현상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임. 평균 기대수명은 2022년 82.7세에서 2072년 91.1세로 약 10세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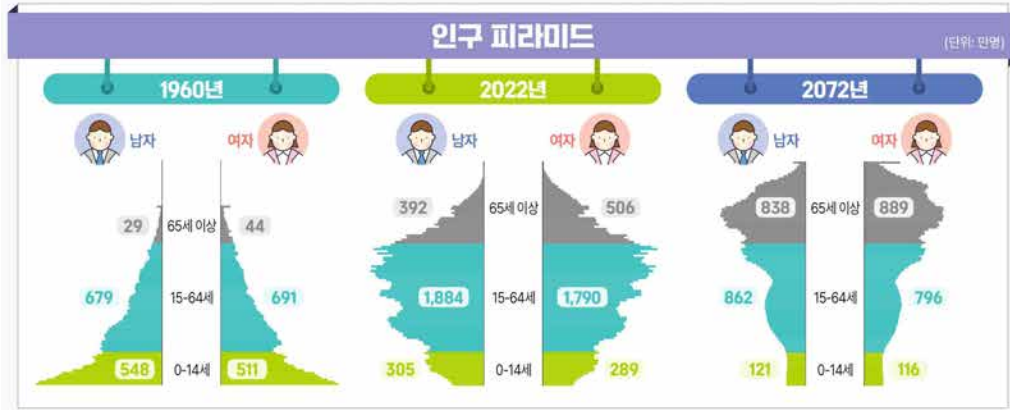
〈표 3-3〉 기대수명 추계 결과(2022~2072년)

(단위: 세)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30	2040	2050	2060	2072	
중위 추계	전체	82.7	83.5	84.3	84.5	85.5	87.2	88.6	89.8	91.1
	남자	79.9	80.6	81.4	81.6	82.8	84.8	86.5	88.0	89.5
	여자	85.6	86.4	87.1	87.3	88.1	89.5	90.7	91.7	92.7

출처: 통계청(2023. 12. 14.). 장래인구추계(2022~2072). 통계청 보도자료.

[그림 3-2] 인구 피라미드 변화



출처: 통계청(2023. 12. 14.). 장래인구추계(2022~2072). 통계청 보도자료.

-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고 난 이후부터는 인구감소 시대에 출생한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70세 이상의 인구가 긴 기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60대는 특정 시기에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다음 <표 3-4>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30년부터는 1970년 출생 인구가 60세로 진입하게 되는데, 197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60세 진입 인구도 해당 시기부터 감소할 것으로 보임.

&lt;표 3-4&gt; 연령 및 연도별 출생연도

출생코호트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2045년	2050년
60세	1965년생	1970년생	1975년생	1980년생	1985년생	1990년생
65세	1960년생	1965년생	1970년생	1975년생	1980년생	1985년생
70세	1955년생	1960년생	1965년생	1970년생	1975년생	1980년생
80세	1945년생	1955년생	1960년생	1965년생	1970년생	1975년생
90세	1935년생	1945년생	1955년생	1960년생	1965년생	1970년생

출처: 이윤경 외(2019). 고령인구 증가와 미래 사회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71.

- 또한 1995년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되며 고등교육기관 수가 늘어나고 취학을 또한 높아져 2000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52.5%로 처음으로 50%를 넘은 후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음(통계청, 2021). 바꿔 말하면 1980년생 이후부터는 대학을 졸업한 비

율이 높기 때문에 2040년 이후부터는 학력 수준이 높은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 기존과 다른 특징이라 볼 수 있음(이윤경 외, 2019).

□ 부족한 생산가능인구 확보를 위한 정년 연장 논의

-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이 맞물리고 장기적으로는 새롭게 진입할 노인 세대의 특성 변화가 예상되면서 노동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 논의가 촉발되고 있음. 정년 연장은 주된 일자리에서의 노동시장 잔류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고령인구의 숙련도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측면이 있음(이승호 외, 2023).
  - 정년 연장이나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기존에도 이루어져 왔음. 대표적으로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만 60세 정년이 제도화된 것을 예로 들 수 있음. 기존 법률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할 때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해당 법률이 개정되면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의무화됨.
  - 이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 도입된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제도의 사례도 있음. 중소·중견 기업의 사업주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1명에 대해 분기 9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제도임(고용노동부, 2022. 6. 29.). 2024년부터는 지원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한 바 있음(고용노동부, 2024. 1. 11.).
- 현재의 인구구조 속에서 정년 연장은 불가피해 보이기도 하나, 정년 연장이 우리 사회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음.
  - 정년 연장이 가져올 이점으로는 고령 가구의 소비와 소득 하락을 막고 고령층의 빈곤을 해소, 사회적 공적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국내에서 부족한 노동 공급의 뒷받침 등이 있음(한요셉, 2020).
  - 반면 부작용으로는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의 위축과 기업 차원에서는 인건비 부담의 가중 등이 있음. 특히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의 개편을 논의하지 않고서는 정년 연장을 쉽게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음(이윤경 외,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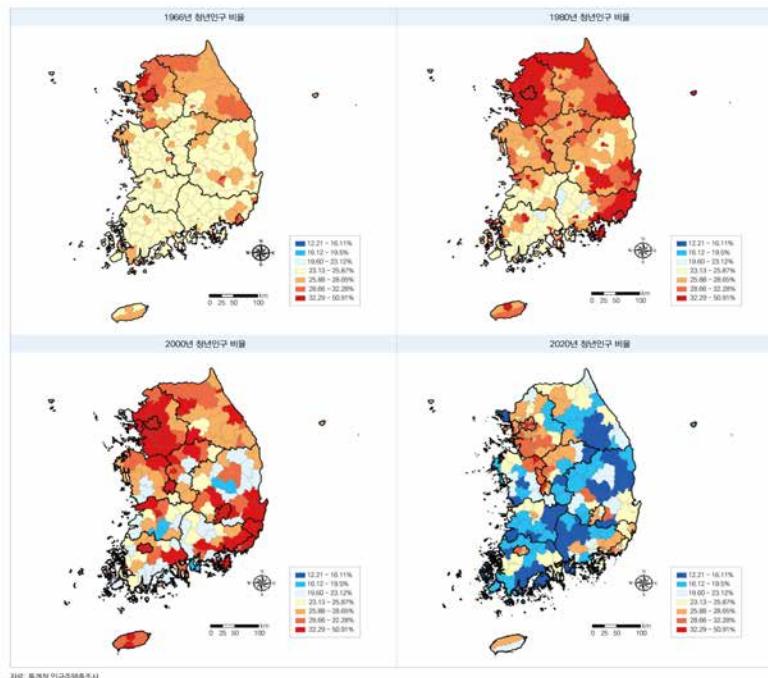
-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고령 인력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직업 교육훈련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될 전망이다.

다. 지역 간 인구격차

□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소멸 위기

-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또 다른 이슈는 지역 간 인구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임. 저출생, 고령화 현상뿐만 아니라 지역별 청년(만 19~39세)인구의 편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청년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2020년 기준으로는 수도권과 일부 지방 대도시를 제외하고 다수의 도시에서 청년인구 비율이 10%대를 보이고 있음(신휴석 외, 2023).

[그림 3-3] 전국 청년인구 비율 변화



출처: 신휴석 외(2023).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 동인 연구. 국토연구원. p. 16.

-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지역 간 인구격차의 근본적 원인은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 성장 전략이 자본과 인적자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있음. 다음 [그림 3-4]와 같이 대규모 자본 투자와 함께 산업단지가 건설되면 지역 내 고용이 창출되고 인구가 증가하여 도시 인프라가 개선되고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
- 다만 경제성장과 함께 성장해 온 도시는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쇠퇴의 경로를 겪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인구 유출이 나타나게 됨.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단지를 유치하며 단기간에 빠르게 도시가 형성된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시다발적으로 도시 기반 시설이 노후화되어 인구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인구감소는 지역의 재화와 서비스 수요를 감소시켜 지역의 경제 규모를 축소시키고 지속적인 지역인구 유출을 발생시키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게 됨(박진경 외, 2019).

[그림 3-4] 도시경제 기반 모형



출처: 송철호(1997). 한국 도시성장 과정과 모형에 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10, 195-225.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 수정·보완.

- 수도권으로 청년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나, 수도권은 오히려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합계 출산율이 낮게 나타남(표 3-5) 참조). 즉 청년들은 일자리, 교육, 주거 등의 목적으로 수도권으로 진입하지만 높은 주거 비용, 경쟁적 환경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지연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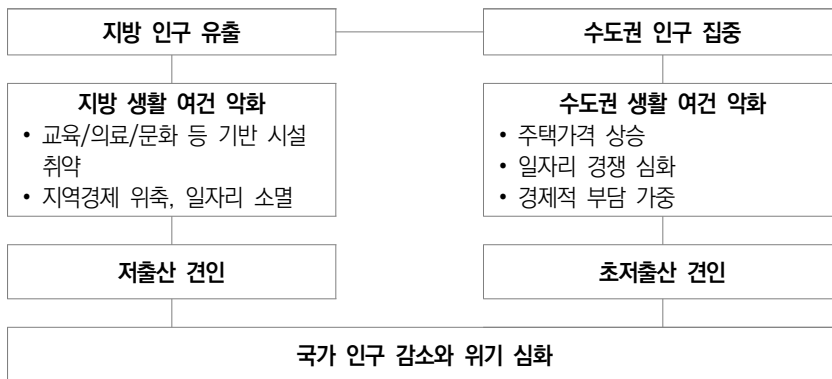
- 이러한 지역 간 격차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정주 여건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저출생을 견인하고 있음([그림 3-5] 참조).

〈표 3-5〉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2023년 합계출산율

구분	지역	합계출산율(명)	구분	지역	합계출산율(명)
수도권	서울	0.552	비수도권 (광역도 단위)	강원	0.893
	경기	0.766		충남	0.842
	인천	0.694		충북	0.886
		전북		0.780	
		전남		0.972	
		경북		0.860	
		경남		0.799	
		제주		0.827	

출처: 통계청 e-지방지표(n.d.). 인구변화, 합계출산율. <https://kosis.kr/visual/eRegionJipyo/themaJipyo/eRegionJipyoThemaJipyoView.do>(검색일 2025. 2. 20.).

[그림 3-5] 지방 인구 유출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국가 인구 감소



출처: 김현호 외(2021). 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 재구성.

□ 지역 기반의 직업교육의 역할 강조

- 직업계고의 성장 또한 산업화와 도시 성장과 맞물려 있음. 산업화 과정에서 새롭게 설립된 직업계고(당시 실업계고)의 경우 지역 내 산업단지의 기술 인력을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 두드러졌음.

- 여전히 특성화고 졸업생의 경우 지역 내 정착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최수현 외, 2023)에 따라 지역산업을 기반으로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교육 운영 모델은 향후에도 강조될 전망이다.
- 다만 지역 내 인구 유출과 저출생 이슈, 제조업 내에서 중소기업이나 생산직 직무에 대한 기피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어 직업교육 단일 차원의 정책 추진으로는 현재의 문제를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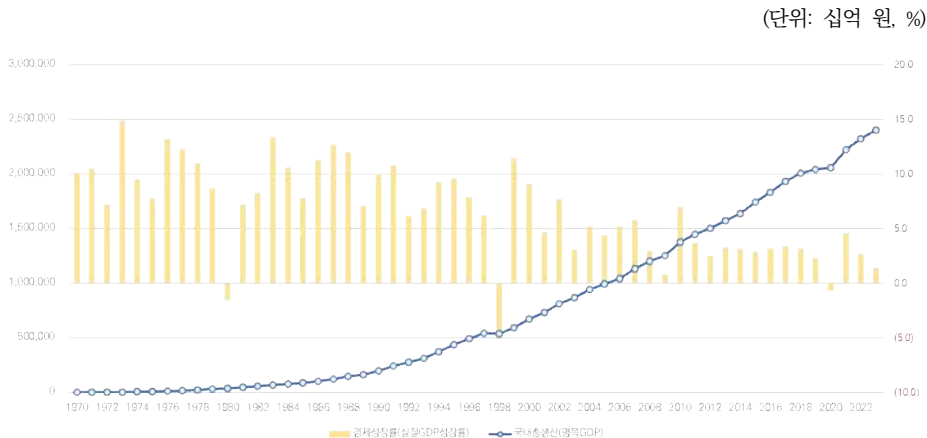
## 2. 산업구조와 기술환경의 변화

### 가. 산업구조 변화

#### □ 지속적인 경제성장기를 지나 저성장 국면 진입

- 우리나라 GDP는 특정 시기의 경제위기 상황을 제외하면 대체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고, 2023년에는 2,401조 원의 명목 GDP를 달성함. 그러나 향후 인구구조 변화, 대외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였을 때 경제성장률이 정체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3-6]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GDP 변화(1970~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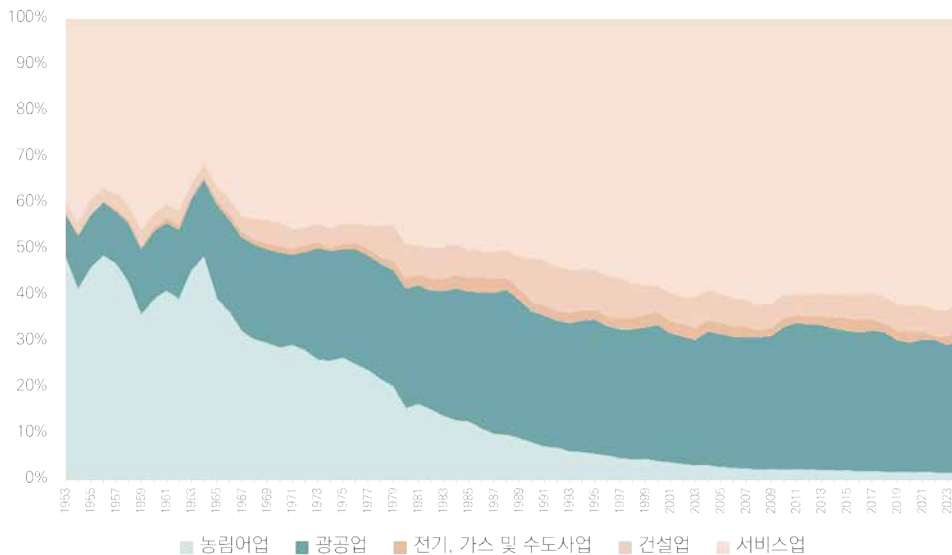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n.d.a).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6](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6)(검색일 2025. 2. 20.).

## □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

- 현재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여전히 수출 의존도가 높고 서비스업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견인되고 있음(한국은행, 2024).
-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음(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4).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이 꼽히고 있는데, 반도체에 대한 전 세계적 수요 증가로 반도체가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중요 원동력이 됨(OECD, 2024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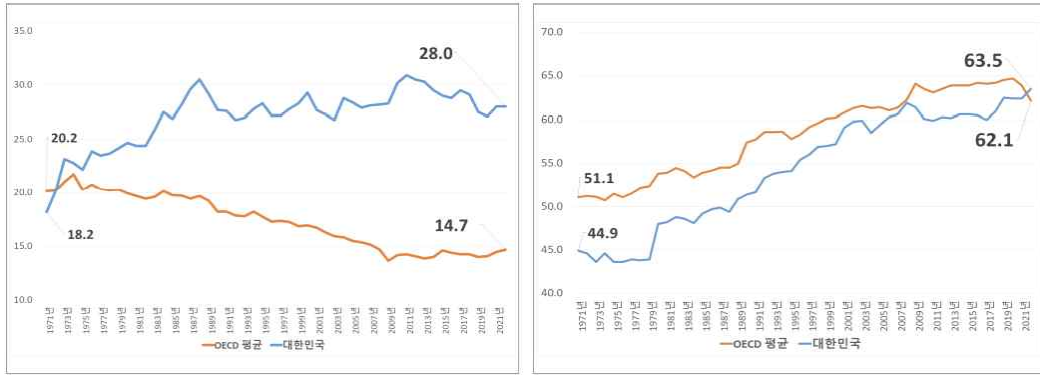
[그림 3-7] 산업 부문별 GDP 비율



출처: 국가통계포털(n.d.a) 경제활동별 GDP 및 GNI.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200Y105&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200Y105&conn_path=I2)(검색일 2025. 2. 20.).

[그림 3-8] 전체 GDP 대비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

(단위: %)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4). 2024년 우리나라 산업구조 동향 분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p. 4.

<표 3-6>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위상(2021년 기준)

(단위: 천 명)

구분	생산 (조 원)	부가가치 (조 원)	고용 (만 명)	수출 (억 달러, '22년)	사업체 수 (개)
반도체	178.7 [10.0%]	118.7 [18.5%]	14.2 [4.8%]	1,427 [20.9%]	469 [0.6%]
디스플레이	73.8 [4.1%]	29.2 [4.6%]	7.3 [2.5%]	211 [3.1%]	431 [0.6%]
무선통신기기	63.0 [3.5%]	23.0 [3.6%]	13.6 [4.6%]	194 [2.8%]	2,641 [3.6%]
자동차	105.0 [5.9%]	29.1 [4.5%]	9.6 [3.3%]	541 [7.9%]	359 [0.5%]
자동차부품	108.7 [6.1%]	32.7 [5.1%]	23.3 [7.9%]	233 [3.4%]	4,410 [6.1%]
철강	183.1 [10.3%]	42.3 [6.6%]	13.9 [4.7%]	545 [8.0%]	3,045 [4.2%]
조선	32.8 [1.8%]	9.1 [1.4%]	9.5 [3.2%]	182 [2.7%]	1,108 [1.5%]
석유정제	123.0 [6.9%]	20.3 [3.2%]	1.2 [0.4%]	631 [9.2%]	128 [0.2%]
석유화학	114.9 [6.4%]	26.8 [4.2%]	4.5 [1.5%]	543 [7.9%]	774 [1.1%]
기계장비	135.8 [7.6%]	50.6 [7.9%]	34.0 [11.6%]	621 [9.1%]	10,288 [14.2%]
전기장비	115.1 [6.5%]	35.4 [5.5%]	21.1 [7.2%]	414 [6.1%]	4,756 [6.6%]

주: [ ]는 제조업 내 비중이며, 수출은 총수출 대비 비중을 의미함.

출처: 한국은행(2023).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생산 및 공급망 지도. 한국은행.

- 제조업은 최근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당면 과제들을 안고 있음.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된 이후 최근까지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ESG 경영에 대한 요구,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 혁신이 제조업의 주된 이슈로 꼽혔다면(김성민, 2022), 현재

는 미중 무역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 정세 위기 등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제조업 분야의 새로운 당면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정선영 외, 2024)

- 여기에 더해 저출생으로 인한 생산가능연령 인구의 감소,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중소기업의 기피 현상,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 등 우리나라만이 처한 특수한 문제 상황도 제조업 분야의 큰 어젠다가 되고 있음.

#### □ 서비스업 기반의 산업구조 전환과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필요성 대두

- 현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여전히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주축이 되고 있지만, 미국 및 주요 선진국들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shift to service economy)을 이룬 것처럼, 우리나라 또한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하봉찬, 2006).

-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 음식점, 교육 서비스, 부동산업 등은 시장 확대가 제한적이고 신규 사업체 진입이 결국 기존 사업체의 수익을 나눠 갖는 제로섬 구조이기 때문에 생산성 제고가 쉽지 않음(안중기, 2025).

- 이에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생산성 서비스업 육성이 주목받고 있음. 전통적인 서비스업으로 꼽힌 여행, 운송 서비스업보다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기술 기반의 서비스 교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관계부처합동, 2024. 11. 14.).

※ (과거)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인 컴퓨터에 탑재되어 물리적 이동(제조업 교역)  
(현재) 물리적 매개 없이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수출입(서비스 교역)

-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고려했을 때 제조업과 연계된 서비스업 성장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서비스업은 제조업의 생산 전방, 생산 공정, 생산 후방 단계에서 중간재로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과 연계된 서비스업의 성장과 발전이 제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문현주, 강인성,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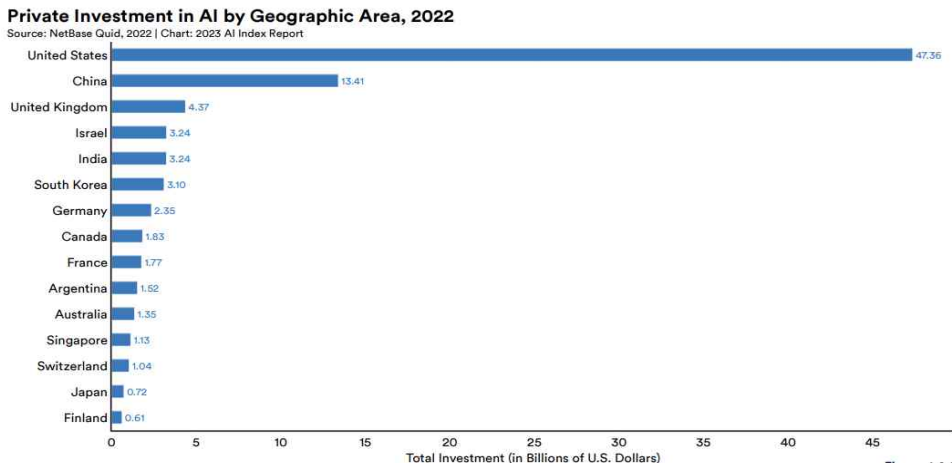
- 예를 들어 생산 전방 단계에서 AI 기술을 접목하여 고객의 구매 패턴을 분석하고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는 것, 생산 공정 단계에서 공정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계하여 생산 환경을 개선하는 것, 생산 후방 단계에서 물류 서비스를 통해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것 등이 있음(문현주, 강인성, 2024).

- 결과적으로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등을 활용해 제조 공정을 혁신하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은 곧 서비스업의 성장을 의미하기도 함.

나. 기술환경 변화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기술 발전이 산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
  - 현재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AI 기술에 대한 개발과 인적자원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그림 3-9] 참조), 향후 AI 기술에 대한 투자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WEF, 2025). 우리나라 또한 AI 개발에 필요한 석·박사급 고급 인력 구인은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임(송단비 외, 2024).

[그림 3-9] 국가별 AI 분야 민간 투자 현황(2022년 기준)



출처: Stanford University(2023). Artificial Intelligence Index Report 2023.

- AI 출현으로 인해 일자리 소멸에 대한 전망과 일자리 증강에 대한 전망 등이 다양하게 혼재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사회에 일자리와 고용구조가 변화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로 다가오고 있음.
- OECD(2024c)에서는 산업 부문별 AI 강도를 크게 4가지 측면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음. 다음 <표 3-7>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산업별 특성에 따라 AI가 미치는 영향의 강도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표 3-7〉 산업 부문별 AI 강도

구분	AI 인재	AI 혁신	AI 노출	AI 활용
식품 가공				
섬유·의류				
목재·종이				
화학	3분위		3분위	4분위
제약	4분위		4분위	4분위
고무, 플라스틱, 광물	3분위			3분위
금속 제품			3분위	3분위
컴퓨터 및 전자	4분위	4분위	4분위	4분위
전기 장비	4분위	3분위	3분위	3분위
기계 장비	4분위	3분위		4분위
운송 장비	4분위	3분위	3분위	4분위
기타 제조업	3분위	3분위	3분위	
건설		3분위		
도매 및 소매업	3분위		4분위	3분위
운송 및 보안	3분위	4분위		
호텔, 음식서비스		4분위		
미디어	4분위	4분위	4분위	4분위
통신	4분위	4분위	4분위	4분위
IT 서비스	4분위	4분위	4분위	4분위
금융 및 보험	4분위	4분위	4분위	4분위
부동산		3분위	4분위	3분위
법률, 회계		4분위	4분위	4분위
과학 연구 및 개발	4분위	4분위	4분위	4분위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4분위	4분위	4분위	4분위
행정 지원 서비스	3분위	4분위	4분위	3분위

주: AI 강도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4분위(상위 25%)	3분위	2분위	1분위(하위 25%)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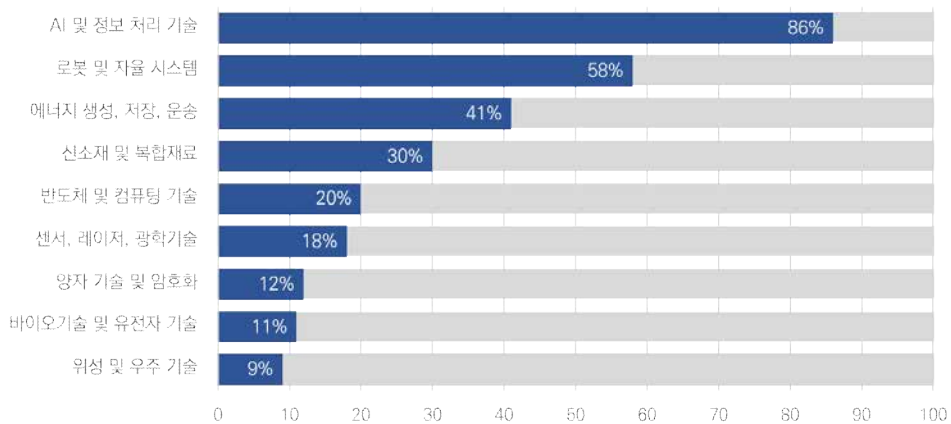
1. AI 인재: 해당 산업 분야에서 AI 관련 온라인 구인 공고의 점유율(AI 기술을 갖춘 근로자 채용 수요)
2. AI 혁신: 해당 산업 분야에서 AI 관련 특허의 점유율(새로운 AI 기술 도입, 개발 등을 의미)
3. AI 노출: 해당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가 AI에 의해 잠재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측정된 것
4. AI 도입: 해당 산업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 회사의 비율

출처: OECD(2024c). A sectoral taxonomy of AI intensity.

□ 로봇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

- AI 발전에 이어 로봇 및 자율 시스템의 등장 또한 미래사회 주요한 기술 변화로 꼽히고 있음. AI보다 영향력이 낮게 평가되고 있지만, 로봇에 AI를 결합해 나가면서 제조 분야에서 로봇의 가치와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 분야에서 로봇 활용도가 높은 편임(WEF, 2025).
- 과거의 자동화가 단순반복적 공정에 대한 작업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의 자동화는 로봇과 AI의 기술의 접목으로 다소 복잡하고 비정형적 공정에 대해서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박상수, 2024).
  - 다만 이러한 자동화가 기존의 일자리를 온전히 대체한다고만은 볼 수 없음. 선행연구에 따르면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또 다른 고용을 창출할 수도 있으며, 로봇으로 온전히 대체하기 힘든 분야에 대해서는 고졸 수준의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권철우 외, 2023).

[그림 3-10] 2025~2030 비즈니스 변화를 이끄는 기술 동향



출처: WEF(2025). Future of Jobs Report 2025. p. 11.

### 3. 노동시장과 일자리의 변화

#### 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 □ 임금근로자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 한국 사회가 직면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그간의 정책적 개입(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화되는 기초를 보이고 있음.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한 축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표 3-8〉 참조), 학력 수준별로 살펴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고졸자의 비중이 가장 높음(〈표 3-9〉 참조).

〈표 3-8〉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수와 비중

(단위: 천 명, %)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임금근로자	19,474	19,743	20,006	20,045	20,559	20,446	20,992	21,724	21,954	22,143
정규직	13,166	13,262	13,428	13,431	13,078	13,020	12,927	13,568	13,832	13,685
비정규직	6,308	6,481	6,578	6,614	7,481	7,426	8,066	8,156	8,122	8,459
비율	32.4	32.8	32.9	33.0	36.4	36.3	38.4	37.5	37.0	38.2

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매년 8월) 기반으로 작성된 통계임.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n.d.b). 비정규직 고용동향.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77](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77)(검색일 2025. 2. 20.).

〈표 3-9〉 학력수준별 비정규직 근로자 수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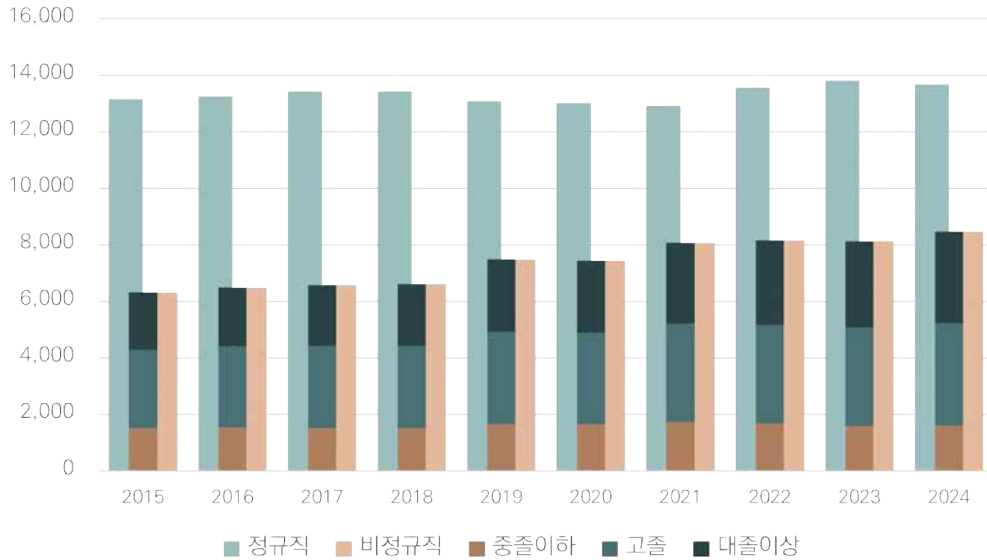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비정규직	6,308	6,481	6,578	6,614	7,481	7,426	8,066	8,156	8,122	8,459
중졸 이하	1,518	1,541	1,520	1,524	1,666	1,664	1,742	1,693	1,596	1,606
고졸	2,781	2,881	2,918	2,913	3,270	3,241	3,483	3,482	3,491	3,636
대졸 이상	2,010	2,058	2,140	2,178	2,545	2,521	2,841	2,982	3,035	3,217

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매년 8월) 기반으로 작성된 통계임.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n.d.b). 비정규직 고용동향.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77](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77)(검색일 2025. 2. 20.).

[그림 3-11]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추이(2015~2024년)

(단위: 천 명)



출처: <표 3-8>과 <표 3-9>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 작성.

- 정규직은 고용 안정성, 임금 경쟁력, 다양한 교육훈련과 복지혜택 제공이라는 강점이 존재하는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 불안정성, 낮은 급여, 교육과 복지 기회 취약성 등의 이슈가 있음. 고용구조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우리 사회 내에 이미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상황임(OECD, 2024b).

□ 대기업/공공부문과 중소기업 일자리의 이중구조

-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또 다른 현상은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 일자리와 대외 경제 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 일자리 간의 격차라 볼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일자리가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임. 2023년 일자리 행정통계에 서 집계된 영리기업 일자리는 2,095만 개로, 이 중 대기업 일자리는 441만 개(21.1%)에 그치고, 중소기업 일자리는 1,654만 개(78.9%)임.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비중이 약 4배가량 높음.

- 이와 반대로 청년세대의 직장 선호도는 대기업이 64.3%, 공공부문 44.0%, 중견기업 36.0%, 중소기업 15.7%(복수응답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 실제 일자리 수와 반대의 결과를 보임(대한상공회의소, 2023).

〈표 3-10〉 기업규모별 일자리 수 현황

(단위: 만 개, %)

구분	일자리 수 합계	일자리 수			소멸 일자리
		지속 일자리	대체 일자리	신규 일자리	
영리기업 일자리	2,095	1,590	236	268	257
대기업	441	368 (83.4)	50 (11.3)	23 (5.2)	27 (6.1)
중소기업	1,654	1,222 (73.9)	187 (11.3)	246 (14.9)	230 (13.9)
비영리기업 일자리	570	473	68	29	20
총계	2,666	2,064	304	298	277

주: 1. 지속 일자리: 전년과 동일 근로자가 점유한 일자리  
 2. 대체 일자리: 퇴직·이직 등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  
 3. 신규 일자리: 기업 생성, 사업 확장 등으로 새롭게 생긴 일자리  
 4. 소멸 일자리: 기업 소멸, 사업 축소로 사라진 일자리  
 출처: 통계청(2024. 12. 6.). 2023년 일자리 행정통계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 노동시장에서 대기업의 일자리 수는 제한적이지만, 이에 대한 선호는 높고 진입장벽 또한 높은 것이 현실임. 대기업 일자리의 연령별 점유율은 30대 > 40대 > 50대 > 20대 > 60세 이상 순서로 30~4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임. 반면 중소기업의 일자리 연령별 점유율은 50대 > 40대 > 60세 이상 > 30대 > 20대로 40~6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2022년 대비 60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감소 경향을 보였고 60세 이상은 오히려 증가하였음. 이는 앞서 고령화 부분에서 살펴본 정부의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제도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 내 인력구조가 고령화되고 있고 자칫 새로운 세대를 유입하기에 점차 어려운 구조로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함.

〈표 3-11〉 기업규모별 - 연령대별 일자리 수 현황

(단위: 만 개, %)

구분		2022년		2023년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연령별	19세 이하	3 (0.6)	11 (0.7)	3 (0.6)	10 (0.6)
	20대	73 (16.7)	203 (12.4)	72 (16.4)	199 (12.0)
	30대	123 (28.0)	296 (18.0)	123 (27.8)	296 (17.9)
	40대	120 (27.3)	381 (23.2)	119 (27.0)	372 (22.5)
	50대	94 (21.3)	407 (24.7)	94 (21.4)	406 (24.5)
	60세 이상	27 (6.2)	347 (21.1)	30 (6.9)	371 (22.5)
총계		440 (100.0)	1,644 (100.0)	441 (100.0)	1,654 (100.0)

출처: 통계청(2023. 12. 6.). 2022년 일자리 행정통계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통계청(2024. 12. 6.). 2023년 일자리 행정통계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 또한 일자리 이동통계를 살펴보았을 때 대기업 → 중소기업 이동은 56.0%이지만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이동률은 12.0%로, 대기업으로의 이동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3-12〕 기업규모 간 일자리 이동 현황(2021-2022년)



출처: 통계청(2024. 6. 5.). 2022년 일자리 이동통계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통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인력에서는 대졸 비율이 매우 높음. 이로 인해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심각하며, 이에 따라 특정 분야에서는 빈 일자리가, 또 다른 특정 분야에서는 과도한 경쟁이 함께 나타나고 있음.
- 실제로 직능수준별 미충원 인원을 살펴보았을 때 2-1수준, 즉 고졸 수준에서 가장 많은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고 있음. 2-1수준의 미충원 사유를 살펴보면,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 수준 등의 근로 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8.3%)’이 1위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17.3%)’이 2위로 나타남 (고용노동부, 2023. 12. 28. a).

〈표 3-12〉 직능수준별 미충원 인원(2023년 3분기 기준)

(단위: 천 명, %)

수준	미충원 인원	수준 정의
1수준	28 (21.0)	현장 경력,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음(중졸 이하 수준)
2-1수준	50 (37.6)	1년 미만 현장 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상 기능사 수준(고졸 수준)
2-2수준	30 (22.3)	1~2년 미만의 현장 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상 산업기사 수준(전문대졸 수준)
3수준	23 (17.4)	2~10년 미만의 현장 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사 수준(대졸/석사 수준)
4수준	2 (1.6)	10년 이상의 현장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사 수준(박사 수준)
계	134 (100.0)	

주: 2024년 통계에서는 직능수준별 미충원 인원을 발표하지 않아 2023년 결과를 제시함.

출처: 고용노동부(2023. 12. 28. a). 2023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나. 노동시장 유연화

##### □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다양한 형태의 노동 확산

- 디지털 전환으로 과거와는 새로운 형태의 일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이러한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음.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플랫폼 노동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플랫폼 노동에 부업 형태로 참여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음(고용노동부, 2024. 8. 5.).

-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대적으로 시행되면서 플랫폼을 매개로 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여기에 관련 종사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표 3-13〉 주요 플랫폼 종사자 직종별 규모

(단위: 천 명, %)

직종	2021	2022	2023	증감률('22~'23)
배달·운전	502 (75.9)	513 (64.5)	485 (54.9)	-5.5
전문 서비스(교육 및 상담 등)	53 (8.0)	85 (10.7)	144 (16.3)	69.4
컴퓨터 단순 작업(데이터 입력 등)	31 (4.7)	57 (7.2)	87 (9.9)	52.6
가사·돌봄	28 (4.2)	53 (6.7)	52 (5.9)	-1.9
창작 활동(디자인 등)	19 (2.9)	36 (4.5)	50 (5.6)	38.9
IT 서비스(SW 개발 등)	14 (2.1)	17 (2.1)	41 (4.6)	141.2
그 외	14 (2.1)	19 (2.5)	24 (28.8)	26.3
총계	661 (100.0)	795 (100.0)	883 (100.0)	

출처: 고용노동부(2024. 8. 5.). 플랫폼 종사자 88.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와 근무 형태 등의 특성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음.
  -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력을 공급하는 인력 입장에서는 진·출입이 자유롭고 스스로가 언제, 어디에서 일할 것인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Pesole et al., 2018). 특히 최근 국내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추가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자 플랫폼 노동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가 다양해지면서 최근에는 고학력자의 참여도 증가되는 추세임(박보람 외, 2023).
  - 그러나 기존과는 다른 고용 형태로 직업 안정성과 소득 안정성이 낮고, 경력개발 기회 또한 부족하며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 보호에도 취약하다는 우려가 공존함(Lane, 2020).

〈표 3-14〉 플랫폼 종사자 근무 형태별 규모

(단위: 천 명, %)

직종	2022	2023	증감률('22~'23)
주업형	459 (57.7)	491 (55.6)	- 7.0
부업형	168 (21.1)	192 (21.8)	14.3
간헐적 참가형	169 (21.2)	200 (22.6)	18.3
총계	795 (100.0)	883 (100.0)	

출처: 박보람 외(2023). 플랫폼 종사자 직종별 근무실태와 정책과제. 한국고용정보원. p. 58.

〈표 3-15〉 플랫폼 종사자 학력 수준별 규모

(단위: 천 명, %)

직종	2022	2023	증감률('22~'23)
중졸 이하	19 (2.4)	13 (1.5)	- 31.6
고졸	256 (32.2)	232 (26.3)	- 9.4
전문대졸	134 (16.9)	151 (17.1)	12.7
대졸	299 (37.6)	389 (44.1)	30.1
대학원졸	87 (10.9)	98 (11.1)	12.6
총계	795 (100.0)	883 (100.0)	

출처: 박보람 외(2023). 플랫폼 종사자 직종별 근무실태와 정책과제. 한국고용정보원. p. 51.

#### 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확대

##### □ 인구감소에 따라 국내 부족 인력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의 적극적 유입 확대

- 그간 외국인력 유치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고용허가제' 수준에서만 추진되어 왔으나, 최근 인구감소와 내국인의 취업 기피 분야 확대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책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음(진달래, 2024).
  - 정부에서는 지난 2024년 6월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외국인력에 대한 노동시장 공급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음(관계부처합동, 2024. 6. 20.).
  - 특히 제조업 기반의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대한 외국인 저숙련 근로자의 유입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에 대한 외국인 유입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기조가 변화하고 있음.

- 2023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인 2,507,584명이며, 이 중 외국인 인력은 526,376명으로 21.0%를 차지하고 있음. 외국인 인력 중에서도 310,825명이 비전문취업(E-9)에 해당함(〈표 3-16〉 참조).
  - 정부에서는 사업체의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 E-9 비자 자격의 외국인력이 국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당 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바 있음(고용노동부, 2024. 12. 20.).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회복 기간에 따라 늘어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E-9 비자 쿼터를 급격히 증가시켰고, 이러한 기조가 이어져 오고 있음. 2025년에는 2024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해마다 많은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유입되고 있음.
    - ※ E-9 비자 쿼터 변화  
(’22) 69,000명 → (’23) 120,000명 → (’24) 165,000명 → (’25) 130,000명
  - E-9 비자를 발급받고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27.1%만이 대졸 이상이며, 그 외는 고졸 및 고졸 이하 교육 수준으로(통계청, 2024. 4. 17.),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고 저숙련 근로자들이 대다수임. 이들의 비중이 높아짐과 동시에 고졸 혹은 전문대졸 내국인 인력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한다면 초기 직업교육의 역할과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음.
- 이 밖에도 정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빈 일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개선하고 있음. 농업 분야에 대해 계절 근로(E-8)로 단기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 기간을 당초 5개월 이내에서 8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E-9 비자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채우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또한 음식점 서비스업과 주방 보조 인력 등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외동포(F-4)의 취업을 허용한 바 있음(고용노동부, 2023. 12. 28. b).

□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및 전문인력 확보 추진

- 2023년 1월부터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이 추진되고 있음.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이 필요하고, 이 경우 복잡한 절차와 6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었음. 그러나 이공계 특성화

5개 대상<sup>4)</sup>의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3년 만에 영주권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진달래, 2024).

〈표 3-16〉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단위: 명, %)

구분	비자	인원	비율	
외국인 인력	전문인력	E-1 ~ E-7	69,950	2.8
	비전문 인력	E-8 (계절근로)	14,143	18.0
		E-9 (비전문취업)	310,825	
		E-10 (신원취업)	21,476	
		H-2 (방문취업)	103,981	
			450,425	
	단기취업 등	C-4 (단기취업)	2,196	0.2
		H-1 (관광취업)	3,805	
			6,001	
소계		526,376	21.0	
유학	D-2 (유학)	152,094	6.1	
그 외	연수, 외교, 공무, 거주 등	1,829,114	72.9	
총계		2,507,584		

주: 비전문취업(E-9)은 제조업, 건설업 등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에 한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를 허용하는 것으로 입국일로부터 최대 3년간 취업이 가능함(사업주 요청 시 재고용 가능). 또한 E-9 비자는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특정 16개국 출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함. 방문취업(H-2)은 중국 등에 거주하며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계 동포에게 부여하는 비자로 입국 후 3년간 취업 가능함. E-9 비자로 입국할 경우 사업장 변경에 제한이 있지만 H-2 비자의 경우 사업장을 자유롭게 변경하여 근로할 수 있음(출처: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홈페이지)

출처: 국가통계포털(n.d.b),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5A&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5A&conn_path=I2)(검색일 2025. 3. 3.).

4)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가 해당됨.

〈표 3-17〉 2025년 비전문 인력(E-9) 업종별 도입 인원

(단위: 명)

구분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탄력배정
130,000	72,000	2,500	2,000	10,000	8,500	3,000	32,000

출처: 고용노동부(2024. 12. 20.). 내년 외국인력(E-9) 13만 명 도입.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4. 교육환경의 변화

##### 가. 트윈 전환에 대응하는 교육

##### □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세상에서의 교육

- AI는 산업 전반의 변화를 견인하기도 하지만 교육환경을 바꿔놓기도 함. 새로운 기술이 미래사회에서 소통과 사고방식을 바꿔놓는다면 배움의 방식 또한 달라질 필요가 있음.

〈표 3-18〉 AI 시대의 교육적 어젠다

구분	주요 고려사항
노동시장에서의 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일의 등장과 AI/로봇 등 기술과의 협업 능력 강조</li> <li>• 교육시스템이 미래 일자리에 대비하고 기술 발전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li> <li>• 평생학습 차원에서의 확장</li> </ul>
교육에서의 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를 통해 개인화된 학습 경험의 제공, 학습 관리의 효율성 제고</li> <li>• AI 기술 활용의 형평성과 격차 문제를 고려한 접근</li> <li>• AI와 연계된 윤리적 이슈의 해소</li> </ul>
디지털 리터러시와 책임감 있는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세계에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리터러시가 강조</li> <li>• AI를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필요</li> <li>• 학습을 향상시키는 도구로서 기술을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li> </ul>
건강과 웰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건강과 웰빙을 증진하는 방향(예: 건강 진단,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의 활용</li> <li>• 디지털 기술의 과도한 사용이 불러오는 새로운 건강 문제 해결</li> </ul>
형평성과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학생이 필요한 디지털 도구와 AI에 접근할 수 있도록 포용적 교육환경 조성</li> <li>• 교육환경 측면의 디지털 격차 해소</li> </ul>

출처: OECD(2025). Trends Shaping Education 2025. OECD Publishing.

## □ 지속가능성에 대한 탐구

- 디지털 전환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내용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AI에 대한 강조는 교육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육의 역할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함.
- 기후 변화 속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산업구조와 생산의 방법이 변화될 수 있고, 직업교육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현재의 성인들을 대상으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와 관련 역량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훈련 체제 속에 이러한 내용을 내재시키는 방향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임(OECD, 2025).

## 나. 교육의 다양성과 경쟁력 제고

## □ 강력한 리더십, 전문성 있는 교사, 매력적인 커리큘럼

- 안정적으로 학생들을 공급받던 학교의 모습은 향후 인구감소 시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단위학교(또는 교육기관)의 경쟁력이 중요해질 수 있음. 이 과정에서의 핵심은 결국 관리자의 강력한 리더십, 전문성 있는 유능한 교사, 그리고 매력적인 교육과정임(OECD, 2023c; 이수현 외, 2024).
  -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계고는 초·중등학교 교육시스템 내에 내재되어 있어 그 특수성을 온전히 구현하지 못하고 교육에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함. 예를 들어 교원 양성과 재교육 시스템은 일반 교사와 차이가 없고,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또한 국가 교육과정 틀 속에 맞춰져 있음.
  - 전문대학의 경우 사학을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교육 재정 구조가 열악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재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고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실습 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음.
  - 중등 및 고등 단계 직업교육이 처한 이러한 한계는 미래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하였을 때 적극적인 혁신과 노력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 볼 수 있음.
- 학령인구 감소 시대 미래 학교 교육 방향을 탐색한 김현미 외(2022)의 연구에서도 미래의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로서 학교운영 형태가 다양해지는 모습을 꼽음. 박남기

(2024)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운영 모델이 만들어져야 학령인구 감소 시대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함.

- 박남기(2024)는 인공지능 중심의 학교, 과학 중심 학교, 예술 중심 학교 등의 특수 목적 학교를 만들어 미래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맞춰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음
-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 내 직업계고 또한 교육 내용과 경로의 다양성 측면에서 그 역할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을 것임.

#### □ 보편적 고등교육 이수경로에 대한 변화

- 디지털 전환과 기술 변화가 빨라질수록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스킬(skill) 수준 또한 다변화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는 매우 선형적이고 다수의 학습자들이 유사 경로를 선택하는 보편적 형태가 자리 잡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상위권 대학을 졸업할수록 전문직 혹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안정적인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암묵적 믿음이 자리 잡고 있지만, 오히려 보편화된 고등교육으로 인해 청년세대의 경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음.
  - 기업은 자체 채용 시험과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대학 졸업 학위에 대한 신뢰보다 자신들이 개발한 채용시스템에 의존하고 있고, 청년들 또한 첫 직장을 구하기 위해 대학에서의 학습 이외에도 자격 취득, 어학 공부 등 추가적인 준비 기간을 거치고 있음. 또한 최근 들어 이러한 준비 기간이 더욱 길어지고 있다는 통계 결과가 발표되고 있음(통계청, 2024. 7. 16.).
- 특히 최근 기업의 신입직원 채용 규모가 줄어들고 경력직 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기존의 교육시스템으로는 노동시장 이행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정기 공채를 통한 신입직원 선발이 범용적 인재(generalist)를 선발하여 기업에 맞는 인재로 교육훈련을 통해 양성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수시 채용을 통한 경력직원 선발은 전문인재(specialist)를 선발해 직무에 전문가로 바로 투입하는 방식임(이상준 외, 2023).
  - 평생직장의 개념이 점차 약화되고 이·전직을 통한 개인의 경력개발과 성장이 보편화되면서 기업 또한 신입직원 선발과 교육훈련에 비용을 투입하는 대신 바로 직무에 투입할 수 있는 전문인재를 선발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음(채민석, 장수정, 2025)

- 결국 노동시장 이행을 위해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쌓고, 일 경험을 토대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함.
- OECD(2024d)에서는 우리나라의 과열된 고등교육 진학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더 나아가 대학에서의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직무를 선택하게 만듦으로써 노동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함.
- 결국 저출생에 대응하는 교육의 방향이 직업교육 자체만의 개선과 혁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함께 동반해야 함을 시사함.

#### 다. 횡단적 역량에 대한 강조

##### □ 고용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보편적 핵심 역량 강조

- OECD에서는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성과와 국가 간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PISA-VET를 도입할 준비를 수행하고 있고, 2024년에 시범 연구로서 자동차 기술자, 전기공, 사업 및 행정 분야, 헬스 케어, 관광 및 호텔업 직업교육훈련에서 PISA-VET를 적용해 봄(OECD, 2024d).

〈표 3-19〉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역량의 주요 항목과 핵심 내용

항목	내용
문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이 관심 있는 직업 분야에서 문해력을 적용하는 것 (예: 자동차 기술자가 기술 매뉴얼을 읽고 자동차의 유지 관리, 수리에 대한 요구 사항과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li> <li>• 문해력은 직장의 경험에 적응해 나가는 데 중요한 요소이자 지속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li> <li>• 직업교육훈련에서 문해력 접근은 읽고 이해하는 인지적 과정뿐만 아니라 담긴 내용(contents)과 그 내용이 위치하는 맥락(context)까지 고려해야 함.</li> </ul>
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가 보편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 더욱 중요한 역량 중 하나로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는 것이 자동화 상황에서 개인이 갖는 경쟁력이 될 수 있음.</li> </ul>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료, 고객 등 직무에서 다양한 접점의 사람들과 원활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이 중요함</li> <li>• 협업에서는 공감(타인의 요구를 이해하고 돌보는 능력), 신뢰(타인을 신뢰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 협동(조직 내 다양한 사람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고 집단 결정을 존중하는 것) 등이 강조됨.</li> </ul>
사회정서적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제력(집중력을 유지하는 능력), 책임감(약속과 시간을 잘 지키며 신뢰받을 수 있는 능력), 끈기(과제와 활동을 완료할 때 까지 지속하는 능력), 성취동기(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욕구)와 같은 사회정서적 역량이 미래사회의 복잡한 업무 환경에서 더욱 강조될 것임.</li> </ul>

출처: OECD(2024d). PISA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VET). Assessment and Analytical Framework. OECD Publishing. 내용을 연구자 요약.

- PISA-VET에서는 초기 직업교육훈련 이수자의 지식, 기술, 태도, 가치를 측정하고 학습자가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역량을 일터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조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이 과정에서 특정 직업 영역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횡단적 역량(transversal competencies)의 관점에서 고용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역량(employability skills) 함양을 강조함. 이러한 역량은 특정 직업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 가치를 보완하는 포괄적 의미의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역량으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됨.
  - 직업교육에서 이러한 핵심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직업교육 맥락과의 유기적 통합이 중요하지만, 교육에서 이러한 역량을 가르치고 기르는 것에 대한 노하우는 충분하게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이러한 보편적 역량이 강조될수록 직업교육 교사의 '전문성' 개념 또한 달라질 수 있음. 과거의 직업교육 교사 전문성이 직무 기술에 대한 실무적 역량을 갖추고 해당 기술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관점에서 접근되었다면, 미래의 직업교육 교사 전문성은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화하게 될 것임(김남희 외, 2023). 즉 해당 직업 맥락에서 학생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로 한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며, 이 역량을 교육 내용과 접목시키는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됨.

## 제2절 해외 직업교육체제의 미래사회 대응 동향<sup>5)</sup>

- 직업교육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닌 만큼, 해외 직업교육 체제의 미래사회 대응 동향을 확인함으로써 직업교육체제에 관한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다양한 국가의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직업교육체제 구축 방향을 검토하여 직업교육의 위상 제고 및 평생학습 체계 구축, 직업교육의 유연성과 개인화 강화, 기술 혁신 대응을 위한 디지털 인력 양성, 일 기반 학습과 산학협력 확대 등 4가지 대응 동향을 추진 배경, 현황, 결과 및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 1. 직업교육의 위상 제고 및 평생학습 체계 구축

#### 가. 추진 배경

-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성
  - 많은 국가에서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이 학문 중심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자격체계를 구체화하는 등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직업교육이 체계적으로 발달한 유럽 국가들과 달리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경향이 있었음. 그러나 커뮤니티 칼리지 등을 도입하면서 국공립 교육체계 내에서 직업교육을 이수하는 기회가 제공되기 시작했으며, ‘인력 혁신 및 기회법(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WIOA)’ 제정과 같은 제도적 추진도 이루어지고 있음(CCCCO, 2015).
-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력 부족 대응
  - 생산인구 감소는 거의 모든 국가가 직면한 공통된 현상으로,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

5) 본 절은 서울대학교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 고귀영 선임연구원이 작성한 원고를 연구진이 수정하여 반영한 것임.

- EU는 2070년까지 생산가능인구가 현재의 64%에서 54%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OECD, 2023c). 이는 기존 노동력의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통해 생산가능인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 경력 전환 및 재취업 지원 요구 증가

- 전 세계적으로 평균수명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저출생으로 인한 청년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이로 인해 중장년 및 고령자의 비율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은 고령자 고용률 상승과 은퇴 연령 연장에서 확인할 수 있음(OECD, 2023c). OECD 전체 국가 기준으로 보면, 취업 연령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3년 약 33%로, 2000년보다 약 11%포인트 증가했으며, 2050년까지 약 53%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OECD, 2023c; OECD, 2023d).
- 중장년 및 고령자의 상당수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불안정한 일자리로 이동하거나 적응을 위해 새로운 역량과 직무 기술을 반드시 습득해야 하는 상황임.
  -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인 고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중장년층과 고령 근로자는 직업 이동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직업 또는 경력 전환이 요구된다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OECD, 2024e).
  - 현재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술 중 약 40%는 기술의 변화로 인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근로자들은 약 5년 주기로 자신의 핵심 기술과 역량을 재개발할 필요가 있음(Broom, 2023).
  -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진입 이후에도 끊임없는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기술 수요를 명확히 인식하고 학습할 때 비로소 적합한 일자리로의 원활한 이동이 가능함.

#### □ 평생학습의 중요성 증대

- 직업교육 측면에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은 노동력 확보, 경력 전환, 재취업 등의 필요성에 의해 대두되었으며, 이는 각국이 자국 상황에 맞는 평생학습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짐.

- OECD는 각국이 평생학습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특히 45세 이상 중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의 평생학습 방안을 제안한 바 있음. 구체적으로 기업 내 직무 순환 프로그램 마련, 디지털 및 녹색 기술 관련 교육과정 운영, 경력 전환을 지원하는 멘토링 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방안으로 제시됨(OECD, 2024e).

□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

- 소외계층의 제한적인 교육 참여는 평생교육 관점에서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음. 주류계층과 소외계층 간의 교육 불평등은 학령기부터 존재하지만, 교육의 범위와 기간이 평생에 걸쳐 확대되면서 그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 평생학습 차원에서 소외계층의 교육 참여를 확대하려는 노력은 직업교육 분야에서도 활발히 나타나고 있음. 기술의 가속화로 인해 저소득층, 청년층, 여성, 저숙련 노동자 등 소외계층은 특히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또한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이 낮거나 지역적으로 교육 기회가 부족한 경우에도 효과적인 직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CVET(Continui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확장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음(Cedefop, 2021a).

나. 현황

□ 성인학습자를 위한 계속직업교육훈련(CVET) 강화

-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개인이 현재 보유한 역량과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며, 꾸준한 재교육(reskilling)과 역량 향상 교육(upskilling)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전 생애에 걸친 직업교육훈련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음.
- 독일은 ‘국가기술전략(National Skills Strategy)’을 마련하여 CVET를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새로운 직업교육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통해 변화하는 노동시장 속에서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숙련도를 향상시키며, 전반적인 경력 발전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Cedefop & Refernet, 2023a).

## [독일의 계속직업교육훈련(CVET) 정책 사례]

- 국가기술전략(National Skills Strategy) 추진
  - 2018년 11월, 독일 연방노동사회부(BMAS) 및 연방교육연구부(BMBF)의 국가기술전략 추진 위원회 출범
  - 2019년, 연방 정부 및 연방 주, 산업 및 노동조합, 고용 기관을 주체로 국가기술전략 발표
  - 국가기술전략의 10가지 행동 목표
    - ① 직업별 CVET 투명성 확보, ② 자금 조달 시스템 마련 및 CVET 예산 확보,
    - ③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 CVET 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동기 강화,
    - ④ 사회적 파트너의 책임 강화, ⑤ 비공식적 역량 가시화(Valikom 및 MYSKILLS),
    - ⑥ 지속 교육 자격 및 프로그램 개발, ⑦ 디지털 변화를 고려한 CVET 자격 설정,
    - ⑧ CVET를 위한 우수 교육기관 개발, ⑨ CVET 프로그램의 질 강화,
    - ⑩ 미래 기술 수요 예측을 위한 CVET 통계 개선

자료: Cedefop & Refernet(2023a). National Skills Strategy: Germany. Timeline of VET policies in Europe. [online tool] <https://www.cedefop.europa.eu/en/tools/timeline-vet-policies-europe/search/28121>(검색일 2025. 1. 31.).

- 핀란드는 ‘지속적 학습 개혁(Continuous Learning Reform)’ 정책을 통해 2020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 개혁을 추진해 왔음. 지속적 학습은 변화하는 업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향상 교육(upskilling)과 재교육(reskilling)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 생애에 걸친 비연속적 학습을 의미함.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 학습은 자격이나 학위로 연계될 수 있으며, 학습자의 교육 수준을 높이거나 노동시장에서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 이 과정은 산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별 기업 및 산업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며, 특히 마이크로 자격(micro-credentials) 같은 방안의 활용이 권장됨(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Finland, 2019).
- 또한 핀란드는 잠재력 있는 기술 및 인력 개발을 위해 위장 실업자(disguised unemployment), 직무능력 저하 인력, 장애인 등 소외된 인력의 역량을 개선하고, 이들을 노동시장에 포용하는 것을 해당 정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로 삼고 있음(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Finland, 2019).

[핀란드의 계속직업교육훈련(CVET) 정책 사례]

- 지속적 학습 개혁(Continuous Learning Reform) 정책
  - 2025년까지 생산가능인구에 속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기술과 역량을 개발하여 고용 기회를 개선하고 직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지역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속적 학습 개혁 정책을 추진함.
  - 정책 개혁을 통한 교육과정 제공, 노동시장의 수요 충족을 목표로 함.
  - 지속적 학습 개혁의 정책 분야
    - ① 교육의 제공 및 자금 조달, ② 이전 교육내용 및 소득 파악,
    - ③ 직장 생활 전반에 걸친 재교육, 지속적 전문성 개발 및 교육 기회 확대,
    - ④ 재교육 및 성인교육을 위한 견습 훈련, ⑤ 고등교육기관의 유연한 학습기회 제공,
    - ⑥ 성인학습자 대상 학업 휴가 및 재정 지원, ⑦ 구직 과정에서의 학습기회 제공
  - 지속적 학습 개혁의 추진 전략
    - ① 지속적 학습 및 고용을 위한 서비스 센터 마련
    - ② 노동 및 역량 수요 예측을 위한 시스템 구축
    - ③ 교육 프로그램 개발(디지털 전환, 디지털 도구관리 능력, 탄소중립 사회 전환 등)
    - ④ 현장 맞춤형 교육 실시
- 지속적 학습 및 취업 서비스 센터 운영
  - 정책 수행을 위해 2021년 9월에 발효된 법률을 근거로 교육부·경제부 산하로 운영
  -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노동시장의 수요 분석,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자금 지원, 지속적 학습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개발

자료: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Finland(2019). Continuous learning reform, Parliamentary reform of continuous learning. [online tool] <https://okm.fi/en/continuous-learning-reform>(검색일 2025. 1. 31.).

Cedefop & Refernet(2023b). Reform of continuous learning: Finland. Timeline of VET policies in Europe. [online tool] <https://www.cedefop.europa.eu/en/tools/timeline-vet-policies-europe/search/36311>(검색일 2025. 1. 31.).

□ 재직자 역량 개발 및 경력 전환 지원 프로그램 확대

- 노동시장에 진입한 근로자뿐 아니라 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점차 확대되면서, 현재 수행 중인 업무와 관련된 역량 개발뿐 아니라 직무 이동이나 이직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흐름은 평생교육 정책과 맞물려, 노동시장 진입에서 은퇴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친 지속적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음.

- 프랑스는 국민 전체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조치로 '개인훈련계좌(Personal Training Account; Compte personnel de formation, CPF)'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 제도는 현재의 고용 상태와 무관하게 노동시장에 진입한 경험이 있는 모든 개인에게 직업교육 학습권을 부여하여,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됨(Cedefop, 2025b).

[프랑스의 재직자 역량개발 정책 사례]

- 개인훈련계좌(Personal Training Account; Compte personnel de formation, CPF) 제도
  - 재직자의 개별적 역량개발을 위해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훈련권을 적립하고, 이를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데 활용하는 제도
  - 2015년 시행 초기에는 시간 단위로 적립하였으나, 프로그램 비용 지불의 편의를 위해 2019년 이후 크레딧(€, 유로)으로 적립됨.
  - CFP 지원 교육과정
    - ① 자격(학위, 전문자격증 등) 취득, ② 지식 및 기술 기반 학습,
    - ③ 경험학습인정제(VAE) 과정: 업무 기반 경험을 통한 학위 인정 제도
    - ④ 전문기술 평가, ⑤ 사업의 창업 또는 인수,
    - ⑥ 자원봉사 및 시민봉사 활동 수행에 필요한 기술 습득, ⑦ 자동차 운전면허
  - CFP 훈련비 지급 기준
    - 정규직 및 파트타임: 연간 500유로, 최대 5,000유로 지원
    - 자영업자: 연간 500유로, 최대 5,000유로 지원, 1년 미만 근무 시 비례 계산  
(예: 사업장 6개월 운영 시 250유로 지원)
    - 비숙련 근로자: CAP/BEP 디플로마 또는 RNCP 3등급에 등록 및 분류된 전문 직함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수준이 없는 경우 연간 800유로, 최대 8,000유로 지원

자료: 옥우석(2021). 개인훈련계좌제도의 제도적 조건: 프랑스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EU학 연구, 26(3), 87-124.  
Le site officiel d'information et de démarches administratives(2025). Personal Training Account (PTA) of a Private Sector Employee. [online tool]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0705?lang=en>(검색일 2025. 2. 3.).  
Cedefop(2025b). Personal Training Account, Compte personnel de formation (CPF). Cedefop Publishing.

□ 직업교육 확대 및 질 제고

- 유럽자격체계(European Qualifications Framework, EQF)를 기반으로 유럽 전역에서 국가자격체계(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NQF)의 운영 기반이 강화되고,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2005년까지만 해도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 등 3개국만이 국가자격체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후 39개국에서 총 43개의 NQF가 시행되고 있음.
- 특히 2019년에서 2020년 초 사이 NQF의 법적 기반이 강화되면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현재 38개국이 공식적으로 NQF를 제정하거나 법적으로 채택하고 있음. 이들 국가에서는 민간자격도 공식적인 NQF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33개국 등에서는 증명서나 공식 문서에 NQF와 EQF를 함께 표기하여 자격 기준의 상호 통용성을 높이고 있음.
- 또한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직업교육의 위상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캐나다 등도 직업교육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미국은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 모델을 활용해 고등직업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며 직업교육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음. 커뮤니티 칼리지는 국공립 교육체계 내에서 직업교육의 핵심 기관으로 기능하며, 대학 재학생뿐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Cohen & Brawer, 2008). 또한 2015년부터 ‘College Promise’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커뮤니티 칼리지의 2년간 수업료를 지원하는 주 단위 캠페인을 운영해 왔으며, 참여 주 정부가 수업료를 부담하고 학생들은 그 외 비용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함(Davis & Lewin, 2015).

□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동등성 확보

- 성공적으로 직업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 등은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의 동등한 인정을 위해 국가역량체계를 확립하고, 두 교육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함(Billett, 2020).
- 독일은 유럽역량체계(EQF)를 기반으로 독일국가역량체계(DQR)를 구축했으며, 직업교육법을 통해 교육경로 간 이동과 연계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과거에는 직업교육 트랙과 일반교육 트랙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직업교육훈련 트랙에서 취득한 자격이 고등교육 입학 자격으로 인정되며, 학사 및 석사

학위 취득으로 연계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됨(유진영, 2022). 특히 직업교육 및 일반교육 전문가가 공동으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DQR에서 규정하는 역량을 기반으로 학습 성과 단위를 설정하도록 하는 점이 특징적임(Hemkes, 2018).

#### [독일의 직업교육 동등성 확보 사례]

- DQR Bridge 5 프로젝트
  - 독일국가역량체계의 레벨 5와 유사한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분야의 연결을 위한 프로젝트로, 국가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숙련 근로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되는 국가적 계획임.
  -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간의 연계성과 투과성을 양방향으로 체계화하는 시스템으로, 교과과정의 상호 연계된 교차 교육을 제공함.
  - DQR Bridge 5의 목표
    - ①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의 투과성 강화를 통한 시스템 간 타당성을 갖춘 프로그램의 체계적 통합
    - ② DQR 5 수준의 교육 및 자문을 통한 커리큘럼 개발
  - 진행 프로젝트
    - ① IT 전문가: 울름 기술 아카데미(TAU)를 중심으로 직업교육과 일반교육 간 '교차 교육을 위한 bridge' 운영
    - ② 자동차 서비스 기술자: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을 연결할 수 있는 자동차 서비스 분야의 양방향 교육과정 개발을 바탕으로 숙련된 근로자의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활용

자료: BIBB.(n.d.). DQR Bridge 5: Förderung von Durchlässigkeit zur Fachkräftegewinnung - Entwicklung von bereichsübergreifenden Bildungsmaßnahmen auf Niveau 5 des DQR.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 노르웨이는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을 동등하게 포함하는 통합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교육개혁을 통해 후기 중등교육 단계에서 '2+2 모델(VET 2+2 model)'을 이수한 후 고등교육으로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함(Cedefop & Norwegian Directorate for Higher Education and Skills, 2022).
-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도 학생들이 직업교육과 관련된 실용 교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업 선택 교과를 교육과정에 일부 포함시켜 고등학교 단계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직업 프로그램을 미리 파악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Hiim, 2020).

[노르웨이의 직업교육 동등성 확보 사례]

- VET 2+2 모델
  - 후기 중등교육(upper secondary)인 고등학교에서 2년간의 학교 교육 이수 후, 2년간의 도제 훈련 또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직업교육 제도
  - 제도 이수 후 EQF 레벨 4의 자격시험을 통과하도록 하여 국가자격으로 인정
  - 이후 고등교육(학사)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며, 일반교육 이수자와 동등한 자격 및 권리를 가짐.
  - 모델 운영 과정
    - ① 1학년: 공통 핵심 과목(노르웨이어, 영어, 수학, 체육, 자연과학 및 사회 과학), 산업 관련 이론 및 실무 과목 이수
    - ② 2학년: 목표 산업에 따라 구체적 이론 및 실무 과목 이수
    - ③ 3~4학년: 학생과 기업 간 계약을 통해 공식적 실습 훈련 이수

자료: Norwegian Directorate for Education and Training(2020). Norwegia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https://www.udir.no/in-english/norwegian-vocational-education-and-training/>(검색일 2025. 2. 27.).

다. 결과 및 기대효과

□ 직업교육의 사회적 인식 개선

- 직업교육의 관점이 평생학습으로 확대되고 중등 및 고등 교육과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그 필요성 또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 직업교육의 미래 비전과 인식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업교육은 향후 15년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고등직업교육 및 평생직업교육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인됨. 나아가 2035년에는 직업교육이 전 연령대 학습자를 포괄하는 평생교육의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음(Cedefop,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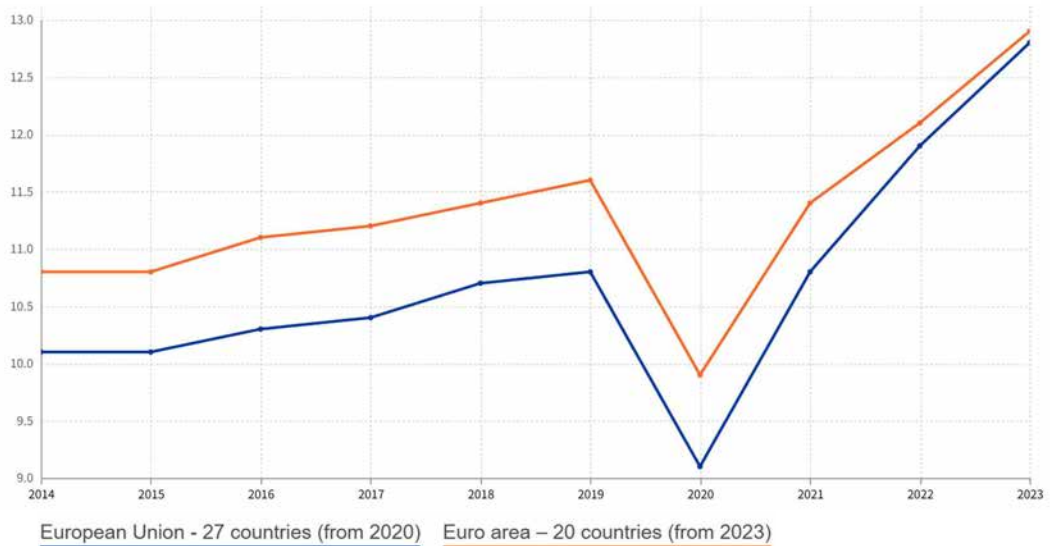
□ 평생학습 참여율 증가

- 직업교육을 평생교육 체계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성인학습자의 교육 이수 및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약 10년간 성인(25세 이상 64세 미만)의 교육 및 훈련 참여

을 추이를 살펴보면, EU 27개국 평균은 10.1%에서 12.8%로, 유로존(Eurozone) 20개국 평균은 10.8%에서 12.9%로 증가함(Eurostat, 2024).

[그림 3-13] 연도별 성인(25세 이상 64세 미만) 교육 및 훈련 참여율(EU)

(단위: %)



자료: Eurostat(2024). Participation rate in education and training (last 4 weeks) by sex and age. [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view/trng\\_lfse\\_01/default/table?lang=en](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view/trng_lfse_01/default/table?lang=en)(검색일 2025. 2. 10.).

#### □ 경력 전환 및 재취업 지원 강화

-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뿐 아니라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의 근로자들도 직업교육을 이수하게 되면서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재취업, 저숙련 노동자 대상의 교육훈련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특히 프랑스의 경우, 개인훈련계좌(CPF)를 활용한 재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이를 통해 재취업 훈련을 받은 실업자 비율이 전년 대비 4%포인트 증가한 36%를 기록함. 또한 생산직 및 저숙련 근로자의 CPF 이용률이 상승하며 재훈련 과정이 확대되었고, 창업 교육과정 수강자 수도 11배가량 증가해 창업역량 강화에 대한 수요 역시 높게 나타남. 이러한 실업자, 비정규직, 저숙련 근로자 대상의 교육훈련은 2020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해 왔으며, 이는 근로자들의 경력 전환과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Ministère du Travail, 2021).

□ 사회적 통합 및 형평성 제고

- 평생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형평성과 사회적 통합에 대한 기여는 직업교육 측면에서도 점점 더 중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래 직업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 역시 변화하고 있음.
- 2035년 이후 직업교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생들의 완전한 사회 참여 및 적극적 시민 양성 준비'일 것으로 예상되며(Cedefop, 2020), 현재는 해당 목적의 비중이 크지 않지만 향후 약 10년 내에 사회 참여와 시민 의식 함양이 직업교육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됨.

## 2. 직업교육의 유연성과 개인화 강화

### 가. 추진 배경

□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필요성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학습의 필요성이 증가함.
- 세계경제포럼(WEF)은 2025년까지 노동시장에서 적용되는 핵심 기술 중 40%가 변경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 세계 노동자의 50% 이상이 재교육을 받아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음.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재교육과 역량 향상(upskilling)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술 변화로 인한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WEF, 2020). 이에 따라 노동시장 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다 유연한 형태의 직업교육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음.

## □ 개인별 맞춤형 학습 요구 증가

- 학습자의 배경과 경험, 교육 목표가 점차 다양화되고 세분화됨에 따라 획일적인 교육 제공만으로는 학습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됨.
  - 특히 직업교육 측면에서는 평생학습자와 성인학습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연령대에서 다양한 직무능력을 학습하려는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학습자들의 요구는 기존 직업교육의 주요 대상으로 여겨졌던 학습자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임(Cedefop, 2022).
  - 또한 중등직업교육에서도 학생들의 요구 사항과 선택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학생들이 필요한 자격을 선택하거나 선택한 과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짐. 과거에는 유연성이 부족한 교육시스템으로 인해 학생들이 선택을 변경하기 어려웠으며, 결국 변경보다는 중도탈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음(Cedefop, 2025a).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유연한 교육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됨.

## □ 디지털 학습 환경 마련

- 기술 발전으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 점차 확대되고,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 등을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음.
  -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반 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복잡한 개념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도를 높이는 긍정적 역할을 함(Elmqaddem, 2019).
  -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학습 자료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습자의 시간적·공간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됨. 또한 온라인에서 개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개인화된 학습 경험 제공과 더불어 학습자의 상황에 맞춘 유연한 학습 과정 진행이 가능해짐(Koksal, 2020).
  - 온라인으로 직업교육 및 훈련을 받으려는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음. 온라인 학습을 원하는 개인은 약 4배, 기업에서 고용주가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 형태는 약 5배 증가하였으며, 유럽 정부가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등록자 수 역시 약 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WEF, 2020).

□ 비형식·무형식 학습의 가치 인정

- 공식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직업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로 향상된 역량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음.
- UNESCO는 2030년까지의 교육 실행계획에서 직업기술교육훈련 시스템은 공식적·형식적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 내 경험이나 온라인 환경 등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무형식 및 비형식 환경에서 학습한 내용의 결과 역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제시함(민동석, 2016).
- 또한 형식 학습과 무형식 학습 간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양쪽에서 이수한 학점 등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학습한 내용 역시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이를 위해 이동 및 유연성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과 서비스 운영이 학습자 편의 증진에 필요하다고 제시함.
- 나아가 비형식·무형식 학습 결과의 인정·검증·인증(Recognition, Validation and Accreditation, RVA)이 평생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며, 이를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각국에서 강조되고 있음. 또한 국가 내부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격 프레임워크를 통합하기 위해 RVA 활용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음(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2012).

나. 현황

□ 모듈식 직업교육 및 학습 시스템 도입

- 학습자의 수요가 점차 다양해지고 개인화됨에 따라 직업교육 시스템 자체에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교육 프로그램을 모듈 형태로 구성하고, 학습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마련되고 있음.
- 호주에서는 국가직업자격체계(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 AQF)를 통해 모듈식 학습 단위(Units of Competency)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학습자는 자신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단위만을 선택해 학습할 수 있으며, 산업별로 필요한 역량은 Training Packages를 통해 모듈 형태로 구성·제공되고 있음(Australian Skills Quality Authority, 2025).

## [호주의 모듈식 직업교육 시스템 운영 사례]

- 훈련 패키지(Training Packages) 제도
  - 훈련 패키지는 직장에서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을 역량 단위로 구성한 것임.
  - 2023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독립적인 훈련 패키지가 국가 표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기능을 구축함.
  - 역량의 단위는 호주 자격 프레임워크(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 AQF)를 준수하여 작성되고, 훈련 패키지를 이수할 경우 국가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
  - 훈련 패키지의 운영 목적
    - ① 개별 학습자의 요구 사항, 고용주 및 기업의 요구 사항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 ② 고용주의 인력 개발, 확보 등에 대한 지원
  - 훈련 패키지의 구성
    - ① 국가 역량 표준: 직장에서 요구되는 성과 기준에 대한 역량 단위
    - ② 국가자격: AQF(Certificate I~Advanced Diploma, Graduate Certificate 및 Graduate Diploma)에 적합한 자격에 필요한 역량 단위
    - ③ 평가 지침: 개인의 성과가 역량 기준을 충족했는지 판단하는 요구 사항

자료: Australian Skills Quality Authority(2025). Training packages. <https://www.asqa.gov.au/about/vet-sector/training-packages>(검색일 2025. 2. 11.).

Training.com.au(2025). Training Packages in Australia. <https://www.training.com.au/training-packages/>(검색일 2025. 2. 11.).

- 싱가포르에서는 SkillsFuture 정책의 일환으로 SkillsFuture Series라는 모듈식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이 프로그램은 산업수요가 높은 분야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단기간의 모듈식 형태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변화하는 직무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을 재교육(reskilling)하거나 향상(upskilling)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Government of Singapore, 2024).

## [싱가포르의 모듈식 직업교육 시스템 운영 사례]

- SkillsFuture Series 제도
  - 산업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기술적 지식 및 역량에 대한 짧은 모듈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도로, 기본적 이해 및 기술 향상을 희망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함.
  - 교육 프로그램 분야
    - ① 돌봄 경제: 현재 및 미래 인구의 양육과 교육에 관련된 학습서비스 제공, 의료, 지역사회 돌봄, 사회 서비스, 유아·일반교육·성인교육 등 포함
    - ② 디지털 경제: 디지털 서비스 관련 AI, 데이터 및 분석,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시스템 및 인프라, 소프트웨어 개발 등 포함

- ③ 녹색 경제: 환경 보호 및 자원 지속가능성 관련 환경 및 지속가능성 관리, 녹색 인프라 및 이동성, 에너지, 자원 순환 및 탈탄소화 기술 등 포함
- ④ 산업 4.0: 산업용 사물 인터넷(IoT), 로봇 공학, 스마트 제조 등 제조 및 산업에서의 자동화 관련 기술 포함
- 교육 프로그램 수준
  - ① 초급: 사전 지식이 제한적인 학습자를 위한 기초 지식 및 응용 학습
  - ② 중급: 실무 지식이 있는 학습자를 위한 복잡한 수준의 지식 및 응용 학습
  - ③ 고급: 숙련된 실무자를 위한 심화 및 전문적 주제의 학습

자료: SkillsFuture Singapore(2024b). SSG Annual Report for the year 2023/2024. Government of Singapore.

Government of Singapore(2024). Short industry-relevant training for emerging skills in economic growth pillars. <https://www.skillsfuture.gov.sg/initiatives/mid-career/series>(검색일 2025. 2. 11.).

#### □ 학습 성과의 인정 기준 확대

- 이수한 직업교육과정의 기록을 축적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학습할 때 이전 학습 기록과 내용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학습경로 간 이동성을 고려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
- 스코틀랜드에서는 학점 및 자격 프레임워크(Scottish Credit and Qualifications Framework, SCQF)를 마련하여 학점의 누적 및 이전 시스템을 통해 직업교육 측면에서의 학습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학습자는 다양한 경로로 이수한 학습 내용을 국가 차원에서 모두 인정받을 수 있으며, 공식 자격체계에 기반해 자신의 역량을 증명할 수 있음(SCQF Partnership, 2012).

#### [스코틀랜드의 학점 및 자격 프레임워크 사례]

- 스코틀랜드 학점 및 자격 프레임워크(Scottish Credit and Qualifications Framework, SCQF) 제도
  - SCQF는 학교, 전문대학, 대학, 기업, 훈련 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다루는 자격을 모두 포함함.
  - 레벨은 학습 성과의 복잡성을 의미하며, 12개로 구성됨.
  - 학점은 학습의 양을 의미하며, 1학점은 평균 10시간의 학습을 의미함. 취득한 학점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전이 가능함.
  - 사전학습인정(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RPL): 이전 학습에서의 성과를 인정하는 프로세스로, 공식적·비공식적 학습을 모두 포함함.

자료: SCQF Partnership(2012). SCQF level descriptors. <https://scqf.org.uk/the-framework/about-the-framework/>(검색일 2025. 2. 11.).

## □ 마이크로 자격 및 학위 취득

- 마이크로 자격(micro-credential)은 단기 학습 경험을 통해 습득한 학습 성과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명확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며 합의된 표준에 기반해 인정받을 수 있음(EU Council, 2022).
- 이는 노동시장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술을 빠르고 유연하게 습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존 자격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방식으로 활용됨.
  - 유럽연합은 ‘평생학습 및 취업 가능성을 위한 마이크로 자격증에 대한 유럽식 접근법’을 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유럽 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을 정의하여 운영함.

## [유럽연합의 마이크로 자격증 운영 사례]

- 평생학습 및 취업 가능성을 위한 마이크로 자격증에 대한 유럽식 접근법(A European approach to micro-credentials for lifelong learning and employability)
  - 마이크로 자격은 단기적인 맞춤형 학습 경험의 결과를 인증하는 제도로, 다양한 교육 제공자가 다양한 학습 환경(공식 및 비공식)에서 설계하고 발급할 수 있음.
  - 2022년 6월 유럽연합에서 공통된 정의와 표준을 설정하여 발표함으로써 인정 기준이 마련됨.
  - 마이크로 자격의 유럽 표준 필수 요소
    - ① 학습자 성명, ② 마이크로 자격명, ③ 발급자 국가 및 지역, ④ 수여 기관,
    - ⑤ 발행일자, ⑥ 학습 성과, ⑦ 학습 성과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학습량(학점 등),
    - ⑧ 마이크로 자격증과 연계할 수 있는 국가자격 수준(EQF, QF-EHEA; 해당 시),
    - ⑨ 평가 유형, ⑩ 학습활동 참여 형태, ⑪ 마이크로 자격증 인정을 위한 보증 유형
  - 마이크로 자격에 대한 위원회의 지원
    - ① 모든 유형 교육 공급자의 마이크로 자격증 개발을 위한 EU 서비스,
    - ② 정보 공유 지원 및 우수사례 홍보, ③ Europass 플랫폼의 기술적 구현 지원,
    - ④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통한 자금 지원 제공

자료: EU Council(2022). A European approach to micro-credentials for lifelong learning and employability.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OJ C 243, 27.6, 10-25.

European Commission(2024a). A European approach to micro-credentials. <https://education.ec.europa.eu/education-levels/higher-education/micro-credentials>(검색일 2025. 2. 11.).

- 미국에서는 마이크로 자격을 특정 기술이나 역량을 유연하게 인증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33개 주에서 교육구 수준으로 마이크로 자격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Digital Promise, 2024).

[미국의 마이크로 자격증 운영 사례]

- Educator Micro-credential Policy
  - 미국은 전국 교육 협회(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NEA) 및 Digital Promise 등을 중심으로 마이크로 자격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교육의 대상은 학생(K12 및 고등교육), 교육자, 직장인 및 평생학습자임.
  - 마이크로 자격증 정책 현황
    - ① 지역구 수준 인센티브: 각 학교 또는 학구의 마이크로 자격 인정 정책 마련
    - ② 주정부 정책 및 지침: 주 전체 또는 주 교육부 수준에서 관련 법령 마련
    - ③ 주정부 수준 이상: 주 정부뿐만 아니라 주 내의 제3자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자격 증명 시범 운영, 평가 위원회 구성, 자격 증명 개발을 위한 공식적 논의
    - ④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과정에서 커리큘럼 제공 및 학점 취득 가능

자료: Galindo, M., Fennelly-Atkinson, R., Franklin, K., Luna, C. (2024). The Role of Micro-Credentials in Lifelong Learning and Development: Empowering Learners, Empowering Organizations. Digital Promise.  
 Digital Promise(2024). Educator Micro-credential Policy Map. <https://digitalpromise.org/initiative/educator-micro-credentials/micro-credential-policy-map/>

-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온타리오 마이크로 크레덴셜 챌린지 펀드를 마련하여 약 6,000 명의 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한 300개 이상의 마이크로 자격 과정을 만들고 운영 중임. 이 펀드를 통해 주 전역의 단과대학, 대학교, 연구소, 직업 전문대학 등을 지원하고 있음(PEQAB, 2023).

[캐나다의 마이크로 자격증 운영 사례]

- Ontario Micro-credentials Challenge Fund
  - 2021년 4월에 온타리오주는 온타리오 마이크로 크레덴셜 챌린지 펀드 1라운드로 1,500만 달러를 확보하고 마이크로 자격 제도 개발을 가속화하였음. 이를 통해 65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수행되었고, 300개 이상의 새로운 자격이 생성됨. 다음으로 펀드 2라운드를 통해서도 노동시장의 격차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36개의 전문대학에 자금을 지원하였음.
  - 펀드 운영 진행 상황
    - ① 마이크로 자격증 교육 온라인 포털 구축
    - ② 새로운 마이크로 자격 생성(약 300개)
    - ③ 고등교육기관, 교육 제공자 및 고용주 간 파트너십 강화
    - ④ 학습자 및 고용주 대상 마이크로 자격증 장려
    - ⑤ 일자리 수요에 따라 필요한 교육 비용 지원(온타리오 학생 지원 프로그램, OSAP)
    - ⑥ 학습자의 학습 경험 기록을 위한 프로그램 시범 운영

자료: PEQAB(2023). Ontario Micro-Credentials: Harnessing the Potential. Postsecondary Education Quality Assessment Board.  
 Government of Ontario(2024). Micro-credentials from Ontario's postsecondary schools. <http://www.ontario.ca/page/micro-credentials-ontarios-postsecondary-schools>.

#### 다. 결과 및 기대효과

##### □ 직무 관련 학습경로 전환 용이성 증가

- 모듈 형태의 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이 필요에 맞는 내용을 선택하여 학습경로를 보다 쉽게 조정할 수 있게 됨.
  - 노동시장 수요나 개인의 수요에 맞는 학습 과정을 취사선택하고, 자신이 보유한 역량 및 지식수준을 보다 쉽게 고려할 수 있게 됨. 유연한 직업교육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습자들이 기존 경로에서 다른 경로로 전환하는 데 대한 부담이 줄어들며, 이는 곧 학습자의 중도 탈락을 감소시키는 요소로 작용함(Cedefop, 2025a).
  - 또한 모듈식 교육과정은 전통적인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다양한 맥락 및 노동시장 변화에 맞게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을 높일 수 있으며, 최근의 학제 간 (interdisciplinary) 접근 추세에 부합하는 직업교육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Farran & Nunez, 2024).

##### □ 개별화된 학습경로 제공

- 유연화되고 개별화된 직업교육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학습자의 개인적 배경, 이전 경험, 학습 목표에 따라 맞춤형 학습경로를 설계할 수 있게 됨.
  - 학습은 직무 단위 혹은 역량 단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자격 취득과 관련해서도 마이크로 자격 등 시스템을 활용해 단기간에 직무역량을 높이고 그 성과를 자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음.
  - 또한 온라인 직업교육과정이 발전하면서 교수법에서도 개인화된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학습 효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Guajardo, 2020).
  - 아울러 기존에 학습한 내용을 반복 학습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전 학습 내용을 인정하는 방식이 학습자의 동기 유지에도 도움이 됨(Cedefop, 2025a).

##### □ 성인학습자 및 평생학습자의 접근성 향상

- 성인학습자 및 평생학습자는 정형화된 학습 과정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는 유연한 학습을 통해 교육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사전학습내용인정(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RPL)은 공식 학습 성과뿐만 아니라 비공식 학습 결과까지도 성과로 인정함으로써 평생학습 접근성을 넓힐 뿐 아니라 공식 학습과 비공식 학습 간 연결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작용함. 또한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간과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성인학습자의 접근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됨(ILO, 2018).

□ 산업수요에 적합한 인재 양성의 효율성 제고

- 직업교육의 유연성이 확보되면서 실용적이고 시급성이 높은 지식과 기술을 학습할 기회가 확대됨. 이를 통해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할 수 있음.
- 공식적·정규 교육 형태의 직업교육은 노동시장에 이미 진입해 있는 근로자에게는 접근성이 다소 낮을 수 있음. 그러나 마이크로 자격이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구성된 유연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성인학습자의 업스킬링 및 리스킬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Kato, Galán-Muros, & Weko, 2020), 이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분야의 근로자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3. 기술 혁신 대응을 위한 디지털 인력 양성

가. 추진 배경

□ 기술 변화로 인한 지속적인 역량 개발 필요성

-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로봇,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하는 혁신적 기술 변화는 산업 측면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 성장을 촉진함.
- 이에 따라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신기술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면서 초기 직업교육(IVET)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직업교육(CVET)의 중요성이 강조됨(Cedefop, 2021b).
- 또한 기술 변화 및 디지털화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됨과 동시에 약 8천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현재 근로자의 50% 이상이 재교육을 통해 노동시장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임(WEF, 2020).

- 구체적으로 기술적·사회적·정서적 기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신체적·수동적 기술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 수준을 심화시키거나 새로운 기술과 역량을 습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기업 측면에서도 조직 내 과업 구성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진행되고 있음 (Bughin et al., 2018).

#### □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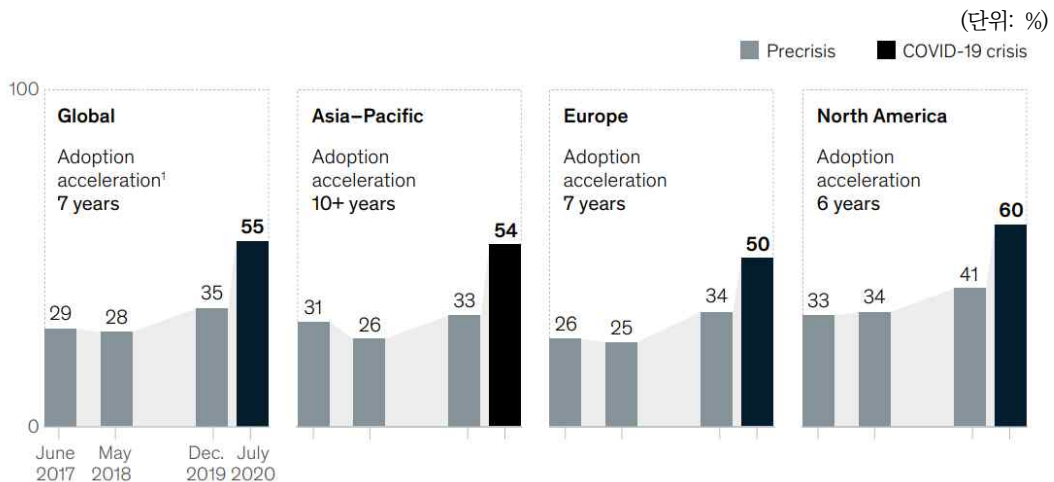
- 4차 산업혁명 이후 디지털 전환의 흐름은 노동시장 전반의 업무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자동화로 인한 직무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 이에 일상적이지 않으면서 디지털 및 혁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의 필요성이 증가함.
- 디지털 기술에 대한 지속적 투자는 첨단 산업 및 IT 산업뿐 아니라 제조, 서비스, 금융, 의료, 미디어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성형 AI, 로봇공학, 몰입형 기술(immersive technology) 등의 등장으로 단순 디지털 리터러시를 넘어선 심화된 기술 수요가 증가함(Yee et al., 2024).
-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수요는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현재 직무에 종사하는 전체 인력 중 약 37%는 충분한 수준의 디지털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숙련된 디지털 기술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European Union, 2025).
-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은 비일상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보다 고용 점유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자동화 위험이 높은 직종은 소멸할 가능성이 높음. OECD 국가 일자리 중 약 14%는 완전한 소멸이 예상되며, 약 32%의 직업은 수행하는 업무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됨(Nedelkoska & Quintini, 2018).

#### □ 팬데믹으로 인한 디지털화의 가속

- 팬데믹으로 인한 전 세계적 위기 상황은 모든 국가와 산업에서 디지털 기술 의존도를 급격히 높였으며, 이는 디지털 역량 개발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됨.

- 기업 측면에서 내부 시스템 디지털화는 약 3~4년 앞당겨졌으며, 디지털 제품·서비스 개발 속도는 약 7년 빠르게 달성되었음. 또한 디지털 이니셔티브에 대한 집중적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기술인재 격차 해소 및 진보된 디지털 기술 활용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음(O'Toole et al., 2020).
- 특히 필수적으로 디지털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기업 운영 대부분을 전환해야 했기 때문에 팬데믹 이전 예상했던 속도보다 약 40배 빠르게 원격 근무 시스템 등이 구축됨. 팬데믹 이전까지는 온라인 근무 환경 구축이 기업 내 우선순위가 아니었으나, 위기 대응 필요성으로 인해 매우 빠른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짐(O'Toole et al., 2020).

[그림 3-14] COVID-19 전후 디지털화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평균 비중



자료: O'Toole et al.(2020). How COVID-19 has pushed companies over the technology tipping point and transformed business forever. McKinsey Global Institute. p. 3.

## 나. 현황

### □ 디지털 기술 교육 강화 정책 구축

- 국가 단위에서 디지털 기술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계뿐만 아니라 산업계 및 전체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기술 혁신 방안을 적용하고 있음.
- 유럽연합(EU)은 전체 회원국에 적용되는 이니셔티브로 '디지털 교육 실행 계획

(Digital Education Action Plan)’을 수립하고, 회원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이 계획은 교육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권고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회원국이 자국 교육과정 및 교육시스템을 설계·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음(European Commission, 2020).

#### [유럽연합의 디지털 교육 정책 사례]

- 디지털 교육 실행 계획(Digital Education Action Plan 2021-2027)
  - 유럽연합의 정책 이니셔티브로, 접근성이 높으며 포괄적이고 질 높은 디지털 교육에 대한 공통 비전을 제시함.
  - 연합 내 회원국들의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이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국가, EU, 전 세계 차원의 협력을 촉구함.
  - 디지털 교육 실행 계획의 우선순위
    - ① 고성능 디지털 교육 생태계 개발 촉진
    - ② 디지털 변혁을 위한 디지털 기술과 역량 강화
  - 유럽위원회 실행 전략
    - ① 디지털 교육 및 기술에 관한 회원국과의 구조적 의견 교류
    - ② 고품질의 포괄적인 초·중등교육을 위한 블렌디드 러닝 접근 방식에 대한 위원회 권고안 마련
    - ③ 유럽 디지털 교육 콘텐츠 프레임워크
    - ④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연결성과 디지털 장비 구축
    - ⑤ 교육 및 훈련 기관을 위한 디지털 전환 계획
    - ⑥ 교육자를 위한 AI 및 데이터 사용에 대한 윤리 지침
    - ⑦ 디지털 리터러시 육성, 허위 정보 해결을 위한 교사 및 교육자를 위한 공통 지침
    - ⑧ AI 및 데이터 관련 기술을 포함하는 유럽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 업데이트
    - ⑨ 유럽 디지털 기술 인증(EDSC)
    - ⑩ 디지털 기술 제공 개선에 대한 위원회 권고안 마련
    - ⑪ 국가 간 데이터 수집 및 학생 디지털 기술에 대한 EU 수준 목표 제시
    - ⑫ 디지털 기회 교육 연수 및 인턴십
    - ⑬ STEM 분야에서의 여성 참여 독려
    - ⑭ 유럽 디지털 교육 허브 설립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0). Digital education action plan 2021-2027. Resetting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digital age. European Commission.

Rodero, L. G. (2023). The european digital education plan for the development of lifelong learning. The value of the difference and lifelong learning in the contemporary pedagogy, 113-129.

- 독일은 '독일 인터스트리 4.0(Germany Industrie 4.0, I40)'을 국가 이니셔티브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전방위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 중임. 특히 학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 결과가 산업계로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 혁신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도모하고 있음(Scheel et al., 2017).

**[독일의 디지털 기술 혁신 정책 사례]**

- 독일 인터스트리 4.0(Germany Industrie 4.0, I40)
  - 독일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전략적인 디지털 이니셔티브로, 제조 분야에서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독일 교육·연구부(BMBF)와 경제·에너지부(BMWI)를 주체로 하여 제조업에서 디지털 및 자동화를 확대하고자 함. 특히 연구와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연구된 결과가 빠르게 산업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둬.
  - 주요 성과
    - ① 산업 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 학계-산업계-정책 간 협력 활성화
    - ② 연구에서 실용화까지의 신속한 연결: 연구 성과를 현장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한 산업체 테스트베드 운영
    - ③ 디지털화로 인한 경제적 기회 창출: 약 1,500만 개의 일자리가 있는 제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자료: Scheel et al.(2017). Germany: Industrie 4.0. Digital Transformation Monitor. European Commission.

- 프랑스는 2015년부터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전담하는 '프랑스 디지털 대학교(Grande École du Numérique)'를 운영해 왔으며, 특히 취약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 확보에 방점을 두었음. 2025년부터는 해당 정책을 종료하고 프랑스 공공고용서비스로 정책 시행을 이관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임(Grande École du Numérique, 2025).

**[프랑스의 디지털 기술 교육 사례]**

- 프랑스 디지털 대학교(Grande École du Numérique, GEN) 운영
  - 2015년 프랑스 정부에 의해 프랑스 디지털 대학교(GEN)가 설립되었으며 교육부, 노동부, 도시정책부, 디지털부 등 4개 부처가 지원함. 디지털 직군의 인력 부족 해소와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포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 주요 성과
  - ① 디지털 기술 교육과정 개설(약 1,000개)
  - ② 취약계층 학습자 기술 교육 지원(약 45,000명)
  - ③ 디지털 직업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플랫폼 구축
  - ④ 디지털 직업 및 직무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대중화 기여
  - ⑤ 교육과정 수료자의 70% 이상이 취업 또는 교육 성과 달성
- 향후 운영 방향: GEN 프로젝트는 관련 정부부처 및 프랑스 공공고용서비스(France Travail)로 이관되어 규모를 확대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자료: Grande École du Numérique(2025). Clap de fin pour la Grande École du Numérique. Communiqué de presse.

- 핀란드는 고등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목적으로 전체 37개 고등교육기관이 참여하는 학습시스템 구축 정책을 수행 중임. 약 4,000만 유로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참여 고등교육기관 간 경계를 없애고 통합시스템을 활용해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디지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CSC, 2021).

[핀란드의 고등교육 디지털 전환 전략 사례]

- o 디지비전 2030(Digivisio 2030)
  -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핀란드 고등교육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개방형 학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 차원 프로젝트임.
  - 핀란드 내 37개 고등교육기관이 참여함.
  - 교육문화부에서 2,000만 유로의 특별 보조금 지원, 초기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780만 유로 추가 지원,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600만 유로 지원
  - 주요 목표
    - ① 디지털 학습 생태계 구축: 개방적이고 통합된 학습시스템 마련
    - ②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 모델: 데이터 기반 학습 지원
    - ③ 대학 간 협력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 ④ AI 및 데이터 기반 교육 혁신: AI를 활용한 교육 맞춤화, 자동화 평가 시스템
  - 실행 전략
    - ① 국가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구축
    - ② AI 기반 학습 지원 시스템 개발: 데이터 기반으로 교육과정 자동 추천
    - ③ 공통 학습 인증 시스템 구축: 여러 대학에서 수강한 과목 통합 관리
    - ④ 디지털 학습 환경 혁신: 블렌디드 러닝, VR/AR 및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
    - ⑤ 지속적 학습 모델 개발: 대학 졸업 후 평생학습 지원

자료: CSC(2021). Digivisio 2030 hankesuunnitelma 2021-2024. CSC: IT Center for Science.

#### 다. 결과 및 기대효과

##### □ 신기술 분야 인력 수급 개선

- 첨단 기술 및 디지털 기술 분야의 인력이 양성됨에 따라 ICT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수가 다소 증가함.
  - 2020년 EU 분석에 따르면, 1년 전 ICT 분야 전문가는 약 780만 명이었으나 1년 후 약 840만 명으로 증가하였음. 지속적인 디지털 역량 강화로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있으나, 여전히 산업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전문인재는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신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할 것으로 전망됨(Bahrke & Grammenou, 2021).
  -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디지털 대학교(GEN) 프로그램 이수 참여자 중 약 75%가 취업 또는 추가 교육을 이어가는 것으로 조사되어, 디지털 및 신기술 교육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Grande École du Numérique, 2025).

##### □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 근로자들의 기술 및 디지털 역량 강화는 기업의 혁신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기업 운영을 가능하게 함.
  - 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전체 사업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높게 인식되고 있으며, 디지털 역량을 갖춘 기업은 효과적 혁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성공적인 운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Kane, 2015; Wielgos et al., 2021).
  - 중소기업 측면에서도 근로자가 보유한 디지털 기술은 혁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기업이 목표로 하는 디지털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 향상과 지식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음(Rexhepi Mahmutaj & Jusufi, 2023).

##### □ 산업현장의 디지털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개선

- 신기술 및 관련 지식을 보유한 인력이 양성되고, 이러한 인력을 기업이 확보할 경우, 기업 전반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됨.

- 독일은 Industrie 4.0(I40) 정책을 통해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기술 혁신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가 약 900억 유로에서 1,5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Scheel, Kagermann, & Scheer, 2017).
- 디지털 인프라 투자 및 직원 교육은 생산 작업 현대화를 가능하게 하며,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Varlamova & Larionova, 2020). 특히 EU가 강조하는 Industry 4.0은 첨단 기술 도입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및 지속적인 인력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함(Aleca & Mihai, 2025).

#### □ 학습자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 기술 혁신과 그에 대응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본적인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춘 개인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기술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핀란드 등의 경우, 근로자뿐 아니라 전체 국민(16~74세) 중 기초 디지털 역량 보유율이 80%에 육박함(European Commission, 2022).
  - 또한 디지털 기술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기업 내 다른 근로자에게 디지털 최신 지식을 전달하거나 그들이 디지털화된 기업 및 산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파급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음(G20 Summits, 2017).

## 4. 일 기반 학습 및 산학협력 확대

### 가. 추진 배경

#### □ 기업의 인재 확보 어려움 증가

- 기술 변화로 인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적합하게 보유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
  - 디지털 및 자동화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기술 습득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제조업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약 15%가 기술 불일치 문제를 겪고 있음(Allgood & Perez, 2024). 또한 미국에서는 제조업체의 71% 이상이 현재 직원을 유

지하거나 신규 인력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Moutray & Holland, 2024).

-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의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인력 전망에서도 전체 기업 중 29%만이 인재 가용성이 개선될 것으로 응답한 반면, 49%의 고용주는 인재 가용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이는 적합한 미래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줌(WEF, 2025).

#### □ 현장 중심 교육의 중요성 인식 확대

- 실제 업무 환경에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이 확대되고 있음.
  - 학교에서 직업교육에 일 기반 학습(work-based learning)을 도입하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역량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임. 실제로 일 기반 학습을 이수한 학습자는 실업 가능성이 낮으며, 기업이 학습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일 기반 학습은 기업에 적합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짐(ILO, 2022).
  - 직장 경험이나 관련 기술이 부족한 인력은 기술 격차가 커지는 환경에서 노동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 기업과 학교가 공동 주체로 참여하는 일 기반 학습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되고 있으며,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전환을 보다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함(Kerber & Gourdin, 2018).

#### □ 이론과 실무 간 격차 해소 요구

- 산업 전반과 업무 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적 지식과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 간 괴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해소할 방안 마련이 필요해짐.
  - 도제제도, 일학습병행,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등은 학생들에게 실제 환경에서 이론적 지식을 적용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 기술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Suyitno et al., 2025).
  - 또한 기업이 교육 및 훈련기관과 협력해 직업교육 커리큘럼을 공동 개발할 경우 현장

에서 발생하는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으며, 이러한 협력 움직임은 유럽 기업들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Cedefop, 2015).

## 나. 현황

### □ 국가 차원의 일 기반 학습 제도 확대

- 공식적인 국가 교육과정 및 국가자격체계에 기반한 일 기반 학습 시스템을 여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체와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가 수준의 직업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영국의 T-level은 중등학교 졸업시험(GCSE) 이후 16세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2년제 기술 과정으로, 기업과 교육기관이 협력하여 운영되는 실무 기반 교육임. T-level은 학교에서의 학습과 더불어 실제 산업체에서 일정 기간의 현장실습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학습자가 실무 경험을 쌓고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함.

#### [영국의 일 기반 학습 제도 사례]

- 영국 T-level
  - 2020년 9월에 시작된 T-level은 산업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지식 및 역량을 학습할 수 있는 과정임.
  - 기업 및 교육 제공자의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이 개발되며, 기업은 T-level 패널로 참여하여 각 과정에 대한 기술 및 요구 사항을 정의하게 됨.
  - 교육과정 구성
    - ① 기술자격: 학교 기반 교육으로, 기술에 대한 핵심 이론 교육과정으로 구성
    - ② 기업에서의 산업 현장실습: 최소 315시간(45일) 동안 진행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 기술 습득 가능
    - ③ 영어 및 수학: 학교 기반 교육으로, 필요한 학생들에게 기초 학습 제공
  - T-level 제공 과목: 농업·환경 및 동물관리, 경영·행정, 건설, 디자인·방송, 디지털 비즈니스 및 제작, 교육 및 유아교육, 엔지니어링 및 제조, 의료 및 과학, 법률·금융 및 회계, 영업 및 마케팅 등
  - T-level 과정 전 기초 역량을 준비할 수 있는 T-level 전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년간 기초적인 기술 및 영어, 수학, 디지털 관련 지식을 습득하며 업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

자료: Lewis, J. & Bolton, P. (2022). Technical education in England: T Levels. House of Commons Library, London.

Department for Education(2023). Introduction of T Levels. Policy paper.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troduction-of-t-levels/introduction-of-t-levels>(검색일 2025. 2. 21.).

- 호주는 Australian Apprenticeships 제도를 운영하며, 정부·기업·교육기관이 협력하여 국가자격체계(AQF)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제공함. 해당 제도는 청년뿐 아니라 성인 학습자도 참여할 수 있으며, 학습자는 실제 산업현장에서 고용주와의 고용계약을 맺고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직무역량을 개발함.

[호주의 일 기반 학습 제도 사례]

- 호주 도제훈련제도(Australian Apprenticeships)
  - 훈련기관에서의 학습과 직장에서의 학습을 결합한 형태의 직업교육으로, 크게 3가지 형태의 유형이 운영되고 있음.
  - 도제훈련제도 유형
    - ① 도제훈련제도
 

18세 이상의 호주 국민을 대상으로 Certificate II, III, IV, VET Diploma 또는 VET Advanced Diploma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 사전 비용은 없으며, 보유하고 있는 자격 또는 기술에 근거하여 보수를 책정하여 급여가 지급됨.
    - ② 학교 기반 도제 프로그램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와 직장 또는 훈련기관에서 학습을 병행하는 형태임. 프로그램 이수에는 1~4년이 소요되며, 보유 기술로 산출한 급여가 지급됨.
    - ③ 사전 도제훈련제도
 

도제훈련제도 실시 전, 입문 수준의 훈련을 사전에 이수하는 제도임. 3~6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수 후 Certificate II의 공식 자격이 인정됨.
  - 2025년 1월, 인센티브 시스템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완료되어 교육 지원 지급 및 고용 인센티브가 연장됨. 또한 도제훈련 이수를 위한 지역 이동이 발생할 경우 생활수당이 증가하며, 장애인 도제생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 지원금이 확대됨.

자료: Department of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2025a). Skills for tomorrow: Shaping the future of Australian apprenticeships. Department of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Publishing.

Department of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2025b). Types of apprenticeships. <https://www.apprenticeships.gov.au/about-apprenticeships/types-apprenticeships>(검색일 2025. 2. 19.).

- 일본은 2019년부터 지식·이론과 기술을 모두 학습할 수 있는 전문직 대학 및 전문직 단기대학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는 국가 차원에서 직업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특정 산업 및 직무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일본의 일 기반 학습 제도 사례]

- 일본 전문직 대학 및 전문직 단기대학(専門職大学·専門職短期大学)
  - 특정 직업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과 이론, 그리고 실제 직무 기술을 모두 학습할 수 있는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음.
  - 전문직 대학은 4년제 과정, 전문직 단기대학은 2년제 또는 3년제 과정으로 운영됨.
  - 기존 대학 또는 단기대학(전문대학)에 전문직 대학의 특징을 반영한 학과를 설립하는 전문직 학과도 제도화되고 있음.
  - 전문직 대학 교육내용 특징
    - ① 수업 중 1/3 이상을 실습·실기 수업으로 진행
    - ② 이론을 담당하는 연구자 교사와 실습을 담당하는 실무가 교사의 수업으로 구성 (실무 경험 보유 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
    - ③ 산업현장에서의 실습은 총 600시간 이상(4년제 전문직 대학의 경우)
    - ④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학습 가능
    - ⑤ 전문직 대학 졸업자는 학사(전문직) 학위, 전문직 단기대학 졸업자는 단기대 학사(전문직) 학위 취득 가능
  - 산업체 및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와의 교육과정 협의회 구축을 의무화하여 산업계 동향 및 지역사회의 의견을 교육과정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함.

자료: 文部科学省(n.d.). 전문직 대학 등의 개요·특색(専門職大学等の概要·特色). [https://www.mext.go.jp/a\\_menu/koutou/senmon/1387235.htm](https://www.mext.go.jp/a_menu/koutou/senmon/1387235.htm).

文部科学省(n.d.). 대학·단대·전문학교와 전문직 대학·전문직 단대의 비교(大学·短大·専門学校と専門職大学·専門職短大の比較).

## □ 국가 및 민간 주도형 산학협력 확대

- 교육기관 단위의 산학협력을 넘어서 국가 또는 민간 기업 중심의 산학협력 시스템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전략은 국가 또는 민간 부문의 인재 양성과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싱가포르의 SkillsFuture라는 국가 주도의 평생교육 및 훈련 시스템을 운영하며, 산업계와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기술 프레임워크(Skills Framework)를 개발함. 이를 근거로 전체 국가 차원의 교육 및 훈련 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하며, 산업수요에 적합한 기술 및 역량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

[싱가포르의 산학협력 사례]

- Skillsfuture의 기술 프레임워크(Skills Framework, SFw) 개발
  - 기술 프레임워크는 싱가포르 근로자의 기술 습득과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된 Skillsfuture의 이니셔티브로, 산업 인력 계획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임.
  - 기술 프레임워크는 정부와 산업 협회, 교육 제공자, 관련 기관 등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개발되었음.
  - 개발된 산업 분야로는 회계학, 항공우주, 농식품, 항공 운송, 건축 환경, 설계, 에너지 및 화학, 금융 서비스, 식품 제조 등 총 36개 분야가 포함됨.
  - 기술 프레임워크는 산업의 정보, 직업 및 직무 역할을 명확화하고, 기존 기술 및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제공되는 정보 유형
    - ① 섹터 정보: 산업 분야의 기술 프레임워크 정보, 추이 및 인력 구성에 대한 정보
    - ② 기술 맵: 트랙별 직무 역할, 주요 업무 기능, 핵심 업무, 기술 및 역량에 대한 정보
    - ③ 기술 및 역량 목록: 주요 핵심 기술 및 역량 목록에 대한 정보
    - ④ 교육 프로그램: 신규 입직자 및 재직자의 필요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자료: SkillsFuture Singapore(2023). Skills Framework for Accountancy. <https://www.skillsfuture.gov.sg/initiatives/early-career/skills-framework/accountancy>(검색일 2025. 2. 17.).  
 SkillsFuture Singapore(2024a). Skills Frameworks to support the Industry Transformation Maps. <https://www.skillsfuture.gov.sg/initiatives/early-career/skills-framework>(검색일 2025. 2. 17.).

- 민간 주도형 산학협력으로는 글로벌 기업인 Google, Apple 등이 주도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살펴볼 수 있음. 이들 기업은 각국 대학과 협력해 자사 기술 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이를 통해 기업은 산업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숙련 인력을 확보하고, 대학은 최신 산업 트렌드에 부합하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상생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음.

[글로벌 기업의 산학협력 사례]

- Apple의 Developer Academy
  - 전 세계 8개국에서 각 나라의 대학 또는 기관과 연계하여 18개의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함.
  -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이탈리아: University of Napoli Federico II, 한국: 포항공과대학교, 인도네시아: BINUS University 등
  -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 비용 전액 무료, 학습 지원 장학금 및 장비 대여를 지원함.
  - 교육과정은 개발, 디자인, 기획, 마케팅, AI 등으로, 챌린지 기반 학습(Challenge Based Learning, CBL) 형태로 운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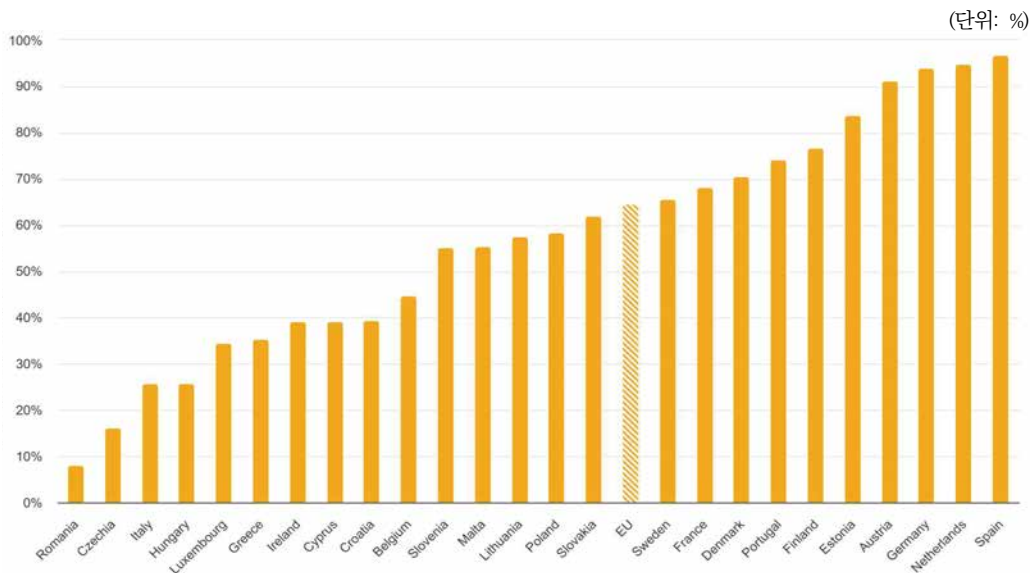
자료: Apple Developer Academy(2025). Apple Developer Academy @POSTECH. <https://developeracademy.postech.ac.kr/>(검색일 2025. 2. 19.).

#### 다. 결과 및 기대효과

##### □ 직무 적합도 및 취업률 향상

- 일 기반 학습을 경험한 학습자는 실무 중심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노동시장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취업률 증가로 이어짐.
- 유럽연합(EU)은 2025년까지 직업교육(VET) 졸업자의 최소 60% 이상이 일 기반 학습을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2023년 기준 전체 VET 졸업생 중 64.5%가 일 기반 학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목표를 조기에 달성함(Eurostat, 2023). 이는 일 기반 학습이 직무적합성과 취업 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그림 3-15] EU 국가의 VET 졸업자 중 일 기반 학습 경험 비중



자료: Eurostat(2023). EU labour force survey 2023. Eurostat.

- 일 기반 학습은 실무 경험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강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전환을 원활하게 할 가능성을 높임(Cedefop, 2021c). 실제로 EU 직업교육 졸업생 중 일 기반 학습을 경험한 경우, 2023년 기준 취업률이 81.0%에 달

했으며, 독일·네덜란드·오스트리아의 경우 일 기반 학습 경험자의 취업률은 84.8%, 경험하지 않은 졸업자의 취업률은 71.5%로, 두 집단 간의 뚜렷한 차이가 확인됨(European Commission, 2024b).

#### □ 기업의 인재 확보 용이성 증대

- 기업이 직접 참여하여 직무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고, 해당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인력 수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도제제도와 같은 일 기반 학습시스템은 기업이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를 고용할 가능성을 높여줌. 스위스의 경우 새로운 인력을 외부에서 채용하는 것보다 도제제도를 통해 직무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음. 이러한 점에서 일 기반 학습은 장기적 인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장점으로 작용함(Hoffman & Schwartz, 2015).
  -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산학협력을 통해 직무교육에 투자하며, 프랑스의 경우 도제제도를 이수한 학습자 중 3명 중 2명이 과정을 마친 후 6개월 이내에 산업체로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남(Ministère du Travail, 2023).
  - 또한 기업이 일 기반 학습을 통해 인력 양성에 직접 참여할 경우 채용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채용된 직원의 동기 부여가 높아지는 것이 확인됨(Musset, 2019).

#### □ 기업 생산성 및 혁신 역량 강화

- 기업은 일 기반 학습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사전에 교육하고 채용 전 역량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대비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생산성 또한 증가함. 이는 효율적 인력 배치 및 조직 내 혁신을 촉진하는 방안으로도 작용함.
  - 산학협력 기반 일 기반 학습의 비용-편익 분석에 따르면, 도제제도 등에 투입되는 비용 및 학생 임금보다 졸업생들이 기업에서 창출하는 생산성과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의 의지가 강해짐(Hoftijzer et al., 2018).
  - 채용 전 필요한 기술을 학습하고 기본 역량을 검증한 뒤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기업은 채용 및 배치 과정에서 더 큰 혁신을 장려할 수 있게 됨(Hodge et al., 2017).

□ 직업교육의 질적 향상 및 매력도 제고

- 산업체와 교육기관 간 협력은 실무 중심의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과 노동시장 간 연계를 긴밀히 할 수 있음.
  - 학교, 산업체, 정부기관이 협의체나 컨소시엄을 구축해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면 산업 요구에 맞춘 직업교육을 설계·운영할 수 있음. 특히 산업체의 참여를 통해 산업현장과 교육 간의 간극을 줄이고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할 수 있음(Remington, 2018).
  - 중소기업은 인재 채용 및 교육 수요가 있음에도 비용 제약이 크기 때문에 여러 소규모 기업이 협력체를 구성해 필요한 역량 개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할 수 있음(Jackson, 2015). 이러한 방식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산학협력 참여 유인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됨.

## 제3절 소결

### 1. 저출생시대의 직업교육 환경 변화

-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의 역할을 탐색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주요 환경 변화와 해외의 미래사회 대비 직업교육 대응 동향을 종합하여 시사점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음.
- 거시환경 변화와 직업교육의 역할
  -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와 기술환경 변화, 노동시장과 일자리 변화, 교육환경 변화 등 다차원적 변화 가운데 놓여 있음. 이러한 변화의 동인은 적극적 직업교육의 역할을 기대하게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여전히 주변부에 머무르고 있음.
  - 이러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교육’이라는 영역과 ‘고용’이라는 영역의 중간 지대에서 역할을 하는 직업교육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망할 주체와 힘이 부재한 것이 원인이기도 함. 특히나 공식적으로 직업교육기관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직업계고와 전문대학이 서로 다른 교육체제(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직업교육의 역할을 조망하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킴. 따라서 거시환경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직업교육의 증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두 교육기관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임.
-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직업교육체제의 재설계
  - 저출생, 고령화 두 축을 고려하여 초기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직업계고와 전문대학, 그리고 계속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탐색할 필요가 있음. 초기 직업교육기관으로 접근할 경우 학령기 학생들의 절대적 수가 감소함에 따라 직업교육에서 양성하고자 하는 인력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또한 지역인재가 지역 내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 기반의 직업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직업교육 논의가 지역 단위로 연계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교육기관, 지역,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 필요가 있음.

- 계속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중요해질 수 있음.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과거 베이비붐 세대 중 고등교육 기회를 얻지 못했던 대상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재직자들의 재교육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음. 다만 전문대학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학위 과정 혹은 마이크로 단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어떤 분야로 접근하고 있는지, 이러한 인력양성 분야가 중등직업교육 혹은 평생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음.

#### □ 산업구조와 기술환경 변화로 인한 직업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재구조화

- 제조업 기반의 성장이 한계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AI, 로봇, 반도체 등 생산성이 높은 서비스업 분야로의 전환이 나타날 수 있고, 이로 인해 직업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변화될 수밖에 없음. 특히 AI의 출현은 직업교육의 내용에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직업교육의 방법과 전략을 설계하는 데에도 큰 이점으로 작동할 수 있음(예: 특정 직무 분야의 현황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시사점 도출).
- 산업구조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업계고와 전문대학 모두 일반적인 초·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과는 다른 접근 전략을 갖출 필요가 있음. 직업계고는 초·중등교육기관으로서 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발 등에 있어 일반교육 제도를 모두 적용받아 그 특수성을 살리기 어려운 구조이고, 전문대학 또한 기본적으로 「고등교육법」 틀 내에서 움직여야 하는 한계가 있음. 장기적으로는 교육과정의 유연화, 교수자 역량의 지속적인 개발, 학교와 일터 기반의 융복합형 직업교육, 학습자 개별 맞춤형 진로지도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의 변화가 필요함.

#### □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다양한 근로 형태 출현 등에 대응한 계속 직업교육체제의 강화

- 현재 우리나라 교육체제를 고려했을 때 학령기(중등 및 중등 단계 졸업 직후의 고등) 이후를 벗어난 개인의 스킬 개발은 평생교육, 기업의 인적자원개발(HRD), 민간 영역에

서의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어 노동시장 일자리 변화에 대한 대응이 충분한가를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임. 본 연구에서 초점화하고 있는 직업계고와 전문대학은 과거 초급 수준의 인력을 양성하고 노동시장에 배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 그러나 사회구조 변화로 개인의 경력경로가 다양해지고 이직, 전직 등의 현상들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학령기 단계의 직업교육과 성인기 이후의 직업교육이 연계성을 갖추는 체제로 변화가 필요함.

- 또한 직업교육에 진입하는 학습자의 특성이 다양해질 가능성이 크며(예: 성인, 외국인 등), 수요의 폭과 깊이도 달라질 수 있음. 학습자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직업교육의 개인화 전략을 위해서는 직업교육 내에 더 많은 전문가 집단이 양성되고 배치될 필요성도 고려해야 함.

#### □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한 경쟁력 있는 직업교육으로의 전환

- 부족한 입학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기관의 매력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함. 이러한 전략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직업교육기관 자체적인 노력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함께 동반되어야 함. 예를 들어 직업계고나 전문대학이 좋은 교육을 제공하더라도 사회 내에서 해당 기관 졸업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2. 해외 직업교육체제의 미래사회 대응 동향

□ 해외 직업교육체제의 미래사회 대응 동향을 바탕으로 해외 주요국들은 저출생, 고령화, 기술 혁신과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교육체제를 다층적으로 개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즉 직업교육은 더 이상 청년층의 초기 노동시장 이행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친 역량 개발과 경력 전환을 지원하는 기반 체제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업교육은 '생애 전환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며, 사회적 포용성과 노동시장 적응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정책적 위상이 재정립되는 경향을 보임.

## □ 직업교육과 평생학습 체계 통합 노력

- 많은 국가에서 직업교육을 평생학습 체계로 통합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독일은 국가기술전략(National Skills Strategy)을 통해 성인 대상의 계속직업교육(CVET)을 강화하고 있으며, 핀란드는 '지속적 학습 개혁'을 통해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재교육과 역량 향상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음. 또한 프랑스의 개인훈련계좌(CPF)는 고용 상태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자기주도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직업교육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사례임.
- 이와 같은 흐름은 한국에서도 직업교육을 단순한 학력 단계가 아니라 경력개발 중심의 평생학습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함을 시사함.

## □ 교육체계의 유연성과 개인화가 직업교육의 핵심 과제로 부상

- 고정된 커리큘럼과 자격경로로는 다변화된 학습자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모듈형 학습, 마이크로 자격, 선행학습인정제도(RPL) 등 다양한 경로를 허용하는 체제가 각국에서 도입되고 있음.
  - 호주는 훈련 패키지(Training Packages)를 통해 직무 단위의 역량 중심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공통된 마이크로 자격 기준을 수립해 공식 교육 외에도 짧고 집중적인 학습 경험이 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한국 직업교육체제도 학습자의 연령, 배경, 경력에 따라 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하고 연결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함.

## □ 디지털 전환과 기술 혁신에 대응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의 강조

- 디지털화로 대표되는 기술 혁신에 대응한 디지털 인력 양성이 직업교육의 주요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특징임.
  - 유럽연합은 디지털 교육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회원국 전체의 교육과정을 디지털 환경에 적응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독일은 Industrie 4.0 전략을 통해 학계-산업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핀란드는 Digivisio 2030 프로젝트를 통해 고등교육

기관 간 공동의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GEN(디지털 대학교)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확보를 지원하고 있음.

- 이는 한국 역시 디지털 기술 변화에 따른 직무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AI, 데이터 분석, 자동화 기술에 대한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등 직업교육의 전면적 재설계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함.

#### □ 현장 중심 교육의 강조 움직임 증대

- 해외 주요국에서는 직업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학협력 기반의 일 기반 학습(Work-Based Learning, WBL)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독일의 이원화 교육 제도, 노르웨이의 VET 2+2 모델은 교육과 산업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습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 적응력을 높이고 있음. 싱가포르의 SkillsFuture 시리즈를 통해 산업수요에 맞는 짧고 집중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이는 한국에서도 산학협력 기반 실습 교육을 고도화하고 지역 단위에서 교육기관-기업-지자체 간 지속가능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 □ 해외 직업교육체제의 미래사회 대응 동향의 주요 시사점

- 직업교육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학력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학습자 중심의 유연한 경로 설계와 개인 맞춤형 역량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합한 교육 콘텐츠와 인프라를 마련하고 직업교육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해야 함.
- 직업교육과 산업 간 경계를 허무는 실질적 산학협력 구조를 토대로 직업교육체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제4장

#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체제의 현안과 미래 방향

- 제1절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체제 현안과 미래 방향  
도출 개요
- 제2절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체제의 현안 진단
- 제3절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의 미래 방향 탐색
- 제4절 소결



## 제4장 |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체제의 현안과 미래 방향

### 제1절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체제 현안과 미래 방향 도출 개요

#### 1. 전문가 심층 면담 개요

-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체제의 현안과 미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직업교육 현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 면담을 실시함.
  - 심층 면담은 중등직업교육 전문가 10명, 고등직업교육 전문가 5명 등 총 15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음의 과정을 통해 선정하였음.
    - 먼저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과 관련된 부처, 협회, 기관 등에서 관련 연구 및 논의의 경험이 많거나 실제 관련 정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전문가 집단 명단(pool)을 구축함.
    - 전문가 집단 중 본 연구의 목적 및 맥락과의 적합성을 중심으로 연구진이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음. 다만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2024년 연구인 「인구 감소 시대의 직업교육 정책 연구: 저출생에 대응하는 직업교육 체제」에서 수행한 FGI 대상과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을 선정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자 노력하였음.
    - 특히 중등직업교육 전문가의 경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비율, 공립과 사립의 비

을, 지역의 비율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이에 따라 10명의 중등직업교육 전문가 중 3명을 마이스터고 전문가로, 3명을 사립 직업계고 전문가로 선정하였음.

- 최종적으로 선정된 전문가 15명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 <표 4-1>과 같음.

<표 4-1> 전문가 심층 면담 참여자 정보

구분	연번	소속	직급	이름	성별	주요 경력	면담 일자
중등 직업 교육	1	공립 특성화고	교감	중등A	남	(전)교육부 교육연구관	2025. 2. 3.
	2	공립 특성화고	교장	중등B	남	(현)관련 협회 회장 (전)교육청 장학사	2025. 2. 4.
	3	공립 특성화고	교장	중등C	남	(현)관련 협회 회장	2025. 2. 4.
	4	공립 특성화고	교감	중등D	남	(전)교육청 장학사	2025. 2. 5.
	5	공립 마이스터고	교장	중등E	남	(전)교육청 장학사	2025. 2. 5.
	6	사립 특성화고	교장	중등F	남	(전)교육청 장학사	2025. 2. 5.
	7	사립 마이스터고	교장	중등G	남	(현)관련 협회 회장 (현)관련 협회 위원	2025. 2. 7.
	8	공립 마이스터고	교감	중등H	남	(전)교육청 장학사	2025. 2. 10.
	9	사립 특성화고	교장	중등I	남	우수학교 다수 선정교	2025. 2. 10.
	10	공립 특성화고	교감	중등J	여	(전)교육청 장학사	2025. 2. 13.
고등 직업 교육	11	전문대학	교수	고등A	여	다수 관련 연구 책임자	2025. 2. 11.
	12	전문대학	부총장	고등B	남	(현)관련 협회 실장	2025. 2. 13.
	13	전문대학	교수	고등C	남	(현)관련 연구소 소장	2025. 2. 20.
	14	전문대학	기획처장	고등D	남	(현)관련 협회 회장	2025. 2. 27.
	15	전문대학	총장	고등E	여	(전)관련 협회 회장	2025. 3. 5.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속 및 주요 경력은 일반전인 범주로 축약하여 제시함.

- 면담은 비대면으로 모두 개별 면담 형태로 실시하였으며, 다음의 절차로 진행되었음.
  - 먼저 면담의 목적 및 개요, 연구윤리에 관한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동시 녹화를 진행하였음.
  - 구체적인 면담 진행에 앞서 본 연구의 맥락 및 이론적 배경에 해당하는 2024년 「인구 감소 시대의 직업교육 정책 연구: 저출생에 대응하는 직업교육 체제」 연구의 결과를 안내하여 전반적인 이해도를 증진하고자 하였음.

- 심층 면담은 반구조화된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직업교육의 현 상황 평가, 이상적 직업 교육 모습, 정책 방안 등을 핵심 질문 내용으로 하였음. 중등 및 고등 참여자에 따라 별도의 질문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 질문은 다음 <표 4-2>, <표 4-3>과 같음. 질문지는 사전에 참여자에게 안내하여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음.

**<표 4-2> 전문가 심층 면담 주요 질문(중등직업교육)**

구분	질문
현 상황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의 중등직업교육은 종합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하십니까?</li> <li>• 최근에 중등직업교육 현장에서 달라진 점(또는 변화를 체감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li> <li>• 오늘날 중등직업교육 운영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느끼십니까?</li> </ul>
이상적 직업교육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적으로 중등직업교육은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li> <li>• 우리나라 상황에서 중등직업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li> <li>• 현재 직업교육 정책의 주요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 ‘선취업 후학습’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li> <li>• 우리나라 청소년 중 어떠한 특징을 갖춘 청소년을 직업교육의 주요 학습자(학생)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li> <li>• 직업교육은 전통적으로 청소년(중등·고등) 위주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최근에는 성인학습자나 재직자 대상 교육도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학습자 다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li> <li>• 우리나라 교육시스템 내에서 직업교육이 일반교육과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li> <li>•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고숙련, 고급기술 중심의 직업교육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 습니다. 더불어 미래 신산업·신기술 분야로의 전환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li> <li>• 직업교육에서 가르치는 교과 내용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li> <li>• 현재 중등직업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li> <li>• 귀하께서 생각하는 미래 중등직업교육을 위해서 학교와 교사 역할 중 강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li> <li>• 직업교육을 이수한 학습자들이 갖게 되는 대표적인 성과(예: 자격증 취득, 특정 역량 숙달, 학 력, 학위 등)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li> </ul>
정책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입니까?</li> <li>• 직업교육 지원 정책 중 학교운영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li> <li>• 직업교육 지원 정책 중 학교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li> <li>• 미래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새롭게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li> </ul>
마무리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다면, 향후 10년간 직업계고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li> <li>○직업교육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전문대학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li> </ul>

〈표 4-3〉 전문가 심층 면담 주요 질문(고등직업교육)

구분	질문
현 상황 평가	○현재의 고등직업교육은 종합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 최근에 고등직업교육 현장에서 달라진 점(또는 변화를 체감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오늘날 고등직업교육 운영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느끼십니까?
이상적 직업교육 모습	○장기적으로 고등직업교육은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나라 상황에서 고등직업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고등직업교육의 주요 대표적인 발전 방향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 고등직업교육에서의 학습자가 다양해지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등직업교육에서 담당하는 직무 체계 및 수준의 다양성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고등직업교육과 일반교육과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자체, 지역기업 등 지역사회의 연계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나라 교육시스템 내에서 직업교육이 일반교육과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고숙련, 고급기술 중심의 직업교육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더불어 미래 신산업·신기술 분야로의 전환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문대학에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의 내실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개방화 체제 및 학사 유연화에 대한 주장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문대학의 미래 변화를 위한 대학, 교수 등 교내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며,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고등직업교육을 이수한 학습자들이 갖게 되는 대표적인 성과(예: 자격증 취득, 특정 역량 숙달, 학력, 학위, 마이크로 디그리 등)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고등직업교육의 관점에서 중등직업교육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 방안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 직업교육 지원 정책 중 전문대학 운영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 직업교육 지원 정책 중 전문대학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 미래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새롭게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무리 질문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다면, 향후 10년간 전문대학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업교육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직업계고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심층 면담은 주요 질문에 따라 진행되었으나, 전문가의 의견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추진하였음.
- 심층 면담은 전문가별로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음.

## 2. 직업교육체제 현안과 미래 방향 도출을 위한 분석틀

### 가. 직업교육체제 모형

-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체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모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상훈 외(2024)에서 활용한 포괄적 직업교육체제 모형을 활용하였음.
  - 직업교육체제는 직업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그 범위와 요소를 달리하는 인식의 틀이라고 볼 수 있음. 교육체제를 논의함에 있어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교육운영체제와 이에 대한 지원체제에 주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저출생에 의한 사회 전반의 변화 속에서 직업교육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을 보다 종합적인 관점을 차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저출생의 원인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경쟁압박과 청년의 불안이라는 사회적 특징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직업교육체제를 이해함에 있어 교육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교육시스템 전반과 사회경제적 특히, 노동시장 차원에서의 고찰이 필요함.
  - 이에 이상훈 외(2024)는 직업교육체제를 사회경제적 관점을 포함하는 다양한 수준에서 논의한 다양한 선행연구의 결과(Pilz, 2016; Cedefop, 2017)에 따라 사회경제적/노동시장 관점, 교육시스템 관점, 페다고지적/학습 관점 등 메크로, 메소, 마이크로 수준으로 구분되는 포괄적 직업교육체제 모형을 개발하였음.
  - 포괄적 직업교육체제 모형은 직업교육체제를 '직업교육의 운영, 지원,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교육시스템, 학습요소들을 수준과 관점에 따라 체계화한 틀'(이상훈 외, 2024: 45)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해당 모형 및 정의는 우리나라에서 직업교육이 어떠한 관점과 시스템 속에서 맥락적으로 이해되어 왔고,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포괄적 직업교육체제 모형은 [그림 4-1]과 같음(구체적인 구성요소 및 정의는 <표 1-3>을 참조).

[그림 4-1] 포괄적 직업교육체제 모형



출처: 이상훈 외(2024). 인구감소 시대의 직업교육 정책 연구: 저출생에 대응하는 직업교육체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p. 45.

□ 이상의 포괄적 직업교육체제 모형을 통해 전문가 심층 면담의 주요 질문을 개발하였으며,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주요 요소로 활용하였음.

나. 직업교육체제 미래 방향(안)

□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체제에 대한 관점뿐 아니라 직업교육체제의 미래 방향성을 이해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인식의 틀로서 방향(안)이 필요함. 본 연구는 이상훈 외(2024)가 저출생에 대응하는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제시한 방향성을 인식의 틀로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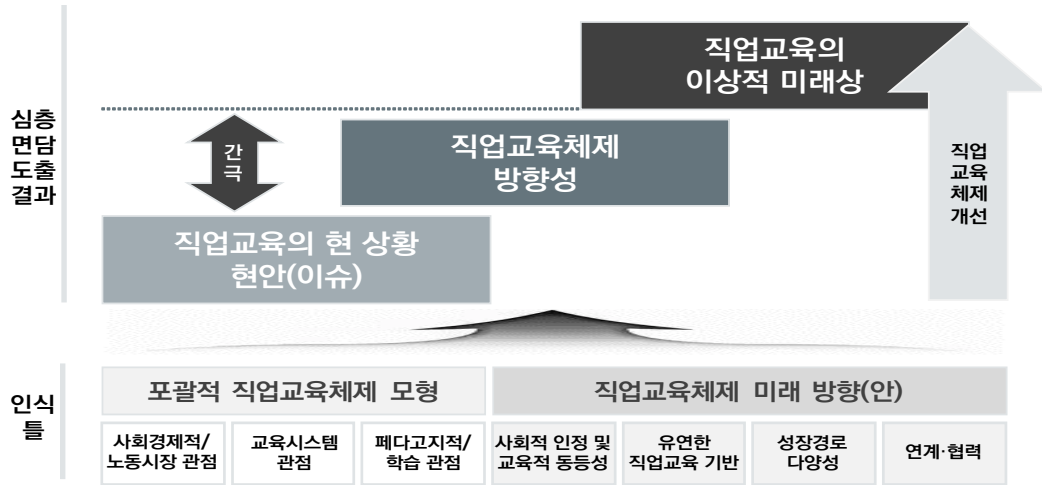
- 이상훈 외(2024)의 방향성은 [그림 1-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4가지 방향성을 제시하였음
  - 방향성 1. 직업교육의 사회적 인정 제고 및 교육적 동등성 확보
  - 방향성 2. 다양한 학습자를 수용하는 유연한 직업교육 기반 마련
  - 방향성 3. 성장경로의 다양성을 고려한 전문인력 양성 기능 강화
  - 방향성 4. 다방면의 교육 주체 및 사회·경제 분야와의 연계·협력 강화

- 다만 해당 방향성은 명시적인 정의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 각 방향성의 달성을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화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방향성을 인식의 틀로 활용하되,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에 관한 전문가 심층 면담의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하고 구체화하고자 하였음.

#### 다. 전문가 심층 면담 분석틀

- 전문가 심층 면담을 통해서 도출되는 결과는 직업교육에 대한 주요 현안, 이상적 미래상, 개선 방향성의 3가지 요소이며, 이는 고유한 인식의 틀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
  -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이 처한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직업교육체제의 현안, 즉 이슈를 도출할 수 있음. 이러한 현안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직업교육의 미래상이 도출됨. 최종적으로 현안과 미래상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직업교육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도출됨. 즉 이상이 미래상, 현실이 현안이며,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정책 추진 관점이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음.
  - 해당 현안, 이상적 미래상, 방향성은 이상훈 외(2024)가 제시한 포괄적 직업교육체제와 직업교육체제 미래 방향(안)을 기반으로 분석하게 됨.
- 최종적으로 본 전문가 심층 면담을 통해서 도출되는 결과와 해당 결과에 대한 인식들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4-2]와 같음.

[그림 4-2] 직업교육체제 현안과 미래 방향 도출을 위한 분석틀



출처: 연구진 작성.

## 제2절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체제의 현안 진단

□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체제의 현안에 대한 전문가 심층 면담 결과를 정리한 결과, 중등직업교육에서는 총 13개의 현안, 고등직업교육에서는 7개의 현안이 도출되었음.

### 1. 중등직업교육의 현안

□ 중등직업교육의 현안은 크게 거시적·구조적 현안, 학교운영·교육과정 현안, 학교 내부 구성원 현안, 학생 성장경로 현안 등 네 영역의 13개 현안으로 구분되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4-4>와 같음.

<표 4-4> 중등직업교육 주요 현안(초안)

구분	현안	설명
거시적·구조적 현안	직업교육 축소 압력과 지속가능성 위기	기술 변화, 저출생 등의 사회적 변화로 직업교육이 무용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직업교육체제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없애자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직업교육 자체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상
	직업교육의 선도모델 의존과 양극화	마이스터고, 협약형 특성화고 등 일부 성공 사례(선도모델)에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면서 일반 특성화고와의 격차가 커지고, 학교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
	직업교육의 거점화 전략과 구조적 난제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직업계고를 거점학교 형태로 통폐합하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통합 과정에서의 학교운영, 학교배치, 물리적 거리, 공사립 갈등 등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실질적인 운영의 현실성이 낮은 상황
	직업계고의 계열 불균형과 뿌리산업 위기	학생 모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인기 높은 서비스 계열, 신산업 계열로 학과가 집중 개편되면서, 제조업 등 국가 산업 기반(뿌리산업)을 담당하는 기초기술 인력의 양성이 위축되는 현상
학교운영·교육과정 현안	보편적 직업교육 확장과 직무특수성 유지 딜레마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직무특수형(협역특수직무)에서 보편형(광역중핵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흐름과 직무특수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면서 교육과정의 목표와 운영 방식에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
	직업교육과정의 제도적 경직성과 혁신 대응의 한계	NCS 기반의 도제학교와 과정평가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해 학교 교육과정이 과도하게 경직되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신기술·신산업 등 사회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
	현장실습의 필요성과 파행적 운영의 이중성	현장실습이 학생의 현장적응력 향상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서는 취업률 달성 목적에 치우쳐 형식적이고 파행적으로 이루어져 교육과정을 왜곡하는 이중적 문제
학교	학교-기업 협력의 불균형과 직업교육 왜곡	학교와 기업 간 협력 과정에서 학교가 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현장실습이나 도제학교 운영에서 기업의 요구에 끌려가는 불균형적 구조가 형성되어 직업교육 본연의 목적이 왜곡되는 현상
학교	직업계고 교사의	기업과의 협력, 진로상담, 학생 생활지도 등 과도하게 다양한 역할이 교사

구분	현안	설명
내부 구성원 현안	역할 과부하와 전문성 침식	에게 집중되면서 교사의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고, 교사의 본연의 전문성이 침식되는 문제
	직업교육 진입 학생의 기초역량 약화와 진로선택 왜곡	직업계고에 진학하는 학생의 기초학력 저하와 왜곡된 직업의식(단기노동 선호, 임금격차 회피 등)으로 인해 취업 준비도와 직업교육 성과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현상
	심리·사회적 취약 학생 증가와 직업교육 기능 약화	심리적·사회적으로 취약한 학생 비율이 증가하면서 직업교육보다는 생활지도 및 기초적 인성교육에 치중하게 되어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본래 기능과 정체성이 약화되는 문제
학생 성장경로 현안	직업계고의 진학 딜레마: 취업 우선 원칙과 진학 수요 사이의 괴리	직업계고가 '취업 우선 원칙'을 유지하지만, 현실적으로 진학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취업 기능과 진학 지원 사이에서 학교운영에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는 현상
	직업계고 학생의 진로설계 부재와 성장경로 단절 문제	직업계고 학생들이 졸업 후 구체적인 진로목표 없이 사회로 진출하고 있으며, 이후의 전문적 성장경로와 사회적 인정 기반이 부재하여 지속가능한 진로설계가 어려운 문제

가. 거시적·구조적 현안

1) 직업교육 축소 압력과 지속가능성 위기

- 직업교육 축소 압력과 지속가능성 위기는 기술 변화, 저출생 등의 사회적 변화로 직업교육이 무용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직업교육체제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없애자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직업교육 자체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상을 의미함.
  - 직업교육체제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없애자는 압력은 저출생으로 인해 기인하는 직업교육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더욱 신입생 충원 등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외부적 시각에 기인함.

학령인구가 되게 급속히 감소했고요. 부산의 경우를 봐서는 아마 2033년에는 위험한 상황이 되어 있어요. (중략) 그러니까 아마 조금 극단적인 상황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마고만 남기고 특성화고는 다 없어져야 된다는 아마 그 의견이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생기는 의견이라 생각이 들고요. (중등H)

- 직업교육 축소 압력과 지속가능성 위기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게 주목되지만, 대표적으로 저출생에 의한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지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이해되며, 이 외에도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률은 낮아지고 진학률이 높아지는 현상,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기조가 약화되는 현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주목받았음.

- 즉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수직화된 고등학교 선호 인식 속에서 일반계고의 입학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지고, 가구당 자녀 수가 적어지면서 직업교육에 진입하는 것을 꺼리는 현상도 심화됨에 따라 직업교육의 수요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근데 지금은 워낙 학생이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일반교육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선호하면 다 수용 가능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점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비율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후략) (중등A)  
시장의 힘이 아니라 여지없이 지금은 고졸 취업 정책이 많이 이제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고. (중략) 이게 지속성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중등D)

- 다만 전문가들은 직업교육 축소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직업교육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전문가들은 직업계고의 미달 사태가 곧 공교육 차원의 위기이며, 특성화고가 한번 축소 되면 재정 문제로 다시 설립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음. 특히 학생들의 고졸 취업 수요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교육의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특성화고는 한번 없으면 만들지 못해요.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규모도 있고 건물 크기 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중등B)  
저희 취업 진학하는 학생들이 이번 신입생들을 제가 수요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취업이 한 60~70%가 되고 나머지 한 20~30%가 진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네들이 목표의식을 갖고 왔어요. (중등D)

## 2) 직업교육의 선도모델 의존과 양극화

- 직업교육의 선도모델 의존과 양극화는 마이스터고, 협약형 특성화고 등 일부 성공 사례 (선도모델)에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면서 일반 특성화고와의 격차가 커지고, 학교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의미함.
  - 마이스터고가 중등직업교육의 취업 성과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성과를 도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직업교육 전반에 대한 지원보다는 마이스터고, 협약형 특성화고와 같은 특정 선도모델 유형의 학교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현재 마이스터고가 없었다면은 지금 현재 직업교육이 도대체 무엇으로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래서 마이스터고라는 모델을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중등H)  
 마이스터고라든가 협약형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하니, 많은 학교가 하지를 않아요. 아시겠지만 학교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도태된 학교는 계속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중등D)

-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와 같은 선도모델의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음. 선도모델 확대는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기존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던 선도모델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문제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마이스터고는 지금은 그나마 희소성이 있으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가는데 그 희소성이 깨지면 마이스터고도 똑같이 이제 특성화고가 된다 그래서 적당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중등B)  
 마이스터고를 만약에 다 모든 직업계고를 예를 들어서 마이스터고로 만든다 이거 과연 바람직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마이스터고의 경쟁력도 지금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중략) 제가 볼 때는 서로 죽자는 거예요. (중등D)

### 3) 직업교육의 거점화 전략과 구조적 난제

- 직업교육의 거점화 전략과 구조적 난제는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직업계고를 거점학교 형태로 통폐합하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통합 과정에서의 학교운영, 학과 배치, 물리적 거리, 공·사립 갈등 등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실질적인 운영의 현실성이 낮은 상황을 의미함.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합 또는 통폐합 운영 논의가 있으며, 이는 현재의 저출생 상황에서 도태되는 학교들을 통합함으로써 상향평준화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즉 이 방안이 직업계고의 발전 전략으로도 이해될 수 있으며, 그리고 해당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상황으로도 이해되었음.

대도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학령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지방 특히 이제 잘 아시는 건데 도농 복합도시나 이런 쪽에서는 급격하게 학령기가 줄기 때문에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규모 자체가 안 나오고 통합학교 때는 거점학교 중심으로 학교를 통합하거나 통폐합하는 일이 아마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중등A)

- 그러나 직업계고의 거점화, 즉 거점학교 운영이 실제로 불가능한 측면이 많음을 전문가들은 지적하였으며, 지역의 산업수요가 아닌 인구를 기반으로 하는 논의가 지닌 구조적 문제, 취업 중심으로 직업계고의 역할을 한정하는 관점으로서의 문제, 사립학교의 통합 문제, 전공 분야 및 학과배치, 기숙사 운영, 통학거리 등 실제적 운영의 문제 등을 지적하였음.
- 직업교육의 거점화 전략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육시스템 내에서 직업교육의 비중 감소가 궁극적으로 정책적 투자와 관리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거점화를 통해 단기적인 성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직업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져 규모 축소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음.

단기적으로는 학교 경쟁력을 높이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어찌면은 좀 개선할 수 있는 의지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감소 비중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중등 E)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교육부에 예를 들어 마이스터고 학교 뭐 한 50개 남았다 그러면 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중략) 경기도에 마이스터고가 3개인데 직업을 담당하는 장학사 한 명이나 두 명이나 또는 장학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 행정직 한 명 있고 예산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중등B)

#### 4) 직업계고의 계열 불균형과 뿌리산업 위기

- 직업계고의 계열 불균형과 뿌리산업 위기는 학생 모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인기 높은 서비스 계열, 신산업 계열로 학과가 집중 개편되면서, 제조업 등 국가 산업 기반(뿌리산업)을 담당하는 기초기술 인력의 양성이 위축되는 현상을 의미함.
  - 직업계고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산업수요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적합한 인력 양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구조화 등의 방법을 통해 학과 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직업계고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선호도 감소에 대응하는 주요 전략으로서 의미가 있었음.
  - 다만 이러한 변화로 인해 다양한 현안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기반산업 분야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학과가 감소하게 된다는 점임. 그에 반해 서비스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산업구조 변화와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수요에 따라서 노동력 위주의 전통적인 제조업이라든가 1차 농업 생산이라든가 회계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이제 드론, 로봇, AI 또는 반려동물 또 카페 베이커리 이런 핵심 산업 위주로 이제 쏠림 현상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죠. (중등C)

-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 학과들로의 개편이 신입생 유치의 측면에 보다 집중한 학과 개편이다 보니 학생들의 장래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직업계고 지속가능성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음.

대부분 미용, 제과제빵, 요리, 헤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그런 거죠. (중략) 이렇게 돼서 공고를 없애고 공업계를 없앤다면 나중에는 정말 이 제조업 기반이 흔들릴 정도의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등G)

- 더불어 신산업 신기술 분야로 학과 개편을 하는 대응 방안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 역시도 학생들의 성장 가능성, 성장경로 측면에서 우려가 있음이 지목되었음.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교원, 학생의 역량을 벗어나는 수준의 학과 개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

바이오 집중 단지가 되면서 바이오고등학교를 만들었어요. (중략) 왜냐하면 바이오 분야에 직무 특성상 고졸 취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 학교의 3년 동안의 교육과정이 그걸 준비할 수 있는 교육과정들도 교수 인력들도 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아주 단순한 논리로 학교를 개편하고 그렇게 만든 거죠. (중등)

- 즉 학생의 수요에 초점을 맞춘 학과 개편이 직업교육의 계열 및 학과 편성의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저출생이 심화되면서 직업계고의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학과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정리할 수 있음.

#### 나. 학교운영·교육과정 현안

##### 1) 보편적 직업교육 확장과 직무특수성 유지 딜레마

- 보편적 직업교육 확장과 직무특수성 유지 딜레마는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직무특수형(협역 특수직무)에서 보편형(광역중핵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흐름과 직무특수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면서 교육과정의 목표와 운영 방식에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를 의미함.

- 미래 산업사회의 직무 다양성이 확대되는 상황과 학생들의 성장경로가 다양화됨에 따라 보편적 직업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탄력적 대응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인식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굉장히 분야가 다양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전문적인 부분 하나를 집어서 가르치기는 어렵고 보편적인 직업교육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졌어요. (중등A)

- 그러나 보편적 직업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직무특수적 영역에 대한 보완을 위해 학교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학교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고, 교원들의 인센티브 요구도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의 학교 수업 시수 측면에서도 운영에 제한이 있음이 지적되었음.
- 더불어 직무 특수적 직업교육이 지닌 장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보편적 직업교육으로 전환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었음. 더욱이 보편적 직업교육이 확대되면 직업계고가 취업 기능을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따라서 적절한 균형점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의 교육과정이 이러한 유연성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음.

1학년 때는 기초 일반교육을 실시하고 2, 3학년 때에 조금 좀 깊이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과정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걸 갖다가 나누기보다는 일반 보편 기술 교육과 특정 직무 맞춤형 교육은 적절한 포지션을 두고 학년을 나눠서 동시에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등B)

## 2) 직업교육과정의 제도적 경직성과 혁신 대응의 한계

- 직업교육과정의 제도적 경직성과 혁신 대응의 한계는 NCS 기반의 도제학교와 과정평가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해 학교 교육과정이 과도하게 경직되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신기술 신산업 등 사회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을 의미함.
- 현재 직업교육과정이 NCS를 기반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산업계와 직업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고, 직업교육의 체계성을 강화하며, 취업 과정에서 활용성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음. 그러나 NCS 기반 교육과정이 과도하게 방대하고 개편의 신속성이 낮아 학습모듈을 학교에서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고, 산업현장과의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음이 지적되었음.

- 더욱이 NCS를 기반으로 하는 절차 중심의 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직업계고의 운영 방향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빠르게 변화하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 디지털, 인공지능 등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NCS 기반 교육과정의 한계가 더욱 부각된다고 보았음.

NCS가 실무 중심이라고 했는데 그게 실무가 굉장히 융통성 사고의 확장에 과연 맞냐 절차 중심의 교육 과정이 과연 고등학교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인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속적으로 시대 흐름에 의해서 변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이 변하고 있는데 NCS가 과연 거기를 갖다가 계속 그렇게 변하고 있냐 그다음에 NCS는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게 무슨 이러냐고 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중등B)

-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경직성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과정평가형 교육과정과 같이 단위 사업에서 더욱 강화되었는데, 학교의 자율성, 산업현장의 변화에 따라 유연한 직업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NCS를 기반으로 이러한 사업의 경직성이 확대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학교는 거기에 맞는 목표라든가 인력 양성 유형이 있고 또는 관련 자격이 있다면 자격증에 관련된 그런 종목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나 자율성이 좀 부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NCS로 해서 잘 짜였지만 결국엔 또 NCS로 발목이 묶인 부분들이 있어요. (중등D)

과정평가형도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왜냐하면 과정평가형을 도입을 하면 또 많은 교과 과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중략)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도 피로도가 엄청 높아지거든요. (중등G)

### 3) 현장실습의 필요성과 파행적 운영의 이중성

- 현장실습의 필요성과 파행적 운영의 이중성은 현장실습이 학생의 현장적응력 향상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서는 취업률 달성 목적에 치우쳐 형식적이고 파행적으로 이루어져 교육과정을 왜곡하는 이중적 문제를 의미함.
  - 현장실습은 직업계고의 교육과정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요컨대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감으로써 실무 경험을 쌓고 사회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여 직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우리가 실제 직업교육에서 이 직업교육의 목적이 뭐냐면은 현장 적응력이거든요. (중략) 그래서 결국 현장 적응력은 현장에 가서 배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중등C)

- 다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의 내실성 및 효과성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먼저 현장실습이 학교를 벗어난 현장에서 실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었음.

현장실습 같은 경우는 산업체하고 학교하고의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채용 연계형이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좀 내실 있게 운영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중등D)

- 더욱이 현장실습 운영에 따라 학교 내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음. 현장실습을 나가는 3학년 2학기에는 정상적인 수업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하였음. 이러한 현상은 직업계고가 학생들의 취업을 주요 성과로 과도하게 주목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로 보고 있었음.

현장실습 나가서 빠져나간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일단은 무너지거든요. (중등) 그러니까 중간에 현장실습 이런 것들을 내보내고 이러면 이 파행적인 교과 과정 운영이 되기 때문에. (중략) 이게 어느 순간에 취업이라는 거에 이제 막 이게 사로잡히다 보니까 다 무너진 거죠. (중등G)

#### 4) 학교-기업 협력의 불균형과 직업교육 왜곡

- 학교-기업 협력의 불균형과 직업교육 왜곡은 학교와 기업 간 협력 과정에서 학교가 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현장실습이나 도제학교 운영에서 기업의 요구에 끌려가는 불균형적 구조가 형성되어 직업교육 본연의 목적이 왜곡되는 현상을 의미함.
- 학교-기업 간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균형 현상은 현재 직업계고의 운영 목적으로서 취업의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기업이 직업교육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왜곡된 형태의 주종 형태로 구현됨.

학교가 직접 교육기관이든 정부든 여기에서 이제 기업을 막 이렇게 어찌 보면 독려하려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기업은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서 기업의 현장에 있는 요구들을 직접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중등A)

- 즉 직업계고 입장에서 기업을 발굴하고, 직업교육 운영과 취업에 대한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 결국에는 직업계고의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요구에 따라 학교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이 조정되는 현상으로 드러남.

- 물론 산업수요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해야 하는 직업계고의 입장에서 기업과 협력적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의 두 주체의 관계에서 기업의 권한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임.

학교가 기업을 발굴해야 되고 기업을 쫓아다니며 학생 취업을 요청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도 있고 또 기업은 책임지고 학생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자기 직원을 양성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기업도 있고. (중등C)

그분들이 인력이 빠지면 바로바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3학년 2학기 때 현장실습이 있지만 3학년 7월, 8월달 9월달 아무 시점에라도 기업이 필요하면은 학생들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취업률을 어느 정도 포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현장실습 제도가 채용 연계하고 되게 현장실습이 없으면은 취업률이 되게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유지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등H)

- 즉 직업계고에 대한 취업률 성과 압박은 직업계고와 기업의 협력 관계에서 불균형으로 드러나고, 이는 현장실습 등의 제도와 결합하여 직접적으로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임.

#### 다. 학교 내부 구성원 현안

##### 1) 직업계고 교사의 역할 과부하와 전문성 침식

- 직업계고 교사의 역할 과부하와 전문성 침식은 기업과의 협력, 진로상담, 학생 생활지도 등 과도하게 다양한 역할이 교사에게 집중되면서 교사의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고, 교사의 본연의 전문성이 침식되는 문제를 의미함.
-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직업계고에서의 보편적 직업교육과 직무특수적 직업교육의 병행, 직무특수적 직업교육의 운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운영, 취업률을 위한 기업 발굴 및 연계 등 다양한 업무가 가중되고 있음.

이제 입학부터 졸업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제 직업교육의 그거를 전부 다 학교에다가 지금 맡기고 있거든요. (중등G)

- 특히 직업계고에서 학생들의 진로 다양성이 높기 때문에 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가들의 역량과 참여가 절실한 상황인데, 이들의 전문성이 높지 않아 직업계고 전문교과 담당 교사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한 과에도 이러한 진로 커리어패스가 적어도 수십 개가 나와요. 한 과에서도 그런데 누가 이런 것을 과연 진로상담교사가 이걸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전문교과 선생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그렇게 말씀하신 교장 선생님한테는 제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싶어요. 진로전담교사 배치하면 할수록 학교의 인력만 손실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요. (중등F)

- 이는 결국 직업계고 교사의 전문성 침식 현상으로 드러나게 되며, 교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현상을 야기시킴. 또한 최종적으로 직업계고 교육 수준의 저하를 가져옴에 따라 장기적으로 직업계고의 효과성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문제를 야기시킴.
- 더욱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직업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직업계고가 독자적으로 학생들의 성장을 책임지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인되었음.

그게 하나의 학교에서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해서 라이즈 사업이니 교육 발전 특구니 협약형 특성화고니 직업교육 혁신지구라고 하지만 다 학교에 보고 다 하래요. (중등E)

## 2) 직업교육 진입 학생의 기초역량 약화와 진로선택 왜곡

- 직업교육 진입 학생의 기초역량 약화와 진로선택 왜곡은 직업계고에 진학하는 학생의 기초학력 저하와 왜곡된 직업의식(단기노동 선호, 임금격차 회피 등)으로 인해 취업 준비도와 직업교육 성과가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현상을 의미함.
  - 앞선 직업계고 교사의 역할 과부하와 전문성 침식이 학교 내부 구성원 현안 중 교원과 관련된 현안이라고 한다면, 이는 학생과 관련되는 현안으로,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직업계고에 대한 선호도 감소로 인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이 지적되었음. ㄴ
  - 즉 누적된 기초학력부진 학생이 직업계고에 진입하는 비중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취업률이 낮아지고, 실제적 의미에서 직업,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함.

특히 이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이제 증가가 되는 현상이 좀 나타나는데요. (중략) 산업 기사 수준을 따라 되는데 이런 학생들을 데리고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나 중도 탈락률이나 포기율이 많이 발생합니다. (중략) 또 이제 졸업 후 취업이나 창업 (중략) 전체적으로 진로 쪽에서도 기존보다는 이제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중등C)

- 이러한 현상은 학생의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오늘날 단기 노동시장의 급성장으로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됨에 따라 그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을 선택하지 않고 단기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려는 의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문제가 최저임금이 갑자기 상승하면서 더욱더 학생들이 현장실습이나 취업을 기피한다. (중략) 딱딱한 기업 분위기에서 내가 있으나 그다음에 그냥 주변에 편의점 이런 데도 편하게, 마음이 편하게 일 하나 급여 수준이 유사한데 구태여 제도권 내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나오는 학생들이 많다. (중등B)

- 다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데는 외부 상황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됨. 즉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 고졸 취업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기업 내 대우 등의 문제로 인해 학생들이 더욱 조기 취업을 기피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 현장실습도 완료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즉 저출생은 직업교육체제에 진입하는 학생들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직업계고의 취업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는 학생에게 노동시장 진입 첫 단계에서 좋은 직장으로 입직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고, 이에 취업 준비 기간이 전반적으로 길어지고 있음. 또한 이 같은 현상은 진학 희망 학생 비율을 높이기도 함. 따라서 저출생에 의한 직업교육 선호도 감소는 직업계고 성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임.

### 3) 심리·사회적 취약 학생 증가와 직업교육 기능 약화

- 심리·사회적 취약 학생 증가와 직업교육 기능 약화는 심리적·사회적으로 취약한 학생 비율이 증가하면서 직업교육보다는 생활지도 및 기초적 인성교육에 치중하게 되어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본래 기능과 정체성이 약화되는 문제를 의미함.

- 저출생에 의한 직업계고의 선호도 감소는 심리·사회적 취약 학생의 증가로도 이어졌음.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의사소통, 사회적 적응과 같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요즘 의사소통이라든가 사회적 적응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이 그 비율로 보면 예전보다 상당히 높아져 있는 거예요. (중등B)

학생 수도 감소하지만 정서 문제를 겪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역량 수준도 더 좀 미흡해지고 또 이거 진로 문제랑 연결해서 취업 미스매칭도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갔다가 그쪽도 만족을 안 하고 우리 아이들도 거기 가서 어른들이랑 같이 일하는 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중등J)

- 심리·사회적 취약 학생의 증가는 우선 직업교육의 운영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학교와 교사가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보니 양질의 직업교육을 운영 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됨.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데리고 취업이 필요한 그런 수업이나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생활 교육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중략)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특성화고등학교가 무슨 대안교육기관이나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중등D)

- 몇몇 전문가들은 최근 직업계고의 진로 미결정 학생, 즉 취업도 진학도 하지 않는 학생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이러한 현상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음.

그게 취업도 안 되고 진학도 안 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기타 학생의 비율이 높아진 게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그 학생들이 많은 부분에서 특성화고에 이제 있으면서 취업도 안 하고 진학도 안 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다. (중등B)

- 정리하면, 학교 구성원의 측면에서 교사들의 직업교육 전문성을 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학생의 특성이 저출생에 의해 변화함에 따라 양질의 직업교육을 운영하는 것과 이를 통해 취업 및 진학 등 성과를 창출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임.

### 라. 학생 성장경로 현안

#### 1) 직업계고의 진학 딜레마: 취업 우선 원칙과 진학 수요 사이의 괴리

□ 직업계고의 진학 딜레마는 직업계고가 '취업 우선 원칙'을 유지하지만, 현실적으로 진학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취업 기능과 진학 지원 사이에서 학교운영에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함.

- 오늘날 직업계고 상황에서 진학은 중요한 진로경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임. 직무 특성에 따라 중등 단계에서 완성형 인재를 배출할 수 없는 분야도 존재하며, 장기적인 성장의 관점에서 학생의 진로희망에 따라 먼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었음. 특히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의 경우에는 진학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하였음.

빨리 대학교 가서 전문적인 코딩을 배워야 진짜 게임 프로그램 개발하지 (중략) 분야별로는 만약에 진짜 고숙련 어떤 신산업 이런 거 한다고 하면 진짜 고등학교 단계에서 2학년 때부터 직업교육을 탄탄하게 배워서 그 아이들이 4년제 대학을 가서 (중략) 탄탄하게 그 기초 지식을 배운 후에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애는 코딩을 하는 거죠. (중등B)

- 전문가들은 진학을 직업교육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동일계열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전문기술 인력으로 성장하는 경로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애들이 관광과 지원할 때 단순한 서비스직만 원해서 온 게 아니라 카지노 딜러도 되고 싶고 항공 승무원도 되고 싶고 (중략) 그러니까 여기서 직업교육을 받은 거를 바탕으로 해서 초대졸 이상은 또 진학을 해서 그걸 이수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입 전형에 대응할 수 있는 학교의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등)

□ 그러나 전문가들은 진학이 직업계고의 본질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즉 경우에 따라 선진학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선취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추후에 후학습을 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즉 직업계고에 진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먼저 취업을 시키고 후학습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작정 대입 경로를 열어두는 것은 직업계고의 존재 가치를 훼손하게 되어 직업교육체제의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임을 지적하였음.

단순히 우수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유리한 방향으로만 열어주는 것은 이젠 직업교육의 동등성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직업교육 자체를 없앨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등H)

- 종합하면, 현재의 직업계고에서의 진학은 경우에 따라 필요한 하나의 진로경로 중 하나로써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전문인력으로서의 성장경로로서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진학보다는 후학습 경로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접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보다 문제로 삼아야 하는 현상은 직업계고에서의 진학 현상이 아니라, 성장경로의 관점에서 충분히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진학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불어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조차 진학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임.

특성화고등학교는 사실 취업처도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 안 하는 애들을 그냥 내버려 둘 거냐 관련 학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진학의 욕구도 있는데 근데 진학의 욕구가 너무 욕구에 비해서 그거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약한 거예요. (중등E)

## 2) 직업계고 학생의 진로설계 부재와 성장경로 단절 문제

- 직업계고 학생의 진로설계 부재와 성장경로 단절 문제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졸업 후 구체적인 진로목표 없이 사회로 진출하고 있으며, 이후의 전문적 성장경로와 사회적 인정 기반이 부재하여 지속가능한 진로설계가 어려운 문제를 의미함.
  - 전문가들이 지적한 현재 직업계고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설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었음. 즉 오늘날 직업계고의 선호도가 감소하고 규모가 축소되는 원인 중 하나가 진입한 학생을 대상으로 탄탄한 성장경로 로드맵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 대다수 학생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지 못한 채 졸업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았음. 더욱이 현재 진로설계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주도되고 마치 교사는 묵인하는 것과 같이 소극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였음.

이제 신입생이 입학 때부터 졸업 때까지 취업이라든가 진학을 위한 그런 탄탄한 로드맵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중등C)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학생이 학부모가 나는 이렇게 가겠다. 우리 아이는 이렇게 기르고 싶다고 했을 때 과연 학교의 선생님은 이거를 그냥 그대로 묵인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 부분일까 지금의 진로지도는 묵인이거든요. (중등F)

- 다만 이러한 형태의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는 데는 직업교육에 적합한 형태의 고속련 전문가로의 성장경로가 부재한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지적되었음. 대표적으로 후학습 제도의 경우 학생들이 취업한 이후 심화학습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여전히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학생의 경우 후학습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으며, 결정적으로 후학습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기업에서 대우해 주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즉 후학습 경로로의 진입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 성과가 인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것임.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다가 기업에서 재직자 전형이든 뭐 다른 어떤 후진학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해서 이 학생들한테 대졸자의 대우를 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한 케이스가 대부분이고요. (중등G)  
중견기업 이상 들어간 아이들은 다 선취업 후진학을 하지만 중소기업 가는 애들은 선취업 후진학 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 (중등B)

- 이는 우리 사회가 학력을 제외한 다른 학습 성과에 대한 인정 수준이 낮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직업계고 학생들이 다양한 경로로 취득하는 자격증 및 NCS 기반 교육 이수 경력이 기업에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한편으로 진학이 강제되고 있는 것임.

민간자격증들이 별로 이렇게 소용이 없는 것들이 아무리 민간에서 운영하는 자격증 따도 기업에서는 별로 인정을 안 해줘요.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그만큼의 역량을 인정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략)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형태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NCS 기반 교육과정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중등G)

## 2. 고등직업교육의 현안

- 고등직업교육의 현안은 크게 거시적·구조적 현안, 전문대학 정체성과 고등교육체제 변화, 학교운영·교육과정 현안, 지역사회 및 학습자 지원 부족 등 네 영역의 7개 현안으로 구분되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4-5>와 같음.

<표 4-5> 고등직업교육 주요 현안(초안)

구분	현안	설명
거시적·구조적 현안	입학자원 감소로 인한 경영난과 교육의 질 하락의 악순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교 재정이 악화되고, 이는 다시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현상
	전문대학 입학자원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전문대학의 위기 심화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전문대학의 학생 충원이 어렵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 전문대학의 경영난과 교육 질 저하가 심화되는 현상
전문대학 정체성과 고등교육 체제 변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 경계 모호화 및 고등교육의 위계화 현상 심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구분이 불명확해지면서, 일반대학에 비해 낮은 사회적 인식과 불균형한 처우가 지속됨에 따라 직업교육의 경쟁력과 전문대학의 고유한 역할이 약화되는 현상
	비전통적 학습자 및 비학위 과정 증가에 따른 전문대학의 정체성 문제	성인학습자와 외국인 유학생 증가로 인해 기존 직업교육의 목적과 방향이 모호해지고, 이로 인해 전문대학 본연의 직업교육 정체성 및 경쟁력이 약화되는 현상
학교운영·교육과정 현안	전문대학 학과 재구조화의 부정적 영향 및 학과의 경쟁력 약화	입학자원을 유지하기 위해 단기적 인기 분야로 학과를 개편하면서 전통적인 제조업 등 지역기반산업의 인력 양성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
	교육과정의 고도화·전문화 부족과 수준별 학위과정 운영의 난항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과 전문기술석사과정 등 학위의 수준과 연계한 고도화된 직업교육의 성과가 미흡하여 인력의 질적 성장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
지역사회 및 학습자 지원 부족	지자체의 전문대학 역할 인식 부족 및 RISE 체계 내 전문대학의 소외	RISE 체계 내에서 전문대학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와 전문대학 간 협력 모델이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RISE 체계 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

### 가. 거시적·구조적 현안

#### 1) 입학자원 감소로 인한 경영난과 교육의 질 하락의 악순환

□ 입학자원 감소로 인한 경영난과 교육의 질 하락의 악순환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교 재정이 악화되고, 이는 다시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함.

- 중등직업교육과 마찬가지로 고등직업교육에서도 거시적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현안은 입학자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었음. 다만 중등직업교육의 경우 입학자원의 감소로 인한 규모의 축소가 문제 현상이라고 한다면, 고등직업교육은 입학자원의 감소가 경영난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입학자원 감소, 경영난, 인건비 하락, 우수교원 확보의 어려움, 비정년 트랙 교수의 증가, 교육효과 감소, 학생의 노동시장 성과 하락으로 그 영향력이 확대되었음.

학생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입학자원이 미달이 되고 이게 경영난으로 나가고 이게 이제 학과 개편 내지는 교원들의 신분 변화 이리면서 교육의 질 저하 그리고 교육의 성과가 낮아지고 결국은 그게 이제 노동시장의 성과가 낮아지는 이런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고등A)

- 다만 이러한 학생 수 감소는 고등직업교육에서의 고품질 맞춤형 직업교육을 구현할 중요한 기회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었음. 학생 수 감소에 맞추어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시기이나, 현실적으로는 충분한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음.

#### 2) 전문대학 입학자원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전문대학의 위기 심화

□ 전문대학 입학자원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전문대학의 위기 심화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전문대학의 학생 충원이 어렵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 전문대학의 경영난과 교육 질 저하가 심화되는 현상을 의미함.

- 고등직업교육에서의 입학자원 감소가 미치는 영향의 특징 중 하나는 전국의 모든 전문대학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있음. 즉 지방 전문대학의 경우 수도권 전문대학에 비해 심각한 입학자원 결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입장에서 수도권 전문대학이나 지방의 일반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직화된 진학 선택 경향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아무래도 수도권 대학에 먼저 진출하고 지방 대학을 가고 이런 어떤 수직적으로 대학을 선택하다 보니까 일종의 직업교육은 이제 진학에 실패한 학생들이 가는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있다 보니까. (후략) (고등C)

- 더욱이 이러한 학령인구의 수직화된 진학 선택은 지방 전문대학 학생의 기초학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지방 전문대학의 노동시장 성과 창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정원이 졸업생들보다 많기 때문에 대학정원이 많은 학생들이 소위 일반대학에 원서만 쓰면 거의 다 들어갈 수 있어서 그 전에 특별하게 필요한 어떤 사회에서 필요한 직업 현장에 가기 위해서 오던 학생들보다는 그런 데에 못 간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입학자원의 수준이 하락해서 거기에 맞는 수업을 이끌어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등E)

#### 나. 전문대학 정체성과 고등교육체제 변화

##### 1)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 경계 모호화 및 고등교육의 위계화 현상 심화

-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 경계 모호화 및 고등교육의 위계화 현상 심화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구분이 불명확해지면서, 일반대학에 비해 낮은 사회적 인식과 불균형한 처우가 지속됨에 따라 직업교육의 경쟁력과 전문대학의 고유한 역할이 약화되는 현상을 의미함.
  - 학령인구 감소 현상과 수직화된 진학 선택 경향의 결합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은 전문대학의 정체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현안으로 발전하고 있었음. 특히 전체 고등교육 시스템 차원에서 볼 때 일반대학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전문대학에서 개설하던 학과나 과정을 일반대학이 유사하게 개설함에 따라, 대학 유형의 경계가 모호화되고 있음이 지적되었음.

이게 4년제에 또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직업교육에서 경계가 애매한 거죠. 예전에 제가 얼핏 ○○전문대학하고 ○○대학이 같은 재단인데 태권도 학과가 이제 ○○전문대학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대학에서 태권도 학과를 만드는 거죠. (고등B)

- 즉 직업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문대학의 정체성으로서 의미가 있었는데, 일반대학 역시 해당 정체성을 도입함에 따라 고등교육 시스템 내에서 전문대학의 의미가 희석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수직화된 진학 선택과 맞물려 전문대학의 문제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음.

전문대학에서 거의 브랜드처럼 사용을 해왔다가 이제 일반 4년제 대학들도 직업교육이라는 그것이 이제 슬로건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등D)

## 2) 비전통적 학습자 및 비학위 과정 증가에 따른 전문대학의 정체성 문제

- 비전통적 학습자 및 비학위 과정 증가에 따른 전문대학의 정체성 문제는 성인학습자와 외국인 유학생 증가로 인해 기존 직업교육의 목적과 방향이 모호해지고, 이로 인해 전문대학 본연의 직업교육 정체성 및 경쟁력이 약화되는 현상을 의미함.
- 저출생에 의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전문대학으로 하여금 새로운 특성의 입학자원을 탐색하게 하였고, 그 대표적인 학습자가 성인학습자임. 그리고 이러한 성인학습자의 증가는 전문대학의 전통적인 운영 방식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었음.

성인학습자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이제 하는 대학만 했었고 안 하는 대학은 안 했었는데 이 성인학습자에 대한 평생직업교육 수요들을 가지고 운영했던 라이프 사업이라든가 하이브 사업 같은 것에 도움을 받아 가지고 성인학습자에 대한 부분들이 두드러지게 증가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등B)

- 더불어 전문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음. 국내 학생보다 외국인 유학생의 비중이 높은 전문대학이 등장하기 시작함에 따라 마찬가지로 정체성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의 ○○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오히려 본교 학생보다 서너 배 많은 경우도 있고. (고등A)

-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전문대학이 비전통적 학습자의 증가에 대응할수록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문대학으로서의 정체성에도 전반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임.

- 즉 그간 전문대학이 추진해 온 전문기술 인력 양성이라는 방향성이 학생 특성의 다양화에 의해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더욱이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학업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필요로 하는 학습 역시 낮은 수준의 기술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음이 지적되었음.

성인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문대학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일종의 전문기술 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직무 향상 교육이라든지 직업 전환 교육이나 이게 성인학습자의 개념인데 (중략) 명확한 정체성을 희박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중략) 외국인 유학생들은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형태의 경제 수단으로 이제 학교를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략) 또 수학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일종의 학습영역 문제 그다음에 적용 수준의 문제, 그다음에 전공에 대한 이해 능력이 한국 학생들과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 (후략) (고등C)

#### 다. 학교운영·교육과정 현안

##### 1) 전문대학 학과 재구조화의 부정적 영향 및 학과의 경쟁력 약화

- 전문대학 학과 재구조화의 부정적 영향 및 학과의 경쟁력 약화는 입학자원을 유지하기 위해 단기적 인기 분야로 학과를 개편하면서 전통적인 제조업 등 지역기반산업의 인력 양성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를 의미함.
  - 입학자원 감소 및 산업사회 변화와 함께 학생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학과 개편은 전문대학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음. 다만 이러한 변화 역시 졸업생의 취업률, 즉 노동 시장 성과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 없이 입학자원의 확보 가능성을 중심으로 조정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음.

예를 들면 입학자원 확보가 좋으면서도 취업률은 낮은 경우도 있고 입학자원이 안 되면서 취업률은 좋은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대학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칼을 대는 것이 입학자원이 확보할 수 없는 이런 쪽이겠죠. (고등A)

- 이에 따라 전문대학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공학 기반 학과 운영이 약화되었고, 제조업 분야의 인력 배출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전문대학의 지역 특화 산업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에서는 제조나 공학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사실 지자체에서는 그걸 지역 특화 산업으로 만들다 보니까. 전문대학가에서는 그런 과를 신설하기에 거부감이 있고, 이게 지속가능할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또 지역의 인력 mismatch가 또다시 생기는. (후략) (고등D)

- 더불어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을 만한 학과들이 증가하면서 대학 및 교원 차원에서 내실이 부족한 상황 역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일부 뿌리산업 분야의 경우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보호되고 있으나, 이 역시 지속가능성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였음. 더욱이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경우 재정 마련의 어려움과 교육 수준에 대한 설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음.

허울 좋은 융합 학과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약간 학과명만 이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교수 인력이 가르칠 수 있는 인력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등A)

첫 번째는 이 신산업과 신기술에 관련돼서 전문대학가에서는 어쨌든 미래형 실습실, 현장이랑 거의 걸맞은 실습실을 구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험을 시키거든요. (중략) 그러한 자원 마련이 상당히 어렵게 있고요. (중략) 또 하나 고민되는 것은 과연 이 신산업 혹은 신기술 분야에서 전문대학가에서는 어느 정도 레벨로 교육을 시켜서 보내야 되느냐가 고민인 거죠. (고등D)

## 2) 교육과정의 고도화·전문화 부족과 수준별 학위과정 운영의 난항

- 교육과정의 고도화·전문화 부족과 수준별 학위과정 운영의 난항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과 전문기술석사과정 등 학위의 수준과 연계한 고도화된 직업교육의 성과가 미흡하여 인력의 질적 성장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함.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과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경우 고수준 전문기술 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입학자원 감소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경우 교육과정 연계 측면에서 미흡함과 졸업 이후의 사회적 인정의 부족으로 인해 “불안정한 형태의 학사 학위 구조”(고등A)로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교육과정 연계도 사실은 그렇게 싹 되지는 않아요. 3년제에서 1년이 그게 꼭 하나의 완성된 형태라기보다는 좀 다양한 형태로 되긴 합니다만 이것도 약간 불안정한 형태의 학사 학위 구조다라고 생각이 들고. (후략) (고등A)

- 전문기술석사과정, 즉 마이스터대학의 경우 정부재정에 의해 시작될 수 있었으나 학생 수요가 많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 것일 수 있으나, 고용시장 내 전문기술석사의 인정 문제와 완성도 있는 교육과정 마련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였음.

전문기술 석사 과정 어렵게 마이스터대학 해갖고 만들어 놨긴 했지만, 그동안에는 정부가 돈을 줘서 이제 인큐베이팅 했지만 지금은 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입학자원이 한 과에 2명 3명 오는 이런 구조이기도 하고, 기존에 정부 재정지원사업은 20억 받아 가지고 했던 대학들도 지금은 안 주니까. (고등A)

#### 라. 지역사회 및 학습자 지원 부족

##### 1) 지자체의 전문대학 역할 인식 부족 및 RISE 체계 내 전문대학의 소외

- 지자체의 전문대학 역할 인식 부족 및 RISE 체계 내 전문대학의 소외는 RISE 체계 내에서 전문대학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와 전문대학 간 협력 모델이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RISE 체계 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함.
  - 전문대학은 운영에 있어 재정지원사업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 이는 전문대학의 혁신적 변화 추진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자체적인 차별화가 부족하고, 취업률과 같은 특정 지표에 대한 집중도가 과도하게 높은 상황으로 이어짐.

재정지원사업을 받지 않으면 정말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게 됐죠. (중략) 모든 게 이제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아니면 평가하고자 하는 기준에 대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이고요. (중략) 말만 자율성이지 사실은 모든 대학이 어느 대학이나 비슷한 형태의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등A)

- RISE 체계가 추진됨에 따라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대학 운영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내의 전문대학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전문대학의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언급하였음.

기존에 전문대학은 라이프 그 5개 사업을 통해 가지고는 약 한 80억 정도를 운영을 했던 그런 전문대학이 이 라이프 체계로 하다 보니까 한 20억 정도가 안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고등D)

- 그간 전문대학이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성과를 창출한 경험이 많은 상황이었  
는데, RISE 체계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연계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어려  
운 상황으로 나타났음.

하이브 사업의 경우 기초지자체와 지역 전문대학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성과를 창출하였  
다고 평가할 수 있죠. (고등E)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이 지역 정주 인력을 양성하는 주요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과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정체성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중심 대학으  
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음을 언급하기도 하였음.

### 제3절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의 미래 방향 탐색

#### 1. 직업교육체제의 미래상

##### 가. 중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

- 중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은 ‘학생 중심의 진로설계와 다양한 성장경로를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중등직업교육’으로 정리할 수 있었으며, 이는 진로설계 중심, 학생 중심성, 다양한 사회진출 경로, 경력개발과 장기적 성장, 교육복지와 다양성 존중, 복합적 성과 평가와 같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체화되었음.
- 즉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중등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직업계고 진입 학생들에 대한 진로설계를 기반으로 취업 중심의 단일 성장경로가 아닌 다양성에 입각한 성장경로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함.
- 이를 정리하면, 중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의 초안은 다음과 같음.

〈표 4-6〉 중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초안)

구분	명칭	설명
미래상	학생 중심의 진로설계와 다양한 성장경로를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중등직업교육	
핵심 키워드	진로설계 중심	중등직업교육의 목적을 학생 개개인의 진로를 명확히 설정하고 다양한 사회진출 경로를 확보하도록 돕는 것에 초점(진로 미결정 상태를 방지)을 맞추는 것
	학생 중심성	취업률, 진학률 등 기업이나 학교 중심의 성과 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의 수요와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직업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하는 것
	다양한 사회진출 경로	취업과 진학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학생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 다양한 사회진출과 성장 경로를 보장하는 것
	경력개발과 장기적 성장	직업교육을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경력을 쌓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사회적 이동성과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
	교육복지와 다양성 존중	직업교육을 교육체제 내에서의 다양성 보장 및 복지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영역으로 인식하는 것
	복합적 성과 평가	직업교육의 성과를 단순한 계량적 지표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성장 사례, 자존감 회복, 심리적 안정 등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

□ 전문가들은 중등직업교육의 목적으로 진로설계를 통한 다각적인 사회진출 경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다각적인 사회진출 경로의 중요성에 관한 관점은 직업계고에 진입하는 학생들에 대한 현장에서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음. 즉 과거의 직업계고 진입 학생들이 성적에 의해 수동적으로 결정되었다면, 오늘날에는 개인의 주체적인 선택에 의해 직업계고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이제 성적순으로 성적이 안 돼서 특성화고 갔다 이런 학생들이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절을 해서 특성화고는 성적이 낮아서가 아니라 어쨌든 원하는 학생만 와요. 그러니까 밀려서 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일반고를 탈락돼서 특성화고 가는 학생은 없어요. (중등B)

- 그렇기 때문에 주체적인 선택을 기반으로 진입한 학생들이 직업계고를 선택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사회에 진입하는 것과 함께 다양한 성장경로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중등직업교육의 목적은 이들의 비전이 장기적인 성장경로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졸업 이후에 아이가 직업을 선택하든 진학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관련된 직업 어떤 분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할 건지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직업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략) 그러니까 취업이 목적이나 진학이 목적이나가 아니라 졸업한 이후에 취업과 진학이든 본인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자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중략) 그게 직업계 고등학교 본연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앞으로는 미래 지속적인 목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등A)

- 즉 직업교육의 목적인 학생들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 미래 진로를 선택하고 빠른 성장 경로를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진로를 찾은 학생들이 미래를 체험하고 이를 배워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음.

□ 중등직업교육의 진로설계는 기존에 직업교육의 핵심 성과로 이해되던 취업을 넘어서 목적 확장을 가능하게 하고, 이에 따라 진학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먼저 취업률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률 강조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일반적으로 취업률이 오르면 직업계고 진입률도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과도한 취업률 강조는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됨을 강조하였음.

이제 데이터를 보면 취업률이 올라가면 신입생 모집도 올라갑니다. 이런 추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중등D)

-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점에 따라 중등직업교육의 목적과 취업이 동치의 관계가 아니라 목적과 수단의 관계로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즉 학생들의 장기적인 성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취업은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취업이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면 진학과 같은 다양한 학생들의 사회진출 경로가 동등한 가치로 인식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음.

취업이라는 것은 경력을 개발하는 게 틀림없어요. 즉 학생의 성장 입장으로 보면 이게 경력개발에 관련된 것이고 경력개발이라는 생각을 하면요. (중략)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는 사실은 취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거죠. (중등F)

- 따라서 중등직업교육에 있어서 취업률과 같은 지표에 대해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오늘날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학생을 중심에 두고 이들이 진로설계를 충분히 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직업계고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전문가들은 중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은 전체 교육시스템 내에서 중등직업교육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이는 직업계고의 존재 가치를 효율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나라 전반의 교육시스템에서의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모든 사람은 다양한 특징과 역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 맞는 역량을 파악하고 진로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 저는 국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직업교육도 그것의 일환으로 봐야지 단순히 효율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중등H)

- 특히 오늘날 중등직업교육에 진입하는 학생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교육복지, 사회적 회복 차원에서 직업계고의 존재 가치가 크다는 사실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었음.

직업계고는 그런 일반적인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육복지적인 면 사회적인 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환경 때문에 자기와 상관없이 선택했던 이 직업교육에 들어온 학생들에 대한 상태 그거를 이제 케어하는 부분도 상당히 크거든요. (중등E)

- 따라서 상황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 목표와 성과가 다를 수밖에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업계고에 진입하여 해당 과정을 이수한 것이 성과가 될 때도 있다고 보았음.

뭐 기능이 뛰어나 가지고 우수한 회사를 취업을 하고 대기업에 가고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졸업을 시켜보면서 이 아이들이 3년 동안 어떻게든 수업 일수 채워 가지고 졸업을 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 참 잘했다 대견하다. (후략) (중등J)

- 중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성장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함으로써 졸업 이후 다양한 사회진출 경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 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었음. 그리고 이는 직업계고에서 관찰되는 성장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었음.
- 즉 직업계고의 목적을 학생의 지속적인 성장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중등직업 교육에 진입한 이후의 성장치를 이상적 지향점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특성화고등학교에 막연하게 입학을 해서 여러 가지 수업을 하다가 자신의 적성을 찾고 재미를 찾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점점 그 기능 숙달이 되면서 전문가가 되는 과정을 보고 자기도 만족하고 그런 과정을 보고 자기도 놀라는 그런 학생들을 가끔 보거든요. 굉장한 성장을 하는 거죠. (중등C)

- 전문가들은 이를 종합적인 성과로 명명하였으며, 직업계고를 통한 학생들의 성장 성과, 그리고 장기적으로 자신의 인생에서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이루어내는 것에 대한 주목이라고 할 수 있음.

학습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 진로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처음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왔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데 직업계 고등학교 와서 1년 2년 3년 졸업하고 이후에 어떤 성과가 있었다. 저는 이런 종합적인 성과를 보고 싶어요. (중등E)

학습자로 들어오는 우리 아이들의 개인적인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한 가치 실현과 사회적, 경제적인 그런 요구를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성과물을 직업교육이 내야 할 거 같다. (중등E)

- 정리하면, 중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은 학생을 중심에 두는 교육, 학생의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교육, 다양한 진로에 맞는 사회진출 경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학생의 장기적인 삶의 질 개선을 지원하는 교육, 학생의 성장을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관점에서 평가되는 교육, 교육적 다양성과 복지 차원에서 보호되는 교육의 모습으로 구체화할 수 있음.

#### 나. 고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

- 고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은 '다양한 학습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 기반 맞춤형 고등직업교육'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기반 인재육성, 평생직업교육 강화, 개인 맞춤형 직업교육, 고숙련·고수준 인재 양성, 직업세계 변화 선제적 대응, 사회 통합 및 개방성과 같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체화되었음.
  - 즉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고등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특성의 고등직업교육 진입 학습자에게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고숙련·고수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등직업교육이 직업세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통합과 개방성을 중심으로 건전한 시민 사회 구축을 지원해야 함을 의미함.
  - 이를 정리하면, 고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의 초안은 다음과 같음.

〈표 4-7〉 고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초안)

구분	명칭	설명
미래상	다양한 학습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 기반 맞춤형 고등직업교육	
핵심 키워드	지역 기반 인재육성	지역산업체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기업 수요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는 것
	평생직업교육 강화	재직자의 업스킬링(역량 고도화), 리스킬링(재교육)을 포함하여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복지 차원에서 평생학습 제공을 통해 다양한 계층에 직업교육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
	개인 맞춤형 직업교육	다양한 교육 수요자(성인학습자, 외국인 학습자 등)의 특성을 고려한 학습자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학습자 요구에 부합하는 직업교육 성과를 창출하는 것
	고숙련·고수준 인재 양성	양적 팽창보다 질적 성장을 중시하여 중소기업 및 국가전략산업이 요구하는 고숙련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고급 기술 교육을 강화하여 고등직업교육의 사회적 위상 및 인식을 제고하는 것
	직업세계 변화 선제적 대응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기술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교육과정을 신속히 개편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인력을 적시에 양성하여 산업현장과의 실질적 연계를 강화하는 것
	사회통합 및 개방성	사회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다양한 학습자의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여 건강한 직업인이자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전한 시민 사회의 구축을 지원하는 것

□ 고등직업교육 분야 전문가들은 고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고등 직업교육의 고유한 역할에 대한 탐색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지역 정주 청년의 육성, 재직자의 계속직업교육 지원, 지역의 평생직업교육 제공을 고유한 역할로 언급하였음.

- 먼저 고등직업교육은 해당 대학이 위치하는 지역의 산업체에 종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에 정주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이 있음을 강조하였음. 이러한 인재를 학령기 학습자뿐 아니라 다양한 성인학습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주와 복지 차원의 역할을 함께 고려하는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전문대학이 평생직업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한다라는 건데 그게 반드시 학령인구만이 아니라 그 안에 이제 평생에 걸쳐서 (중략)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지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성인들의 자기계발 이런 차원에서도 그 지역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봐요. (고등A)

- 특히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이유로 전문대학이 상대적으로 소규모 학교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며 민첩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오히려 전문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훨씬 더 응집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거버넌스 자체가 굉장히 일반 대학에 비해서 효율성이나 어떤 기본적인 순발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은 구조거든요. (고등A)

- 따라서 고등직업교육은 다양한 학습자들이 일과 학습 사이를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경로로 의미를 지닐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곧 고등직업교육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일단 학업하고 다시 현장에 갔다가 다시 오고 평생 동안 루프 돌 수 있게 그런 형태가. (중략) 결국은 직업 교육이 연결돼서 언제든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공부한 이력들이 그대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저는 좀 장기적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등B)

□ 따라서 고등직업교육은 지역의 다양한 특성의 학습자를 학생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인 맞춤형 직업교육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 기존의 고등직업교육이 많은 수의 학습자를 수용하여 표준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형태를 지향했다면, 저출생으로 인한 입학자원의 감소에 따라 소수의 학습자가 진입하는 상황에서는 이들의 개별적인 학습 목적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학령인구 감소 상황은 고등직업교육의 위기이지만, 한편으로는 역할과 정체성을 전환할 수 있는 주요한 분기점으로서도 의미를 지니고 있음.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동안에 너무 많은 자원을 받아들여서 교육을 시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대량 생산을 하는 구조 속에서 좀 낮은 질 교육을 시켜 왔다. (중략)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저출생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학생 수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고등A)

- 그리고 이러한 맞춤형 교육의 차원에서 고숙련·고수준 인재의 양성이 중요한 지향점이 될 수 있음. 즉 지역에 존재하는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성장하여 기업 및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실제 전문대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여집니다. (중략) 명확한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정확한 기술인재를 양성해야 이게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양적인 부분보다는 이제야말로 고속런 기술인재라고 하는, 이제 질을 더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등C)

- 고등직업교육이 지향하는 지역 중심 운영, 학습자 맞춤형 직업교육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고등직업교육과정을 통한 성장경로 제시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됨.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한 것과 최근 마이스터대를 중심으로 기술석사과정을 확대시킨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 특히 전문가들은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일반대학으로 진학하여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사례가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이는 고등직업교육이 학습자의 장기적인 성장경로 내에서 의의를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이제 일반대학에서 전공심화과정을 통해서 석사 과정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을 받아 보기 시작하니 어느 정도는 충분하다라는 걸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진로 영역이 생긴 것 같아요. (고등D)

- 즉 고등직업교육의 학습경로를 고수준으로 확장한 그간의 노력은 전문대학을 통한 사회진출 경로의 확장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그것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기업 내 수용이 부족한 것은 한계라고 지적하였음.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상당히 많이 전파가 되어 있고 한데,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구조나 산업체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지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좀 더 많은 게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고등D)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직업교육이 지역을 기반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만큼, 지역의 산업현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즉 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습의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산업 현장과 연계함으로써 산업 환경과 지역기업의 중간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미래 변화하는 사회를 예측하는 직업군을 이제 우리가 먼저 도출해서 교육과정을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다양한 계층을 위해서 리스킬링 또는 업스킬링 교육과정을 유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 공부하고 또 재교육 받고 스킬을 업시킨 것들이 데이터베이스화돼 있어서 필요한 산업에서 사람을 찾을 때 바로 연결할 수 있고. (후략) (고등E)

- 정리하면, 고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은 지역산업체와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 지역의 다양한 학습자를 수용하는 평생직업교육,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교육, 그 결과로 고속련·고수준 인재를 양성해 내고, 직업세계 학생을 중심에 두는 교육, 학생의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교육, 직업세계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교육, 최종적으로 사회통합 및 개방성에 기초한 지역의 건전한 시민 사회 구축을 지원하는 교육의 모습으로 구체화할 수 있음.

## 2.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

-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은 직업교육을 둘러싼 현안을 해결하고 이상적 미래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 관점으로서, 직업교육을 위한 정책 방안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 전문가들의 면담 결과를 종합하여 동등성, 다양성, 전문성, 유연성, 연계성 등 5가지 개선 방향성을 도출하였음.
  - 각 개선 방향성은 세부 과제로서 하위 요소를 담고 있으며, 각 하위 요소는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의 급별 특성과 상황에 따라 공통적인 하위 요소와 개별적인 하위 요소를 함께 담고 있음.

### 가. 동등성: 직업교육의 동등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동등성은 직업교육의 동등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직업교육이 일반교육 및 학력 중심의 교육과 비교하여 사회적, 제도적으로 동등한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 인정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함.

- 직업교육체제가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에 도달하고 저출생시대에 대응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적 동등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되었음. 즉 직업교육이 계획, 운영되는 과정과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일반교육에 비해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보가 우선될 때 직업교육의 개선이 가능하다는 인식임.
- 따라서 직업교육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직업교육의 결과로서 학력·경력·자격의 사회적 동등한 인정체계를 정립하고, 진학과 취업 등 다양한 성장경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직업교육의 성과가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동등성 초안은 다음 <표 4-8>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4-8>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동등성(초안)**

구분	명칭	설명	범위	
			중등	고등
방향성	[동등성] 직업교육의 동등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직업교육이 일반교육 및 학력 중심의 교육과 비교하여 사회적, 제도적으로 동등한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과 사회적 인정체계를 마련함.	●	●
하위 요소	직업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직업교육이 정권과 교육감 교체 등 외부적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비전 설정 및 정책 연계성을 강화함.	●	●
	학력·경력·자격의 사회적 인정 및 동등성 확보	국가역량체계(KQF)를 활용해 직업교육에서의 학습 결과, 자격, 경력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관리하며, 비학위 전문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확대함.	●	●
	직업교육 성장경로 확보 및 사회진출 기회의 균등화	직업교육 이수자가 진학·취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일계 진학 확대 및 교육과정 유연화를 추진하여 사회진출의 다양성을 보장함.	●	●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성과 인정 강화	직업교육의 성과(임금·복지·승진 등)를 사회적으로 인정받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초·중등 단계에서부터 진로교육을 강화하여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장기적으로 개선함.	●	●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교육 혁신 학과 지원 강화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직업교육체제가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임.	●	●
	국가전략산업 및 뿌리산업 분야의 직업교육 지원 확대	중등과 고등 직업교육 및 산업계 간의 연계를 통해 국가 전략산업 및 뿌리산업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 투자와 지원을 강화함.	●	●

구분	명칭	설명	범위	
			중등	고등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학위구조 및 교육체계 개편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구분과 학위구조를 개선하여 양자간 학력·학위·자격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고등교육 내에서 직업교육의 위상을 통합적으로 재정립함.	-	●
	전문대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재정 지원 확대	전문대학이 직업교육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확대하여 직업교육의 내실화와 지속가능성을 보장함.	-	●

### 1) 직업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 직업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는 직업교육이 정권과 교육감 교체 등 외부적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비전 설정 및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함.

- 전문가들은 직업교육에 대한 정책들이 탄탄한 제도적 기반 없이 과도하게 사업 위주로 추진된 것이 한계라고 지적하면서, 제도적 기반을 먼저 탄탄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특히 정권 및 교육감에 따라 교육 정책 방향이 변경되면서 혼선이 발생하고 연계성이 하락하게 되는 사례들을 언급하였음.

제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정책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정책이 사라지면 지원도 사라지는 형태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가장 미흡한 게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점이죠. (중등A)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육감은 4년마다 바뀌는데 지역의 교육감도 또 바뀔 때마다 하나씩 들고 나와서 뭔가를 바꿔버리니까 혼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중등B)

- 고등직업교육 전문가들 역시 공통적으로 언급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직업교육법을 제정하여 장기적인 직업교육의 비전을 마련하고, 주기적이고 포괄적인 직업교육 기본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즉 직업교육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직업교육 정책 방향의 일관성, 재정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장기적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며, 단계별 직업교육의 경로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음.

사회적인 법, 제도 정비를 통해 가지고 직업교육이 결코 낮은 수준의 교육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제도를 통해서 보장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중략) 사회적 인식 변화가 첫 번째고, (중략) 두 번째는 중등에서 고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직업교육의 경로를 명확하게 좀 설계해 준다고 하는 것. (후략) (고등C)

## 2) 학력·경력·자격의 사회적 인정 및 동등성 확보

- 학력·경력·자격의 사회적 인정 및 동등성 확보는 국가역량체계(KQF)를 활용해 직업교육에서의 학습 결과, 자격, 경력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관리하며, 비학위 전문교육과정에만 한 사회적 인정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함.
  - 직업교육의 동등성 확보는 직업교육을 통로로 하여 직업세계로 진입한 이후에 획득하는 경력과 이후 획득하는 자격 등이 학력과 동등하게 인정받을 때 가능하다고 지적하였음. 특히 중등직업교육의 차원에서 학생들이 과정평가형을 통해서 얻는 자격,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통해서 획득한 일 경험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음.

학생들 실제 산업체 가면 일반 애들하고 대우가 똑같아요. 선생님들이 예산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들을 시키고 애들을 졸업시켜서 이제 보냈는데, 문제는 그러고 나면 그냥 일반 애들하고 받는 애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과정평가형 자격도 일반 기능사 딱 애들이나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기능사 딱 애나 제가 볼 때 현장에서 아무 차이 없습니다. (중등D)

- 고등직업교육도 유사한 상황임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KQF와 같은 국가역량체계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곧 능력중심사회로 이행하는 방향을 의미함과 동시에 직업교육의 결과가 직무능력의 수준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함.

직업교육은 분명한 하이어라키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몇 단계인지가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중략) 그 사람의 직무능력을 표현하는 수단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중략)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면서 이게 좀 노동시장에서 이게 안착되는 데는 KQF가 중요한 하나의 증빙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고등C)

## 3) 직업교육 성장경로 확보 및 사회진출 기회의 균등화

- 직업교육 성장경로 확보 및 사회진출 기회의 균등화는 직업교육 이수자가 진학·취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일계 진학 확대 및 교육과정 유연화를 추진하여 사회진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함.
- 직업교육의 동등성 확보 측면에서 본다면 직업교육을 통한 성장경로가 얼마나 다양하고, 그 경로가 일반교육 경로와 비교하였을 때도 탄탄하게 확보되는가가 중요함. 대표적으로 중등직업교육에서 학생들이 직업교육으로 진입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가 확보되어야 하며, 그 경로 중 하나로서 진학도 그 가치를 인정 받고 보장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

진학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되지만 취업률을 넘어서거나 아니면 예전처럼 진학이 80%, 70% 되고 그건 이제 아니겠지만 다양하게 수요를 반영하고 지원하는 거는 맞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등E) 1.5% 그것은, 예전에 이제 5%까지 했었으니까 동일계 전형 그 정도는 5%는 다시 환원해 준다든가, 취업으로만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은 정말 시대적 흐름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등B) 일부 학생들은 관련된 과를 대학에 진학해서 농고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대 가서 하는 게. (중략) 관련된 폴리텍 대학에 관련된 과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애들이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어요. (중등E)

- 즉 진학 역시 학생들이 전문가로 성장하는 경로에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력개발의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음. 물론 이러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직업교육의 목적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일부 전문가들은 만약 마이스터고에서 진학경로를 개방하게 된다면 마이스터고의 설립 목적이 무너지게 되는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하였음.

직업계고를 통해서 좀 더 자신이 원하는 학업을 대학에서 같은 계통으로 꼭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마련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즉 같은 계통에 계속 이어지게 공부한다면은. (중략) 일반고 출신하고 경쟁했을 때 우위에 설수도 있는 그런 제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등C) 그러면 이제 마이스터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일부 발생을 합니다. 일부 이제 대학을 위해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중략) 그래서 만약에 진학의 문을 완전히 열어준다면은 마이스터고 설립 목적이 이제 많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등C)

- 이러한 직업교육의 성장경로에 대한 의견은 고등직업교육에서도 언급되는데, 특히 전문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기도 하였음.

전에 마이스터가 없었을 때 저희 학교에 교수 요원을 뽑을 때 사실은 치과 기공에 대한 교수를 뽑아야 되는데 석사나 박사는 치의학이라든지 또는 다른 전공을 한 교수를 뽑는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기술 파트에 어떤 그 석·박사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직업의 심화라든지 또는 더 숙련된 기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등E)

#### 4)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성과 인정 강화

□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성과 인정 강화는 직업교육의 성과(임금·복지·승진 등)를 사회적으로 인정받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초·중등 단계에서부터 진로교육을 강화하여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의미함.

- 직업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이직이 잦고,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를 강요받는 측면이 있음. 직업교육 이수 학생들의 경우 임금, 복지, 승진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직업세계에 진입하게 되고, 이들의 경력개발 노력(예: 후학습)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임. 따라서 이직을 통해서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졸업자들의 사회적 위상을 위해서 임금 구조나 복지 구조를 이렇게 동등하게 만드는 데 훨씬 더 포커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중략) 예를 들면 간호사 같은 경우도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학사학위인데도 전문대학 졸업자들의 임금은 훨씬 낮아요. (중략) 같은 자격에 관한 졸업자인 경우에는 일반대학이든 전문대학이든가 동등한 가치를 부여를 해줘야 된다. (고등A)

이 진입할 때 애가 고졸자로 들어가서 고졸 직급의 대우를 받는다고 그랬을 때 이 학생들이 그 안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서 학위도 취득하고 역량을 발휘하고 이렇게 해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이거를 누가 학생들이나 국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이걸 인정을 하겠어요. (중등G)

- 이러한 현상은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다만 인식 개선은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인 지원이 있어야 함을 전문가들이 지적하였음.

직업계고 인식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라 국가 주도로 철저히 하지 않으면은 이제 흐지부지되는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단위학교나 또는 시도교육청에 맡기기보다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등C)

- 그리고 이러한 인식 개선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핵심 정책 대상 중 하나는 초·중등 단계의 학생과 교사라는 점이 중요함. 즉 중등 직업교육에 진입하기 이전에 직업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될 필요가 있으며, 교사들 역시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진로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초등학교도 진로지도교사들이 다 배치가 돼서 초등학교 때부터 직업교육에 대한 내용은 교육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보면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쪽에 좀 집중이 돼 있지 그 안에서 직업교육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고 제가 듣고 있어요. (중략)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희 입시 시즌이 돌아오면 중학교에 방문을 하거든요. 중학교 방문하는데 그 중학교에서 마치 이제 선생님들을 보따리장수 취급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중등G)

- 즉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이 있어야만 사회 전반에 걸친 직업교육의 성과 인정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중등직업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초·중등 단계의 학교에 먼저 집중할 필요가 있음.

#### 5)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교육 혁신 학과 지원 강화

-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교육 혁신 학과 지원 강화는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직업교육체제가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의미함.
- 직업교육체제가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 산업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신산업·신기술 분야와 같이 사회적 영향력이 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함. 특히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상대적으로 적절한 교육과정을 갖추고 인프라를 갖추는 데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은 재정적 지원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직업교육의 경우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전공심화과정 및 마이스터대학의 정원을 확대하거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음.

고숙련이나 고급 기술 신산업 이쪽은 결국에는 마이스터라든지 전공심화과정의 정원을 좀 확대해 주는 것, 개방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지원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고등C)

- 이는 중등직업교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비록 중등 단계에서 양성되는 전문인력이라고 하더라도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적합한 인력 수요가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전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생산 현장이 자동화되고 로봇 중심의 환경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 로봇을 수리하고 생산 자동화 라인을 유지, 보수하는 그 틈새시장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신기술, 신산업으로의 전환은 필요하지만, 다만 대학 수준의 공업 기술을 갖춘다기보다는 그 틈새시장에 맞는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과정을 만들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등H)

#### 6) 국가전략산업 및 뿌리산업 분야의 직업교육 지원 확대

- 국가전략산업 및 뿌리산업 분야의 직업교육 지원 확대는 중등과 고등 직업교육 및 산업계 간의 연계를 통해 국가전략산업 및 뿌리산업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함.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영역임에는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체제의 현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학생 유치 가능성을 중심으로 학과 개편이 추진됨에 따라 직업교육 기반이 약화되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따라서 사회적 수요는 크지만, 학생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전략산업 및 뿌리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이러한 분야의 경우 원천기술 및 뿌리산업 인력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교육기관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책무성을 지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음.

원천기술이라든지 그런 어떤 뿌리산업의 인력이 이제 소멸될 위기에 놓이는 부분, 이 부분을 저는 전문대학이 계속 가져가야 되고 또 이걸 가져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원천기술이나 중소기업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고등C)

- 그리고 이러한 지원은 단순히 해당 분야 인재를 육성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됨. 이러한 분야의 경우 직업세계의 안착과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요구에 대응해 주는 교육 외적 지원이 함께 필요한 상황임.

대학은 길러내기만 하지 사실은 그들이 과연 얼마나 머물고 있느냐 그 내에서 얼마나 행복한 직업 생활을 하느냐 이거는 저희가 핸들링이 안 되고 있어요. (중략) 그게 만약 국가사회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그러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인력을 양성하는 구조로 가야 된다. (고등A)

이 친구들이 지역에 있는 뿌리산업 업체로 취업하는 걸 한 업체까지 다 연계한 그 루트를 만들어서 그걸 전부 국가하고 산업체가 뭔가 좀 지원을 하는, 지자체까지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중장기적인 지원보다는 응급처치입니다. (고등C)

#### 7)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학위구조 및 교육체계 개편

-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학위구조 및 교육체계 개편은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구분과 학위구조를 개선하여 양자 간 학력·학위·자격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고등교육 내에서 직업교육의 위상을 통합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을 의미함.
  - 이는 고등직업교육에 주로 해당하는 것으로, 전문대학이 고등교육 시스템 내에서 지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수직적 교육기대 수준에 따라 같은 내용이라면 전문대학보다는 일반대학을 선택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두 대학의 교육 영역 및 교육 성과의 중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인식의 문제인데 여전히 프레임을 만들어놓고 그 프레임 속으로 계속 넣다 보니까 전문대는 뭘 해도 전문대다 이런 인식이 강한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은 고등직업, 고등교육 체제가 재구조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등B)

-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대표적으로 통합된 형태의 대학 구조를 고민해 볼 수 있다고 고등직업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언급하였음. 즉 지금의 전문

대학에 대한 낙인효과를 없애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이라는 구분 자체를 없애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임.

우리나라 대학이 나아갈 방향은 학습자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전문대학을 만들어서 오히려 낙인을 하면서 그들이 불행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습자들의 행복한 교육을 하려면 전문대학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고등A)

- 더불어 전문대학이 취득하는 학위와 학력을 통합적으로 재정립하는 방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음. 즉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취득하는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등의 명칭을 통일하는 것임. 예를 들어 일반대학의 경우 학사학위, 전문대학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름 구분부터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임.

#### 8) 전문대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재정 지원 확대

□ 전문대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재정 지원 확대는 전문대학이 직업교육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확대하여 직업교육의 내실화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함.

- 직업교육에 대한 정부투자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직업교육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임. 다만 중등직업교육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바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등직업교육 분야에서 더욱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었음.
- 특히 전문대학 학생에 대한 무상교육화, 전문대학에 대한 일반 재정지원 교부금 강화 등과 같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음.

재정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예를 들면은 정부 교체라든지 정치적 변화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지속성이 갖추어지면 대학에서는 안정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고등C)

- 이러한 재정지원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재정지원이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만큼, 그에 따른 성과요구가 직업교육체제의 장기적인 성장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러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즉 보다 오랜 시간에 걸쳐 발생하는 혁신을 기반으

로 전문대학이 산업 및 지역의 특성에 따라 특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을 혁신의 대상이 아닌, 혁신의 주체로 보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임.

혁신의 대상이 아니라 혁신의 주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뀌어야 돼, 너희들 옛날 생각이야, 이렇 게 아니라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지원책들이 대학가에서 좀 마련이 됐으면 하는 게 좀 바람이고요. (고등D)

#### 나. 다양성: 학습자의 다양성 존중과 직업교육 접근성 확대를 위한 직업교육체제 개편<sup>6)</sup>

-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다양성은 다양한 유형의 학습자(일반고 학생, 성인학 습자, 외국인 등)를 확보하고, 학습자의 개별적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직업교육 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특징적으로 다양성에 대한 방향성은 중등직업교육에서 혁신적인 관점에서 언급된 것으 로,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평생직업교육의 중요성 증가, 일반교육 진입 학생 들의 직업교육 수요 대응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유형의 학습자를 확보하고 대응할 필 요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었음.
  - 특히 이러한 대응 방향성은 장기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등직업교육에 진입할 수 있는 학생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보 았음. 이에 따라 일반고 학생, 성인학습자, 외국인 등을 중등직업교육의 새로운 학생 유형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위한 직업교육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음.
  - 더불어 장기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계고에 다양한 유형의 학습자를 수용하기 위한 운영 방안으로 소규모 다학과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 물리적 경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이 함께 언급되었음.
  -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다양성 초안은 다음 <표 4-9>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6)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다양성: 학습자의 다양성 존중과 직업교육 접근성 확대를 위한 직업교육체제 개편'은 전문가 델파이 조사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삭제되었음. 이는 중등직업교육의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혁신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오늘날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관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영역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표 4-9〉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다양성(초안)

구분	명칭	설명	범위	
			중등	고등
방향성	[다양성] 학습자의 다양성 존중과 직업교육 접근성 확대를 위한 직업교육체제 개편	다양한 유형의 학습자(일반고 학생, 성인학습자, 외국인 등)를 확보하고, 학습자의 개별적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직업교육 제공	●	-
하위 요소	직업교육 학습자의 다양성 확대와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직업계고가 중등 단계 학생뿐 아니라 성인학습자, 고교 미졸업자 등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평생직업교육을 제공하여 직업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	●	-
	일반고 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자의 직업교육 참여 확대	일반고 학생의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내실화하고, 직업계고에서 이를 적극 수용하여 더 많은 학생이 실질적 직업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방안	●	-
	외국인 등 특수 학습자 대상 직업교육 기회 확대	외국인 학생이나 다문화가정 학생 등 특수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다양한 학습자의 직업역량 확보를 지원하는 방안	●	-
	소규모 다학과 체제 구축을 통한 다양한 학습 수요 대응	학습자의 다양한 적성과 융합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소규모 학교 내 다양한 학과 운영을 유지하고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	-
	직업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물리적 경계 극복 전략	동학버스 등 물리적 인프라 확충 및 온라인 교육 확대를 통해 직업계고 접근성을 높이고, 온라인 교육을 적극 활용하여 직업교육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방안	●	-

1) 직업교육 학습자의 다양성 확대와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 먼저 직업교육 학습자의 다양성 확대와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는 직업계고가 중등 단계 학생뿐 아니라 성인학습자, 고교 미졸업자 등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평생직업교육을 제공하여 직업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중등직업교육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으로, 즉 나이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의 영역이 인식되지만, 기본적으로 중등직업교육이 학습자를 특정 지을 필요는 없으며, 지역에 따라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등 단계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 사례가 있음. 따라서 직업계고에서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음. 이는 중등직업교육기관이 평생교육시설로서의 성격도 함께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도시권에 있는 교통편이 좋은 이런 데 특성화고는 장기적으로 평생교육기관으로 바뀌어서 이제 그것은 이제 정책 연구를 해야 되겠죠. (중등B)

늘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변화해야 되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직업교육 면에서 볼 때는 이제 직업교육도 이런 평생교육 쪽도 담당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중등C)

- 특히 일반 재직자 외에도 중졸자 성인을 대상으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음.

직업계 고등학교도 얼마든지 평생교육원을 운영할 수 있고 또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나오는 아이들도 제법 있거든요. (중등F)

□ 다만 이러한 성인학습자를 중등직업교육에서 수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신중하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 역시 있었음.

- 현실적으로 현재의 체제 내에서 직업계고가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평생교육시설, 전문대학 등 다른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기관과의 역할 중복 문제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임.

평생교육기관들하고 특성화고등학교 그다음에 전문대, 대학이 약간의 중복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중략) 그래서 현재 학생들을 지도하는 시간도 딱딱한데 이제 외부인을 가르치려면 여유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시간 확보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등C)

- 특히 현재 직업계고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 많은 상황에서 성인학습자를 학생으로 수용하게 되면, 직업계고에 과도하게 많은 업무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어 최종적으로 중등 직업교육의 질적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었음.

지금도 가뜰이나 많은 걸 하고 있고. (중략) 취업처도 알아봐야 하지, (취업)유지도 시켜야 하지, 학업 중단도 해야지, 학교 폭력도 해야지, 생활지도도 해야 하지 이런 상태에서 성인학습자를 받았다? 이것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거다. (중등E)

## 2) 일반고 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자의 직업교육 참여 확대

- 일반고 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자의 직업교육 참여 확대는 일반고 학생의 직업교육 위탁과정<sup>7)</sup>을 내실화하고, 직업계고에서 이를 적극 수용하여 더 많은 학생이 실질적 직업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의미함.
  - 일반고 학생의 직업교육 위탁과정은 중학교에서 적절한 진로설계 경험 없이 일반고에 진학한 후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여 참여하고 있는 사례라 볼 수 있음. 따라서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전문화된 직업교육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직업계고가 이러한 학생을 수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음.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단순히 직업계고를 없앤다는 것보다도 이제 그런 역할이나 방향을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두고 대상을 좀 더 확대한다든가 이렇게 갈 수 있는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중등D)

일반고 아이들 위탁교육과정 와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저기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기 취업 연계해 가지고. (중략) 그런 거를 직업계고가 흡수해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등J)

- 이는 직업계고로 직접적으로 진입하는 학생 수가 미래에 적어진다고 하더라도 중등직업교육을 통해 양성되는 학생 수는 많도록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부설직업교육센터, 직업계고 내 특별반과 같은 형태가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음.

직업계고는 그동안에 약 한 30~40%가 감축이 됐어요. 그러면 직업전문학교는 지금도 확장일로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중략)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부설직업교육센터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반을 만들 수도 있어요. (중등F)

## 3) 외국인 등 특수 학습자 대상 직업교육 기회 확대

- 외국인 등 특수 학습자 대상 직업교육 기회 확대는 외국인 학생이나 다문화가정 학생 등 특수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다양한 학습자의 직업역량 확보를 지원하는 방안을 의미함.

7) 일반고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고 3학년 과정을 대신하여 공공직업훈련기관이나 고용노동부 지원 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직업계고에서 외국인 학생을 선발하여 학생으로 수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음.<sup>8)</sup> 이러한 흐름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이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세계에 안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직업계고의 역할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는 견해가 있었음.

외국인을 뽑아서 안정적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에 안착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만 되면 저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다니는 동안에 우리나라 언어나 기본적인 생활, 문화도 좀 이해를 하고 한 3년 다니고 나면 어떤 일자리 갔을 때 좀 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한글문화 배운 것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중등B)

- 일부 전문가는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를 사례로 언급하고 하였음. 전남미래국제고는 이주배경 청소년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함께 기계, 전기, 건설 등의 분야에 걸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직업교육 특화 대안학교임(전남일보, 2025. 4. 16.)

전남에서 대안학교 하시는 교장 선생님 한 분이 전남 직업 국제고등학교를 만들더라고요. 전남 직업 국제 학교요. 근데 그게 대상이 외국인 유학생이예요. 근데 수요가 밖에 나갔더니 너무 많다는 거예요. (중등B)

- 즉 외국인 유학생, 이주배경 청소년 등 기존의 중등직업교육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학습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음.

#### 4) 소규모 다학과 체제 구축을 통한 다양한 학습 수요 대응

- 소규모 다학과 체제 구축을 통한 다양한 학습 수요 대응은 학습자의 다양한 적성과 융합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소규모 학교 내 다양한 학과 운영을 유지하고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의미함.
-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직업계고의 규모 축소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현재 어떠한 형태로 학교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이러한 상황에서

8) 대표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은 2024년 외국인 유학생 48명을 직업계고에 입학하도록 하였고, 2025학년도에는 70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기도 하였음. 이러한 사례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어 충청남도, 전라남도, 강원도 교육청 등에서 시도되고 있음(이상훈 외, 2024).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학교의 규모를 크게 유지하고 학교의 수를 줄이는 방안과 학교의 규모를 줄이고 학교의 수를 유지하는 방안임.

- 이러한 선택의 지점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학교의 수를 줄이는 것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음. 그보다는 다양한 전공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학교를 운영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음.

앞으로 사회에 필요한 직무능력들이 한 분야보다도 여러 분야의 다양한 융합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것처럼 소규모 학교 안에 다양한 학과를 두어서 학생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 학과에 대한 직무라든가 지식들을 같이 공부해 보는 것도 앞으로 미래사회 준비하는 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등D)

- 다만 학교의 규모가 적어지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학과를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음.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계열로 구성된 소규모 학교 운영 방안이 더욱 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음.

저희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영상미디어 이런 상관관계가 없는 여러 과들이 존재를 했었는데. (중략) 사실 너무 여러 문어발식의 어떤 과들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중략) 비슷한 같은 계열의 학과로 구성이 되어야만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도 발휘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등G)

- 더불어 협약형 특성화고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직업계고의 유형을 다양화하여 저출생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었음. 즉 저출생에 의한 학령인구의 감소에 대응하고 동시에 학생들의 진로희망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직업계고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음.

계열 경계가 무너지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융합 특성화고등학교, 만약에 생각한다면 저는 가끔 이제 이런 상상을 해 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처럼 그냥 자연, 모든 농공상, 가사 계열 이런 과목들이 다 편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중등C)

##### 5) 직업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물리적 경계 극복 전략

- 직업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물리적 경계 극복 전략은 통학버스 등 물리적 인프라 확충 및 온라인 교육 확대를 통해 직업계고 접근성을 높이고, 온라인 교육을 적극 활용하여 직업교육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방안을 의미함.

- 해당 방안은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계고가 학생을 수용하는 물리적 경계를 확대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방법과 같이 물리적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먼 거리에 있는 학생들도 직업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특정 전문가들은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통학버스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어 그것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음. 그러나 이를 학교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통학버스가 지원이 되면 학생들이 조금 거리가 있어도 자기가 좀 배우고 싶다 하는 학교를 갈 수 있는데 이 통학버스가 없다 보니까. (중략) 이제 그것을 좀 모아서 통학버스 운영하면 그런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데. (중략) 지금은 운영을 못하죠. (중등B)

엄청나게 히트 쳤어요. (중략)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교 단위별로 해결될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심의 어느 지역에 두세 군데 정차 지역을 마련해 두면은 되거든요. (중등)

- 온라인 방식의 교육 방법을 적용하는 것 역시 물리적 한계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는 견해도 있었음. 물론 직업교육에서 핵심적인 교육내용이 실습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적용은 어려울 수 있으나, 일부 과목이나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보았음.

일부분 직업교육도 온라인으로 도입을 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 없이 학생들이 수강을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내실 있고 또 많은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한 대규모 실습 시설이라든가 기자재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확보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런 원격수업을 통해서 비용이 절감도 되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중등C)

#### 다. 전문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전문성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을 위해 직업교육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직업교육기관의 운영 역량과 전문성을 높여 지역사회 및 산업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교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교육 성과를 제고하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전문성은 저출생 상황에 대한 직업교육기관의 개별적인 대응으로서, 학과 재구조화와 같은 직업교육 개편이 지역 및 취업 수요에 잘 대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판단의 전문성이 필요함. 그 외에도 직업교육기관의 내실화를 위한 교원들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탄력적인 교육 운영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전문성은 저출생 상황에서 발생하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직업교육의 대응이 보다 합리적 판단과 전문적 시각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판단과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관 내부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정리할 수 있음.
-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전문성 초안은 다음 <표 4-10>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4-10>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전문성(초안)**

구분	명칭	설명	범위	
			중등	고등
방향성	[전문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직업교육기관의 운영 역량과 전문성을 높여 지역사회 및 산업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교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교육 성과 제고	●	●
하위 요소	지역·취업 수요 기반의 직업교육 개편을 위한 의사결정 전문성 강화	직업교육의 학과 개편이 지역산업과 취업 수요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실질적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전략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	●
	직업교육기관의 내실화를 통한 교육적 전문성 강화	직업교육 선도모델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직업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학교의 교육적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	●	●
	직업교육 전문성을 위한 교원 역량 개발 확대	중등·고등 단계 교사와 교수자의 직업교육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방안	●	●
	직업교육의 전문성 및 혁신성 강화를 위한 탄력적 교육 운영 추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생의 다양한 수요(학급 규모 조정, 맞춤형 교육, 프로젝트형 수업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	●	●

## 1) 지역 취업 수요 기반의 직업교육 개편을 위한 의사결정 전문성 강화

- 지역·취업 수요 기반의 직업교육 개편을 위한 의사결정 전문성 강화는 직업교육의 학과 개편이 지역산업과 취업 수요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실질적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전략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리고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과 같은 정책 사업으로 직업계고의 학과 재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학과 재편이 단기적 성과인 신입생 유치 중심이 되다 보니, 경우에 따라 지역 및 산업의 환경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그렇기 때문에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의 재구조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외부 환경을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임.

대한민국에 어떤 특정 시도에 이런 학과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학과 재구조화)제한을 못 두잖아요. 개별 학교로 그냥 결정하고, (시도교육청에서)대행하는 거지 전체적인 조절판은 없는 것 같아요. (중등)  
대기업도 ○○자동차라든가 대기업도 있겠지만 ○○자동차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한 명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뭐냐 군필자를 뽑기 때문에. (중등D)

- 이러한 전문성의 필요성은 최근의 신산업·신기술 분야로의 재구조화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최근에 학생 유치 및 정책 사업 대응의 관점에서 신산업·신기술 분야로의 재구조화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더불어 신산업·신기술 분야로의 전환의 결과에 따른 과도한 세분화, 즉 직무 특수적 기술로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상황 역시 지양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음.
- 이러한 변화는 고등직업교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음. 다만 고등직업교육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 성인학습자와 같은 다양한 특성의 학습자 진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과 개편에 대한 전문성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음.

외국인 유학생을 양성할 때 적정 규모의 학생을 받아서 지역산업체에 취업시키는 일종의 주문식 교육을 하는 게 좀 필요하죠.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가 무제한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수용만 하지 어떤 배출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엄격하게 관리하는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등C)

2) 직업교육기관의 내실화를 통한 교육적 전문성 강화

□ 직업교육기관의 내실화를 통한 교육적 전문성 강화는 직업교육 선도모델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직업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학교의 교육적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의미함.

- 이는 먼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중등직업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기반함. 대표적으로 마이스터고의 경우 선도모델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일부 학교는 마이스터고의 설립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선도 모델에 대한 질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임.
- 선도모델에 대한 질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마이스터고와 같은 학교들이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표적인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따라서 선도모델에 대한 질 관리는 전체 중등직업교육에 대한 질 관리로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마고에서 탈락한 경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확실한 질 관리를 통해 가지고 마고 중에서는 탈락한 학교도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력 없는 학교는 빼고, 경쟁력 있는 마고가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전체 포션이 유지되어야지. (후략) (중등H)

- 직업교육기관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적 전문성 강화는 학교 내에 다양한 전문적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포함함. 직업계고의 경우 직업교육의 특성상 다양한 전문가의 지원을 필요로 함. 대표적으로 진로전담교사, 코디네이터, 심리 상담사, 취업 전문가와 같은 전문가가 중등직업교육에 필요하며, 고등직업교육기관의 경우 산업체 근무 경험을 갖춘 교수 교원의 비율을 늘려 교육적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임.

한 명의 교사가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거기에 맞는 특성화된 직무교사들이 앞으로는. (중략) 새로운 유형의 교육 자원들이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중등A)

지금 중학교까지는 사회복지사가 배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직업계고에는 상담교사가 다 해요. (중략) 가족 치료 내지는 가족 지원까지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바로 구청 내지는 지자체, 사회단체와 연계를 한 가족 지원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중등F)

교과과정 내실화를 위해서는 우선 교육과정 개발에 산업체 인사를 다수 포함시켜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중략) 산업체 인사를 제2의 교원으로 같이 활용한다든지 했을 때 국가의 어떤 세제 혜택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등E)

- 따라서 직업교육기관의 내실화를 통한 교육적 전문성 강화는 직업교육기관의 질 관리, 기관 내부의 전문인력 지원을 통해 직업교육기관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만 기관의 교육적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음을 의미함.

### 3) 직업교육 전문성을 위한 교원 역량 개발 확대

- 직업교육 전문성을 위한 교원 역량 개발 확대는 중등·고등 단계 교사와 교수자의 직업교육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방안을 의미함. 이는 앞선 기관 차원의 전문성 개발이 아닌 내부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즉 직업교육이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육을 실제로 실시하는 교원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현재의 단기 연수 중심의 역량개발을 넘어서 장기 직무연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전문교과 선생님들 중에서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한국기술교육대라든지 좀 집중적으로 연수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중략) 왜냐하면은 30시간이나 60시간의 연수를 가지고는 사실 전문적인 역량을 습득하기에는 짧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장기 직무연수 과정을 확대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등H)

- 더불어 고교학점제와 같이 다양한 선택과목, 심화과목의 운영이 필요해진 상황에서 교원들의 부전공 취득 기회를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었음. 즉 교육대학원이 아닌 관련 과목 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더라도 부전공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전문교과교사의 진로지도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음. 학생들의 진로의 범위가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보다 전문적인 관점에서 진로지도 및 경력경로 설계 역량이 필요하다는 의미임.

전문교과교사는 기본적으로 3가지가 돼야 된다. 현장 실무, 신기술 그다음에 진로지도. 지금 학교 교사들이 갖추고 있는 것은 교과의 이론적 부분만 갖추고 있지. (중략) 그다음에 학교는 좀 더 넓은 안목에서 바라보면 학생 맞춤 미래비전 설정과 성취 지원을 해야 될 것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중등F)

- 이러한 교원의 역량 강화는 고등직업교육 분야에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문대학 교원 역시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체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하는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음.

산업체 교수가 전문대학에 왔다 하더라도 한 10년 지나면은 산업체 교수가 아닌 거나 다름없거든요. (중략) 이게 재정적인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가전략산업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재정 보조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후략) (고등C)

#### 4) 직업교육의 전문성 및 혁신성 강화를 위한 탄력적 교육 운영 추진

- 직업교육의 전문성 및 혁신성 강화를 위한 탄력적 교육 운영 추진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생의 다양한 수요(학급 규모 조정, 맞춤형 교육, 프로젝트형 수업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의미함. 이는 직업교육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음.
  - 대표적으로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운영 자율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었음.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학교의 자율성이 감소하는 측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지금 현재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는 보통교과도 몇 단위 이상, 전문교과도 몇 단위 이상 그다음에 이거는 학기별로 반드시 몇 단위를 이수해라라는 이런 조건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중략) 직업교육의 특수한 부분들이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업계고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데 되게 힘이 들 겁니다. (중등H)

- 다만 직업교육의 탄력적 운영은 이러한 교육과정 적용 과정에서의 탄력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이보다 중요한 것으로 학생들의 수요와 산업계의 필요에 따라 교육 운영 차원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음. 대표적인 운영의 유연화는 학급당 학생 수 유연화라고 할 수 있음.

과정이나 과목이나 내용에 따른 학생 수를 지금처럼 천편일률적으로 20명, 25명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네다섯 명 어떤 경우 두 명 이렇게 해서 교육하는 게 최적이다. (중등B)

- 이 밖에도 교과서로 대표되는 교육내용에 대한 자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는 현재의 NCS 기반 교육과정의 활용에 대한 자율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 특히 최근의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음.
  - 더불어 중등직업교육에서는 현장실습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도 높았음.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현장실습 운영 수준의 유연화(예: 공동실습소 이용, 최소 이수단위 설정, 산업체 견학 등), 학교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시기의 유연화 등이 제안되기도 하였음.
- 이러한 직업교육의 탄력적 운영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고등직업교육에서도 언급되었음.
- 특히 학사제도의 유연화를 통해서 학기 단위를 중심으로 학점을 이수하는 경직성을 탈피할 필요가 있고, 입학시기 유연화, 학과 및 대학 간 경계 완화, RPL의 점진적 확대 운영, 수업연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견해들이 있었음. 특정 전문가는 가상학과와 같은 새로운 개념으로 학과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하였음.

가상학과는 뭐냐 하면 지금 당장은 없는 학과지만 이것을 마이크로 디그리 또는 소단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거 하고 좀 연결이 되면 굉장히 좋은 게 될 것 같아. (중략) 이러이러한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바로 가상학과를 만들어서. (중략) 인력을 배출해 내고 다시 또 해체하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등E)

- 이 외에 교수학습 방법의 선진화도 언급되었음. 즉 디지털 기반, AI 기반 교육, 팀티칭 기반 교육과 같이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 교육의 효과성 측면에서 개선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라. 유연성: 학생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적 진로설계 및 성장경로 다각화

-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유연성은 직업교육 졸업자들이 사회로 진출 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및 후학습 기회를 강화하는 것으로, 학생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적 진로설계를 지원하고 성장경로를 다각화하는 것을 의미함.
-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에 대한 매력도가 증가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매력도의 핵심 중 하나는 직업교육이 성장경로 및 진로경로가 단혀 있는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의 성장을 보장하는 교육으로서의 정체성임. 이러한 측면에서 직업교육이 학습자의 진로목표에 따라 다양한 사회진출 경로를 확보하고, 필요에 따라 일터에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등직업교육에서도 이러한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며, 특히 성인학습자, 외국인 학습자와 같은 다양한 학습자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교육의 운영과 고수준 학습을 희망하는 학습자의 수요에 대응하는 체제의 다변화 및 학위 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함.
- 이러한 측면에서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유연성 초안은 다음 <표 4-1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4-11>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유연성(초안)

구분	명칭	설명	범위	
			중등	고등
방향성	[유연성] 학생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적 진로설계 및 성장경로 다각화	직업교육 졸업자들이 사회로 진출 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및 후학습 기회 강화	●	●
하위 요소	다양한 학생 특성에 대응하는 차별화된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학생 특성(진학, 취업, 심리·사회적 취약 등)에 따라 교육 과정을 차별화하고 유연하게 운영하여 다양한 학생이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방안	●	●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및 성장경로 가시화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희망에 맞춰 장기적 성장경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학생들이 미래 직업과 경력을 명확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	-
	선취업 후학습 제도의 내실화 및 경로 다양화	선취업 후학습 제도를 강화하고, 재직자 특별전형 등 고등교육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후학습 경로를 구축하여 평생학습과 경력개발을 촉진하는 방안	●	-

구분	명칭	설명	범위	
			중등	고등
	고졸자 취업경로 확대 및 안정적 진입과 정착 지원 강화	고졸자의 양질의 취업처를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하며, 사회적 인정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고졸자 취업과 정주의 안정성과 매력도를 높이는 방안	●	-
	성인·외국인 학습자 대상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성인학습자, 외국인 학습자 등 개인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학위 및 비학위 과정에 걸쳐 운영하여 직업역량 향상과 지역사회 기여를 지원하는 방안	-	●
	전문대학 체제 다변화 및 학위 체제 고도화	전문대학이 다양한 학습자의 특성과 사회·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과 유형을 확장하고, 학위 체계를 전문학사에서 석·박사 수준까지 확대하여 전문대학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	-	●

### 1) 다양한 학생 특성에 대응하는 차별화된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 다양한 학생 특성에 대응하는 차별화된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은 학생 특성(진학, 취업, 심리·사회적 취약 등)에 따라 교육과정을 차별화하고 유연하게 운영하여 다양한 학생이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방안을 의미함.

- 중등직업교육 전문가들은 후학습에 대비하기 위해 방과 후 보통교과 편성·운영, 디지털 역량 등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심리·사회적 취약 학생들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사례를 제시하기도 하였음.
- 이러한 맞춤형 직업교육의 필요성은 저출생으로 인한 학습자의 다양성 확대에서 기인하는데, 이는 곧 오늘날 직업교육에 진입하는 학생들의 진로목표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것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취약 학생 등 유형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정말로 어려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하면 심리 치료가 필요한 학생, 교사 수준을 뛰어넘는 거죠. 정신과 치료, 어떤 치료가 병행이 되어야 될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직업계 고등학교에 몰려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등F)

- 이러한 맞춤형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는 고등직업교육에서도 존재하는데, 성인학습자, 외국인 학습자들이 전문대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수요와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직업교육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에는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한계라고 지적하기도 하였음.

맞춤형 교육을 하기 제일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직업계고의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략)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틀을 맞추라고 하니까 자율성을 맞추기가 힘들고요. (중등H)

## 2)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및 성장경로 가시화

□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및 성장경로 가시화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희망에 맞춰 장기적 성장경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학생들이 미래 직업과 경력을 명확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의미함.

- 전문가들은 중등직업교육에서 달성해야 하는 성과 중 하나가 학생들의 진로설계라는 점에 견해를 공유하고 있었음. 그리고 이러한 진로설계의 핵심으로 장기적인 성장의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진로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좋은 일자리가 뭐가 좋은 건지를 몰라요. 사회에 나가서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하면 그때야 알죠. 좋은 직업이면 대기업 가고 이런 거 하면 좋은 건지 알지만 사실 내 역량에 맞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중등J)

- 중등직업교육 단계에서 학생들은 아직 직업에 대한 충분한 가치관을 형성하기 어려운 시기라는 점에서 체계적으로 진로설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진로성장 DB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음. 즉 초기 경력부터 중장기 경력에 이르기까지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상황에 적합한 진로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음.

DB 플랫폼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바로 뭐냐, 즉 여기에 아이들이 진로활동 하는 모든 내용들 (중략) 커리어패스라든지 진로성장 모형이라든지 등등요. (중략) 요즘에 AI 기능이 매우 높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진로적성의 기초검사, 아이들이 활동한 내용, 그다음에 선생님이 지도한 내용 이거를 토대로 해서 AI가 가안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중등F)

- 즉 학생 성장경로의 가시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의 진로설계를 지원하고, 이를 구체적인 성장경로로 지원해 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음. 일부 학교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우수한 성공 사례를 찾아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학생들의 역량을 키웠을 때 실질적으로 졸업하고 끝 이런 게 아니라 졸업하고도 학생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이 되는 게 그런 건데 이런 것까지 학교에서 다 하니까 굉장히 힘들기는 하지만 저희도 이제 졸업생 계속지원센터가 있어요. (중등G)

### 3) 선취업 후학습 제도의 내실화 및 경로 다양화

- 선취업 후학습 제도의 내실화 및 경로 다양화는 선취업 후학습 제도를 강화하고, 재직자 특별전형 등 고등교육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후학습 경로를 구축하여 평생학습과 경력개발을 촉진하는 방안을 의미함.
  - 오늘날 직업계고 졸업자의 성장경로에서 후학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오늘날 중등직업교육의 경우 선취업-후학습 정책에서 선취업이 강조되다 보니, 정책의 중심이 취업에 있지만, 장기적인 평생학습 차원, 경력개발의 관점에서 후학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저는 이제 지금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는 있지만은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는 늘 있다고 봅니다. (중등C)

마이스터고등학교 애들은 우수한 아이면 아이수록 일부는 회사를 아이들이 지금 석사 박사까지 이제 가려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중등E)

이 정책이 나왔을 때 선취업이라는 것의 관점과 후진학이라는 관점에서 어느 것이 비중이 높았을까요? 선취업이 훨씬 비중이 높았습니다. 80대 20 정도 심지어는 90대 10 정도로 선취업이 높았어요. (중등F)

- 따라서 선취업-후학습 정책의 측면에서 후학습에 더 초점화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후학습 경로를 내실화하고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먼저 후학습으로 고졸 취업자가 진학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 확대가 필요한데,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고졸 취업자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후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제도적 측면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우리나라의 90프로 이상이 다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후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중등A)

- 더불어 후학습 경로의 다양화를 통한 보완 역시 필요한 상황임. 선취업-후학습 정책이

추진된 이후 초기에는 진학경로가 다양하게 마련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최근에는 의미 있는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없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 제도는 계속 더 강화되면 좋기는 하겠어요. 예전보다 들어갈 수 있는 후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났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더 어려워진 거 아닌가. (중등J)

#### 4) 고졸자 취업경로 확대 및 안정적 진입과 정착 지원 강화

□ 고졸자 취업경로 확대 및 안정적 진입과 정착 지원 강화는 고졸자의 양질의 취업처를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하며, 사회적 인정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고졸자 취업과 정주의 안정성과 매력도를 높이는 방안을 의미함.

- 중등직업교육 전문가들은 고졸 취업 관련 정책이 이명박 정부 시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기반으로 마련되고 추진되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잃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였음.

예전에 MB 정부 때 특성화고 졸업자들을 관공서 이런 곳에 배정하다시피 했는데 갈수록 축소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특성화고 아무래도 취업도 잘되고 좋은 점도 많이 있다는 점에서 성과를 내고 있었는데, 이제 박 정부 들어서고 그 뒤로 정부에서 별로 관심이 없다. (중등B)

- 물론 중앙취업지원센터를 만드는 등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었음. 따라서 직업계고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취업처를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기반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중앙취업지원센터를 만든 목적은 시도 단위 취업지원센터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직장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들 그러니까 더 좋은 기업체와의 협업이라든지 (중략) 성과가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등B)

- 더불어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학생들이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전문가들은 고졸 취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임금, 복지, 승진 등의 차원에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직업세계의 안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기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견해를 갖고 있었음.

고등학교 수준에서 취업을 한다는 거를. (중략) 현실적으로 진짜 대견해요. 너무 훌륭하고 해요. 그런데도 안쓰러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 안쓰러운 마음이 안 들게 하려면 그 아이들에 대해, 빨리 입직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왕창 줘야 되는 거라는 거죠. (중략) 우리가 또 그러면은 뭐 공부 열심히 해갖고 했는 사람한테 또 역차별이다 막 이러지만요. 그래도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중등J)

##### 5) 성인·외국인 학습자 대상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 성인·외국인 학습자 대상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은 성인학습자, 외국인 학습자 등 개인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학위 및 비학위 과정에 걸쳐 운영하여 직업역량 향상과 지역사회 기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의미함.
  - 고등직업교육에 성인학습자와 외국인 학습자의 유입은 저출생시대의 도래에 따른 평생 직업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사회적 맥락이 반영되고, 전문대학이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의미를 지님. 다만 이러한 변화에 전문대학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직업교육 성과를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연령, 국적, 학력, 경력 이런 부분인데 사실 지금은 현재 구조는 전문대학에서는 이런 걸 고려해서 차별화된 형태의 맞춤형 직업교육을 하고 있지는 못해요. (고등A)

- 특히 외국인 학습자의 전문대학 진입은 국내 체류와 근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이 많아 일부 불필요한 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음.

근로를 연장하기 위해서 학위를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석사를 졸업하고 다시 전문대로 유턴하는 아이들도 꽤 많습시다. 계속 연장을 하는 거거든요. D-2 비자로 있으려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좀 악순환인 거죠. (고등B)

-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성인학습자와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직업교육을 위해서는 비학위 전문교육과정 등 유연한 과정의 확대를 필요로 한다고 언급하였음. 이는 단기, 중단기, 중기 형태의 비학위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 이들에게 맞는 적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필요에 따라 비학위 과정을 학위와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음.

우리나라가 직업교육 파트도 그렇고 일반교육 파트도 수업연한이 자꾸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현장인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3개월 만에도 나갈 수 있어야 되고. (중략)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단기 직무과정을 더 다양화하면은 좋지 않을까 (고등C)

#### 6) 전문대학 체제 다변화 및 학위 체계 고도화

- 전문대학 체제 다변화 및 학위 체계 고도화는 전문대학이 다양한 학습자의 특성과 사회·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과 유형을 확장하고, 학위 체계를 전문학사에서 석·박사 수준까지 확대하여 전문대학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의미함.
  - 현재 우리나라의 직업교육체제는 직업교육 이수자가 학위 차원에서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일정 부분에서 막혀 있다는 한계가 있음. 전문대학은 전통적으로 전문기술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을 때 직업교육체제가 완결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전문가들은 마이스터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고수준 기술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이를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마이스터대학을 운영하는 전문대학의 입장에서는 확실히 전문학사보다 고숙련 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체제를 갖추고 있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이 엄격한 관리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고등C)

- 더불어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 운영 중인 마이스터대학을 확대하여 박사과정까지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음. 특히 이러한 학위 수준의 확대는 전문대학에 대한 인식 강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음. 즉 전문대학을 통해 박사과정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지적임.

지금 산업체하고 굉장히 연관돼 있는 대표적인 전문대학이 이제 구미에 있는 구미대학, 울산에 있는 울산과학대학, 그다음에 영진전문대학 이런 데 특히 공학 계열 같은 경우는 충분히 구조가 박사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좀 할 수 있는 기업하고 연계됐을 때 그런 구조를 충분히 가지고 있거든요. (고등B)

마. 연계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 생태계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다층적 연계 및 협력 강화

-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연계성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 생태계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다층적 연계 및 협력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고등 직업교육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사회·산업·학교 간 협력을 확대하여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직업교육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저출생으로 인한 학습자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핵심 주체로서 직업교육기관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직업교육이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상황에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 더욱이 직업교육기관이 독립적 기관으로서 직업세계에 바로 안착할 수 있는 완성형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들의 장기적인 성장경로를 고려한다면 중등과 고등 직업교육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중등직업교육을 통해 지역에 정착한 청년이 경력을 개발하고 고수준 기술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고등직업교육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계는 후학습 측면뿐 아니라 진학의 측면에서도 연계되어야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직업교육기관을 중심에 두고, 다른 유형의 직업교육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와 직업교육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가 필요함. 더불어 중등과 고등 직업교육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다양한 연계를 위해서는 중앙부처 단위의 협력 역시 중요한 요소임.
  - 이러한 측면에서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연계성 초안은 다음 <표 4-12>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4-12〉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연계성(초안)

구분	명칭	설명	범위	
			중등	고등
방향성	[연계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 생태계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다층적 연계 및 협력 강화	중·고등 직업교육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사회·산업·학교 간 협력을 확대하여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직업교육 생태계 활성화	●	●
하위 요소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지자체, 기업)의 역할 강화	지역사회가 학교와 기업 간의 연계를 촉진하고, 기업 참여 및 학생 정주 지원 등을 통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과 책무성을 확대하는 방안	●	●
	직업교육기관의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 및 지역사회 기여 확대	지역의 근간 산업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직업교육 기관과 지역산업 간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직업교육체제 구축	●	●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의 연계 강화 및 역할 명확화	중등직업교육(직업계고)과 고등직업교육(전문대학)이 각자의 역할과 전문성을 명확히 하고 협력적 교육과정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	●	●
	직업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직업교육 운영에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직업교육 프로그램(도제학교, 과정평가형 자격 등)의 내실과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	●	-
	대학 간(일반대학, 전문대학 등) 수직·수평적 연계를 통한 성장경로 확보	전문대학 간 또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 학점교류, 연합대학 체제, 컨소시엄 운영 등 대학 간 수평적·수직적 연계를 활성화하고, 성장경로 연계를 확대하여 학생의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	●

1)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지자체, 기업)의 역할 강화

-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지자체, 기업)의 역할 강화는 지역사회가 학교와 기업 간의 연계를 촉진하고, 기업 참여 및 학생 정주 지원 등을 통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과 책무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의미함.
  - 현재 직업교육기관은 직업교육의 운영, 성과 창출의 전체 과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즉 직업교육기관은 학생을 산업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부터 이들을 기업과 연계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양성과 배출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고 있음. 다만 직업교육기관, 특히 중등 단계인 직업계고의 경우 배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따라서 전문가들은 학교와 기업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직업교육에 대해 기업의 참여가 소극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음. 특히 RISE 체계의 도입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자체가 기업과 직업교육기관 연계를 지원하는 데 용이할 수 있다는 점임.

지역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얘기는 지역에 정주하는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정주 전략부터 일자리 계약까지 다 포괄해서. (중략) 과연 지자체 역할이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자체 평가를 한번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중등A)

라이즈 체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권한이라든지 대학을 관리하는 권한이 커졌기 때문에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등H)

- 더불어 전문가들은 직업교육에 대한 지역기업의 역할 강화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이들은 지역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춘 직업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기업의 참여와 인재 채용에 관한 기업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서) 2020년 통계이긴 한데 산업체 주도형의 비율이 한 6% 정도 되더라고요. 산업체에서 주도해 가지고 자기들이 학교에 와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해서 데리고 와서 관리하는 이 산업체 주도형의 포션을 높여 가야 됩니다. (중등H)

우리가 지역인재 육성이라고 했을 때는 육성은 할 수 있습니다. (중략) 문제는 육성을 해서 그다음에 졸업 시켜서 애들이 어디를 가냐가 문제인 거지. (중략) 만약 OO자동차가 OO에서 한 명만 뽑아주잖아요? 직업계고 학생들 한 명만 뽑아준다면, 그때는 직업계고에 아마 몰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어디서 정주할 데가 없어요. (중등D)

-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전문가들은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직업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지역사회에 전면 부여하게 되면 직업교육에 대한 지역의 지원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

국가가 책임질 일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지방의 직업교육. 적어도 중등직업교육은 이제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부실을 겪을 겁니다. 교육감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과연 중등직업교육에 관심을 가져줄까요? 안 가집니다. (중등F)

## 2) 직업교육기관의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 및 지역사회 기여 확대

□ 직업교육기관의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 및 지역사회 기여 확대는 지역의 근간 산업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직업교육기관과 지역산업 간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함.

- 앞선 하위 요소가 직업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본 하위 요소는 그에 상응하는 직업교육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직업교육기관이 지역에 적합한 분야에 맞춘 직업교육 로드맵을 설정하고 실행함으로써 지역소멸에 협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협약형 특성화고분만 아니라 점점 고조되고 있는 가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학교는 지역사회의 학교가 돼야 하지 않을까. (중략) 지역의 기업, 대학과 이런 연계 협력할 수 있도록, 학교 테두리 안에 있지 않고 그분들과 연계 협력해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후략) (중등E)

- 물론 최근에는 지역 중소기업에 외국인 인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전문인력의 양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지역인재 육성이 필요함.

부산에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중략) 그래서 이 CEO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외국인은 결국에는 모두 떠나버리기 때문에)처음에 우리 한국 애들을 받아 가지고 돈이 좀 들고 힘들어도 우리나라 애들을 양성하는 체계를 만들어야지 온전히 해외 인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 크게 느꼈습니다. (중등H)

- 특히 이러한 직업교육기관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해 고등직업교육 전문가들은 그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였는데, 현재의 직업교육 정책으로서 지역인재 육성이 지역대학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되며, 지역에 꼭 필요한 대학, 의미 있는 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지역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어 빈집에 관한 거라든지 고령화라든지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의 대학이 아니라 일반대학, 전문대학이 네다섯 개 모여 가지고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죠. (고등C)

## 3)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의 연계 강화 및 역할 명확화

-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의 연계 강화 및 역할 명확화는 중등직업교육(직업계고)과 고등직업교육(전문대학)이 각자의 역할과 전문성을 명확히 하고 협력적 교육과정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의미함.
- 직업교육의 연계성 강화의 측면에서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의 연계 강화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강화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직업교육의 전체 체제 내에서 두 급의 교육기관은 수준에 따른 역할 구분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의한 효과로 인해 단절이 심화되고 있음.

취업 정책이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전문대학을 패싱하고 바로 취업하고, 선취업 후학습으로 가다 보니까 전문대학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4년제 대학 쪽으로 포커싱이 맞춰져 있잖아요. (중등E) 선취업 후학습이 되면서 핵심축이 갑자기 중등교육으로 가게 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전문대학이 오히려 중간에서 죽게 되고, 일반대학이 확대되는 형태, 통계에서도 나오잖아요. (고등A)

- 이러한 상황에서 중등직업교육 전문가들은 고등직업교육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견해를 보였음. 즉 중등직업교육의 측면에서 전문대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중등직업교육 졸업자가 더 높은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를 고등직업교육에서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엔지니어 영역(일반대를 의미함)과 전문 고숙련 영역 안에 세분화된 기술 중심의 영역(전문대를 의미함)이 좀 다른데,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단계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대학이 이제 전문대학인데, 전문대학이 포지션을 확실하게 잡고 있지 못하다는 게 좀 안타깝고. (후략) (중등A)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전문대학에 갔을 때, 직업계고에서 배우지 못한 상위 전문지식과 기능을 더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커리큘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략) 또 하나 문제는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전문대 갈 수 있는 실력이나 기회가 4년제 대학에 갈 수 있는 실력이나 기회와 별 차이 없다는 거죠. 일부 수준 높은 대학을 제외하고는, 차라리 4년제 가셔도 이런 걸 배우는데 4년제 가지 왜 굳이 전문대 가느냐 이런 학생도 있습니다. (중등C)

- 다만 고등직업교육 분야 전문가들은 일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업계고 연계과정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는 오히려 역량 수준이 낮은 경우가 있음을 언급하기도 하였음.

옛날에 연계 교육 지원 사업을 해서. (중략) 전문대학으로 하여금 직업계고와의 연계를 위해서 특별 전형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상적으로는 좋지만, 그게 선취업 후진학 정책 때문에 더 실패가 된 건데. (중략) 연계 과정을 통해서 오면 그 친구들이 너무나 역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고등A)

- 이러한 전문가들의 견해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의 연계에 대한 입장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저출생 상황에서는 연계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된 견해를 보였음.

지금 ○○이공대학에서는 매년 취업 시즌이 되는 8~9월쯤 되면 취업 리스트를 우리 학교에 보내줍니다. 우리 학교는 그 기업들을 학생들한테 안내를 하고 거기서에는 단순히 기업명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연봉, 직무, 그다음에 학위연계, 후학습에 대한 정보가 함께 오죠. (중등F)

그러니까 (직업계고) 3년 하고 오면 1년 반 만에 졸업을 한다든지 또는 2년만 하고 전문대학으로 와서 2년을 마저 마친다든지 뭐 이런 것을 서로 커리큘럼을 연계해서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학생들은 수업 연한이 줄어들면서 자기의 전공을 전문대학 학위까지 딸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고등E)

- 정리하면,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의 연계의 차원에서 정책과 교육 기대 수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절이 축적되어 온 것으로 이해됨. 다만 최근의 저출생 상황에서는 지역인재 육성과 고수준 기술인재로의 성장의 측면에서 두 기관 연계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연계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 전문가들은 커리큘럼 연계 이외에도 시설 및 인프라 공유, 취업처 등의 정보 공유, 중등 교원의 연수 지원 등 다양한 연계 방안에 대해 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음.

#### 4) 직업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 직업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은 직업교육 운영에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직업교육 프로그램(도제학교, 과정평가형 자격 등)의 내실과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을 의미함.

- 직업교육의 내실화 차원에서 부처 간 협력의 필요성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부분으로, 특히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협력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음. 직업교육 관련 부처의 정책이 직업교육기관 내에서 수렴되는 만큼 교육 운영과 취업의 측면에서 긴밀한 교류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견해를 보였음.

정부부처 간에도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중략) 어느 한 부서에서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기술 역량을 키운다든지, 취업하고 관련된 정부부처들이 함께 손을 잡고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구체적인 어떤 정책으로 나왔을 때 효과들이 배도 되고 세 배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 봅니다. (중등G)

##### 5) 대학 간(일반대학, 전문대학 등) 수직·수평적 연계를 통한 성장경로 확보

- 대학 간(일반대학, 전문대학 등) 수직·수평적 연계를 통한 성장경로 확보는 전문대학 간 또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 학점교류, 연합대학 체계, 컨소시엄 운영 등 대학 간 수평적·수직적 연계를 활성화하고, 성장경로 연계를 확대하여 학생의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의미함.
  - 해당 요소는 고등직업교육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저출생시대에 고등직업교육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전문대학들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즉 저출생으로 인해 전문대학의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특성의 학습자를 수용하여 맞춤형 직업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임.

한 대학에서 단기 직무 과정, 전문학사, 학사, 석사 이거를 다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저출생이기도 하고 지역 내의 대학 간의 연계, 공유 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후략) (고등A)

고등교육기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컨소시엄이라든지 아니면 연합대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연대를 통해서 효율성을 좀 높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보여줍니다. (고등C)

- 일부 전문가는 이러한 전문대학 간 연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각 대학의 전문성에 기반한 연계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음.

3개 대학의 교수님들이 다 합친다면 성인 간호학 15주 수업을 당뇨에 관해 ○○대 교수님이, 또 혈압에 관한 건 ○○대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냥 당뇨를 전공한 사람이 다른 걸 다 가르치는 것보다 더 세부적으로 우수한 강의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서, 표준화하고 고도화할 수 있지 않을까. (후략) (고등E)

- 고등직업교육 전문가들은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연계 필요성도 지적하였음. 이는 전문대학 학습자들의 경력 및 진로목표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전문가들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문대학 학생의 일반대학 편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이는 미국의 커뮤니티칼리지와 같은 속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지금 학령인구가 감소가 됐을 때,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촉매가 될 수 있는 것이 편입이라고 보거든요. (중략) 3학년부터 편입을 받는 거라 한다면, (일반대학)3, 4학년에 그 학생수에 대한 충원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전문대학도 이런 편입 제도가 정착되고 나면 사회적인 인지도가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등D)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립거점대학 진학을 하거나 이럴 때 지역 전문대학의 입학 쿼터를 보장하는 것들이 미국처럼 있다고 그러면. (후략) (고등B)

## 제4절 소결

### 1.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체제의 현안

-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의 전문가 심층 면담을 통해 도출한 주요 현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직업교육체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에 대응하려는 직업교육기관의 자체적인 노력 속에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직업교육기관의 대응 전략은 입학 예정자들에게 매력적인 학과로 개편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이러한 학과 개편이 단기적인 입학자원 확보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역효과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확인되었음. 서비스 분야 등 학생들의 선호에 초점을 맞추거나, 지역산업 수요나 인프라와의 부합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산업, 신기술 분야로 전환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전환은 단기적인 입학자원 확보 차원에서 성과가 있을 수 있으나, 지역 및 산업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적절한 취업처를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더욱이 직업교육 학과 계열의 편중도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저출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일 경우 현안을 가중하게 되며, 저출생에 대한 대응을 단위학교에 의존할 경우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그렇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직업교육체제의 정체성과 변화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체제의 현안은 교육적 효과성의 문제보다는 그 근간에 있는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영향이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체제가 일반교육에 비해 더욱 가파른 축소 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직업교육체제가 가지고 있는 효과성과 관련이 있겠지만, 이러한 효과성의 편차를 만들어 내는 것은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련이 있음. 특히 직업교육 이수자에 대한 임금, 복지, 승진 등 노동시장 내 처우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직업교육의 매력도와 선택 가능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현안의 특징은 직업교육체제에 대한 지원이 직업교육기관의 내부적 변화를 통해서만은 효과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함. 직업교육체제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육성하고, 이들의 직업세계 진입 및 지역 정주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 외부의 환경으로부터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 중 하나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입하는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상황 또는 진학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직업교육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따라서 직업교육체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 진로교육의 질적 제고가 핵심 선결 조건임을 보여줌.
  - 요약하면,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체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직업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교육적 환경에 대한 총체적 개선책으로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체제를 둘러싼 외부 환경의 변화가 직업교육기관의 내부 구성원의 변화를 동반한다는 점임.
-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직업교육체제의 규모 축소 현상을 가져왔으나,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규모를 구성하는 학습자의 특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임. 중등직업교육의 경우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사회·심리적 취약 학생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고등직업교육의 경우 성인학습자와 외국인 학습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직업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활동 등 전반의 교육활동의 변화 수요를 증진시키고 있음.
  - 따라서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체제의 현안을 이해함에 있어 외부 환경의 변화와 함께 내부적 변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대표적으로 중등직업교육

진입 학생들의 교육 기대 수준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은 직업계고를 전문 기술 인력으로 성장하는 장기적인 경로의 한 단계로 이해하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음.

- 저출생으로 인해 직업교육체제의 규모 축소 현상이 발생하는 현실과는 달리, 사회 전반의 변화는 오히려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체제에 관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저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변화가 오히려 직업교육체제의 강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임. 저출생으로 인한 학생 한 명 한 명의 진로설계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교육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진로목표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체제의 강화가 필요함이 확인되었음.
  - 더불어 평생직업교육의 중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어서, 고등직업교육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이러한 요구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정리하면, 저출생으로 인한 직업교육체제의 현안은 저출생에 의해 발생하는 일차적인 현안과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이차적인 현안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며, 이러한 현안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기관 내부적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더욱이 저출생시대의 직업교육체제에서 다양한 현안에 주목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오히려 저출생시대에 직업교육의 사회적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임. 이는 곧 직업교육을 둘러싼 다양하고 중층적인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2.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의 미래 방향

- 본 연구에서는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의 미래 방향으로 이상적 미래상과 개선 방향성을 도출하였음.

- 중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초안)은 ‘학생 중심의 진로설계와 다양한 성장경로를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중등직업교육’으로, 고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 초안은 ‘다양한 학습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 기반 맞춤형 고등직업교육’으로 정리될 수 있었음. 이상적 미래상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개선 방향성은 동등성, 다양성, 전문성, 유연성, 연계성 등 5가지로 정리되었음.
  -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의 미래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직업교육의 성과지표에 집중하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직업교육이 지닌 사회적·교육적 가치 자체를 강조하고, 이를 기반으로 직업교육체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직업교육의 성과는 취업률을 중심으로 하는 소수의 지표를 중심으로 수직적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 왔음. 그러나 직업교육의 가치는 단기적이고 목표 지향적 관점에서 학생이 졸업 후 직업세계에 진입하는 것만으로 한정 지을 수 없음. 그보다 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교육적 측면에서 취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 평생직업교육을 촉진하는 역할, 그리고 지역사회의 유지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역할 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따라서 직업교육은 단기적인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도구적 관점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장기적 교육체제로 재정립되어야 하며, 보다 보편적인 가치 실현의 주체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직업교육체제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집중을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갈 필요가 있음.
- 둘째, 직업교육체제에 관한 정책의 초점을 수급 중심에서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전환하여 직업교육의 운영 내실화와 장기적 성과 창출 과정에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저출생 상황에 대한 직업교육기관의 자체적 대응의 핵심이 입학자원 감소라는 문제를 상대적으로 단기적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음. 이는 장기적 차원에서 직업교육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

음. 따라서 향후 학령인구 감소가 더욱 심화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직업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 자체를 정책적 핵심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단기적 입학자원 확보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으로서 의미를 지니며, 직업교육 자체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교육적 가치를 중심으로 동등성을 확보하고, 이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교육체제의 전문화, 유연화, 연계화를 통해 기능적 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 셋째, 직업교육을 통한 직업세계 진입을 순환적 과정으로 보고 경력경로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직업교육에서 유연성을 언급할 때는 주로 선택권의 확대 차원에서 논의되었으나, 교육과 노동시장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그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직업교육의 유연성은 교육과 노동의 연결과 이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음.
  - 기술 변화와 노동시장 유동성이 증가하는 미래 직업세계에서는 평생직업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역량개발과 경력개발을 요구함. 따라서 교육을 통한 취업이라는 단선적인 선후관계로 직업교육의 역할을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경력경로 차원에서 직업교육의 역할을 규정해야 함.
  - 즉 후학습 경로의 확대 및 강화, RPL, 다양한 수준의 수업연한 도입, 비학위 과정의 확대 등을 통해 일터에서 학교, 학교에서 일터, 학교에서 학교로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직업교육기관을 하나의 독립적 개체로 보고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포괄적 생태계 내 핵심 주체로 보고 지역 내 협력적 네트워크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오랫동안 직업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및 기업의 역할과 책무성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업교육기관은 개별적인 학교 단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저출생시대의 도래에 따라 요구되는 복합적 기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역량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음.

- 따라서 개별 기관 중심의 구조를 벗어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효율적 역할 분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즉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해서는 지역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이는 개념적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공동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지자체는 직업교육의 책무성을, 기업은 직업교육의 인센티브를, 직업교육기관은 연계 협력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함.
- 다섯째,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인정체계의 결합적 접근이 필요함.
- 직업교육의 사회적 인식이 낮은 이유는 궁극적으로 직업교육의 성과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적 구조가 미흡하기 때문임.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통해 획득한 자격과 경력이 노동시장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은 더욱 난항에 빠지게 됨. 따라서 직업교육의 사회적 인식은 직업교육에 대한 개인의 피상적 인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적 제도 자체로 이해되어야 함. 즉 직업교육의 사회적 인식이 낮다는 것은 직업교육 성과에 대한 제도적 기틀이 부족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학력, 경력, 자격 등에 대한 제도적 인정체계를 구축하고, 그것이 다른 교육경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성과와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함.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때, 앞서 전문가들이 언급한 것과 같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의 진로교육의 내실화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며 직업교육에 대한 홍보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임.
- 마지막으로, 직업교육체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리더십과 책무성,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함.
- 직업교육의 미래 방향에 관한 이상의 시사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직업교육체제 개선의 핵심 주체가 직업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이지만,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 추진력과 효과성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황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임.

- 직업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의 변화는 너무나 거대한 구조적 변화이기 때문에 이를 개별 학교 단위에서 자체적인 혁신을 통해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교육부, 유관부처를 포함하는 정부 차원, 지자체와 산업체를 포괄하는 지역 사회 차원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



## 제5장

#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체제의 혁신 방안

제1절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안 도출 개요

제2절 직업교육체제의 주요 현안과 이상적 미래상

제3절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과 정책 방안

제4절 소결



## 제5장 |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체제의 혁신 방안

### 제1절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안 도출 개요

#### 1. 전문가 델파이 조사 개요

- 전문가 면담을 통해 도출된 주요 현안(이슈), 이상적 미래상, 개선 방향성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상대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현안을 판단하며, 최종적으로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의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를 추진함. 전문가 델파이의 개요는 아래와 같음.
  - 대상: 직업교육 전문가 37명(중등직업교육: 20명, 고등직업교육 17명)
  - 내용: 전문가 면담 결과의 타당화부터 정책 방안의 도출 및 우선순위 도출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 방법: 델파이 조사지를 활용한 총 3차례 서면 조사
    - 1차 델파이 조사: 2025. 3. 11.(화) ~ 3. 19.(수)
    - 2차 델파이 조사: 2025. 4. 16.(수) ~ 4. 24.(목)
    - 3차 델파이 조사: 2025. 5. 2.(금) ~ 5. 9.(금)

〈표 5-1〉 전문가 델파이 추진 내용

구분	1차 델파이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주요 현안(이슈)	타당성 검토	수정안 검토 중요도-시급도 검토	-
이상적 미래상	타당성 검토	수정안 검토	-
개선 방향성	타당성 검토	수정안 검토	-
정책 방안	개방형 의견 수렴	타당성 검토	효과성-실행가능성 검토

〈표 5-2〉 전문가 심층 면담 참여자 정보

구분	연번	소속	직급	성별	구분	연번	소속	직급	성별
중등 직업 교육	1~10	전문가 심층 면담 참여자 10명			고등 직업 교육	21~25	전문가 심층 면담 참여자 5명		
	11	대학교	교수	남		26	전문대학	총장	남
	12	대학교	교수	남		27	전문대학	부총장	남
	13	대학교	교수	남		28	전문대학	기획처장	남
	14	대학교	교수	남		29	전문대학	교수	남
	15	대학교	교수	여		30	전문대학	교수	여
	16	특성화고	전)교장	남		31	전문대학	교수	남
	17	특성화고	교장	남		32	전문대학	교수	남
	18	특성화고	교감	남		33	전문대학	교수	남
	19	각종학교	교감	여		34	전문대학	교수	남
20	교육청	장학사	남	35	전문대학	교수	남		
					36	전문대학	교수	남	
					37	전문대학	교수	남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속 및 주요 경력은 일반전인 범주로 축약하여 제시함.

□ 수집된 델파이 조사 결과는 응답자의 평균, 표준편차, 긍정률과 같은 기술통계 지표와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이하 CVR), 합의도, 수렴도 등 6가지 타당화 지표를 활용하였음.

- 평균: 응답 결과에 대한 단순 평균
- 표준편차: 응답 결과의 표준편차

- 긍정률: 선택지 중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에 응답한 비율
- CVR: 전문가 의견의 긍정적 수렴 여부를 파악하는 지표(Lawshe, 1975)
  - 중등직업교육 전문가 20명을 기준으로 .42 이상
  - 고등직업교육 전문가 17명을 기준으로 .46 이상
- 합의도: 전문가 의견이 가까이 모여 있는 정도(근접성)를 드러내는 지표(기준=.75 이상)(이종성, 2006)
- 수렴도: 전문가 의견이 일관성 있게 모여 있는 정도(일관성)를 드러내는 지표(기준=.50 이하)(이종성, 2006)
- CVR, 합의도, 수렴도의 산출 공식은 아래와 같음.

$$CVR = \frac{N_e - \frac{N}{2}}{\frac{N}{2}}, \quad \text{합의도} = 1 - \frac{Q_3 - Q_1}{M_{dn}}, \quad \text{수렴도} = \frac{Q_3 - Q_1}{2}$$

여기서,  $N_e$ : 4점 이상 응답한 사람의 수

$N$ : 전체 응답자 수

$Q_3$ : 사분위값 중 제3사분위 계수(75%)

$Q_1$ : 사분위값 중 제1사분위 계수(25%)

$M_{dn}$ : 중앙값

□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되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체제의 주요 현안(타당성 검토)과 우선순위(중요도-시급도 분석)
-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체제의 이상적 미래상(타당성 검토)
-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타당성 검토)
-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정책 방안(타당성 검토)과 우선순위(효과성-실행가능성 검토)

## 제2절 직업교육체제의 주요 현안과 이상적 미래상

### 1. 직업교육체제의 주요 현안

#### 가. 중등직업교육

- 중등직업교육의 주요 현안은 전문가 면담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된 13개의 현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도출되었음.
  - 전문가 면담을 통해 도출된 현안은 거시적·구조적 현안, 학교운영·교육과정 현안, 학교 내부 구성원 현안, 학생 성장경로 현안 등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었음. 중등직업교육 주요 현안에 대한 초안은 <표 4-4>를 참조하기 바람.
- 13개 중등직업교육 현안 초안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중등직업교육 현안에 대한 타당화는 1차와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수행되었으며, 1차 델파이 조사에서 13개 초안에 대한 검토가,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수정된 안에 대한 최종 검토가 수행되었음.

**<표 5-3> 중등직업교육 주요 현안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구분	현안	1차 델파이 조사						2차 델파이 조사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CVR (≥.42)	합의도 (≥.75)	수렴도 (≤.50)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CVR (≥.42)	합의도 (≥.75)	수렴도 (≤.50)
거시적·구조적 현안	직업교육 축소 압력과 지속가능성 위기	3.75	1.44	65.0	.30	.50	1.00	4.45	.92	95.0	.90	.80	.50
	직업교육의 선도모델 의존과 양극화	4.05	1.07	80.0	.60	.75	.50	/	/	/	/	/	/
	직업교육의 거점화 전략과 구조적 난제	4.35	1.06	90.0	.80	.80	.50	/	/	/	/	/	/
	직업계고의 계열 불균형과 뿌리산업 위기	4.50	.67	90.0	.80	.80	.50	/	/	/	/	/	/
학교운영·교육과정 현안	보편적 직업교육 확장과 직무특수성 유지 딜레마	4.10	.94	85.0	.70	.75	.50	/	/	/	/	/	/
	직업교육과정의 제도적 경직성과 혁신 대응의 한계	3.80	1.21	70.0	.40	.50	1.00	4.30	.78	90.0	.80	.75	.50

구분	현안	1차 델파이 조사						2차 델파이 조사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CVR (≥.42)	합의도 (≥.75)	수렴도 (≤.50)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CVR (≥.42)	합의도 (≥.75)	수렴도 (≤.50)
학교 내부 구성원 현안	현장실습의 필요성과 파행적 운영의 이중성	3.85	.91	60.0	.20	.50	1.00	4.60	.49	100.0	1.00	.80	.50
	학교-기업 협력의 불균형과 직업교육 왜곡	4.20	.81	85.0	.70	.75	.50	/	/	/	/	/	/
	직업계고 교사의 역할 과부하와 전문성 침식	4.30	.78	90.0	.80	.75	.50	/	/	/	/	/	/
	직업교육 진입 학생의 기초역량 약화와 진로선택 왜곡	4.55	.67	90.0	.80	.80	.50	/	/	/	/	/	/
	삼다사회적 취약 학생 증가와 직업교육 가능 약화	4.30	.90	95.0	.90	.75	.50	/	/	/	/	/	/
학생 성장경로 현안	직업계고의 진학 딜레마: 취업 우선 원칙과 진학 수요 사이의 괴리	4.55	.59	95.0	.90	.80	.50	/	/	/	/	/	/
	직업계고 학생의 진로설계 부재와 성장경로 단절 문제	4.40	.97	90.0	.80	.80	.50	/	/	/	/	/	/

주 1: 중등직업교육 관련 전문가 20명의 응답 결과임.

주 2: 음영은 타당화 지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 1차,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중등직업교육 현안의 명칭 및 설명이 전반적으로 수정되었으며, 전문가의 정량적 평가와 함께 정성적 의견을 참고하였음. 대표적인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직업교육 축소 압력과 지속가능성 위기’의 경우, ‘무용론’과 ‘축소 압력’이라는 표현이 과도하다는 전문가 지적에 따라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선호도 감소, 신입생 충원 어려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현상 중심으로 서술 내용을 조정함.
- ‘직업교육의 선도모델 의존과 양극화’의 경우, 전문가들은 양극화의 원인이 선도모델 때문이 아니라 일반 특성화고 지원 부족 때문이라고 보았고, 학교 간 서열화나 구조적 문제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아 해당 현안을 삭제함. 다만 기존 초안이 타당성 지표에 부합하였으나 전문가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연구진 협의를 통해 삭제함.
- ‘직업교육과정의 제도적 경직성과 혁신 대응의 한계’의 경우, 전문가들은 교육과정 경직성의 주된 원인이 NCS나 도제학교 때문이 아니라 산업 변화에 맞는 인프라 부족,

교사 역량 확보의 어려움, 제도적 자율성 제한 등에 있다고 지적함. 이에 따라 표현을 보다 중립적이고 구조적 제약 중심으로 수정함.

- ‘현장실습의 필요성과 파행적 운영의 이중성’의 경우, 전문가들은 ‘파행적 운영’이라는 표현이 과도하며, 최근에는 정책적 보완과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음. 또한 문제의 핵심은 산학 간 정합성 부족과 기업의 교육적 책임 미흡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다 구조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으로 수정함.

□ 이상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중등직업교육 현안의 최종 확정안은 다음 <표 5-4>와 같음.

**<표 5-4> 중등직업교육 주요 현안(최종안)**

구분	현안	설명
거시적·구조적 현안	직업교육의 선호도 감소와 지속가능성 위기	기술 변화, 저출생 등의 사회적 변화로 직업계고의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직업교육의 규모가 축소되어, 직업교육을 통한 숙련기능기술인 양성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현상
	직업교육의 거점화 전략과 구조적 난제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직업계고를 거점학교 형태로 통합하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통합 과정에서의 학교운영, 학과배치, 물리적 거리, 공사립 갈등 등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실질적인 운영의 현실성이 낮은 상황
	직업계고의 인력양성 분야 불균형과 산업수요 미스매칭	학생 모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인기 높은 서비스 및 신산업 분야로 학과 개편이 집중되면서 인력양성 분야 불균형 및 산업수요와의 미스매칭이 심화되는 현상
학교운영·교육과정 현안	보편적 직무역량 함양 교육과 구체적 직무기술 함양 교육의 딜레마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구체적 직무기술에 기반을 두고 운영하자는 의견과 범용적이고 보편적인 직무역량 함양에 기반을 두고 운영하자는 의견이 대립하면서 교육운영의 목표와 방식에 혼란이 발생하는 현상
	직업교육과정의 유연성 부족과 산업현장 대응의 한계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신기술 신산업 등 산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이 부족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또한 현실적 제약을 받는 상황
	현장실습 운영의 구조적 한계와 교육적 활용 제약	현장실습이 직업교육과정에서 중요한 학습기회로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산학 간 교육과정 정합성 부족, 참여 기업의 학습형 현장실습에 대한 인식과 책임 부족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
	학교-기업 협력의 불균형과 직업교육 왜곡	학교와 기업 간 협력 체제 미흡으로 불균형적 구조가 형성되어 직업교육 본연의 목적이 왜곡되는 현상
학교 내부 구성원 현안	직업계고 교사의 역할 과부하와 수업 전문성 침식	기업과의 협력, 진로상담, 학생 생활지도 등 다양한 역할이 집중되면서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여 교사의 수업 전문성이 침식되는 문제
	직업계고 입학생의 누적된 기초학력부진과 학습 결손 심화	직업계고 선호도 감소에 따라 최근 기초학력부진이 누적된 학생의 진입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직업교육 성과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현상
	심리·사회적 취약 학생 증가와 직업교육 기능 약화	심리적·사회적으로 취약한 학생 비율이 증가하면서 직업교육보다는 생활지도 및 기초적 인성교육에 치중하게 되어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본래 기능과 정체성이 악화되는 문제

구분	현안	설명
학생 성장경로 현안	직업계고의 진학 딜레마: 취업 우선 원칙과 진학 수요 사이의 괴리	직업계고가 '취업 우선 원칙'을 유지하지만, 현실적으로 진학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취업 기능과 진학 지원 사이에서 학교운영에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는 현상
	직업계고 학생의 진로설계 미흡과 성장경로 단절 문제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목표 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후의 전문적 성장경로와 사회적 인정 기반이 미흡하여 지속가능한 진로설계가 어려운 문제

□ 중등직업교육 주요 현안 최종안에 대한 해결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주요 현안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도를 평가하였음. 그 결과는 다음 <표 5-5>와 같음.

**<표 5-5> 중등직업교육 주요 현안의 중요도-시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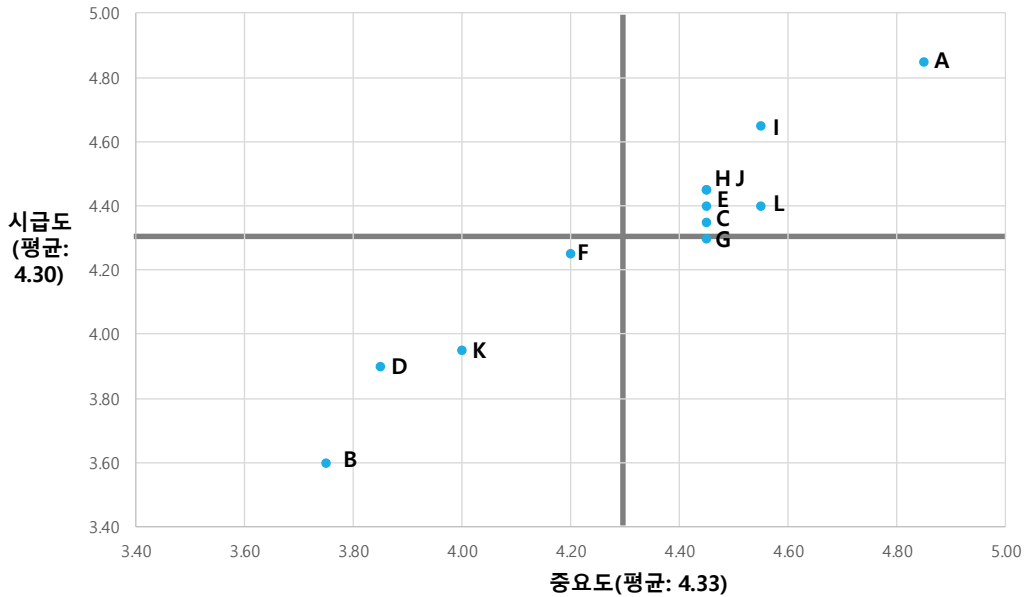
구분	현안	중요도		시급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거시적·구조적 현안	직업교육의 선호도 감소와 지속가능성 위기	4.85	.36	4.85	.48
	직업교육의 거점화 전략과 구조적 난제	3.75	.83	3.60	.92
	직업계고의 인력양성 분야 불균형과 산업수요 미스매칭	4.45	.59	4.35	.65
학교운영·교육과정 현안	보편적 직무역량 함양 교육과 구체적 직무기술 함양 교육의 딜레마	3.85	.79	3.90	.83
	직업교육과정의 유연성 부족과 산업현장 대응의 한계	4.45	.67	4.40	.73
	현장실습 운영의 구조적 한계와 교육적 활용 제약	4.20	.87	4.25	.89
	학교-기업 협력의 불균형과 직업교육 왜곡	4.45	.59	4.30	.56
학교 내부 구성원 현안	직업계고 교사의 역할 과부하와 수업 전문성 침식	4.45	.67	4.45	.59
	직업계고 입학생의 누적된 기초학력부진과 학습 결손 심화	4.55	.74	4.65	.48
	심리·사회적 취약 학생 증가와 직업교육 기능 약화	4.45	.67	4.45	.67
학생 성장경로 현안	직업계고의 진학 딜레마: 취업 우선 원칙과 진학 수요 사이의 괴리	4.00	.89	3.95	.92
	직업계고 학생의 진로설계 미흡과 성장경로 단절 문제	4.55	.80	4.40	.66
평균		4.33	.78	4.30	.79

주: 중등직업교육 관련 전문가 20명의 응답 결과임.

- 중요도-시급도 차원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현안은 '직업교육의 선호도 감소와 지속가능성 위기'로 나타났으며, 해당 현안의 시급도 역시 가장 높게 나타났음. 둘째로 중요도가 높은 것은 '직업계고 입학생의 누적된 기초학력부진과 학습 결손 심화'와 '직업계고 학생의 진로설계 미흡과 성장경로 단절 문제'로 나타났으며, '직업계고 입학생의 누적된 기초학력부진과 학습 결손 심화'의 시급도 역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음.

- 반대로 중요도가 가장 낮은 현안은 ‘직업교육의 거점화 전략과 구조적 난제’로 나타났으며, 해당 현안의 시급도 역시 가장 낮게 나타났음. 두 번째로 중요도가 낮은 현안은 ‘보편적 직무역량 함양 교육과 구체적 직무기술 함양 교육의 딜레마’로 나타났으며, 해당 현안의 시급도 역시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났음.
- 이상의 결과를 기반으로 중등직업교육 주요 현안의 중요도-시급도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5-1]과 같음.

[그림 5-1] 중등직업교육 주요 현안의 중요도-시급도



- |   |  |
|---|--|
| <p>A: 직업교육의 선호도 감소와 지속가능성 위기<br/>                 B: 직업교육의 거점화 전략과 구조적 난제<br/>                 C: 직업계고의 인력양성 분야 불균형과 산업수요 미스매칭<br/>                 D: 보편적 직무역량 함양 교육과 구체적 직무기술 함양 교육의 딜레마<br/>                 E: 직업교육과정의 유연성 부족과 산업현장 대응의 한계<br/>                 F: 현장실습 운영의 구조적 한계와 교육적 활용 제약</p> | <p>G: 학교-기업 협력의 불균형과 직업교육 왜곡<br/>                 H: 직업계고 교사의 역할 과부하와 수업 전문성 침식<br/>                 I: 직업계고 입학생의 누적된 기초학력부진과 학습 결손 심화<br/>                 J: 심리·사회적 취약 학생 증가와 직업교육 기능 약화<br/>                 K: 직업계고의 진학 딜레마: 취업 우선 원칙과 진학 수요 사이의 괴리<br/>                 L: 직업계고 학생의 진로설계 미흡과 성장경로 단절 문제</p> |
|---|--|

## 나. 고등직업교육

- 고등직업교육의 주요 현안은 전문가 면담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된 7개의 현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도출되었음.
- 전문가 면담을 통해 도출된 현안은 거시적·구조적 현안, 전문대학 정체성과 고등교육체제 변화, 학교운영·교육과정 현안, 지역사회 및 학습자 지원 부족 등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었음. 고등직업교육 주요 현안에 대한 초안은 <표 4-5>를 참조하기 바람.
- 7개 고등직업교육 현안 초안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고등직업교육 현안에 대한 타당화는 1차와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수행되었으며, 1차 델파이 조사에서 7개 초안에 대한 검토가,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수정된 안에 대한 최종 검토가 수행되었음.

〈표 5-6〉 고등직업교육 주요 현안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구분	현안	1차 델파이 조사						2차 델파이 조사					
		평균	표준편차	긍정률	CVR (≥.42)	합의도 (≥.75)	수렴도 (≤.50)	평균	표준편차	긍정률	CVR (≥.42)	합의도 (≥.75)	수렴도 (≤.50)
거시적·구조적 현안	입학지원 감소로 인한 경영난과 교육의 질 하락의 악순환	476	.42	100	1.00	1.00	.00	/	/	/	/	/	/
	전문대학 입학지원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전문대학의 위기 심화	418	1.15	82.4	.65	.80	.50	/	/	/	/	/	/
전문대학 정체성과 고등교육체제 변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 경계 모호화 및 고등교육의 위계화 현상 심화	465	.59	94.1	.88	.80	.50	/	/	/	/	/	/
	비전통적 학습자 및 비학위 과정 증가에 따른 전문대학의 정체성 문제	329	1.07	41.2	-.18	.33	1.00	453	.61	94.1	.88	.80	.50
학교운영·교육과정 현안	전문대학 학과 재구조화의 부정적 영향 및 학과의 경쟁력 약화	388	.90	64.7	.29	.50	1.00	400	.59	82.4	.65	1.00	.00
	교육과정의 고도화·전문화 부족과 수준별 학위과정 운영의 난항	347	.98	52.9	.06	.75	.50	412	.96	88.2	.76	.75	.50

구분	현안	1차 델파이 조사						2차 델파이 조사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CVR (≥.42)	합의도 (≥.75)	수렴도 (≤.50)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CVR (≥.42)	합의도 (≥.75)	수렴도 (≤.50)
지역사회 및 학습자 지원 부족	지자체의 전문대학 역할 인식 부족 및 RISE 체계 내 전문대학의 소외	3.94	1.00	58.8	.18	.50	1.00	4.35	.68	88.2	.76	.75	.50

주 1: 고등직업교육 관련 전문가 17명의 응답 결과임.

주 2: 음영은 타당화 지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 1차,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고등직업교육 현안의 명칭 및 설명이 전반적으로 수정되었으며, 전문가의 정량적 평가와 함께 정성적 의견을 참고하였음. 대표적인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비전통적 학습자 및 비학위 과정 증가에 따른 전문대학의 정체성 문제’의 경우, 전문가들은 비전통적 학습자의 증가가 전문대학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기보다는 변화와 재정립을 요구하는 요인이라고 보았으며, ‘문제’보다는 ‘변화 요구’로 표현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보다 중립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표현으로 수정함.
- ‘전문대학 학과 재구조화의 부정적 영향 및 학과의 경쟁력 약화’의 경우, 전문가들은 학과 개편이 경쟁력 약화로만 해석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일부 산업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과 긍정적 기능도 존재한다고 보았음. 이에 따라 표현을 중립적으로 조정하고, 지역산업 인력 양성 약화라는 구체적 결과 중심으로 수정함.
- ‘교육과정의 고도화·전문화 부족과 수준별 학위과정 운영의 난항’의 경우, 전문가들은 교육과정 자체의 고도화 부족보다는 사회적 인식 부족과 현장 활용성의 미비가 문제라고 보았으며, 성과 부족이라는 단정적 표현 대신 제도의 정착 지연과 확산 한계로 표현을 조정함.
- ‘지자체의 전문대학 역할 인식 부족 및 RISE 체계 내 전문대학의 소외’의 경우, 전문가들은 RISE 체계 내 전문대학의 역할 부진을 전문대학 자체의 문제로 단정하기보다는 지자체의 인식 부족과 거버넌스 구조의 한계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음. 또한 RISE 사업이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표현을 보다 중립적이고 전망 중심으로 수정함.

□ 이상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고등직업교육 현안의 최종 확정안은 다음 <표 5-7>과 같음.

<표 5-7> 고등직업교육 주요 현안(최종안)

구분	현안	설명
거시적·구조적 현안	입학자원 감소로 인한 경영난과 교육의 질 하락의 악순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교 재정이 악화되고, 이는 다시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현상
	수직적 진학 선택에 따른 지방 전문대학의 위기 심화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고등교육기관 입학정원 대비 입학자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대학 설립 목적과 교육 특수성 대신 순위와 서열에 기반을 둔 선택 경향이 심화되어 전문대학 선호도가 감소하는 현상
전문대학 정체성과 고등교육 체제 변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 교육 영역 중첩 및 고등교육 위계화 현상 심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교육 영역 구분이 불명확해짐에 따라 고등교육 전반의 위계화와 서열화 경향이 심화되며, 각 고등교육기관의 고유한 정체성과 역할이 약화되는 현상
	비전통적 학습자 및 비학위 과정 증가에 따른 전문대학의 정체성 재정립 요구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성인학습자와 외국인 유학생 등 비전통적 학습자와 비학위 과정이 확대되고 일반대학의 직업교육 영역 진출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교육 대상과 교육 방식의 변화 대응과 일반대학과의 차별화 확대 측면에서 전문대학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 요구가 증가하는 현상
학교운영·교육과정 현안	입학자원 확보 중심의 학과 개편에 따른 지역산업 인력 양성 기능 약화	입학자원 확보를 위해 단기적 인기 분야로 전문대학 학과를 개편하는 추세에 따라 지역산업 인력 양성 측면에서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현상
	고숙련 직업교육과정의 사회적 인식 및 타당성 정립 부족에 따른 수준별 학위과정 정착 지연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과 전문기술석사과정 등 고숙련 직업교육과정이 도입되었으나, 사회적 인식과 현장 활용 타당성 정립의 부족으로 인해 해당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 성과 확산이 지연되는 현상
지역사회 연계·협력 현안	RISE 체계 내 전문대학의 역할 인식 부족 및 지역협력 체계의 한계	RISE 체계에서 광역 사회(산업) 수요와 연계한 전문대학의 역할 수행에 대한 소통 및 인식 부족과 거버넌스 참여 제약으로 전문대학의 참여와 협력이 제한되는 현상

□ 고등직업교육 주요 현안 최종안에 대한 해결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주요 현안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도를 평가하였음. 그 결과는 다음 <표 5-8>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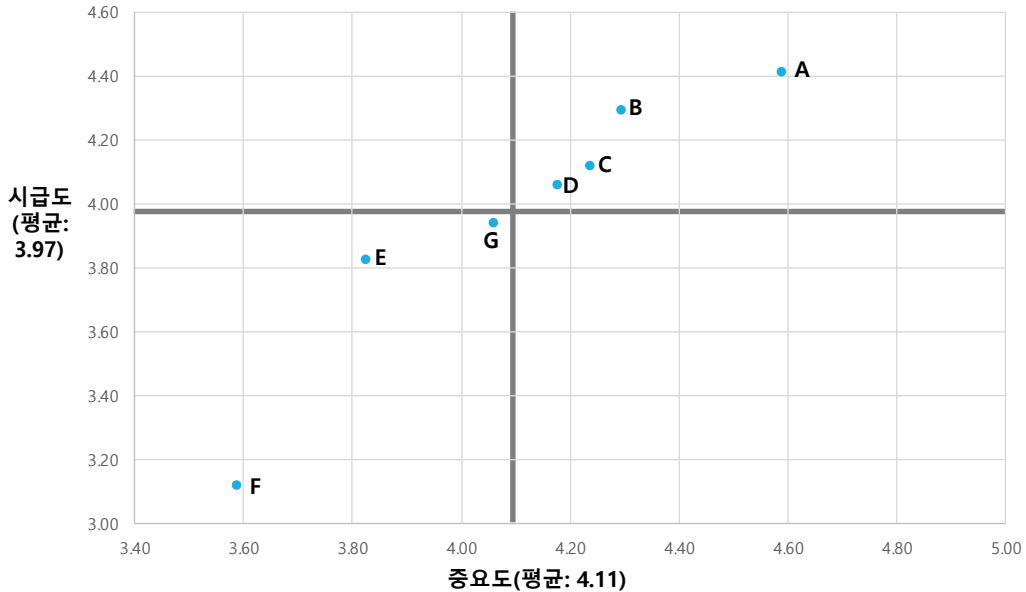
**<표 5-8> 고등직업교육 주요 현안의 중요도-시급도**

구분	현안	중요도		시급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거시적·구조적 현안	입학자원 감소로 인한 경영난과 교육의 질 하락의 악순환	4.59	.60	4.41	.69
	수직적 진학 선택에 따른 지방 전문대학의 위기 심화	4.29	.67	4.29	.67
전문대학 정체성과 고등교육체제 변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 교육 영역 중첩 및 고등교육 위계화 현상 심화	4.24	.64	4.12	.83
	비전통적 학습자 및 비학위 과정 증가에 따른 전문대학의 정체성 재정립 요구	4.18	.71	4.06	.73
학교운영·교육과정 현안	입학자원 확보 중심의 학과 개편에 따른 지역산업 인력 양성 기능 약화	3.82	.71	3.82	.71
	고숙련 직업교육과정의 사회적 인식 및 타당성 정립 부족에 따른 수준별 학위과정 정착 지연	3.59	.97	3.12	.83
지역사회 연계·협력 현안	RISE 체계 내 전문대학의 역할 인식 부족 및 지역협력 체계의 한계	4.06	.87	3.94	.94
	평균	4.11	.81	3.97	.87

주: 고등직업교육 관련 전문가 17명의 응답 결과임.

- 중요도-시급도 차원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현안은 ‘입학자원 감소로 인한 경영난과 교육의 질 하락의 악순환’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현안의 시급도 역시 가장 높게 나타났음. 둘째로 중요도가 높은 것은 ‘수직적 진학 선택에 따른 지방 전문대학의 위기 심화’로 나타났으며, 해당 현안의 시급도 역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음.
- 반대로 중요도가 가장 낮은 현안은 ‘고숙련 직업교육과정의 사회적 인식 및 타당성 정립 부족에 따른 수준별 학위과정 정착 지연’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현안의 시급도 역시 가장 낮게 나타났음. 두 번째로 중요도가 낮은 현안은 ‘입학자원 확보 중심의 학과 개편에 따른 지역산업 인력 양성 기능 약화’로 나타났으며, 해당 현안의 시급도 역시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났음.
- 이상의 결과를 기반으로 고등직업교육 주요 현안의 중요도-시급도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5-2]와 같음.

[그림 5-2] 고등직업교육 주요 현안의 중요도-시급도



- A: 입학자원 감소로 인한 경영난과 교육의 질 하락의 악순환
- B: 수직적 진학 선택에 따른 지방 전문대학의 위기 심화
- C: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 교육영역 중첩 및 고등교육 위계화 현상 심화
- D: 비전통적 학습자 및 비학위과정 증가에 따른 전문대학의 정체성 재정립 요구
- E: 입학 자원 확보 중심의 학과 개편에 따른 지역 산업 인력 양성 기능 약화
- F: 고숙련 직업교육과정의 사회적 인식 및 타당성 정립 부족에 따른 수준별 학위과정 정착 지연
- G: RISE 체계 내 전문대학의 역할 인식 부족 및 지역협력 체계의 한계

## 2. 직업교육체제의 이상적 미래상

### 가. 중등직업교육

- 중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은 중등직업교육의 비전을 표현하는 미래상 진술문과 해당 진술문을 구성하는 핵심 키워드 6개로 구성되었으며, 해당 진술문과 핵심 키워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음.
  - 중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은 '학생 중심의 진로설계와 다양한 성장경로를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중등직업교육'으로 정리되었으며, 진로설계 중심, 학생 중심성, 다양한 사회진출 경로, 경력개발과 장기적 성장, 교육복지와 다양성 존중, 복합적 성과 평가의 핵심 키워드로 구체화되었음. 해당 초안의 구체적 내용은 <표 4-6>을 참조하기 바람.

- 중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과 핵심 키워드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중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1차와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수행되었으며,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초안에 대한 검토가, 2차 델파이 조사에서 수정된 안에 대한 최종 검토가 수행되었음.

〈표 5-9〉 중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구분	명칭	1차 델파이 조사						2차 델파이 조사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CVR (≥.42)	합의도 (≥.75)	수렴도 (≤.50)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CVR (≥.42)	합의도 (≥.75)	수렴도 (≤.50)
미래상	학생 중심의 진로설계와 다양한 성장경로를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중등직업교육	445	1.07	90.0	.80	.80	.50						
거시적·구조적 현안	진로설계 중심	455	.80	90.0	.80	.80	.50						
	학생 중심성	450	1.07	90.0	.80	.95	.13						
	다양한 사회진출 경로	470	.71	95.0	.90	1.00	.00						
	경력개발과 장기적 성장	460	.73	95.0	.90	.80	.50						
	교육복지와 다양성 존중	475	.43	100	1.00	.95	.13						
	복합적 성과 평가 → 지역사회 협력 기반 공동 시스템	475	.43	100	1.00	.95	.13	4.65	.65	90.0	.80	.95	.13

주: 중등직업교육 관련 전문가 20명의 응답 결과임.

- 1차 델파이에서 중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에 관한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나, 전문가의 정성적 의견을 참고하여 명칭 및 설명문이 일부 수정되었음. 특히 기존의 ‘복합적 성과 평가’가 ‘지역사회 협력 기반 공동 시스템’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건에 대해 2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 이상적 미래상의 기존 핵심 키워드의 전반적인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명칭이 직업교육의 맥락을 충실히 표현하지 못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등직업교육에 적합한 표현으로 수정한 것임.
  - ‘복합적 성과 평가’가 ‘지역사회 협력 기반 공동 시스템’으로 변경된 것은 기존의 키워드가 ‘학생 중심성’과 중복성이 높아 통합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와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의 교육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임.

- 이상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중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 최종 확정안은 다음 <표 5-10>과 같음.

**<표 5-10> 중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최종안)**

구분	명칭	설명
미래상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및 직무역량 형성을 중심으로 산업수요와 연계된 다양한 성장경로를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중등직업교육
핵심 키워드	직무역량 기반 진로설계 중심	학생이 직무역량 형성과 연계된 진로설계를 통해 진로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사회진출 경로를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직무 연계형 학생 성장 중심	취업률, 진학률 중심의 외형적 성과에서 벗어나, 학생의 진로 방향과 교육의 정합성을 기반으로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
	유연한 경로 기반 직업이행 지원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목표에 따라 유연하게 경로를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진출과 성장 경로를 확보하는 것
	경력 생애설계 및 지속 성장 지원	직업교육을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경력을 쌓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더 나은 일자리와 삶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포용적 직업교육 보장체계	교육 체제 내에서 직업교육의 다양성 보장 및 복지 차원에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영역으로 인식하는 것
	지역사회 협력 기반 공동 시스템	직업교육의 운영과 성과에 대한 책임을 학교만의 몫으로 제한하지 않고, 산업체·지자체·유관기관이 함께 연계하여 공동으로 책임지는 공동의 시스템 구축을 지향하는 것

#### 나. 고등직업교육

- 고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 역시 고등직업교육의 비전을 표현하는 미래상 진술문과 해당 진술문을 구성하는 핵심 키워드 6개로 구성되었으며, 해당 진술문과 핵심 키워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음.
- 고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은 ‘다양한 학습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 기반 맞춤형 고등직업교육’으로 정리되었으며, 지역 기반 인재육성, 평생직업교육 강화, 개인 맞춤형 직업교육, 고숙련·고수준 인재 양성, 직업세계 변화 선제적 대응, 사회통합 및 개방성 등의 핵심 키워드로 구체화되었음. 해당 초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4-7>을 참조하기 바람.

□ 고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과 핵심 키워드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고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1차 델파이 조사에서 모든 타당성 지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고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에 관한 별도의 타당성 검토는 실시하지 않았음.

〈표 5-11〉 고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구분	명칭	1차 델파이 조사						2차 델파이 조사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CVR (≥.46)	합의도 (≥.75)	수렴도 (≤.50)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CVR (≥.46)	합의도 (≥.75)	수렴도 (≤.50)
미래상	다양한 학습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 기반 맞춤형 고등직업교육	444	.70	875	.75	.80	.50						
핵심 키워드	지역 기반 인재육성	471	.46	1000	1.00	.80	.50						
	평생직업교육 강화	465	.48	1000	1.00	.80	.50						
	개인 맞춤형 직업교육	459	.49	1000	1.00	.80	.50						
	고숙련·고수준 인재 양성	429	.67	882	.76	.75	.50						
	직업세계 변화 선제적 대응	435	.68	882	.76	.75	.50						
	사회통합 및 개방성	447	.50	1000	1.00	.75	.50						

주: 고등직업교육 관련 전문가 17명의 응답 결과임.

□ 다만 전문가들의 정성적인 의견을 기반으로 일부 명칭 및 표현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었음. 전문가 의견을 기반으로 부분적인 수정을 수행하였음.

- 이상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고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 최종 확정안은 다음 〈표 5-12〉와 같음.

〈표 5-12〉 고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최종안)

구분	명칭	설명
미래상		다양한 학습자(학령인구, 성인학습자, 외국인 등)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산업수요 기반 맞춤형 고등직업교육
핵심 키워드	지역 기반 인재 양성	지역산업체와의 연계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발전과 산업수요 대응에 기여하는 것
	평생직업교육 강화	성인학습자의 업스킬링, 리스킬링을 포함하여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배경의 학습자를 위한 평생직업교육을 통해 지역 복지 차원의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
	학습자 맞춤형 직업교육	다양한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학습자 요구에 부합하는 직업교육 성과를 창출하는 것
	산업수요 기반 고속력 인재 양성	중소기업과 국가전략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역량 중심의 고속력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직업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
	산업 변화 선제 대응	산업과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신산업 분야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적시에 양성하는 것
	사회통합 및 개방성	사회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다양한 학습자의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여 건강한 직업인 이자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전한 시민 사회의 구축을 지원하는 것

### 제3절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과 정책 방안

#### 1.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개선 방향성

-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은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의 현안을 해결하고 이상적 미래상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성과 과제를 제시한 것임.
  - 본 연구에서는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이 처한 문제 상황의 차이를 인식하면서도, 직업교육체제 전반의 연계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동등성, 다양성, 전문성, 유연성, 연계성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의 공통 개선 방향을 구성하고자 하였음.
  - 특히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이 서로 분리된 개별 체제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 직업교육 생태계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방향성 아래 각 교육 단계에서 적합한 세부 과제를 하위 요소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즉 방향성 차원에서는 일관된 틀을 유지하되, 실행 과제 수준에서는 직업교육의 급별 특성과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함.
  - 이를 통해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에 정책적 통일성과 실행의 유연성을 동시에 부여하고, 향후 중장기 직업교육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이상의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 설정 관점에 따라 동등성, 다양성, 전문성, 유연성, 연계성 각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의 각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추진하였음.

#### 가. 동등성

- 동등성은 직업교육의 동등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직업교육이 학력 중심의 일반교육과 비교하였을 때 경쟁력이 있는 인재를 길러냄에 있어 사회·제도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함.
  - 동등성의 정의와 하위 요소의 초안은 <표 4-8>을 참조하기 바람.

□ 동등성 방향성과 하위 요소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5-13>과 같음.

- 분석 결과, 방향성과 모든 하위 요소가 타당성 지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타당성에 관한 정량적 분석 결과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정성적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명칭과 표현을 수정하였음. 다만 해당 수정 사항이 타당성의 재검토가 필요할 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2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표 5-13>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동등성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구분	명칭	중등직업교육						고등직업교육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CVR (≥.42)	합의도 (≥.75)	수렴도 (≤.50)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CVR (≥.46)	합의도 (≥.75)	수렴도 (≤.50)
방향성	[동등성] 직업교육의 동등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490	.30	100	1.00	1.00	.00	471	.57	94.1	.88	1.00	.00
하위 요소	직업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495	.22	100	1.00	1.00	.00	471	.57	94.1	.88	1.00	.00
	학력·경력·자격의 사회적 인정 및 동등성 확보	465	.48	100	1.00	.80	.50	435	.68	88.2	.76	.75	.50
	직업교육 성장경로 확보 및 사회진출 기회의 균등화	485	.36	100	1.00	1.00	.00	424	.64	88.2	.76	.75	.50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성과 인정 강화	490	.30	100	1.00	1.00	.00	482	.38	100	1.00	1.00	.00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교육 혁신 학과 지원 강화	460	.73	95.0	.90	.80	.50	465	.48	100	1.00	.80	.50
	국가전략산업 및 뿌리산업 분야의 직업교육 지원 확대	470	.46	100	1.00	.80	.50	447	.70	88.2	.76	.80	.50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학위구조 및 교육체계 개편							453	.85	88.2	.76	.80	.50
	전문대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재정 지원 확대							494	.24	100	1.00	1.00	.00

주: 중등직업교육 관련 전문가 20명과 고등직업교육 관련 전문가 17명이 각각 응답한 결과임.

□ 이상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동등성에 대한 최종 확정안은 다음 <표 5-14>와 같음.

〈표 5-14〉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동등성(최종안)

구분	명칭	설명	범위	
			중등	고등
방향성	[동등성] 직업교육의 동등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직업교육이 학문 중심의 일반교육과 비교하였을 때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냄에 있어 사회·제도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체계 마련	●	●
하위 요소	직업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직업교육이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비전 수립 및 다양한 주체의 안정적인 참여를 통한 정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함	●	●
	학력·경력·자격의 사회적 인정 및 동등성 확보	국가역량체계(KQF)를 활용해 직업교육에서의 학습 결과, 자격, 경력 등의 인정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비학위 전문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확대함	●	●
	직업교육 성장경로 확보 및 사회진출 기회 확대	직업교육 이수자가 진학·취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일계 진학·재직자 전형·지속적인 평생직업교육 참여기회 확대 등을 통해 사회진출의 다양성을 보장함	●	●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성과 인정 강화	직업교육의 성과를 사회적으로 인정(임금·복지·승진 등)받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초·중등 단계에서부터 진로교육을 강화하여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장기적으로 개선함	●	●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교육 혁신 학과 지원 강화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직업교육체제가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	●
	국가전략산업 및 뿌리산업 분야의 직업교육 지원 확대	국가전략산업 및 뿌리산업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 투자와 지원을 강화함	●	●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학위구조 및 교육체계 개편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구분과 학위구조를 개선하여 양자간 학력·학위·자격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고등교육 내에서 직업교육의 위상을 통합적으로 재정립함	-	●
	전문대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재정 지원 확대	전문대학이 직업교육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확대하여 직업교육의 내실화와 지속가능성을 보장함	-	●

나. 다양성<sup>9)</sup>

- 다양성은 학습자의 다양성 존중과 직업교육 접근성 확대를 위한 직업교육체제로 개편하는 것으로, 다양한 유형의 학습자(일반고 학생, 성인학습자, 외국인 등)를 확보하고, 학습자의 개별적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해당 방향성은 나머지 방향성과 달리 중등직업교육에만 해당하는 방향성으로서 의미가 있었음. 다양성 방향성은 다양한 특성의 학습자를 학교 시스템에서 수용하는 것을 강조

9) 해당 방향성은 델파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최종 삭제됨.

하는 방향성으로 의미를 지니는데, 고등직업교육의 경우 해당 방향성이 충실히 달성되고 있기 때문에 유연성 방향성에 더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임. 즉 다양성 방향성은 중등직업교육에만 해당되며, 다양성의 정의와 하위 요소의 초안은 <표 4-9>를 참조하기 바람.

- 다양성 방향성과 하위 요소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5-15>와 같음.
  - 분석 결과, 방향성 자체에 관한 타당성은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 요소의 타당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은 해당 방향성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필요할 수 있으나, 직업계고 학생 대상 직업교육이 어려운 현실점에서 다양한 학습자를 위한 교육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하위 요소로 제시되는 것들이 뒤의 유연성 방향성과 의미상 중복되는 것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함.

<표 5-15>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다양성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구분	명칭	중등직업교육						고등직업교육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CVR (≥.42)	합의도 (≥.75)	수렴도 (≤.50)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CVR (≥.46)	합의도 (≥.75)	수렴도 (≤.50)
방향성	[다양성] 학습자의 다양성 존중과 직업교육 접근성 확대를 위한 직업교육체제 개편	445	.86	85.0	.70	.80	.50	/	/	/	/	/	/
	직업교육 학습자의 다양성 확대와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440	.73	85.0	.70	.80	.50	/	/	/	/	/	/
하위 요소	일반고 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자의 직업교육 참여 확대	400	1.00	70.0	.40	.50	1.00	/	/	/	/	/	/
	외국인 등 특수 학습자 대상 직업교육 기회 확대	445	.80	90.0	.80	.80	.50	/	/	/	/	/	/
	소규모 다학과 체제 구축을 통한 다양한 학습 수요 대응	410	.99	75.0	.50	.69	.63	/	/	/	/	/	/
	직업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물리적 경계 극복 전략	420	.81	75.0	.50	.69	.63	/	/	/	/	/	/

주 1: 중등직업교육 관련 전문가 20명의 응답 결과임.  
 주 2: 음영은 타당화 지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성 방향성은 최종적으로 삭제하였으며, 하위 요소는 다른 관련 방향성의 하위 요소로 위치를 변경함.
  - 구체적으로 ‘직업교육 학습자의 다양성 확대와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는 ‘유연성’ 방향으로 위치를 변경함.
  - ‘소규모 다학과 체제 구축을 통한 다양한 학습 수요 대응’은 전문가들의 소규모 학교의 정예화 접근 필요성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여 ‘소규모 학교의 특성화 및 인력 양성 기능 강화’로 수정하고, ‘전문성’ 방향으로 위치를 변경함.
  - ‘직업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물리적 경계 극복 전략’은 온라인 교육에 관한 기존의 설명문에서 중등직업교육의 현실적 활용 가능성 및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명칭을 ‘직업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접근 여건 개선 강화’로 수정하여 ‘유연성’ 방향으로 위치를 변경함.
  - 그 외 ‘일반고 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자의 직업교육 참여 확대’, ‘외국인 등 특수 학습자 대상 직업교육 기회 확대’의 2개 하위 요소는 다양성 방향성의 삭제 목적과 동일한 이유에서 항목을 삭제함.

#### 다. 전문성

- 전문성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을 위해 직업교육기관 차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직업교육기관의 운영 역량과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산업수요 및 기술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학생의 성공적인 진로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 전문성의 정의와 하위 요소의 초안은 <표 4-10>을 참조하기 바람.
- 전문성 방향성과 하위 요소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5-16>과 같음.
  - 분석 결과, 중등직업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방향성과 모든 하위 요소에 대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 데 비해, 고등직업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지역·취업 수요 기반의 직업교육 개편을 위한 의사결정 전문성 강화’에 대한 타당성을 낮게 판단하였음. 해당 이유는 의

사결정 전문성이라는 표현이 의미가 불분명하며, 전문대학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전문대학의 학과 개편이 지역산업에만 기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임.

〈표 5-16〉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전문성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구분	명칭	중등직업교육						고등직업교육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CVR (≥.42)	합의도 (≥.75)	수렴도 (≤.50)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CVR (≥.46)	합의도 (≥.75)	수렴도 (≤.50)
방향성	[전문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490	.30	1000	1.00	1.00	.00	476	.42	1000	1.00	1.00	.00
하위 요소	지역·취업 수요 기반의 직업교육 개편을 위한 의사결정 전문성 강화	450	.74	95.0	.90	.80	.50	412	.96	70.6	.41	.50	1.00
	직업교육기관의 내실화를 통한 교육적 전문성 강화	480	.51	95.0	.90	1.00	.00	453	.50	1000	1.00	.80	.50
	직업교육 전문성을 위한 교원 역량 개발 확대	480	.40	1000	1.00	1.00	.00	476	.42	1000	1.00	1.00	.00
	직업교육의 전문성 및 혁신성 강화를 위한 탄력적 교육 운영 추진	475	.43	1000	1.00	.95	.13	459	.60	94.1	.88	.80	.50

주 1: 중등직업교육 관련 전문가 20명과 고등직업교육 관련 전문가 17명이 각각 응답한 결과임.

주 2: 음영은 타당화 지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 전문성에 대한 2차 델파이는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사항에 대한 검토로 이루어졌음.
- 중등직업교육의 경우 기존의 다양성 방향성에 위치하였던 ‘소규모 다학과 체제 구축을 통한 다양한 학습 수요 대응’을 ‘소규모 학교의 특성화 및 인력 양성 기능 강화’로 변경하여 재배치한 요소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음. 고등직업교육은 타당성이 낮은 요소를 ‘지역·취업 수요 기반의 직업교육 개편 및 운영 전문성 강화’로 변경한 안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음. 검토 결과, 수정된 하위 요소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5-17〉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전문성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구분	명칭	중등직업교육					고등직업교육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CVR (≥.42)	합의도 (≥.75)	수렴도 (≤.50)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CVR (≥.46)	합의도 (≥.75)	수렴도 (≤.50)
하위 요소	지역·취업 수요 기반의 직업교육 개편 및 운영 전문성 강화	/	/	/	/	/	/	4.56	.50	100	1.00	.80	.50
	소규모 학교의 특성화 및 인력 양성 기능 강화	4.40	.73	95.0	.90	.78	.50	/	/	/	/	/	/

주: 중등직업교육 관련 전문가 20명과 고등직업교육 관련 전문가 17명이 각각 응답한 결과임.

□ 이상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전문성에 대한 최종 확정안은 다음 〈표 5-18〉과 같음.

〈표 5-18〉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전문성(최종안)

구분	명칭	설명	범위	
			중등	고등
방향성	[전문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직업교육기관의 운영 역량과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산업수요 및 기술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학생의 성공적인 진로성장을 지원	●	●
하위 요소	지역·취업 수요 기반의 직업교육 개편 및 운영 전문성 강화	직업교육의 학과 개편이 지역산업과 미래 산업사회 취업 수요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실질적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전략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교육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	●
	직업교육기관의 내실화를 통한 복합적 교육 지원 기능 강화	직업교육 선도모델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직업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학교의 복합적 교육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	●
	직업교육 전문성을 위한 교원 역량 개발 기반 마련	교원의 직업교육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방안	●	●
	직업교육의 전문성 및 혁신성 강화를 위한 유연한 교육 운영 추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생 및 산업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	●	●
	소규모 학교의 특성화 및 인력 양성 기능 강화	저출생으로 인해 증가하는 직업계고 소규모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을 위해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특화하여 지역산업과 연계된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하는 방안	●	-

라. 유연성

- 유연성은 학생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혁신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학습경로를 다각화하는 것으로, 직업교육 졸업자들이 사회진출 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경로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및 후속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함.
  - 유연성의 정의와 하위 요소의 초안은 <표 4-11>을 참조하기 바람.
- 유연성 방향성과 하위 요소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5-19>와 같음.
  - 분석 결과, 중등직업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초안의 방향성과 모든 하위 요소에 대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다만 고등직업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전문대학 체제 다변화 및 학위 체계 고도화’에 대한 타당성을 낮게 판단하였음. 이는 전문대학의 학위 체계 고도화를 위해서는 전문대학 교육의 차별성이 우선시될 필요가 있고, 시기적으로 박사 과정을 논의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5-19>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유연성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구분	명칭	중등직업교육						고등직업교육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CVR (≥.42)	합의도수렴도 (≥.75)	합의도수렴도 (≤.50)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CVR (≥.46)	합의도수렴도 (≥.75)	합의도수렴도 (≤.50)
방향성	[유연성] 학생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적 진로설계 및 성장경로 다각화	485	.36	100	1.00	1.00	.00	450	.50	100	1.00	.78	.50
	다양한 학생 특성에 대응하는 차별화된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485	.36	100	1.00	1.00	.00	441	.60	94.1	.88	.75	.50
하위 요소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및 성장경로 가시화	490	.30	100	1.00	1.00	.00	/	/	/	/	/	/
	선취업 후학습 제도의 내실화 및 경로 다양화	475	.43	100	1.00	.95	.13	/	/	/	/	/	/
	고졸자 취업경로 확대 및 안정적 진입과 정착 지원 강화	490	.30	100	1.00	1.00	.00	/	/	/	/	/	/
	성인·외국인 학습자 대상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	/	/	/	/	/	429	.57	94.1	.88	.75	.50
	전문대학 체제 다변화 및 학위 체계 고도화	/	/	/	/	/	/	424	1.00	70.6	.41	.60	1.00

주 1: 중등직업교육 관련 전문가 20명과 고등직업교육 관련 전문가 17명이 각각 응답한 결과임.

주 2: 음영은 타당화 지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 유연성에 대한 2차 델파이는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사항에 대한 검토로 이루어졌음.
  - 중등직업교육의 경우 기존의 다양성 방향성에 위치하였던 ‘직업교육 학습자의 다양성 확대와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를 재배치하였으며, 동일하게 다양성 방향성에 위치하였던 ‘직업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물리적 경계 극복 전략’을 ‘직업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접근 여건 개선 강화’로 변경하여 재배치한 요소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음. 고등직업교육은 타당성이 낮은 요소를 ‘전문대학 체제 다양화 및 실무 중심 학위 체계 고도화’로 변경한 안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음.

〈표 5-20〉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유연성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구분	명칭	중등직업교육						고등직업교육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CVR (≥.42)	합의도 (≥.75)	수렴도 (≤.50)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CVR (≥.46)	합의도 (≥.75)	수렴도 (≤.50)
하위 요소	직업교육 학습자의 다양성 확대와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425	.62	90.0	.80	.75	.50	/	/	/	/	/	/
	직업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접근 여건 개선 강화	415	.73	90.0	.80	.75	.50	/	/	/	/	/	/
	전문대학 체제 다양화 및 실무 중심 학위 체계 고도화	/	/	/	/	/	/	429	.67	88.2	.76	.75	.50

주: 중등직업교육 관련 전문가 20명과 고등직업교육 관련 전문가 17명이 각각 응답한 결과임.

- 이상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유연성에 대한 최종 확정안은 다음 〈표 5-21〉과 같음.

〈표 5-21〉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유연성(최종안)

구분	명칭	설명	범위	
			중등	고등
방향성	[유연성] 학생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적 진로설계 및 학습경로 다각화	직업교육 졸업자들이 사회로 진출 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경로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및 후속학습 기회 확대	●	●
하위 요소	학습자 특성과 진로목표 기반의 유연한 직업교육 체계 구축	학생 개인의 특성과 학습여건, 진로목표를 고려해 유연한 직업교육과정의 맞춤형 이수경로를 설계하여 자기주도적 성장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	●

구분	명칭	설명	범위	
			중등	고등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및 성장경로 가시화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희망에 맞춰 장기적 성장경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학생들이 미래 직업과 경력을 명확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	-
	선취업 후학습 제도의 내실화 및 경로 다양화	선취업 후학습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재직자 특별전형 등 고등교육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후학습 경로를 구축하여 평생학습과 경력개발을 촉진하는 방안	●	-
	고졸자 취업경로 확대 및 안정적 진입과 정착 지원 강화	양질의 고졸 취업처를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하며, 사회적 인정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고졸자 취업과 정주의 안정성과 매력도를 높이는 방안	●	-
	직업교육 학습자의 다양성 확대와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직업계고가 중등 단계 학생뿐 아니라 성인학습자, 고교 미졸업자 등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평생직업교육을 제공하여 직업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	●	-
	직업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접근 여건 개선 강화	통학버스 제공 및 기숙사 확충 등 물리적 인프라 확충과 온라인 교육 활용을 통해 물리적·지리적 제한을 극복함으로써 중등직업교육의 접근성을 향상하는 방안	●	-
	성인·다문화 학습자 대상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성인학습자와 다문화 학습자(외국인, 이주민 등)의 특성에 맞춘 모듈형 직업교육 및 평생학습 기반 과정을 운영하는 방안	-	●
	전문대학 체제 다양화 및 실무 중심 학위 체계 고도화	전문대학이 다양한 학습자의 특성과 사회·산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과 유형을 차별화·확장하고, 고숙련 전문인재 양상을 위한 실무 중심 학위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	-	●

#### 마. 연계성

- 연계성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 생태계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다층적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중등·고등 직업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기업·학교 간 협력을 확대하여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교육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을 의미함.
  - 연계성의 정의와 하위 요소의 초안은 <표 4-12>를 참조하기 바람.
- 연계성 방향성과 하위 요소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5-22>와 같음.
  - 분석 결과, 방향성과 모든 하위 요소가 타당성 지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타당성에 관한 정량적 분석 결과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정성적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명칭과 표현을 수정하였음. 다만 해당 수정 사항이 타당성의 재검토가 필요할 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2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표 5-22〉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연계성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구분	명칭	중등직업교육						고등직업교육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CVR (≥.42)	합의도 (≥.75)	수렴도 (≤.50)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CVR (≥.46)	합의도 (≥.75)	수렴도 (≤.50)
방향성	[연계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 생태계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다층적 연계 및 협력 강화	490	.30	100	1.00	1.00	.00	465	.48	100	1.00	.80	.50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지자체, 기업)의 역할 강화	485	.36	100	1.00	1.00	.00	471	.46	100	1.00	.80	.50
하위 요소	직업교육기관의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 및 지역사회 기여 확대	470	.46	100	1.00	.80	.50	465	.48	100	1.00	.80	.50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의 연계 강화 및 역할 명확화	440	.80	90.0	.80	.80	.50	447	.70	88.2	.76	.80	.50
	직업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470	.46	100	1.00	.80	.50	/	/	/	/	/	/
	대학 간(일반대학, 전문대학 등) 수직·수평적 연계를 통한 성장경로 확보	/	/	/	/	/	/	4.29	.75	82.4	.65	.75	.50

주: 중등직업교육 관련 전문가 20명과 고등직업교육 관련 전문가 17명이 각각 응답한 결과임.

□ 이상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연계성에 대한 최종 확정안은 다음 〈표 5-23〉과 같음.

〈표 5-23〉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연계성(최종안)

구분	명칭	설명	범위	
			중등	고등
방향성	[연계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 생태계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다층적 연계 및 협력 강화	중등·고등 직업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기업·학교 간 협력을 확대하여 산업 및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교육 생태계 활성화	●	●
하위 요소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지자체, 기업)의 역할 강화	학교와 지역기업 간 연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지역 정주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직업교육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	●	●
	직업교육기관의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 및 지역사회 기여 확대	지역 특화 산업, 뿌리산업 등 인력 수요와 교육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직업교육기관이 민첩하게 대응함으로써 지역기업, 직업교육기관, 지자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직업교육체제 구축	●	●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의 연계 강화 및 역할 명확화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이 각자의 역할과 전문성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	●	●

구분	명칭	설명	범위	
			중등	고등
	직업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직업교육 운영에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직업교육 프로그램(도제학교, 중기특성학교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 과정평가형 자격 등)의 내실과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	●	-
	대학 간(일반대학, 전문대학 등) 수직·수평적 연계를 통한 성장경로 확보	전문대학 간 또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 학점교류, 연합대학 체계, 컨소시엄 운영 등 대학 간 수평적·수직적 연계를 활성화하고, 성장경로 연계를 확대하여 학생의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	●

## 2.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정책 방안

-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정책 방안은 앞선 개선 방향성에 입각한 구체적인 단위 실천 과제로서 의미를 지님. 해당 방안들은 직업교육체제 주요 현안과 이상적 미래상에 대한 분석과 전문가 면담 과정에서 도출된 방안들을 기본틀로 하고 1차 델파이 조사 과정에서 개방형 설문을 통해 추가적인 방안들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음.
  - 정책 방안은 현재 직업교육체제 현안에서 이상적 미래상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방향성별로 정리하였으며, 개선 방향성과 동일하게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방안과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방안이 구분되었음.
  - 전문가 델파이 2차 조사를 통해 정책 방안(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3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타당성이 확보된 정책 방안의 효과성과 실행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정책 방안 추진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 해당 정책 방안의 우선순위는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즉 이상적 미래상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적 로드맵으로서 의미를 지님.

### 가. 정책 방안 타당성 검토: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 직업교육체제 정책 방안은 동등성, 전문성, 유연성, 연계성 등 4가지 직업교육체제 개선 방향성의 틀에 맞추어 구성되었으며, 중등과 고등 직업교육의 공통 방안과 개별 방안으로 구분되었음. 최종적으로 95개의 방안을 2차 델파이 조사에서 검토함.

- 먼저 동등성 관련 정책 방안은 ‘직업교육법 제정’과 같은 공통 방안 9개와 6개의 중등직업교육 방안, 5개의 고등직업교육 방안으로 구성되어, 총 20개의 방안이 검토되었음.
  - 전문성 관련 정책 방안은 ‘직업교육기관의 시설 및 기자재 현대화를 위한 목적 사업비의 안정적 투입 확대’와 같은 공통 방안 2개와 16개의 중등직업교육 방안, 8개의 고등직업교육 방안으로 구성되어, 총 26개의 방안이 검토되었음.
  - 유연성 관련 정책 방안은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이수자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 강화’와 같은 공통 방안 5개와 17개의 중등직업교육 방안, 8개의 고등직업교육 방안으로 구성되어, 총 30개의 방안이 검토되었음.
  - 마지막으로 연계성 관련 정책 방안은 ‘학교-기업 연계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와 같은 공통 방안 11개와 3개의 중등직업교육 방안, 5개의 고등직업교육 방안으로 구성되어, 총 19개의 방안이 검토되었음.
- 해당 정책 방안 초안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는 개별 정책 방안의 효과성과 실행가능성을 검토하는 3차 델파이 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으며, 2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 타당성이 낮은 정책 방안은 제외하였음.
- 2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 타당성이 낮게 나타난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중등직업교육: (동등성)직업계고 비중 확대 정책 추진, (전문성)소규모 직업계고 지원 정책 추진, 소규모 학교 지원을 위한 지역 단위 직업교육지원센터 설립, (유연성)일반고 학생 대상 직업교육 위탁교육과정 도입 및 제도화, 지역 단위 스쿨버스 운영을 통한 직업계고의 물리적 접근성 제고 등 5개 정책 방안
    - 고등직업교육: (동등성)전문대학 학제 제한 개방(전문대학-일반대학 간 학제 일원화), 고등교육기관 신규 직업교육과정의 인증 절차 마련, (유연성)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창업교육 강화 및 창업 생태계 기반 마련, 마이스터대학 성인·외국인 전용 과정 개설, (연계성)지역 기반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일반대학-전문대학 간 학점 교류 및 연계 프로그램 확대, 전문대 간 협력 확대(공동 학위, 학점 교류 등), 일반대-전문대 연계 모델(커뮤니티칼리지 개념 도입) 등 9개 정책 방안

- 이상의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정책 방안의 초안과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5-24>와 같음.

〈표 5-24〉 직업교육체제 정책 방안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구분	정책 방안(안)	중등직업교육				고등직업교육					
		평균	표준 편차	CVR 합의도수렴도 (≥.42)(≤.50)	합의도수렴도 (≥.75)(≤.50)	평균	표준 편차	CVR 합의도수렴도 (≥.46)(≤.75)	합의도수렴도 (≥.75)(≤.50)		
중 등 성	직업교육법 제정	5.00	.00	100	1.00	4.41	.69	882	.76	.80	.50
	5년 단위 직업교육 발전 기본계획 수립	4.80	.40	100	1.00	4.71	.46	100	1.00	.80	.50
	직업교육 성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 확대	4.70	.46	100	1.00	4.53	.50	100	1.00	.80	.50
	국가역량체계(KQF)의 지속 개발 및 적용 확대	4.35	.85	85.0	.70	4.06	.87	765	.53	.75	.50
	개인 자격·훈련·교육·경력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 및 활용처 확대	4.50	.59	95.0	.90	4.18	.71	941	.88	.75	.50
	국가 차원의 직업교육 인식 개선 사업 추진	4.85	.48	95.0	.90	4.24	.73	824	.65	.75	.50
	뿌리산업(기반산업) 분야 직업교육 보호 정책 추진	4.25	1.04	80.0	.60	4.12	.68	824	.65	.75	.50
	국가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 장기투자 전략 수립	4.90	.30	100	1.00	4.18	.71	824	.65	.75	.50
	국가 차원의 직업교육 위원회 설치	4.70	.46	100	1.00	4.18	.78	765	.53	.75	.50
	직업계고 비중 확대 정책 추진	3.95	.86	70.0	.40	.50	1.00				
직업계고 졸업자의 동일계열 진학 기회 확대(예: 동일계 특별전형 확대: 1.5%→5.0%)	4.25	.83	85.0	.70	.75	.50					
초중학교 단계 직업 및 진로 교육 내실화	4.80	.51	95.0	.90	1.00	.00					
중학교 교사 대상 직업교육 인식 개선 및 연수 제공	4.75	.43	100	1.00	.95	.13					
중등직업교육의 새로운 영역 탐색 및 확대	4.70	.46	100	1.00	.80	.50					
교원양성 교직과정에 직업교육 교양 과목 신설	4.55	.50	100	1.00	.80	.50					
신산업 신기술 분야 진도학과 인프라 구축 지원 강화					4.18	.71	824	.65	.75	.50	
비하위 전문교육과정 인증체계 도입 및 활성화(예: 마이크로 디그리, 마이크로 자격, 학위연계 등)					4.18	.78	882	.76	.75	.50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학력 및 학위 체계 일원화(예: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학사학위)					4.71	.57	941	.88	1.00	.00	
전문대학 학제 재한 개방(전문대학-일반대학 간 학제 일원화)					3.71	1.02	529	.06	.50	1.00	
고등교육기관 신규 직업교육과정의 인증 절차 마련					3.59	.69	588	.18	.75	.50	
직업교육기관의 시설 및 기자재 현대화를 위한 목적 사업비의 안정적인 투입 확대	4.80	.40	100	1.00	1.00	.00	453	.61	.941	.88	
장기직무연수,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 교원 역량 개발 추진	4.75	.43	100	1.00	.95	.13	429	.67	882	.76	
직업교육 재구조화의 기준 명확화 및 의사결정 과정의 전문성 확보(조정기구 신설 등)	4.45	.59	95.0	.90	.78	.50					
마이스터고 및 협약형 특성화고 등 선도모델의 엄격한 질 관리 체계 마련	4.45	.92	95.0	.90	.80	.50					

구분	정책 방안(인)	중등직업교육				고등직업교육					
		평균	표준 편차	CVR 규정률 ( $\geq 42$ )	합의도 수렴도 ( $\leq 50$ )	평균	표준 편차	CVR 규정률 ( $\geq 40$ )	합의도 수렴도 ( $\leq 50$ )		
고등	직업교육기관 내 다양한 유형의 전문가 배치(진로전담교사, 취업계층 전문상담사, 코디네이터 등) 탄력적인 학급당 학생 수 운영을 통해 개별화 지도 추진 NCS 기반 교육과정의 자율성 및 유연성을 확대하여 교육기관별 특성화 촉진 현장실습 유형의 다양화 및 유연한 운영 방식 마련(공동실습수, 산업체 견학 등) 직업계고 교사 대상 전문대학 및 대학 연계 직무연수 프로그램 정례화 및 확대 운영 전문교과교사의 부진공 획득 기회 확대 및 규제 완화 산학겸임교사 제도 내실화 및 활성화 직업계고 맞춤형 진로전담교사 양성 및 확충 진로전담교사의 취업 연계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운영 학교 자체 교과서 개발 지원 및 현장 중심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원 강화 전문교과교사 대상 진로설계 역량 강화 분야 특화 직업교육을 위한 소규모 학교체제 마련 소규모 직업계고 지원 정책 추진 소규모 학교 지원을 위한 지역 단위 직업교육지원센터 설립 교원 임금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역 단위 직업교육지원센터 설립 전문대학 교수진 내 산업체 경력 교수의 비율 확대를 위한 대학-기업 인사교류 제도 도입(사바티컬 및 리버스 사바티컬 활성화) 산업체 전문가의 전문대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참여 확대 및 인센티브 지원 전문대학 내 외국인 및 성인학습자 대상 주문식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역량 강화 고등직업교육기관의 학사제도 유연화(예: 3학기제, 집중이수제, 수업연한 삭제, 원격교육, 평생학번제 도입 등) 대학 내 소단위 전공, 융합학과 및 가상학과 도입을 통한 교육과정 혁신 지원 확대 교수학습 방법 혁신을 위한 디지털 AI/AR/VR 기반 실습 인프라 구축 및 교수법 전환 지원 RPI(학습경험인정제) 확대도 성인 및 재직자 학습 결과의 공식적 인정체계 구축 강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이수자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 강화 직업교육을 통한 성장경로 DB 축적 및 플랫폼 구축	4.60	.58	95.0	.90	.80	.50	/	/	/	/
		4.40	.92	80.0	.60	.80	.50	/	/	/	/
		4.50	.50	100.0	1.00	.78	.50	/	/	/	/
		4.00	.89	85.0	.70	.94	.13	/	/	/	/
		4.40	.66	90.0	.80	.78	.50	/	/	/	/
		4.45	.50	100.0	1.00	.75	.50	/	/	/	/
		4.35	.65	90.0	.80	.75	.50	/	/	/	/
		4.40	.66	90.0	.80	.78	.50	/	/	/	/
		4.45	.59	95.0	.90	.78	.50	/	/	/	/
		4.30	.64	90.0	.80	.75	.50	/	/	/	/
		4.65	.48	100.0	1.00	.80	.50	/	/	/	/
		4.25	.77	80.0	.60	.75	.50	/	/	/	/
		4.15	.91	75.0	.50	.69	.63	/	/	/	/
		4.15	.85	70.0	.40	.50	1.00	/	/	/	/
		4.53	.61	94.1	.88	.80	.50	/	/	/	/
		4.18	.62	88.2	.76	.75	.50	/	/	/	/
4.24	.64	88.2	.76	.75	.50	/	/	/	/		
4.06	.73	76.5	.53	.75	.50	/	/	/	/		
4.24	.81	88.2	.76	.75	.50	/	/	/	/		
4.12	.76	88.2	.76	.75	.50	/	/	/	/		
4.29	.57	94.1	.88	.75	.50	/	/	/	/		
4.12	.76	88.2	.76	.75	.50	/	/	/	/		
4.70	.46	100.0	1.00	.80	.50	/	/	/	/		
4.75	.43	100.0	1.00	.95	.13	/	/	/	/		

유  
연

구분	정책 방안(안)	중등직업교육				고등직업교육							
		평균	표준 편차	CVR 합의를률(≥42)(≤50)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CVR 합의를률(≥46)(≤50)	표준 편차				
중등	시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4.55	.50	100	1.00	80	.50	4.00	.77	70.6	.41	.50	1.00
	중소기업 재직자의 후학습 참여 지원 강화	4.75	.43	100	1.00	95	.13	4.24	.73	82.4	.65	.75	.50
	창업교육 강화 및 창업 생태계 기반 마련	4.35	.65	90.0	.80	.75	.50	3.71	.57	64.7	.29	.75	.50
	직업계고의 진로선택 학기제 (시범)도입	4.00	.71	85.0	.70	1.00	.00						
	졸업생 계속지원센터의 전국 단위 확대 운영	4.40	.66	90.0	.80	.78	.50						
	선취업 후학습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후학습 경로 다양성 강화	4.90	.30	100	1.00	1.00	.00						
	대입 전형 중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확대	4.85	.36	100	1.00	1.00	.00						
	고졸자에 대한 공공부문 및 우량기업 취업처 발굴 및 취업 연계 지원 확대 (MOU 체결 확대)	4.80	.40	100	1.00	1.00	.00						
	고졸 청년 대상 장기적인 사회적 안전망 및 인센티브 제도 강화	4.85	.36	100	1.00	1.00	.00						
	학생 유형 및 진로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모델 개발 및 적용	4.70	.56	95.0	.90	.95	.13						
	직업계고 학생 대상 직업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4.45	.59	95.0	.90	.78	.50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지원 확대	4.45	.67	90.0	.80	.80	.50						
	직업계고 내 심리·정서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4.75	.43	100	1.00	95	.13						
	성인학습자 대상의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범 사업 추진	4.10	.62	85.0	.70	.94	.13						
	일련고 학생 대상 직업교육 위탁교육과정 도입 및 제도화	3.90	.83	70.0	.40	.69	.63						
외국인 유학생 대상 직업교육 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 및 내실화	4.20	1.12	80.0	.60	.80	.50							
융합형 특성화고등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직업계고 유형 마련	4.40	.73	85.0	.70	.80	.50							
지역 단위 스쿨버스 운영을 통한 직업계고의 물리적 접근성 제고	4.10	.83	70.0	.40	.50	1.00							
중등직업교육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보급	4.15	.73	80.0	.60	.75	.50							
중등직업교육에서의 온라인 교육 규제 완화	4.15	.85	80.0	.60	.75	.50							
성인학습자 및 외국인 학습자 대상 개인 맞춤형 직업교육 제공 체계 구축 및 확장							4.35	.59	94.1	.88	.75	.50	
전문대학 내 비학위 단기 전문직무 과정 확대 및 학위과정 연계 방안 마련(마이							4.29	.67	88.2	.76	.75	.50	
크로 디그리 연계 학위 운영 활성화)							4.35	.68	88.2	.76	.75	.50	
마이스터대학 운영의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							4.24	.73	82.4	.65	.75	.50	
전문기술직사과정의 내실화 및 제도적 인적 강화							3.71	.89	52.9	.06	.75	.50	
마이스터대학 성인·외국인 전용 과정 개설													

성

구분	정책 방안(안)	중등직업교육				고등직업교육					
		평균	표준 편차	CVR 규정률 (≥.42)(≥.75)(≤.50)	합의도 수렴도 (≥.75)(≤.50)	평균	표준 편차	CVR 규정률 (≥.46)(≥.75)(≤.50)	합의도 수렴도 (≥.75)(≤.50)		
연 계 성	진문대학 내 진로상담 전문가 및 경력개발상담센터 설치 원격 및 블렌디드 학습 과정 활성화 유연한 모듈형 학습 과정 개발 및 활성화					4.00	.69	765	.53	1.00	.00
	학교-기업 연계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지자체 주도 취업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4.85	.36	100	1.00	4.29	.67	882	.76	.75	.50
	중앙-지역 취업센터 기능 확대 및 활성화	4.50	.59	95.0	.90	4.06	.64	824	.65	1.00	.00
	지역 기반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4.20	.60	90.0	.80	3.82	.78	706	.41	.75	.50
	고졸-전문대 졸업자의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확대	4.60	.58	95.0	.90	4.24	.73	824	.65	.75	.50
	직업계고-전문대학 간 연계 교육과정 확대(3+1.5, 2+2 모델)	4.45	.74	85.0	.70	4.41	.77	824	.65	.80	.50
	지역 맞춤형 학과 및 교육과정 개발	4.45	.67	90.0	.80	4.29	.75	824	.65	.75	.50
	교육부-고용노동부-지자체 간 협력 강화	4.65	.48	100	1.00	4.41	.84	882	.76	.80	.50
	고교학점제를 활용한 직업계고-전문대 연계 운영 강화	4.20	.75	80.0	.60	4.41	.60	941	.88	.75	.50
	지역 전략산업 및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직업교육 로드맵 설정 및 지원 체계 구축(인센티브 제공, 산업체 주도형 교육 확대)	4.60	.66	90.0	.80	4.29	.57	941	.88	.75	.50
중 등	중등과 고등 직업교육 간의 명확한 역할 설정 및 협력모델 구축	4.50	.59	95.0	.90	4.18	.78	882	.76	.75	.50
	중등-고등 간 시찰 교육자원-취업처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4.45	.67	90.0	.80	4.06	.64	824	.65	1.00	.00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한 고졸 취업 보장형 프로그램 도입	4.80	.40	100	1.00						
	중등직업교육에서 학습한 성과를 대학에서 인정하는 제도 도입(학점인정 등)	4.55	.59	95.0	.90						
	심리-사회적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및 가족 연계 강화(지역사회 사회복지 인프라 활용)	4.60	.58	95.0	.90						
	일반대학-전문대학 간 학점 교류 및 연계 프로그램 확대					3.71	.89	647	.29	.75	.50
	전문대학과 지역산업 연계 모델 개발 및 운영(지자체-전문대-기업 협력)					4.59	.49	1000	1.00	.80	.50
	RISE 체계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전문대 교육 지원 확대					4.71	.46	1000	1.00	.80	.50
	전문대 간 협력 확대(공동 학위, 학점 교류 등)					3.94	.80	647	.29	.50	1.00
	일반대-전문대 연계 모델(커뮤니티칼리지 개념 도입)					3.94	.80	647	.29	.50	1.00

주 1: 중등직업교육 관련 전문대 20명과 고등직업교육 관련 전문대 17명이 각각 응답한 결과임.

주 2: 음영은 타당화 지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나. 정책 방안 타당성 검토: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 2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 타당성이 확보된 정책 방안에 대한 3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정책 방안의 효과성과 실행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음.
  - 먼저 효과성은 해당 정책 방안이 실행될 때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구현에 효과를 발휘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실행가능성은 해당 정책 방안이 오늘날 직업교육체제의 현실적 상황에서 실현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함.
  - 따라서 효과성이 높고 실행가능성이 높은 정책 방안은 상대적 우선순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효과성과 실행가능성이 낮은 정책 방안은 상대적 우선순위가 낮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효과성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행가능성이 낮은 정책 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정책 방안은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음.
  
-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총 84개 정책 방안을 대상으로 3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음. 최종적으로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의 공통 정책 방안이 24개로 도출되었으며, 중등직업교육 정책 방안은 40개(합: 64개), 고등직업교육 정책 방안은 20개(합: 44개)가 도출되었음.
  - 2차 델파이 조사에서 공통 정책 방안이었던 유연성의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창업교육 강화 및 창업 생태계 기반 마련'과 연계성의 '지역 기반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의 경우 고등직업교육 전문가들은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으나, 중등직업교육 전문가들에 의해 타당성이 확보됨. 이에 따라 해당 3개의 정책 방안은 기존의 공통 정책 방안에서 중등직업교육 정책 방안으로 변경하여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 먼저 중등직업교육 영역의 정책 방안에 관한 3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5-25>와 같음.

- 먼저 효과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정책 방안을 살펴보면, ‘고졸자에 대한 공공부문 및 우량기업 취업처 발굴 및 취업 연계 지원 확대(MOU 체결 확대)’, ‘직업계고 내 심리·정서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한 고졸 취업 보장형 프로그램 도입’(각 4.95점)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도 ‘직업교육법 제정’, ‘국가 차원의 직업교육 인식 개선 사업 추진’(각 4.89점) 역시 높게 나타났음. 그러나 효과성의 전체 평균이 4.49점으로 나타나 델파이 조사에서 언급된 정책 방안들이 대체로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효과성이 낮게 나타난 정책 방안은 ‘외국인 유학생 대상 직업교육 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 및 내실화’(3.89점), ‘직업계고의 진로선택 학기제 (시범)도입’(3.95점), ‘고교학점제를 활용한 직업계고-전문대 연계 운영 강화’, ‘직업계고-전문대학 간 연계 교육과정 확대(3+1.5, 2+2 모델)’, ‘성인학습자 대상의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범 사업 추진’, ‘중등직업교육에서의 온라인 교육 규제 완화’, ‘현장실습 유형의 다양화 및 유연한 운영 방식 마련(공동실습소, 산업체 견학 등)’(각 4.00점)으로 나타났음.
- 실행가능성과 관련하여, 평균 4.29점으로 전반적인 실행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음. 가장 높은 실행가능성을 보인 것인 ‘5년 단위 직업교육 발전 기본계획 수립’(4.79점)으로 나타났고, ‘직업계고 내 심리·정서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마이스터고 및 협약형 특성화고 등 선도모델의 엄격한 질 관리 체계 마련’(각 4.74점)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실행가능성이 낮게 나타난 정책 방안은 ‘직업교육 성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 확대’, ‘고졸 전문대 졸업자의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확대’, ‘뿌리산업(기반산업) 분야 직업교육 보호 정책 추진’, ‘외국인 유학생 대상 직업교육 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 및 내실화’(각 3.79점)로 나타났음.

〈표 5-25〉 직업교육체제 정책 방안에 대한 3차 델파이 조사 결과(중등직업교육)

구분	정책 방안	효과성		실행가능성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동등성	공통	직업교육법 제정	4.89	.31	4.58	.67
		5년 단위 직업교육 발전 기본계획 수립	4.53	.50	4.79	.41
		직업교육 성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 확대	4.79	.41	3.79	.83
		국가역량체계(KQF)의 지속 개발 및 적용 확대	4.26	.64	4.00	.73
		개인 자격·훈련·교육·경력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 및 활용처 확대	4.58	.59	4.16	.74
		국가 차원의 직업교육 인식 개선 사업 추진	4.89	.31	4.32	.86
		뿌리산업(기반산업) 분야 직업교육 보호 정책 추진	4.16	.67	3.79	.61
		국가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 장기투자 전략 수립	4.74	.44	4.32	.80
	국가 차원의 직업교육 위원회 설치	4.68	.46	4.63	.58	
	중등	직업계고 졸업자의 동일계열 진학 기회 확대(예: 동일계 특별전형 확대: 15%→50%)	4.26	.71	4.00	1.12
초중학교 단계 직업 및 진로 교육 내실화		4.84	.36	4.53	.60	
중학교 교사 대상 직업교육 인식 개선 및 연수 제공		4.63	.48	4.68	.57	
중등직업교육의 새로운 영역 탐색 및 확대		4.58	.49	4.58	.59	
교원양성 교직과정에 직업교육 교양 과목 신설		4.68	.46	4.21	.69	
전문성	공통	직업교육기관의 시설 및 기자재 현대화를 위한 목적 사업비의 안정적 투입 확대	4.84	.36	4.42	.67
		장기직무연수,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 교원 역량 개발 추진	4.79	.41	4.42	.49
	중등	직업교육 재구조화의 기준 명확화 및 의사결정 과정의 전문성 확보(조정기구 신설 등)	4.47	.50	4.47	.60
		마이스터고 및 협약형 특성화고 등 선도모델의 엄격한 질 관리 체계 마련	4.79	.41	4.74	.55
		직업교육기관 내 다양한 유형의 전문가 배치(진로전담교사, 취약계층 전문상담사, 코디네이터 등)	4.63	.58	4.05	.76
		탄력적인 학급당 학생 수 운영을 통해 개별화 지도 촉진	4.32	.65	3.84	.59
		NCS 기반 교육과정의 자율성 및 유연성을 확대하여 교육기관별 특성화 촉진	4.26	.64	4.16	.49
		현장실습 유형의 다양화 및 유연한 운영 방식 마련(공동실습소, 산업체 견학 등)	4.00	.56	4.32	.57
		직업계고 교사 대상 전문대학 및 대학 연계 직무연수 프로그램 정례화 및 확대 운영	4.26	.55	4.32	.65
		전문교과교사의 부진공 획득 기회 확대 및 규제 완화	4.47	.60	4.37	.74
		산학겸임교사 제도 내실화 및 활성화	4.26	.64	4.11	.72
		직업계고 맞춤형 진로전담교사 양성 및 확충	4.21	.61	4.26	.71
		진로전담교사의 취업 연계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운영	4.32	.46	4.53	.50
		학교 자체 교과서 개발 지원 및 현장 중심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원 강화	4.21	.69	4.16	.67
		전문교과교사 대상 진로설계 역량 강화	4.63	.48	4.63	.48
분야 특화 직업교육을 위한 소규모 학교체제 마련	4.16	.81	3.84	.74		
유연성	공통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이수자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 강화	4.79	.41	4.26	.71
		직업교육을 통한 성장경로 DB 축적 및 플랫폼 구축	4.53	.50	4.63	.48
		중소기업 재직자의 후학습 참여 지원 강화	4.53	.50	4.47	.68
	중등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4.42	.59	4.53	.50
		창업교육 강화 및 창업 생태계 기반 마련	4.16	.59	3.89	.55
		직업계고의 진로선택 학기제(시범)도입	3.95	.76	3.95	.83
		졸업생 계속지원센터의 전국 단위 확대 운영	4.53	.60	4.21	.83
		선취업 후학습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후학습 경로 다양성 강화	4.84	.36	4.63	.48
		대입 전형 중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확대	4.79	.41	4.68	.46
		고졸자에 대한 공공부문 및 우량기업 취업처 발굴 및 취업 연계 지원 확	4.95	.22	4.33	.75

구분	정책 방안	효과성		실행가능성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대(MOU 체결 확대)					
	고졸 청년 대상 장기적인 사회적 안전망 및 인센티브 제도 강화	4.84	.36	4.16	.81	
	학생 유형 및 진로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모델 개발 및 적용	4.63	.48	4.32	.65	
	직업계고 학생 대상 직업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4.79	.41	4.63	.48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지원 확대	4.26	.55	4.47	.60	
	직업계고 내 심리·정서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4.95	.22	4.74	.44	
	성인학습자 대상의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범 사업 추진	4.00	.73	4.16	.74	
	외국인 유학생 대상 직업교육 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 및 내실화	3.89	.97	3.79	.89	
	융합형 특성화고등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직업계고 유형 마련	4.37	.67	4.11	.64	
	중등직업교육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보급	4.11	.72	4.47	.60	
	중등직업교육에서의 온라인 교육 규제 완화	4.00	.79	4.39	.68	
	연 계 성	공통	학교-기업 연계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지자체 주도 취업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4.84	.36	4.32
중앙·지역 취업센터 기능 확대 및 활성화			4.47	.75	4.53	.82
고졸·전문대 졸업자의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확대			4.58	.75	3.79	.77
직업계고-전문대학 간 연계 교육과정 확대(3+1.5, 2+2 모델)			4.00	.86	3.95	.60
지역 맞춤형 학과 및 교육과정 개발			4.53	.50	4.16	.59
교육부-고용노동부-지자체 간 협력 강화			4.74	.44	4.53	.68
중등		고교학점제를 활용한 직업계고-전문대 연계 운영 강화	4.00	.73	4.26	.64
		지역 전략산업 및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직업교육 로드맵 설정 및 지원 체계 구축(인센티브 제공, 산업체 주도형 교육 확대)	4.47	.60	3.95	.69
		중등과 고등 직업교육 간의 명확한 역할 설정 및 협력모델 구축	4.37	.58	3.95	.60
		중등-고등 간 시설·교육자원 취업처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4.32	.57	4.00	.65
		지역 기반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4.16	.59	4.26	.44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한 고졸 취업 보장형 프로그램 도입	4.95	.22	4.37	.67
	중등직업교육에서 학습한 성과를 대학에서 인정하는 제도 도입(학점인정 등)	4.68	.57	4.42	.49	
	심리·사회적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및 가족 연계 강화(지역사회 사회복지 인프라 활용)	4.79	.41	4.32	.65	
평균		4.49	.63	4.29	.71	

□ 중등직업교육 영역 정책 방안에서 효과성과 실행가능성의 개별적인 분석보다 중요한 것은 이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한 우선순위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음. 3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 기반해 효과성과 실행가능성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26>과 같음.

- 최우선 추진 과제는 ‘고졸자에 대한 공공부문 및 우량기업 취업처 발굴 및 취업 연계 지원 확대(MOU 체결 확대)’, ‘직업계고 내 심리·정서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한 고졸 취업 보장형 프로그램 도입’으로 나타났음.

-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효과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행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정책 방안들인데, 대표적으로 ‘고졸 청년 대상 장기적인 사회적 안전망 및 인센티브 제도 강화’, ‘직업교육 성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 확대’와 같은 정책 방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최우선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중등직업교육 정책 방안을 마련하되, 효과성이 높고 실행가능성이 낮은 중순위 과제를 장기적인 과제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표 5-26〉 중등직업교육의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정책 방안 우선순위

구분	최우선 추진 과제 효과성 ↑ - 실행가능성 ↑	중순위 과제(장기 추진) 효과성 ↑ - 실행가능성 ↑	중순위 과제(단기 추진) 효과성 ↓ - 실행가능성 ↑	후순위 과제 효과성 ↓ - 실행가능성 ↓
정책 방안	고졸자에 대한 공공부문 및 은량기업 취업 지원 확대 및 취업 연계 지원 확대(MOU 체결 확대)	고졸 청년 대상 장기적인 사회적 안전망 및 인센티브 제도 강화	직업교육 재구조화의 기준 명확화 및 의사결정 과정의 전문성 확보(조정기구 신설 등)	지역 전략산업 및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직업교육 로드맵 설정 및 지원 체계 구축(인센티브 제공, 산업체 주도형 교육 확대)
	직업제고 내 심리·정서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직업교육 성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 확대	전문교과교사의 부전공 획득 기회 확대 및 규제 완화	유형별 특성화고등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직업제고 유형 마련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한 고졸 취업 보장형 프로그램 도입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이수자 및 정주 여건 개선 지원 강화	중앙·지역 취업센터 기능 확대 및 활성화	중등과 고등 직업교육 간의 명확한 역할 설정 및 협력모델 구축
	직업교육법 제정	표면양성 교과과정에 직업교육 교양 과목 신설	시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탄력적인 학급당 학생 수 운영을 통해 개별화 지도 촉진
	국가 차원의 직업교육 인식 개선 사업 추진	직업교육기관 내 다양한 유형의 전문가 배치(진로전담교사, 취업계층 전문상담사, 코디네이터 등)	진로전담교사의 취업 연계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운영	중등·고등 간 시설 교육자원 투입처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초중학교 단계 직업 및 진로 교육 내실화	개인 자격·훈련교육·경력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 및 활용성 확대	직업제고 교사 대상 전문대학 및 대학원 연계 직무연수 프로그램 운영 확대	국가역량체계(KQF)의 지속 개발 및 적용 확대
	직업교육기관의 시설 및 기자재 현대화를 위한 목적 사업비의 안정적 투입 확대	고졸 전문대 졸업자의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확대	진로·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직업제고 학점제 운영 지원 확대	직업제고 졸업자의 동일계열 진학 기회 확대(예: 동일계 특별전형 확대: 1.5%→5.0%)
	신취업 후학습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후학습 경로 다양성 강화	졸업생 계속지원센터의 전국 단위 확대 운영	중등직업교육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보급	NCS 기반 교육과정의 자율성 및 유연성을 확대하여 교육기관별 특성화 촉진
	한교-기업 연계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지자체 주도 취업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지역 맞춤형 학과 및 교육과정 개발	현장실습 유형의 다양화 및 유연한 운영 방식 마련(공공실습소, 산업체 견학 등)	산학겸임교사 제도 내실화 및 활성화
	차기정부연수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 교원 역량 개발 추진		중등직업교육에서의 온라인 교육 규제 완화	직업제고 맞춤형 진로전담교사 양성 및 확충
마이스터고 및 협양형 특성화고 등 신도모텔의 임력한 질 관리 체계 마련			학교 자체 교과서 개발 지원 및 현장 중심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원 강화	
대입 전형 중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확대			뿌리산업(기반산업) 분야 직업교육 보호 정책 추진	
직업제고 학생 대상 직업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분야 특화 직업교육을 위한 소규모 학교제 마련	

구분	최우선 추진 과제 효과성 ↑ - 실행가능성 ↑	중순위 과제(장기 추진) 효과성 ↑ - 실행가능성 ↓	중순위 과제(단기 추진) 효과성 ↓ - 실행가능성 ↑	후순위 과제 효과성 ↓ - 실행가능성 ↓
	신리·사회적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및 가족 연계 강화(지역사회 사회복지 인프라 활용) 국가전략산업 분야 인제 양성 장기투자 전략 수립 교육부-고용노동부-지자체 간 협력 강화 국가 차원의 직업교육 위원회 설치 중등직업교육에선 학습한 성과를 대학에서 인정하는 제도 도입(학점인정 등) 중학교 교사 대상 직업교육 인식 개선 및 연수 제공 전문교과교사 대상 진로설계 역량 강화 학생 유형 및 진로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모델 개발 및 적용 중등직업교육의 새로운 영역 탐색 및 확대 5년 단위 직업교육 발전 기본계획 수립 직업교육을 통한 성장경로 DB 축적 및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재직자의 후학습 참여 지원 강화			창업교육 강화 및 창업 생태계 기반 마련 지역 기반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성인학습자 대상의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범 사업 추진 직업계고-전문대학 간 연계 교육과정 확대(3+1.5, 2+2 모델) 고교화점제를 활용한 직업계고-전문대 연계 운영 강화 직업계고의 진로선택 학기제 (시범)도입 외국인 유학생 대상 직업교육 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 및 내실화

주: 각 영역 내 정책 방안은 효과성이 높은 순서로 배치함.

□ 고등직업교육 영역의 정책 방안에 관한 3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5-27>과 같음.

- 먼저 효과성이 가장 높은 정책 방안을 살펴보면, ‘5년 단위 직업교육 발전 기본계획 수립’(4.88점), ‘교원 임금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국고사업 집행 항목 확대 등)’(4.82점), ‘직업교육기관의 시설 및 기자재 현대화를 위한 목적 사업비의 안정적 투입 확대’, ‘RISE 체계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전문대 교육 지원 확대’(각 4.71점) 순으로 나타났음.
- 반대로 상대적 효과성이 낮은 정책 방안은 ‘국가역량체계(KQF)의 지속 개발 및 적용 확대’(3.76점), ‘비학위 전문교육과정 인증체계 도입 및 활성화(예: 마이크로 디그리, 마이크로 자격, 학위연계 등)’(4.00점), ‘RPL(학습경험인정제) 확대’로 성인 및 재직자 학습 결과의 공식적 인정체계 구축 강화’, ‘전문대학 내 외국인 및 성인학습자 대상 주문식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역량 강화’(각 4.12점) 순으로 나타났음.
- 실행가능성이 높은 정책 방안은 ‘원격 및 블렌디드 학습 과정 활성화’(4.53점), ‘교수학습 방법 혁신을 위한 디지털, AI, AR/VR 기반 실습 인프라 구축 및 교수법 전환 지원’(4.47점) 순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실행가능성이 낮은 것은 ‘직업교육 성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 확대’(3.24점), ‘국가역량체계(KQF)의 지속 개발 및 적용 확대’(3.35점) 순으로 나타났음.

<표 5-27> 직업교육체제 정책 방안에 대한 3차 델파이 조사 결과(고등직업교육)

구분	정책 방안	효과성		실행가능성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동 등 성	직업교육법 제정	4.41	.84	3.76	1.06
	5년 단위 직업교육 발전 기본계획 수립	4.88	.32	4.41	.91
	직업교육 성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 확대	4.41	.84	3.24	.88
	국가역량체계(KQF)의 지속 개발 및 적용 확대	3.76	.73	3.35	.97
	개인 자격·훈련·교육·경력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 및 활용처 확대	4.18	.78	3.53	.85
	국가 차원의 직업교육 인식 개선 사업 추진	4.53	.50	3.71	1.02
	뿌리산업(기반산업) 분야 직업교육 보호 정책 추진	4.18	.51	3.88	.76
	국가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 장기투자 전략 수립	4.59	.49	4.12	.68
	국가 차원의 직업교육 위원회 설치	4.35	.84	4.12	.96
	신산업 신기술 분야 선도학과 인프라 구축 지원 강화	4.35	.59	4.18	.51
고등	비학위 전문교육과정 인증체계 도입 및 활성화(예: 마이크로 디그리, 마이크로 자격, 학위연계 등)	4.00	.84	4.18	.86

구분	정책 방안	효과성		실행가능성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문성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학력 및 학위 체계 일원화(예: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학사학위)	4.35	.84	3.94	1.00	
	공통	직업교육기관의 시설 및 기자재 현대화를 위한 목적 사업비의 안정적 투입 확대	4.71	.46	4.24	.81
		장기직무연수,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 교원 역량 개발 추진	4.41	.60	4.18	.86
	고등	교원 임금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국고사업 집행 항목 확대 등)	4.82	.38	3.94	1.00
		전문대학 교수진 내 산업체 경력 교수의 비율 확대를 위한 대학-기업 인사교류 제도 도입(사바티컬 및 리버스 사바티컬 활성화)	4.18	.62	3.59	.84
		산업체 전문가의 전문대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참여 확대 및 인센티브 지원	4.24	.73	4.24	.81
		전문대학 내 외국인 및 성인학습자 대상 주문식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역량 강화	4.12	.58	4.24	.64
		고등직업교육기관의 학사제도 유연화(예: 3학기제, 집중이수제, 수업연한 삭제, 원격교육, 평생학번제 도입 등)	4.24	.73	4.29	.67
		대학 내 소단위 전공, 융합학과 및 가상학과 도입을 통한 교육과정 혁신 지원 확대	4.18	.86	4.18	.62
		교수학습 방법 혁신을 위한 디지털, AI, AR/VR 기반 실습 인프라 구축 및 교수법 전환 지원	4.29	.67	4.47	.70
RPL(학습경험인정제) 확대로 성인 및 재직자 학습 결과의 공식적 인정체계 구축 강화		4.12	.58	4.00	.77	
유연성	공통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이수자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 강화	4.53	.61	3.65	.84
		직업교육을 통한 성장경로 DB 축적 및 플랫폼 구축	4.18	.78	3.82	.71
		중소기업 재직자의 후학습 참여 지원 강화	4.35	.68	4.12	.76
	고등	성인학습자 및 외국인 학습자 대상 개인 맞춤형 직업교육 제공 체계 구축 및 확장	4.24	.64	3.94	.80
		전문대학 내 비학위 단기 전문직무 과정 확대 및 학위과정 연계 방안 마련(마이크로 디그리 연계 학위 운영 활성화)	4.29	.57	4.12	.58
		마이스터대학 운영의 안정적 지원체제 구축	4.53	.50	4.00	.84
		전문기술석사과정의 내실화 및 제도적 인정 강화	4.47	.61	4.06	.73
		전문대학 내 진로상담 전문가 및 경력개발상담센터 설치	4.29	.46	4.24	.73
		원격 및 블렌디드 학습 과정 활성화	4.24	.64	4.53	.61
		유연한 모듈형 학습 과정 개발 및 활성화	4.47	.61	4.41	.60
연계성	공통	학교-기업 연계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지자체 주도 취업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4.41	.60	3.82	.86
		중앙·지역 취업센터 기능 확대 및 활성화	4.18	.71	3.82	.71
		고졸·전문대 졸업자의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확대	4.59	.60	3.53	.92
		직업계고-전문대학 간 연계 교육과정 확대(3+1.5, 2+2 모델)	4.41	.69	4.00	.84
		지역 맞춤형 학과 및 교육과정 개발	4.24	.64	4.06	.73
		교육부-고용노동부-지자체 간 협력 강화	4.65	.68	3.76	.73
		고교학점제를 활용한 직업계고-전문대 연계 운영 강화	4.47	.70	4.19	.63
		지역 전략산업 및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직업교육 로드맵 설정 및 지원 체계 구축(인센티브 제공, 산업체 주도형 교육 확대)	4.41	.49	4.00	.69
		중등과 고등 직업교육 간의 명확한 역할 설정 및 협력모델 구축	4.35	.76	3.53	.70
		중등-고등 간 시설·교육자원·취업처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4.35	.59	3.65	.48
고등	전문대학과 지역산업 연계 모델 개발 및 운영(지자체-전문대-기업 협력)	4.59	.49	4.00	.69	
	RISE 체계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전문대 교육 지원 확대	4.71	.46	4.12	.90	
평균		4.37	.68	3.98	.84	

- 고등직업교육 영역에서 3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 기반해 효과성과 실행가능성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28>과 같음.
- 최우선 추진 과제는 ‘5년 단위 직업교육 발전 기본계획 수립’, ‘직업교육기관의 시설 및 기자재 현대화를 위한 목적 사업비의 안정적 투입 확대’, ‘RISE 체계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전문대 교육 지원 확대’로 나타났음.
  - 효과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행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정책 방안들은 총 8개이며, 대표적으로 ‘교원 임금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국고사업 집행 항목 확대 등)’, ‘교육부-고용노동부-지자체 간 협력 강화’, ‘고졸·전문대 졸업자의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확대’와 같은 정책 방안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 역시 최우선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고등직업교육 정책 방안을 마련하되, 효과성이 높고 실행가능성이 낮은 중순위 과제를 장기적인 과제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표 5-28〉 고등직업교육의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정책 방안 우선순위

구분	최우선 추진 과제 효과성 ↑ - 실행가능성 ↑	중순위 과제(장기 추진) 효과성 ↑ - 실행가능성 ↓	중순위 과제(단기 추진) 효과성 ↓ - 실행가능성 ↑	후순위 과제 효과성 ↓ - 실행가능성 ↓
정책 방안	5년 단위의 직업교육 발전 기본계획 수립 직업교육기관의 시설 및 기자재 현대화를 위한 목적 사업비의 안정적 투입 확대 RISF 체계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전문대 교육 지원 확대 국가전략산업 분야 인계 양성 장기투자 전략 수립 전문대학과 지역산업 연계 모델 개발 및 운영(기자재-전문대-기업 협력) 마이스터대학 운영의 안정적 지원체제 구축 장문기술석사과정의 내실화 및 제도적 인정 강화 유연한 모듈형 학습 과정 개발 및 활성화 고교화점제를 활용한 직업계고-전문대 연계 운영 강화 장기직무연수 프로그램의 기반 학습 등 교육 역할 개발 추진 직업계고-전문대간 연계 교육과정 확대(3+1.5, 2+2 모델) 지역 전략산업 및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직업교육 로드맵 설정 및 지원 체계 구축(인센티브 제공, 산업체 주도형 교육 확대)	교원 인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국고 사업 집행 항목 확대 등) 교육부 고용노동부-지자체 간 협력 강화 고졸·전문대 졸업자의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확대 국가 차원의 직업교육 인식 개선 사업 추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이수자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 강화 직업교육범 제정 직업교육 성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 확대 학교-기업 연계체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지자체 주도 취업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국가 차원의 직업교육 위원회 설치 신산업 신기술 분야 선도학과 인프라 구축 지원 강화 중소기업 제작자의 후속 학습 참여 지원 강화 교수학습 방법 혁신을 위한 디지털 AI AR/VR 기반 학습 인프라 구축 및 교수법 전환 지원 전문대학 내 비취위 단기 전문직무 과정 확대 및 학위과정 연계 방안 마련(마이크로 디그리 연계 학위 운영 활성화) 전문대학 내 진로상담 전문가 및 경력개발 상담센터 설치 산업체 전문가의 전문대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참여 확대 및 인센티브 지원 고등직업교육기관의 학사제도 유연화(예: 3학기제, 집중이수제, 수업연한 삭제, 원격 교육, 평생학번제 도입 등)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학년 및 학위 체계 일원화(예: 학사학위 전공신학과정-학사학위) 중등과 고등 직업교육 간의 명확한 역할 설정 및 협력모델 구축 중등·고등 간 시설·교육자원 취업처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성인학습자 및 외국인 학습자 대상 개인 맞춤형 직업교육 제공 체계 구축 및 확장 개인 자격·훈련·교육·경력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 및 활용처 확대 뿌리산업(기반산업) 분야 직업교육 보호 정책 추진 전문대학 교수진 내 산업체 경력 교수의 비율 확대를 위한 대학-기업 인사교류 제도 도입(사바터칼 및 리버스 사바터칼 활성화) 직업교육을 통한 성장경로 DB 구축 및 플랫폼 구축 중앙·지역 취업센터 기능 확대 및 활성화 국가역량체계(KQF)의 지속 개발 및 적용 확대
	대학 내 소단의 전공-융합학과 및 가상학과 도입을 통한 교육과정 혁신 지원 확대 전문대학 내 외국인 및 성인학습자 대상 주문식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역량 강화 RPI(학습경험인정제) 확대로 성인 및 재직자 학습 결과의 공식적 인정체계 구축 강화 비취위 전문교육과정 인증체계 도입 및 활성화(예: 마이크로 디그리, 마이크로 자격, 학위연계 등)	원격 및 블렌디드 학습 과정 활성화 지역 맞춤형 학과 및 교육과정 개발 대학 내 소단의 전공-융합학과 및 가상학과 도입을 통한 교육과정 혁신 지원 확대 전문대학 내 외국인 및 성인학습자 대상 주문식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역량 강화 RPI(학습경험인정제) 확대로 성인 및 재직자 학습 결과의 공식적 인정체계 구축 강화 비취위 전문교육과정 인증체계 도입 및 활성화(예: 마이크로 디그리, 마이크로 자격, 학위연계 등)	원격 및 블렌디드 학습 과정 활성화 지역 맞춤형 학과 및 교육과정 개발 대학 내 소단의 전공-융합학과 및 가상학과 도입을 통한 교육과정 혁신 지원 확대 전문대학 내 외국인 및 성인학습자 대상 주문식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역량 강화 RPI(학습경험인정제) 확대로 성인 및 재직자 학습 결과의 공식적 인정체계 구축 강화 비취위 전문교육과정 인증체계 도입 및 활성화(예: 마이크로 디그리, 마이크로 자격, 학위연계 등)	원격 및 블렌디드 학습 과정 활성화 지역 맞춤형 학과 및 교육과정 개발 대학 내 소단의 전공-융합학과 및 가상학과 도입을 통한 교육과정 혁신 지원 확대 전문대학 내 외국인 및 성인학습자 대상 주문식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역량 강화 RPI(학습경험인정제) 확대로 성인 및 재직자 학습 결과의 공식적 인정체계 구축 강화 비취위 전문교육과정 인증체계 도입 및 활성화(예: 마이크로 디그리, 마이크로 자격, 학위연계 등)

주: 각 영역 내 정책 방안은 효과성이 높은 순서로 배치함.

## 제4절 소결

-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체제의 혁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직업교육체제의 주요 현안, 이상적 미래상, 개선 방향성, 정책 방안 등 크게 4가지 영역에 대해 탐색하였음.
  - 즉 현재 직업교육체제가 처해 있는 상황을 진단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미래상을 도출하였음. 또한 현재 상황과 이상적 미래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성으로 개선 방향성을 도출하였음. 개선 방향성은 전략 과제와 같은 하위 요소로도 구체화되었으나,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도출하기 위해 별도의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정책 방안의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혁신 로드맵을 개발하였음.
  
- 다만 직업교육체제라는 큰 개념 속에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이 급별로 보이는 현상과 이상적 미래상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각 급별로 개별적인 혁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이 협력과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추진 거버넌스에 의해 지원된다는 점에서 개선 방향성과 정책 방안의 공통적인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이에 따라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의 직업교육체제 개선 방향성은 동일한 구조를 갖되, 하위 요소에서 일부 급별 차이가 발생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정책 방안 역시 공통적 요소와 차별적 요소를 구분하여 구성하였음.
  - 한편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의 상황적 맥락에 차이가 있는 만큼, 동일한 정책 방안이라고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개별적으로 도출하여 직업교육체제 혁신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안 도출을 위한 이상의 목적과 관점에 따라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의 개별적인 로드맵을 도출하였으며, 각 로드맵은 이상적 미래상, 개선 방향성, 주요 현안을 포함하는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향과 개선 방향성의 추진을 위한 정책 로드맵으로 구성하였음.

- 즉 혁신 방향이 큰 틀에서 직업교육체제의 개선을 위한 장기적 여정의 출발점과 지향점, 방향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책 로드맵은 이러한 여정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1.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중등직업교육의 혁신 방안

- 저출생시대 중등직업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도출하고자, 이상적 미래상, 주요 현안, 개선 방향성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 방향 모형과 정책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로드맵을 구성하였음.

### 가. 중등직업교육의 혁신 방향

- 혁신 방향 모형에서 주요 현안을 살펴보면, 중등직업교육체제는 구조적, 제도적, 교육적 측면에서 복합적인 현안에 직면하고 있음.
  - 거시적·구조적 수준에서 직업교육의 전반적 선호도 하락과 학생 수 감소가 지속되며 거점화 전략이 추진되는 반면, 지역 간·계열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학교운영과 교육과정 측면에서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교육과정 구조와 현장실습의 제약, 협력 기반의 부재 등으로 직업교육의 내실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음. 더불어 기초학력부진과 심리·사회적 취약성이 누적된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진학과 취업을 둘러싼 성장경로 단절 문제도 지적되었음. 이와 같은 현안들은 중등직업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며 체제 전반에 대한 구조적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현안을 고려하여 중등직업교육이 지향해야 할 미래상으로는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및 직무역량 형성을 중심으로 산업수요와 연계된 다양한 성장경로를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을 설정하였음.
  - 이 미래상은 직무역량 기반 진로설계 중심, 직무 연계형 학생 성장 중심, 유연한 경로 기반 직업이행 지원, 경력 생애설계 및 지속 성장 지원, 포용적 직업교육 보장체계, 지역사회 협력 기반 공동 시스템이라는 6가지 핵심 키워드를 통해 구체화하였음.

- 이상적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개선 방향으로 동등성, 전문성, 유연성, 연계성 등 4가지 방향성을 설정하였음.
- 첫째, 동등성은 직업교육의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학력·경력·자격의 사회적 인정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직업교육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고, 둘째, 전문성은 지역 수요 기반의 직업교육 운영, 기관 내실화, 교원 역량 제고 등을 통해 직업교육의 질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성임. 셋째, 유연성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목표를 반영한 교육체계, 선취업 후학습, 다양한 사회진출 경로를 통해 직업교육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임. 마지막으로, 연계성은 지역사회, 산업체, 유관기관 간의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중등직업교육이 지역 기반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그림 5-3]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중등직업교육의 혁신 방향

<b>미래상</b>	<b>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및 직무역량 형성을 중심으로 산업수요와 연계된 다양한 성장경로를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중등직업교육</b>					
<b>핵심 키워드</b>	직무역량 기반 진로설계 중심	직무 연계형 학생 성장 중심	유연한 경로 기반 직업이행 지원	경력 생애설계 및 지속 성장 지원	포용적 직업교육 보장체계	지역사회 협력 기반 공동 시스템

<b>개선 방향성</b>	[동등성] 직업교육의 동등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전문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유연성] 학생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적 진로설계 및 학습경로 다각화	[연계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 생태계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다층적 연계 및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li> <li>▶ 학력·경력·자격의 사회적 인정 및 동등성 확보</li> <li>▶ 직업교육 성장경로 확보 및 사회진출 기회의 확대</li> <li>▶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성과 인정 강화</li> <li>▶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교육 혁신 학과 지원 강화</li> <li>▶ 국가전략산업 및 뿌리산업 분야의 직업교육 지원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취업 수요 기반의 직업교육 개편 및 운영 전문성 강화</li> <li>▶ 직업교육기관의 내실화를 통한 복합적 교육 지원 기능 강화</li> <li>▶ 직업교육 전문성을 위한 교원 역량 개발 기반 마련</li> <li>▶ 직업교육의 전문성 및 혁신성 강화를 위한 유연한 교육 운영 추진</li> <li>▶ 소규모 학교의 특성화 및 인력 양성 기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 특성과 진로목표 기반의 유연한 직업교육 체계 구축</li> <li>▶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및 성장경로 가시화</li> <li>▶ 선취업 후학습 제도의 내실화 및 경로 다양화</li> <li>▶ 고졸자 취업경로 확대 및 인성적 진입과 정착 지원 강화</li> <li>▶ 직업교육 학습자의 다양성 확대와 평생 직업교육 기능 강화</li> <li>▶ 직업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접근 여건 개선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지자체, 기업)의 역할 강화</li> <li>▶ 직업교육기관의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 및 지역사회 기여 확대</li> <li>▶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의 연계 강화 및 역할 명확화</li> <li>▶ 직업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li> </ul>

<b>주요 현안</b>	거시적·구조적 현안	학교운영·교육과정 현안	학교 내부 구성원 현안	학생 성장경로 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교육의 선호도 감소와 지속가능성 위기</li> <li>▶ 직업교육의 거점화 전략과 구조적 난제</li> <li>▶ 직업계고의 인력양성 분야 불균형과 산업수요 미스매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편적 직무역량 함양 교육과 구체적 직무기술 함양 교육의 딜레마</li> <li>▶ 직업교육과정의 유연성 부족과 산업현장 대응의 한계</li> <li>▶ 현장실습 운영의 구조적 한계와 교육적 활용 제약</li> <li>▶ 학교-기업 협력의 불균형과 직업교육 왜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계고 교사의 역할 과부하와 수업 전문성 침식</li> <li>▶ 직업계고 입학생의 누적된 기초학력부진과 학습 결손 심화</li> <li>▶ 심리·사회적 취약 학생 증가와 직업교육 기능 약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계고의 진학 딜레마: 취업 우선 원칙과 진학 수요 사이의 괴리</li> <li>▶ 직업계고 학생의 진로설계 미흡과 성장경로 단절 문제</li> </ul>

나. 중등직업교육의 정책 로드맵

□ 중등직업교육의 정책 방안에 관한 타당성 검토와 효과성-실행가능성 검토를 통해 도출한 정책 로드맵을 단기 추진 과제와 장기 추진 과제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 [그림 5-4], [그림 5-5]와 같음.

[그림 5-4]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중등직업교육의 정책 로드맵(단기 추진 과제)

개선 방향성	동등성	전문성	유연성	연계성
<b>단기 추진 과제</b>				
<b>우선 추진 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차원의 직업교육 인식 개선 사업 추진</li> <li>직업교육법 제정</li> <li>초중학교 단계 직업 및 진로 교육 내실화</li> <li>국가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 장기투자 전략 수립</li> <li>국가 차원의 직업교육 위원회 설치</li> <li>중학교 교사 대상 직업교육 인식 개선 및 연수 제공</li> <li>중등직업교육의 새로운 영역 탐색 및 확대</li> <li>5년 단위 직업교육 발전 기본 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교육기관의 시설 및 기자재 현대화를 위한 목적 사업비의 안정적 투입 확대</li> <li>장기직무연수,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 교원 역량 개발 추진</li> <li>마이스터고 및 협약형 특성화고 등 선도모델의 엄격한 질 관리 체계 마련</li> <li>전문교과교사 대상 진로설계 역량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졸자에 대한 공공부문 및 우량기업 취업처 발굴 및 취업연계 지원 확대(MOU 체결 확대)</li> <li>직업계고 내 심리-정서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li> <li>선취업후학습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후학습 경로 다양성 강화</li> <li>직업계고 학생 대상 직업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li> <li>대입 전형 중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확대</li> <li>학생 유형 및 진로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모델 개발 및 적용</li> <li>중소기업 재직자의 후학습 참여 지원 강화</li> <li>직업교육을 통한 성장경로 DB 축적 및 플랫폼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내 기업과 연계한 고졸 취업 보장형 프로그램 도입</li> <li>학교-기업 연계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지자체 주도 취업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li> <li>심리-사회적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및 가족 연계 강화(지역사회 사회 복지 인프라 활용)</li> <li>교육부-고용노동부-지자체 간 협력 강화</li> <li>중등직업교육에서 학습한 성과를 대학에서 인정하는 제도 도입(학점인정 등)</li> </ul>
<b>보완 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교과교사의 부진공 획득 기회 확대 및 규제 완화</li> <li>직업교육 재구조화의 기준 명확화 및 의사결정 과정의 전문성 확보(조정기구 신설 등)</li> <li>진로전담교사의 취업 연계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운영</li> <li>직업계고 교사 대상 전문대학 및 대학 연계 직무연수 프로그램 정례화 및 확대 운영</li> <li>현장실습 유형의 다양화 및 유연한 운영 방식 마련(공동실습소, 산업체 견학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li> <li>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지원 확대</li> <li>중등직업교육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보급</li> <li>중등직업교육에서의 온라인 교육 규제 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지역 취업센터 기능 확대 및 활성화</li> </ul>

[그림 5-5]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중등직업교육의 정책 로드맵(장기 추진 과제)

개선 방향성	동등성	전문성	유연성	연계성
<b>장기 추진 과제</b>				
<b>우선 추진 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교육 성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 확대</li> <li>• 교원양성 교직과정에 직업교육 교양 과목 신설</li> <li>• 개인 자격·훈련·교육 경력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 및 활용처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교육기관 내 다양한 유형의 전문가 배치(진로전담교사, 취업계층 전문상담사, 코디네이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졸 청년 대상 장기적인 사회적 안전망 및 인센티브 제도 강화</li> <li>•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이수자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 강화</li> <li>• 졸업생 계속지원센터의 전국 단위 확대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졸-전문대 졸업자의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 복지 지원 확대</li> <li>• 지역 맞춤형 학과 및 교육과정 개발</li> </ul>
<b>보완 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역량체계(KQF)의 지속 개발 및 적용 확대</li> <li>• 직업계고 졸업자의 동일계열 진학 기회 확대(예: 동일계 특별전형 확대: 1.5%→5.0%)</li> <li>• 뿌리산업(기반산업) 분야 직업교육 보호 정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력적인 학급당 학생 수 운영을 통해 개별화 지도 촉진</li> <li>• 산학겸임교사 제도 내실화 및 활성화</li> <li>• NCS 기반 교육과정의 자율성 및 유연성을 확대하여 교육기관별 특성화 촉진</li> <li>• 학교 자체 교과서 개발 지원 및 현장 중심 교육과정 개발 운영 지원 강화</li> <li>• 직업계고 맞춤형 진로전담교사 양성 및 확충</li> <li>• 분야 특화 직업교육을 위한 소규모 학교체제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융합형 특성화고등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직업계고 유형 마련</li> <li>• 창업교육 강화 및 창업 생태계 기반 마련</li> <li>• 지역 기반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li> <li>• 성인학습자 대상의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범사업 추진</li> <li>• 직업계고의 진로선택 학기제(시범)도입</li> <li>• 외국인유학생 대상 직업교육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 및 내실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전략산업 및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직업교육 로드맵 설정 및 지원 체계 구축(인센티브 제공, 산업체 주도형 교육 확대)</li> <li>• 중등과 고등 직업교육 간의 명확한 역할 설정 및 협력모델 구축</li> <li>• 중등-고등 간 시설·교육자원·취업처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li> <li>• 직업계고-전문대학 연계 교육과정 확대(3+1.5, 2+2 모델)</li> <li>• 고교학점제를 활용한 직업계고-전문대 연계 운영 강화</li> </ul>

□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추진 과제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주요 영역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단기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보면, 동등성 측면에서 중등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초중학교 대상 직업교육 인식 개선 등이 우선 추진될 필요가 있었음. 전문성 측면에서 중등직업교육에 인프라 구축에 대한 재정 투자의 확대 및 내부 구성원의 역량 개발이 필요하였으며, 기관 차원에서의 선도모델 질 관리 강화가 필요하였음. 유연성 측면에서 고졸자를 위한 취업처 발굴과 같은 전통적 선취업 정책과 함께 후학습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였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특성의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 모델의 도입이 필요함이 확인되었음. 연계성 측면에서 지역과 연계한 직업교육, 그리고 이를 위한 지역사회의 책무성 강화와 연계 협력 강화가 필요하였으며, 이는 중앙정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음.

- 다음으로 장기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보면, 먼저 동등성 측면에서 직업교육 성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의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변화, 전문성 측면에서 학교 내 다양한 전문가 배치, 유연성 측면에서 고졸 취업자의 취업과 정주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 연계성과 관련하여 지역에서의 직업교육 졸업자에 대한 정주 지원, 지역 맞춤형 교육 운영 등은 효과성은 높으나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기간에 직업교육기관 내부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정책 방안들로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보완 과제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과제들에 비해 효과성이 낮은 정책 방안들로, 향후 논의 및 연구를 통해 보완 및 개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중등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차원에서 기반 정비가 필요함을 시사함.
- 중등직업교육체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물리적, 인식적 기반을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 투자 확대, 맞춤형 교육모델 도입, 지역 연계 강화 등은 상대적 효과성과 실행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더욱이 이러한 과제들은 직업교육 내부 기반을 다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구조적 문제와 관련성이 깊은 장기 과제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중등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구조적 차원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 장기 추진 과제는 대부분 제도 전환,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 지역 정착 지원 등 구조적 성격이 강한 정책들로, 단일 학교 차원에서 혹은 지역 교육청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영역들임. 따라서 중앙정부 주도의 법제화, 부처 간 협력,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구축 등을 통해 단계적이고 주도적인 접근이 필요함.
- 보완 과제는 현재 효과성은 낮지만 직업교육체제의 맥락에 따라 중요성이 커질 수 있으며, 단기·장기 과제와의 연계나 환경 변화에 따라 재조명될 수 있음. 이에 따라 관련 연구, 의견 수렴, 시범 도입 등을 통해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고등직업교육의 혁신 방안

### 가. 고등직업교육의 혁신 방향

- 고등직업교육체제의 주요 현안은 거시적·구조적 현안, 전문대학 정체성과 고등교육체제 변화, 학교운영·교육과정 현안, 지역사회 연계·협력 현안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되었음.
  - 거시적·구조적 현안으로서 입학자원 감소에서 촉발되는 경영난, 교육의 질 하락, 수직적 진학 선택과 지방 전문대학의 위기 심화는 중등직업교육의 구조와 유사한 측면을 보였음. 고등직업교육 주요 현안의 특수한 부분은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병렬 구조 속에서 교육 영역의 중첩 및 위계화되어 있고, 비전통적 학습자의 증가에 따라 정체성과 체제 전반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는 점이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내부적으로는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 외부적으로는 RISE 체계 내에서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현안을 고려하여 고등직업교육이 지향해야 할 미래상으로는 ‘다양한 학습자(학령 인구, 성인학습자, 외국인 등)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산업수요 기반 맞춤형 고등 직업교육’을 설정하였음.
  - 해당 미래상은 지역 기반 인재 양성, 평생직업교육 강화, 학습자 맞춤형 직업교육, 산업수요 기반 고숙련 인재 양성, 산업 변화 선제 대응, 사회통합 및 개방성 등 6가지 핵심 키워드로 구체화되었음.
  
- 이상적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개선 방향성은 중등직업교육과 동일하게 동등성, 전문성, 유연성, 연계성 등 4가지 방향성을 설정하였음.
  - 해당 개선 방향성들은 중등직업교육에서 언급한 것과 유사한 방향으로 구성되었으나, 동등성 차원에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학위구조 및 교육체계 개편, 전문대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재정 지원 확대와 같은 차별적인 실천 과제가 포함되었음.
  - 특히 유연성에서 성인학습자, 외국인 등 다양한 학습자를 수용하는 전문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장기적인 성장경로를 위한 체제 다양화 및 실무 중심 학

위 체계 고도화가 포함되었음. 더불어 연계성의 측면에서는 대학 간의 수직·수평적 연계를 통한 성장경로 확보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 생태계 구축의 측면에서 조명되었음.

[그림 5-6]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고등직업교육의 혁신 방향

미래상	<b>다양한 학습자(학령인구, 성인학습자, 외국인 등)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산업수요 기반 맞춤형 고등직업교육</b>					
핵심 키워드	지역 기반 인재 양성	평생직업교육 강화	학습자 맞춤형 직업교육	산업수요 기반 고숙련 인재 양성	산업 변화 선제 대응	사회통합 및 개방성

개선 방향성	[동등성]	[전문성]	[유연성]	[연계성]
	직업교육의 동등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학생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적 진로설계 및 학습경로 다각화	지속가능한 직업교육 생태계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다층적 연계 및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li> <li>▶ 학력·경력·자격의 사회적 인정 및 동등성 확보</li> <li>▶ 직업교육 성장경로 확보 및 사회진출 기회 확대</li> <li>▶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성과 인정 강화</li> <li>▶ 산·산업·신기술 분야 직업교육 혁신 학과 지원 강화</li> <li>▶ 국가전략산업 및 뿌리산업 분야의 직업교육 지원 확대</li> <li>▶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학위구조 및 교육체계 개편</li> <li>▶ 전문대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재정 지원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취업 수요 기반의 직업교육 개편 및 운영 전문성 강화</li> <li>▶ 직업교육기관의 내실화를 통한 복합적 교육 지원 기능 강화</li> <li>▶ 직업교육 전문성을 위한 교원 역량 개발 기반 마련</li> <li>▶ 직업교육의 전문성 및 혁신성 강화를 위한 유연한 교육 운영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 특성과 진로목표 기반의 유연한 직업교육 체계 구축</li> <li>▶ 성인·다문화 학습자 대상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li> <li>▶ 전문대학 체제 다양화 및 실무 중심 학위 체계 고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지자체, 기업)의 역할 강화</li> <li>▶ 직업교육기관의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 및 지역사회 기여 확대</li> <li>▶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의 연계 강화 및 역할 명확화</li> <li>▶ 대학 간(일반대학, 전문대학 등) 수직·수평적 연계를 통한 성장경로 확보</li> </ul>	

주요 현안	거시적·구조적 현안	전문대학 정체성과 고등교육체제 변화	학교운영·교육과정 현안	지역사회 연계·협력 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학자원 감소로 인한 경영난과 교육의 질 하락의 악순환</li> <li>▶ 수직적 진학 선택에 따른 지방 전문대학의 위기 심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 교육 영역 중첩 및 고등교육 위계화 현상 심화</li> <li>▶ 비전통적 학습자 및 비학위 과정 증가에 따른 전문대학의 정체성 재정립 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학자원 확보 중심의 학과 개편에 따른 지역산업 인력 양성 기능 약화</li> <li>▶ 고숙련 직업교육과정의 사회적 인식 및 타당성 정립 부족에 따른 수준별 학위과정 정착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ISE 체계 내 전문대학의 역할 인식 부족 및 지역협력 체계의 한계</li> </ul>

나. 고등직업교육의 정책 로드맵

□ 고등직업교육의 정책 방안에 관한 타당성 검토와 효과성-실행가능성 검토를 통해 도출한 정책 로드맵을 단기 추진 과제와 장기 추진 과제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 [그림 5-7], [그림 5-8]과 같음.

[그림 5-7]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고등직업교육의 정책 로드맵(단기 추진 과제)

개선 방향성	동등성	전문성	유연성	연계성
<b>단기 추진 과제</b>				
<b>우선 추진 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년 단위 직업교육 발전 기본 계획 수립</li> <li>국가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 장기투자 전략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교육기관의 시설 및 기자재 현대화를 위한 목적 사업 비의 안정적 투입 확대</li> <li>장기직무연수,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 교원 역량 개발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이스터대학 운영의 안정적 지원체제 구축</li> <li>유연한 모듈형 학습 과정 개발 및 활성화</li> <li>전문기술석사과정의 내실화 및 제도적 인정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ISE 체계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전문대 교육 지원 확대</li> <li>전문대학과 지역산업 연계 모델 개발 및 운영(지자체-전문대-기업 협력)</li> <li>고교학점제를 활용한 직업계고-전문대 연계 운영 강화</li> <li>직업계고-전문대학 간 연계 교육과정 확대(3+1.5, 2+2 모델)</li> <li>지역전략산업 및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직업교육 로드맵 설정 및 지원 체계 구축(인센티브 제공, 산업체 주도형 교육 확대)</li> </ul>
<b>보완 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산업 신기술 분야 선도학과 인프라 구축 지원 강화</li> <li>국가 차원의 직업교육 위원회 설치</li> <li>비학위 전문교육과정 인증체계 도입 및 활성화(예: 마이크로 디그리, 마이크로 자격, 학위연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수학습 방법 혁신을 위한 디지털, AI, AR/VR 기반 실습인프라 구축 및 교수법 전환 지원</li> <li>고등직업교육기관의 학사제도 유연화(예: 3학기제, 집중 이수제, 수업연한 삭제, 원격 교육, 평생학번제 도입 등)</li> <li>산업체 전문가의 전문대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참여 확대 및 인센티브 지원</li> <li>대학 내 소단위 전공, 융합학과 및 가상학과 도입을 통한 교육과정 혁신 지원 확대</li> <li>전문대학 내 외국인 및 성인 학습자 대상 주문식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역량 강화</li> <li>RPL(학습경험인정제) 확대로 성인 및 재직자 학습 결과의 공식적 인정체계 구축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 재직자의 후학습 참여 지원 강화</li> <li>전문대학 내 진로상담 전문가 및 경력개발상담센터 설치</li> <li>전문대학 내 비학위 단기 전문직무 과정 확대 및 학위과정 연계 방안 마련(마이크로 디그리 연계 학위 운영 활성화)</li> <li>원격 및 블렌디드 학습 과정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맞춤형 학과 및 교육과정 개발</li> </ul>

[그림 5-8]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고등직업교육의 정책 로드맵(장기 추진 과제)

개선 방향성	동등성	전문성	유연성	연계성
<b>장기 추진 과제</b>				
<b>우선 추진 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차원의 직업교육 인식 개선 사업 추진</li> <li>직업교육법 제정</li> <li>직업교육 성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원 임금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국고사업 집행 항목 확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직업 교육 이수자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부-고용노동부-지자체 간 협력 강화</li> <li>고졸 전문대 졸업자의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확대</li> <li>학교-기업 연계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지자체 주도 취업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li> </ul>
<b>보완 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학력 및 학위 체계 일원화(예: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학사학위)</li> <li>부리산업(기반산업) 분야 직업교육 보호 정책 추진</li> <li>개인 자격·훈련·교육·경력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 및 활용처 확대</li> <li>국가역량체계(KQF)의 지속 개발 및 적용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대학 교수진 내 산업체 경력 교수의 비율 확대를 위한 대학-기업 인사교류 제도 도입(사바티컬 및 리버스 사바티컬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인학습자 및 외국인 학습자대 상 개인 맞춤형 직업교육 제공 체계 구축 및 확장</li> <li>직업교육을 통한 성장경로 DB 축적 및 플랫폼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등-고등 간 시설·교육자원·취업처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li> <li>중등과 고등 직업교육 간의 명확한 역할 설정 및 협력모델 구축</li> <li>중앙·지역 취업센터 기능 확대 및 활성화</li> </ul>

□ 고등직업교육의 정책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먼저 단기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보면, 동등성 측면에서 직업교육에 대한 비전과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전문성 측면에서 학교의 인적·물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이 확인되었음. 더불어 유연성을 위해서 교육과정의 유연화와 함께 고숙련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학위 체계 고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연계성을 위해서는 전문대학과 지역 연계 사업 및 프로그램의 지원 필요성과 더불어 중등직업교육과의 연계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직업교육 인식 개선 사업 추진과 직업교육법 제정 등 사회적·제도적 차원의 개선이 동등성 차원에서 필요하며, 교원 임금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전문대학의 전문성 확대, 직업교육 이수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유연성 확보가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연계성 측면에서 지자체의 직업교육 책무성 강화와 이를 위한 중앙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였음.

- 이러한 정책 방안들은 많은 부분에서 중등직업교육과 유사한 성격을 보였음. 대표적으로 동등성 확보를 위한 직업교육의 사회적 위상 확보와 제도적 기반 강화,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형성 지원 확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직업교육체제의 협력 체계 강화 등에서 상호 유기적 연관성을 갖고 있었음.
- 이상의 고등직업교육체제의 정책 로드맵을 통해 중등직업교육체제와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고등직업교육체제는 중등직업교육에 비해 제도적 독립성과 지역 연계성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났음.
- 예를 들어 직업교육법 제정, 국가 비전 수립, RISE 체계 기반 지역 연계 등 정책 방안의 중요성이 높게 언급되었음. 이는 전문대학이 지역사회, 산업계, 지자체와 함께 설계되어야 하는 직업교육기관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근거가 됨.
  - 이러한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역할 확대는 한편으로 학교 차원의 직접 실행 과제에 주목하는 중등직업교육의 제도적 연계 필요성으로 이어짐. 즉 중등직업교육기관을 거치는 학습자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적 안착에까지 이르는 성장경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복합적인 행위자 중심의 구조를 지닌 고등직업교육기관과의 연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둘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경우 고숙련 인재 양성과 직무 중심의 학위 체계 고도화가 강조되었음.
- 이는 중등직업교육이 취업 중심 교육을 넘어 장기적인 경력설계를 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즉 중등 단계에서 고등 단계로 바로 이동하는 경로와 취업 이후의 진입

경로를 확보함으로써 고숙련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 및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즉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이러한 방안은 직업교육 시스템 전체의 고도화의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음.

- 셋째, 고등직업교육체제는 지역 내 지자체, 산업체, 대학 등 복합적 협력 모델을 중요한 전략 축으로 강조하고 있음.
  - 이는 중등직업교육이 고등 단계 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 가능성 및 모델을 사전에 고려하여 학생의 진로를 설계하고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즉 중등직업교육 역시 학교 단독의 운영 방식, 특히 교육과정 구성의 측면에서의 완결성에 초점을 두는 것에서 벗어나 지역의 직업교육 시스템에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넷째, 고등직업교육에서 다양한 학습자를 고려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한 직업교육체제를 구상하며, 그 필요가 높은 만큼, 중등직업교육 역시 이러한 경로의 다양성을 전제로 운영 방향성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고등직업교육체제는 유연성과 연계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특성의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지향하고 있음. 이는 장래의 직업교육이 단선적인 경로가 아닌 다경로의 순환적 특성을 갖게 되는 변화 동향을 의미함.
  - 따라서 중등직업교육에서도 취업, 진학, 창업 등 여러 경로 가능성을 포함한 진로설계 및 직업교육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는 중등직업교육체제의 정당성, 전문성, 유연성, 연계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됨.
  
- 정리하면, 고등직업교육체제의 정책 로드맵은 중등직업교육체제가 지향하는 방향성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특히 고등직업교육 단계가 고수준화 및 다양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중등직업교육은 이러한 다양화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즉 중등직업교육이 직업교육 전체 시스템 내에서 진입 지점으로서 의미를 지니며, 그 자체로도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는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지니지만, 고등직업교육과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진로 및 경력 경로의 실현 가능성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제6장

#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제2절 한계 및 향후 과제



## 제6장 | 결론 및 제언

###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는 저출생과 인구구조의 변화, 기술 전환 등 급변하는 사회적·경제적·교육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방향성과 정책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직업교육의 현황과 정책 대응,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의 역할에 대해 탐색하고, 전문가 심층 면담과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체제의 혁신 방안을 도출하였음.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안은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의 상황적 맥락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도출되었음.
  
-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안은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체제의 주요 현안, 이상적 미래상, 개선방향성으로 구성되는 혁신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로드맵으로 구성되었음.
  -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직업교육체제가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 무엇인지, 이러한 현안을 극복하고 도달해야 하는 이상적 미래상은 무엇인지, 이 미래상에는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1. 직업교육체제의 현안과 우선순위: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가?

-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체제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공통 현안은 거시적·구조적 차원에서 입학자원 감소에 의한 직업교육의 규모 축소와 관련이 있음. 즉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직업교육의 규모 축소 현상에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중등직업교육에서 중요도와 시급도가 가장 높았던 현안은 ‘직업교육의 선호도 감소와 지속가능성 위기’로 나타났으며, 고등직업교육은 ‘입학자원 감소로 인한 경영난과 교육의 질 하락의 악순환’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직업교육체제 현황 검토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직업교육 규모 축소 현상이 직업교육 현장의 위기감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특히 이러한 규모 축소 현상은 단순히 직업교육의 정량적 차원의 위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업교육기관의 정체성과 운영 측면에 이르기까지 내부적 변화를 불러오는 간접적 영향까지 파생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안이 확산되고 있었음.
  - 중등직업교육에서는 입학생의 기초학력부진과 학습 결손이 누적되고, 심리·사회적 취약성이 높은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이 생활지도 중심으로 전환되는 등 본래의 정체성과 역할이 약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고등직업교육의 경우, 고등교육체제 전반에서의 수직적 위계화와 일반대학 중심의 선택 구조가 고착되면서 전문대학의 정체성과 교육적 고유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선호도 문제를 넘어 구조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음. 나아가, 성인학습자·외국인 유학생 등 비전통적 학습자 증가와 비학위 과정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전문대학의 역할 재정립이 불가피해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한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의 주요 현안들은 단순한 기능적 문제를 넘어 체제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들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다수의 현안들이 단위학교나 개별 제도 개선을 넘어서 직업교육의 구조, 정체성, 지역 기반 역할, 교육의 질적 고도화 등 체제 수준에서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지님. 즉 현장의 위기감은 단순한 운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직업교육이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조적 성찰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업교육체제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임이 확인됨.
- 정리하면, 직업교육체제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는 단순한 수급 조절이나 운영 개선을 넘어, 직업교육의 정체성 회복과 체제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있음.
  - 즉 저출생으로 인한 입학자원 감소라는 구조적 조건 속에서, 직업교육은 교육 수요자의 특성과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의 목적, 운영 방식, 사회적 역할 전반을 재정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직업교육의 위상 강화, 교육과정의 유연화, 지역 기반 협력 체제 구축, 비전통적 학습자 수용을 위한 제도 혁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임. 이는 직업교육이 미래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효과적인 교육 영역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매력적인 실질적 교육 선택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 2. 직업교육체제의 이상적 미래상: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에서 이상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상적 미래상은 급별 차별적 상황과 특징에 따라 규정되었음.
  - 중등직업교육은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및 직무역량 형성을 중심으로 산업수요와 연계된 다양한 성장경로를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중등직업교육’을 이상적 미래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직무역량 기반 진로설계 중심, 직무 연계형 학생 성장 중심, 유연한 경로 기반 직업이행 지원, 경력 생애설계 및 지속 성장 지원, 포용적 직업교육 보장체제, 지역사회 협력 기반 공동 시스템 등 6가지 핵심 키워드로 구체화되었음.
  - 고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은 ‘다양한 학습자(학령인구, 성인학습자, 외국인 등)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산업수요 기반 맞춤형 고등직업교육’으로 정리되었으며,

지역 기반 인재 양성, 평생직업교육 강화, 학습자 맞춤형 직업교육, 산업수요 기반 고숙련 인재 양성, 사회통합 및 개방성 등 6가지 핵심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었음.

-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은 모두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산업수요와의 연계, 지속가능한 학습자의 성장 지원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음.
  -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 모두 진로설계의 주체로서 학습자 맞춤형의 유연한 경로를 제공하고, 해당 경로, 즉 직무와 교육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주요 미래상으로 설정함. 또한 지역 기반 협력, 사회적 포용성 확대, 직업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러한 공통점은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이 단순한 초기 취업 교육을 넘어, 학습자 생애 전반의 경력개발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교육체제로 기능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직업교육체제 전체의 가치관과 비전을 공유된 틀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한편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의 급별 특성에 따른 차이점 역시 확인되었음. 이는 향후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할 때 급별 차별성과 고유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상호 연계 가능한 체계 설계가 필요함을 보여줌.
  - 중등직업교육은 주로 학령기 학생의 진로설계, 진학·취업 경로 다양화, 기초 직무역량 함양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학생의 성장경로 설계와 지역사회 공동 책임 체제 구축을 강조하는 데 비해, 고등직업교육은 학습자의 다양성을 포괄하는 평생직업교육체제로의 확장, 고숙련 인재의 양성, 산업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음.
  - 즉 중등직업교육이 학습자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확보하고 이를 지원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면, 고등직업교육은 반대로 다양한 학습자의 배경과 수요를 포용하여, 이를 기반으로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고숙련 인재를 양성하고 경력 전환을 지원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정리하면, 중등과 고등 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은 각각의 교육급에 따른 차별적 상황과 기능을 반영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경로 설계, 산업수요와의 정합성, 지역 및 사회와의 연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통합적 직업교육체제 수립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직업교육체제는 학습자 특성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유연한 진입 및 이행 경로 보장,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수요 대응력 강화, 비전통적 학습자와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공공성 기반의 교육 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 등 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과정과 인프라 마련을 핵심 방향으로 지향해야 할 것임.

### 3.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 및 정책 방안: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체제가 주요 현안과 이상적 미래상의 측면에서 많은 부분 공통적인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별 차이에서 발생하는 맥락적 차이와 기능적 차이에 의해 차별적인 현안과 미래상이 존재하였음. 이는 결과적으로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이 처해 있는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일부 존재함을 의미함. 다만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의 측면에서는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 공통적으로 동등성, 전문성, 유연성, 연계성이 도출되었음.
- 이는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체제의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해서는 두 직업교육 영역이 급별 특성을 반영하되, 공통된 방향성과 원칙 아래에서 체계적으로 연계·통합되어야 함을 의미함.
- 즉 이 4가지 방향성은 단순한 제도 운영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직업교육체제를 저출생, 디지털 전환, 사회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직업교육체제로 전환하는데 통일된 전략으로 기능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중등과 고등, 학령기와 성인기, 전통적과 비전통적 학습자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직업교육의 연속성과 통합성, 지역성과 공공성, 유연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중장기적 정책 설계가 요구됨.
- 더불어 이 네 방향성은 서로 독립된 과제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이해될 필요

가 있음. 동등성 확보는 체제 정당성과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성 강화는 인적·물적 인프라 강화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함. 유연성 확보는 다양한 학습자의 진입과 직업교육을 통한 전환과 경력설계를 가능하게 하며, 연계성 강화는 직업교육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확장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함. 따라서 이 네 방향성이 유기적으로 통합될 때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체제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능할 것임.

- 결국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개별 기관의 변화나 분절적이고 단기적인 성과 향상에 그치지 않고, 직업교육체제를 사회 전체의 변화와 정합적으로 연결하는 구조적 개혁과 정책적 일관성 확보를 통해 가능할 것임.

#### 가. 직업교육의 동등성 확보: 어떻게 동등성을 확보할 것인가?

□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향성으로서 동등성은 직업교육이 학문 중심의 일반교육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냄에 있어 사회·제도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체계 마련을 의미함. 이는 미래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체제가 지속가능성을 갖도록 하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전제조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먼저 직업교육이 학문 중심의 일반교육과 사회·제도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이는 단순히 직업교육의 위상을 선언적으로 높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기반을 통해 사회적 인정, 성장경로, 정책적 투자 전반에서의 실질적 동등성 확보를 의미함.
- 더불어 KQF와 같은 인정체계를 중심으로 한 학력·경력·자격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직업교육 이수자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진출 기회와 다양한 성장경로 확보가 병행되어야 함.
- 나아가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성과의 실질적 인정이 필요하며, 이는 임금, 복지, 승진 등 고용체계 전반에 걸쳐 직업교육 경로를 이수한 사람에 대한 가시적인 보상과 차별 없는 인정 구조를 제도화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직업교육의 중요성과 가치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진로교육 강화도 함께 요구됨.

- 더불어 직업교육체제가 신산업 및 국가전략산업에 적합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학과 개편 및 인프라를 지원하고, 특히 전문대학에 대한 국가 책임과 재정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직업교육체제의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결론적으로, 직업교육의 동등성은 단순한 인식 개선이나 제도 정비를 넘어 법적 위상, 제도 설계, 재정구조, 성장경로, 사회적 보상 체계 전반에서 직업교육이 실질적인 동등성과 가치를 갖도록 하는 데 핵심이 있음.

#### 나. 직업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어떻게 전문성을 강화할 것인가?

- 전문성은 직업교육기관의 운영 역량과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산업수요 및 기술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학생의 성공적인 진로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급격한 환경 변화가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직업교육기관의 전문성은 직업교육체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근간이라고 할 수 있음.
  - 먼저 지역산업 및 미래 취업 수요에 기반한 학과 개편과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관의 기획력과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직업교육이 실질적인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 체계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아울러 직업교육기관이 교육제공의 역할을 넘어 진로상담, 학습지원, 현장연계 등 복합적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교원에 대해서도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량 개발 체계를 마련하고, 현장성과 교육성을 동시에 갖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러한 직업교육기관의 역량 강화에는 기관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특히 앞으로 증가할 소규모 학교가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특정 분야 중심의 특성화 지원에 힘써야 할 것임.

다. 진로 및 학습 경로 다각화: 어떻게 유연성을 확보할 것인가?

- 유연성은 직업교육 졸업자들이 사회로 진출 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경로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및 후속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함. 이는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이 다양한 특성의 학습자를 수용하고, 경력 전환과 평생학습이 일상화되는 미래사회에 적합한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조건임.
  -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직업교육과정의 편성 및 이수 방식에서 학습자의 특성과 진로목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함. 즉 맞춤형 진로설계 및 학습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진로상담 및 경력설계를 위한 지원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유연성에 기반한 인재 양성은 직업교육 이수자의 취업과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을 통해 생애 전반에 걸친 평생직업교육체제로서 시작 지점이 될 것이고, 지속가능한 학습과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후학습 경로를 다양화 및 내실화함으로써 완성될 것임. 즉 직업교육이 단절된 교육경로가 아닌 생애 전반에 걸친 경력개발의 기반이 되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즉 중등직업교육은 직업교육 진입자의 다양한 진로 및 성장 경로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고등직업교육은 다양한 학습자의 특성을 수용하여 고숙련 전문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라. 다층적 연계 및 협력: 어떻게 연계성을 강화할 것인가?

- 연계성은 중등·고등 직업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기업·학교 간 협력을 확대하여 산업 및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교육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을 의미함. 이는 저출생과 지역 불균형 시대에 직업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생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체제 전환의 핵심 전략임.
  - 우선 중등과 고등 직업교육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연계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학습자의 경력설계가 단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통해 직업교육이 단순한 초기 직무훈련이 아닌 경력개발의 시작점이 되는 것을 의미함.
  - 특히 중등직업교육은 진입 기반으로서 기초 역량과 진로설계를 지원하고, 고등직업교

육은 이와 연계하여 고수준 전문인력으로서의 장기적인 성장 기능을 확보해 주는 구조를 구상할 필요가 있음. 즉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은 직업교육 참여 학습자의 경력 경로를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임.

- 동시에 직업교육기관은 지역산업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지역 특화 인력 양성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지자체의 직업교육 책무성도 명확히 설정되어야 함. 이러한 책무성을 기반으로 할 때 지역인재의 양성이 경력개발과 사회적 안착으로 구현되어 지역 정주와 지역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
- 더불어 부처 간 협력 및 정책 통합을 통해 직업교육 관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기관을 둘러싼 다양한 교육기관과의 수직·수평적 연계를 통해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경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함.

#### 4. 직업교육체제 전환을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 무엇이 변화의 걸림돌인가?

##### □ 직업교육의 법적 정체성 및 제도적 기반 부족

-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직업교육체제 개선을 위한 주요 현안, 방향성, 정책 방안 등에서 반복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된 것 중 하나는, 직업교육의 특수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적합한 정책 판단과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임.
- 즉 직업계고는 일반계고와, 전문대학은 일반대학과 다른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치 일반교육의 하위 개념, 혹은 대안적 과정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음.
- 다만 이러한 높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법 제정과 같은 법 체계 마련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경험의 축적으로 인해 고등직업교육의 경우 직업교육법 제정이 효과성이 높지만 실행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음. 따라서 우리나라 교육시스템 내에서 직업교육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과 사회적 공공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첫 번째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음.

□ 통합적 정책 주체의 불명확성과 중앙정부의 책무성 부족

- 앞선 법적 정체성 및 제도적 기반 부족과 연결되는 제약으로, 현재 직업교육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다양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관여를 받게 되지만, 정작 이 다양한 주체의 관계 및 협력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에서 중등 및 고등 직업교육이 주변화되는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음.
- 즉 직업세계로의 조기 진입을 희망하는 학생이 직업계고로 진입한 이후 취업하고, 경력을 쌓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며, 다시 후학습을 통해 전문성을 개발하는 이 전체의 과정의 복잡성이 통합 관리되지 못하고 분절적으로 파편화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직업교육 체제를 전 생애에 걸친 경력경로로 이해하고 이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부재가 두 번째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음.

□ 교육체제 내부의 수직적 위계 구조와 사회적 인식 문제

- 직업교육체제의 중요성 혹은 이 체계를 통해서 육성되는 기술 전문인력의 사회적 중요성은 학력 중심의 교육 위계, 대학 서열화 속에서 그 가치가 희석되고 있음.
- 직업계고는 일반계고와의 경쟁에서, 전문대학은 일반대학과의 경쟁에서 구조적 제약에 처해 있으며, 이는 학습자의 선택 구조 자체를 제약하여 직업교육이 선택되지 않는 경로로 고착시키고 있음.
- 따라서 단기적으로 직업교육 경로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인센티브의 제공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직업교육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경로에 대한 학습자의 선택이 긍정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할 것임. 다만 이러한 논의는 여전히 미비하여 직업교육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정 수준과 해당 경로에 대한 인식은 낮은 상황이며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직업교육이 교육체제 내부의 수직적 위계 구조 속에서 동등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적 인식이 세 번째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상 제시한 3가지 제약은 직업교육체제의 현안, 이상적 미래상, 개선 방향성과 정책 방안의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지만,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내린 신념 및 인식 체계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해결 방안 역시 분명하지 않음. 다만 이러한 문제 의식이 지니는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직업교육 정책 수립의 출발점으로 단기적 성과 중심의 과제 해결이 아니라, 직업교육 개선을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동시에 필요함. 따라서 직업교육 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단기 추진 과제와 장기 추진 과제가 병행되는 이중구조의 마련이 필요할 것임.
  
-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구축과 관련해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 변화의 걸림돌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를 종합하여 도달할 수 있는 본 연구의 최종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선택되지 못하는 것이 곧 그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님. 사람들의 단기적 선호나 일시적 선택을 근거로 정책적·제도적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며, 특정 제도가 일시적으로 외면받고 있다는 이유로 그 사회적 의미와 교육적 가치를 축소해서는 안 됨. 현재 선택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사회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면,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육성해야 하며, 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입증하고 사회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함.
  
- 소수만이 진입할 수 있는 이른바 ‘황금 티켓’을 둘러싼 과도한 경쟁은 사회 전반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삶의 경로 다양성이 지닌 본질적 가치를 축소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직업교육이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가 감소 속에서 학생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응이 순응적이거나 수동적인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됨. 즉 저출생에 대한 직업교육 정책 대응이 반응적인 규모 축소나 수동적인 조정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오히려 직업교육의 성과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선택이 존중되고 보장될 수 있는 포괄적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함.

- 이를 통해 직업교육체제가 더 이상 수렴적이고 닫힌 경로가 아닌, 발산적이고 확산적인 교육경로로서 의미를 확보해야 할 것임. 이는 직업교육이 '차선의 선택'이 아니라 다양한 학습자의 삶의 조건과 진로목표에 근거하여 폭넓은 삶의 경로로서 '주체적 선택'의 경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야말로 저출생시대 직업교육체제가 지향해야 할 본질적인 가치이자 궁극적인 목표임.

## 제2절 한계 및 향후 과제

□ 본 연구는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심도 있는 고찰을 기반으로 직업교육의 현안, 이상적 미래상, 개선 방향성, 정책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목적과 초점에 의해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

- 첫째, 본 연구는 각 정책 방안에 대한 예산, 주체, 시기,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담고 있지 못함. 사실 하나의 정책 방안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실 있게 마련하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별도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 혹은 효과성은 높으나 실행가능성이 낮게 나타난 핵심 장기 과제에 대한 별도 연구 수행이 필요할 것임.
- 둘째, 본 연구는 전문가 심층 면담과 델파이 조사를 기반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직업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식과 이해를 반영하지 못하였음. 대표적으로 학생 및 학부모가 인식하는 직업교육체제에 대한 논의를 담지 못하였음. 따라서 향후에는 직업교육에 참여한 혹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뿐 아니라 참여를 망설였던 다양한 학생 및 학부모의 인식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할 것임.
- 셋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맥락에 기반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개별 개선 방향성과 정책 방안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사례 비교 및 분석이 제한적으로 수행되었음. 특히 직업교육법, 지역 기반의 협력 모델, 후학습 체계 등은 선진국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클 것이라고 사료됨. 따라서 향후 과제로 본 연구의 핵심 정책 방향과 방안에 대한 해외 사례의 검토와 벤치마킹을 통해 정책적 타당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본 연구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제안 과제 이외에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검토 필요성이 확인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직업교육의 성과모형 혹은 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함. 본 연구를 통해서 직업교육의 성과는 취업률과 같은 단기적인 지표로 대변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

있음. 즉 직업교육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교육적, 경제적, 문화적 차원의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명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음. 특히 이러한 성과에 대한 인식이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동등성 확보에 중요한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직업교육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혹은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업교육의 성과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직업교육에 기반한 유연한 경력경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함. 본 연구 결과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의 구축은 직업교육체제가 얼마나 학습자의 특성과 진로목표에 대응하는 유연한 직업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가로 귀결될 수 있음. 따라서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진학과 취업, 지역 정주와 후학습 등 다양한 경로가 실제로 어떠한 조건에서 실현되는지, 어떠한 제도적 장벽이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함.
- 셋째,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직업교육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연구가 필요함. 본 연구 결과, 직업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책무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의 강화는 향후 직업교육체제의 강화를 위한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조건임. 따라서 중등과 고등 직업교육을 포함하며 학문 중심 교육체계와 동등성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직업교육을 종합적으로 총괄·조정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함.

## 참고문헌

- 강경중, 김종우, 김성남, 김대영, 전종호, 송기원(2023). 2023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정책 연구 사업 1.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성과관리 지원. 교육부, 전라북도교육청,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강경중, 김종우, 김종욱, 김선태, 주홍석, 홍은선(2022).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한 전문대학의 발전적 구조개혁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고용노동부(2022. 6. 29.).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2023. 12. 28. a). 2023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2023. 12. 28. b). 23년 3차례 정부 대책 발표, 빈일자리 수 8개월 연속 감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2024. 1. 1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최대 3년까지 받는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2024. 3. 21.). 직업계고 학생도 종합 취업 서비스(고용서비스+직업훈련)를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2024. 8. 5.). 플랫폼 종사자 88.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2024. 12. 20.). 내년 외국인력(E-9) 13만 명 도입.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2025. 1. 23.). 로봇부터 방사선까지! 미래를 여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에 도전하세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교육부(2015. 10. 10.).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전국 60개 특성화고로 본격 확대된다.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2024). 2024 선정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우수사례집.
- 국가통계포털(n.d.a) 경제활동별 GDP 및 GNI.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200Y105&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200Y105&conn_path=I2)(검색일 2025. 2. 20.).
- 국가통계포털(n.d.b).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5A&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5A&conn_path=I2)(검색일 2025. 3. 3.).

- 관계부처합동(2013. 8. 29.).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도입 계획.
- 관계부처합동(2020. 12. 17. a). 제1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19~'23) 수정.
- 관계부처합동(2020. 12. 17. b).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 효과성 제고 방안.
- 관계부처합동(2023. 8.).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
- 관계부처합동(2024. 6. 20.).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 관계부처합동
- 관계부처합동(2024. 11. 14.). 서비스산업생산성 혁신 지원방안.
- 교육과학기술부(2008. 7. 8.).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계획.
- 교육부(2019. 12. 23.). 미래 산업수요 대응을 위한 전문대학 혁신방안.
- 교육부(2020. 2.). 2020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 교육부(2020. 11. 25.). 직업계고-지역협업 기반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공고. 교육부 보도자료.
- 교육부(2022. 1.).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 교육부(2022. 5. 4.).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3.0) 선정 대학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 교육부(2023. 2.).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LiFE 2.0) 기본계획(안).
- 교육부(2023. 2.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 선정·운영 계획.
- 교육부(2023. 3. a). 신산업·신기술 및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 재구조화 2.0 지원 기본계획.
- 교육부(2023. 3. b). 2023학년도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기본계획.
- 교육부(2023. 9.).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교육부(2024. 1. a). 지역 거버넌스 중심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
- 교육부(2024. 1. b).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2.0 기본계획.
- 교육부(2024. 1. 23.). 현장직무능력 갖춘 신산업 전문기술인재 양성. 교육부 보도자료.
- 교육부(2024. 1. 24.). 전문기술석사 최초 배출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성과토론회 개최. 교육부 보도자료.
- 교육부(2024. 2. a). 2024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일반재정지원 기본계획.
- 교육부(2024. 2. b). 2024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기본계획.
- 교육부(2024. 2. c). 2024년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 교육부(2024. 3.) 2024년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 교육부(2024. 3. 8.). 직업교육 혁신지구에 서울특별시 선정, 지역 특화·전략 산업 분야 고졸 인재 키워낸다. 교육부 보도자료.
- 교육부(2024. 12. 26.).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2025년 전국 시행. 교육부 보도자료.
- 교육부(2025. 2. 6.). 지역사회에 필요한 신산업 인재 양성 전문대학이 앞장섭니다. 교육부 보도자료.
- 교육부, 고용노동부(2016. 4. 8.). 기업과 학교가 손잡고 미래의 기술 명장을 기른다.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0~2024).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연보.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3).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고등교육통계편.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 (검색일 2024. 8. 1.).
- 권순형, 정미경, 이강주, 허 주, 민윤경, 정혜주, 박균열, 정규열, 이호준, 안병훈(2021).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권철우, 전용식, 김수명, 이상진(2023). 로봇 자동화가 울산지역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 청년과 저숙련 고용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울산본부.
- 김남희, 이수정, 박미희, 이수현(2023). 미래 교육 환경 변화와 직업계고 교사 전문성. 한국 직업능력연구원.
- 김두섭(2010). 초저출산 시대의 도래와 출산력 저하의 주요 원인. 통계청(편저), 한국의 사회 동향 2010(pp. 14-20). 통계청.
- 김성남, 류지은, 유진영, 안유진, 최지연(2024). 2024년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사업 1.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및 개교 준비 지원. 교육부, 광주광역시교육청,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김성민(2022). 디지털로 다시 도약하는 산업의 혁신성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김현미, 변희현, 이수정, 정은주, 주형미, 이상일, 조대현, 최항섭(2022). 인구감소 대비 지역별 인구추계 기반 미래학교 시나리오 구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현아, 고창수, 신동준, 신화연(2022).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각론⑤: 재정 지속가능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현호, 이제연, 김도형(2021). 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대한민국정부(2020).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
- 대한상공회의소(2023). 청년 구직자 일자리 인식 조사.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2023. 5. 25.).
- 문현주, 강인성(2024). 제조업의 서비스화, 제조업의 신성장 동력.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347/view.do?nttId=10084383&menuNo=201106&pageIndex=1>
- 민동석(2016). 교육 2030 인천선언과 실행계획.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박남기(2024). 학령인구감소 시대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 2024년 제2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토론회 발표자료.
- 박보람, 김준영, 김태환(2023). 플랫폼 종사자 직종별 근무실태와 정책과제. 한국고용정보원.
- 박상수(2024). 글로벌 로봇산업 동향 분석과 우리의 발전 방향. 산업연구원.
- 박종서, 김동진,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이윤경 ..., 정희선(2022).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각론②: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강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박종성, 김대영, 문상균, 박동진, 손규태, 장주희, 김미란, 전성준, 이지은, 민지식(2024). 2024년 일학습병행 성과관리 지원사업 2-2. 일학습병행 성과진단.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박진경, 김현호, 김상민, 임태경(2019).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송단비, 민순홍, 최민청, 조재한(2024). 산업별 인공지능 도입의 노동시장 영향과 정책과제. 산업연구원.
- 송철호(1997). 한국 도시성장 과정과 모형에 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10, 195-225.
- 신휴석, 이소현, 박대한(2023).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 동인 연구. 국토연구원.
- 안중기(2025). 서비스업 생산성 진단 및 제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옥우석(2021). 개인훈련계좌제도의 제도적 조건: 프랑스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EU학 연구, 26(3), 87-124.

- 유진영(2022). 독일 직업교육법 개정(2019)의 배경과 합의 고찰. *교육의 이론과 실천*, 27(1), 1-23.
- 이상준, 노세리, 오진욱, 박지성, 노성철(2023). 공채의 종말과 노동시장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 이상훈, 최동선, 안재영, 류지은, 김남희, 최지희, 길혜지(2024). 인구감소 시대의 직업교육 정책 연구: 저출생에 대응하는 직업교육 체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이수현, 김남희, 이정민, 심미경(2024). 학생주체성에 기초한 특성화고 미래 교육혁신 모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이승호, 김근주, 이은주, 김기홍, 조영민, 고혜진(2023). 고령 불안정 노동 실태와 정책 대응. 한국노동연구원.
- 이윤경, 강은나, 김경래, 주보혜, 고영호, 김진현, 남재량, 문종철, 백혜연, 이동민, 조현승, 김세진(2019). 고령인구 증가와 미래 사회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종성(2006). 델파이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 이희경, 도금혜, 임한려, 주홍석, 홍성경, 전민재(2020).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문대학 체제 혁신 방안 연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
- 전남일보(2025. 4. 16.). 전남도교육청 “전남국제직업교, ‘전남미래국제고’로 교명 확정”. <https://m.jnilbo.com/76752137026>(검색일 2025. 5. 1.).
- 정선영, 이아랑, 정동재, 최준, 안병탁(2024). 글로벌 공급망으로 본 우리경제 구조변화와 정책대응. 한국은행.
- 진달래(2024). 전문·숙련 외국인력 유치 정책 및 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채민석, 장수정(2025). 경력직 채용 증가와 청년 고용. 한국은행.
- 최동선, 김남희, 류지은, 이상훈, 임언, 안현용, 임정훈(2021). 미래 환경 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에서 평생직업교육 내실화 방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최동선, 류지은, 이상훈, 오혁제(2023).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 변화와 학교 직업교육의 대응.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최동선, 변숙영, 신동준, 김호진, 김윤경(2023). 2023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2. 직업계고 재구조화 모니터링. 교육부, 전라북도교육청,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최동선, 이상훈, 김호진(2024). 2024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5.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방안. 교육부, 광주광역시교육청,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최수현, 류지은, 윤종혁(2023). 직업계고 졸업생의 지역 정착.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통계청(2021). 한국의 사회동향 2021. 통계청.
- 통계청(2023. 12. 6.). 2022년 일자리 행정통계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 통계청(2023. 12. 14.). 장래인구추계(2022~2072). 통계청 보도자료.
- 통계청(2024). 장래인구추계: 2022 인구총조사 기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2)(검색일 2024. 10. 25.).
- 통계청(2024. 3. 19.). 2023년 혼인·이혼 통계. 통계청 보도자료.
- 통계청(2024. 4. 17.).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 통계청(2024. 6. 5.). 2022년 일자리 이동통계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 통계청(2024. 7. 16.).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 통계청(2024. 12. 6.). 2023년 일자리 행정통계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 통계청(2025. 2. 26.)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통계청 보도자료.
- 통계청 e-나라지표(n.d.a).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6](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6)(검색일 2025. 2. 20.).
- 통계청 e-나라지표(n.d.b). 비정규직 고용동향.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77](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77)(검색일 2025. 2. 20.).
- 통계청 e-지방지표(n.d.). 인구변화, 합계출산율. <https://kosis.kr/visual/eRegionJipyo/themaJipyo/eRegionJipyoThemaJipyoView.do>(검색일 2025. 2. 20.).
- 하봉찬(2006).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정체 현상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 학교알리미(2020~2022). 학교현황 정보공시 자료. <https://schoolinfo.go.kr/>(검색일 2022. 7. 4.).
- 한국교육개발원(2008~2022). 대학·학교별·학과별 데이터셋. <https://kess.kedi.re.kr>(검색일 2023. 5. 22.).
- 한국교육개발원(2008~2024). 유·초등·중등학교/학과별 데이터셋. <https://kess.kedi.re.kr> (검색일 2023. 9. 6.; 2024. 9. 11.).
- 한국교육개발원(2011~2022). 대학 취업통계 학교별 데이터셋. <https://kess.kedi.re.kr>.
- 한국교육개발원(2013~2022). 직업계고 학교별·학과별 현황. 유·초등·중등 교육통계 DB.
-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대학통계. 입학정원/모집인원 및 입학자.
-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유치중등통계. 입학 및 졸업 후 상황.
-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4). 2024년 우리나라 산업구조 동향 분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국은행(2023).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생산 및 공급망 지도. 한국은행.
- 한국은행(2024). 글로벌 공급망으로 본 우리 경제 구조변화와 정책대응. 한국은행.
- 한요셉(2020).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한국개발연구원.
- Aleca, O. E. & Mihai, F. (2025). The Role of Digital Infrastructure and Skills in Enhancing Labor Productivity: Insights from Industry 4.0 in the European Union. *Systems*, 13(2), 113.
- Allgood, K. & Perez, F. (2024). Putting People First: A New Imperative for Manufacturing. *World Economic Forum*.
- Apple Developer Academy(2025). Apple Developer Academy @POSTECH. <https://developeracademy.postech.ac.kr/>(검색일 2025. 2. 19.).
- Australian Skills Quality Authority(2025). Training Packages. <https://www.asqa.gov.au/about/vet-sector/training-packages>(검색일 2025. 2. 11.).
- Bahrke, J. & Grammenou, M. (2021). Digital Economy and Society Index 2021: overall progress in digital transition but need for new EU-wide efforts. EU press release.
- BIBB. (n.d.). DQR Bridge 5: Forderung von Durchlässigkeit zur Fachkraftgewinnung - Entwicklung von bereichsübergreifenden Bildungsmaßnahmen auf Niveau 5 des DQR.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
- Billett, S. (2020). Perspectives on enhancing the standing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he occupations it serve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72(2), 161-169.
- Broom, D. (2023). Having Many Careers will be the Norm, Experts Say. *Davos Agenda*, World Economic Forum.

- Bughin, J., Hazan, E., Lund, S., Dahlström, P., Wiesinger, A., & Subramaniam, A. (2018). Skill shift: Automation and the Future of the Workforce. McKinsey Global Institute.
- California Community Colleges Chancellor's Office(2015). Board of Governors Task Force on Workforce, Job Creation, and a Strong Economy: Report and Recommendations. California Community Colleges.
- Cedefop & Norwegian Directorate for Higher Education and Skills (2022).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Europe - Norway: system description. Cedefop; ReferNe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Europe database.
- Cedefop & Refernet(2023a). National Skills Strategy: Germany. Timeline of VET policies in Europe. <https://www.cedefop.europa.eu/en/tools/timeline-vet-policies-europe/search/28121>(검색일 2025. 1. 31.).
- Cedefop & Refernet(2023b). Reform of Continuous Learning: Finland. Timeline of VET Policies in Europe. <https://www.cedefop.europa.eu/en/tools/timeline-vet-policies-europe/search/36311>(검색일 2025. 1. 31.).
- Cedefop(2015). Skill Shortages and Gaps in European Enterprises: Striking a Balance Betwee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the Labour Market.
- Cedefop(2017). The Changing Nature and Role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Europe. Volume 1: Conceptions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 Analytical Framework.
- Cedefop(2020).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Europe, 1995-2035: Scenarios for Europea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21st century. Cedefop reference series, 114.
- Cedefop(2021a). More perceptions: opinion survey on adult learning and continui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Europe. Volume 2: views of adults in Europe.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Cedefop

- reference series, No 119. <http://data.europa.eu/doi/10.2801/55767>
- Cedefop(2021b). The importance of being vocational: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VET in the next decade
- Cedefop(2021c). The role of work-based learning in VET and tertiary education.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Cedefop research paper.
- Cedefop(2022). The future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s learner-centred. Briefing note. <https://www.cedefop.europa.eu/en/press-releases/future-vocational-education-and-training-learner-centred>(검색일 2025. 2. 11.).
- Cedefop(2025a). Flexibl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VET toolkit for tackling early leaving. <https://www.cedefop.europa.eu/en/en/tools/vet-toolkit-tackling-early-leaving/intervention-approaches/flexibleeducation-and-training-systems>(검색일 2025. 2. 11.).
- Cedefop(2025b). Personal Training Account, Compte personnel de formation (CPF). Cedefop Publishing.
- Cohen, A.M. & Brawer, F.B. (2008). The American Community College (5th Ed.). Jossey-Bass.
- CSC(2021). Digivisio 2030 hankesuunnitelma 2021-2024. CSC: IT Center for Science.
- Davis, J.H. & Lewin, H. (2015). Obama Plan Would Help Many Go to Community College Free. The New York Times.
- Department for Education(2023). Introduction of T Levels. Policy paper.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troduction-of-t-levels/introduction-of-t-levels>(검색일 2025. 2. 21.).
- Department of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2025a). Skills for tomorrow: Shaping the future of Australian apprenticeships. Department of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Publishing.
- Department of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2025b). Types of apprentic

- eships. <https://www.apprenticeships.gov.au/about-apprenticeships/types-apprenticeships>(검색일 2025. 2. 19.).
- Digital Promise(2024). Educator Micro-credential Policy Map. <https://digitalpromise.org/initiative/educator-micro-credentials/micro-credential-policy-map/>(검색일 2025. 2. 11.).
- Elmqaddem, N. (2019). Augmented reality and virtual reality in education. Myth or re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emerging technologies in learning*, 14(3), 234-242.
- EU Council(2022). A European approach to micro-credentials for lifelong learning and employability.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OJ C 243, 27.6, 10-25.
- European Commission(2020). Digital education action plan 2021-2027. Resetting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 digital age. European Commission.
- European Commission(2022). Digital Economy and Society Index (DESI) 2022. EU publishing.
- European Commission(2024a). A European approach to micro-credentials. <https://education.ec.europa.eu/education-levels/higher-education/micro-credentials>(검색일 2025. 2. 11.).
- European Commission(2024b). Education and training monitor 2024: comparative report.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European Union(2025). 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 EU Publishing.
- Eurostat(2023). EU labour force survey 2023. Eurostat.
- Eurostat(2024). Participation rate in education and training (last 4 weeks) by sex and age. [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view/trng\\_lfse\\_01/default/table?lang=en](https://ec.europa.eu/eurostat/databrowser/view/trng_lfse_01/default/table?lang=en)(검색일 2025. 2. 10.).
- Farran, I. & Nunez, I. (2024). Converging pathways: new approaches to integrate 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and higher education.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1-19.

- G20 Summits(2017). Digital Skills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nex paper 2 to the Declaration of the Ministers responsible for the Digital Economy.
- Galindo, M., Fennelly-Atkinson, R., Franklin, K., Luna, C. (2024). The Role of Micro-Credentials in Lifelong Learning and Development: Empowering Learners, Empowering Organizations. Digital Promise.
- Government of Ontario(2024). Micro-credentials from Ontario's postsecondary schools. <https://www.ontario.ca/page/micro-credentials-ontarios-postsecondary-schools>
- Government of Singapore(2024). Short industry-relevant training for emerging skills in economic growth pillars. <https://www.skillsfuture.gov.sg/initiatives/mid-career/series>(검색일 2025. 2. 11.).
- Grande École du Numérique(2025). Clap de fin pour la Grande École du Numérique. Communiqué de presse.
- Guajardo, M. G. P. (2020). Personalised and Differentiated Learning: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ETF Openspace.
- Hemkes, B. (2018): Zwischen Studium und Beruf: Formate und Handlungskoordinationen im Kontext von Durchlässigkeit. In: bwp@Berufs- und Wirtschaftspädagogik - online, Ausgabe 34, 1-23.
- Hiim, H. (2020). The quality and standing of school-based Norwegian VET.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72(2), 228-249.
- Hodge, S., Smith, R., Field, J., & Flynn, M. (2017). The Contribution of VET Student Placement to Innovation in Host Organisations. NCVET Research Report. National Centre for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Ltd.
- Hoffman, N. & Schwartz, R. (2015). Gold Standard: The Swiss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National Center on Education and the Economy.

- Hoftijzer, M., Stronkowski, P., & Rezenbaum, J. (2018). Getting Out of School and into the Workplace: Strengthening Work-Based Learning in Upper Secondary Technical Education in Poland's Swietokrzyskie Region. World Bank Group.
- ILO(2018).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RPL): Learning Packag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Skills and Employability Branch, Employment Policy Department.
- ILO(2022). Strengthening work-based learning in VET institution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Publishing.
- Jackson, S. (2015). A new era of alignment in massachusetts' advanced manufacturing industry. Jobs for the Future.
- Kane, G. C. (2015). Strategy, not technology, drives digital transformation. MIT Sloan Management Review and Deloitte University Press.
- Kato, S., Galán-Muros, V., & Weko, T. (2020). The Emergence of Alternative Credentials. OECD Education Working Papers, No. 216, OECD Publishing.
- Kerber, L. & Gourdin A. (2018). Quality Assurance and work-based learning. European Association for Quality Assurance in Higher Education.
- Koksal, I. (2020). The rise of online learning. Forbes.
- Lane, M. (2020). Regulating platform work in the digital age. OECD Publishing.
- Lawshe, C. H.(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4), 563-575.
- Le site officiel d'information et de démarches administratives(2025). Personal Training Account (PTA) of a Private Sector Employee.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0705?lang=en> (검색일 2025. 2. 3.).
- Lewis, J. & Bolton, P. (2022). Technical education in England: T Levels. House of Commons Library.

- Ministère du Travail(2021). Le compte personnel de formation en 2020.
- Ministère du Travail(2023). Les chiffres de l'apprentissage en 2022. Ministère du Travail.
- Moutray, C. & Holland, M. F. (2024). NAM manufacturers' outlook survey fourth quarter 2023.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 Musset, P. (2019). Improving work-based learning in school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233, 1-79.
- Nedelkoska, L. & Quintini, G. (2018). Automation, Skills Use and Training.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02. OECD Publishing.
- Norwegian Directorate for Education and Training(2020). Norwegia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https://www.udir.no/in-english/norwegian-vocational-education-and-training/>(검색일 2025. 2. 27.).
- O'Toole, C., Schneider, J., Smaje, K., & LaBerge, L. (2020). How COVID-19 has pushed companies over the technology tipping point and transformed business forever. McKinsey Global Institute.
- OECD(2020). OECD Employment Outlook 2020: Worker Security and the COVID-19 Crisis.
- OECD(2023a). Education Database: Enrolment by age. OECD Education Statistics (database). <https://doi.org/10.1787/71c07338-en>(검색일 2023. 5. 25.).
- OECD(2023b). Labour Force Statistics: Historical population data.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 <https://doi.org/10.1787/4cf3d106-en>(검색일 2023. 5. 25.).
- OECD(2023c). Building Future-Ready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OECD Publishing.
- OECD(2023d). OECD Pensions Statistics.
- OECD(2024a).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 OECD(2024b). Strengthening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in Korea, Connecting

- People with Jobs. OECD Publishing.
- OECD(2024c). A sectoral taxonomy of AI intensity. OECD Publishing.
- OECD(2024d). PISA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VET). Assessment and Analytical Framework. OECD Publishing.
- OECD(2024e). Promoting Better Career Choices for Longer Working Lives: Stepping Up Not Stepping Out,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OECD Publishing.
- OECD(2025). Trends Shaping Education 2025. OECD Publishing.
- PEQAB(2023). Ontario Micro-Credentials: Harnessing the Potential. Postsecondary Education Quality Assessment Board.
- Pesole, A., Brancati, U., Fernández-Macías, E., Biagi, F., & González Vázquez, I. (2018). Platform workers in Europe.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Pilz, M.(2016). Typologies in comparative vocational education: Existing models and a new approach. *Vocations and Learning*, 9, 295-314.
- Remington, T. F. (2018).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TVET: Adapting the dual system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70(4), 497-523.
- Rexhepi Mahmutaj, L. & Jusufi, N. (2023). The importance of digital skills in firms' innovation: the case of Western Balkans. *Journal of technology management & innovation*, 18(3), 98-102.
- Rodero, L. G. (2023). The european digital education plan for the development of lifelong learning. *The value of the difference and lifelong learning in the contemporary pedagogy*, 113-129.
- Scheel, H., Kagermann, H., & Scheer, A. (2017). Germany: Industrie 4.0. Digital Transformation Monitor. European Commission.
- SCQF Partnership(2012). SCQF level descriptors. <https://scqf.org.uk/the-framework/about-the-framework/>(검색일 2025. 2. 11.).

- SkillsFuture Singapore(2023). Skills Framework for Accountancy. <https://www.skillsfuture.gov.sg/initiatives/early-career/skills-framework/accountancy>(검색일 2025. 2. 17.).
- SkillsFuture Singapore(2024a). Skills Frameworks to support the Industry Transformation Maps. <https://www.skillsfuture.gov.sg/initiatives/early-career/skills-framework>(검색일 2025. 2. 17.).
- SkillsFuture Singapore(2024b). SSG Annual Report for the year 2023/2024. Government of Singapore.
- Stanford University(2023). Artificial Intelligence Index Report 2023. Stanford University.
- Suyitno, S., Nurtanto, M., Jatmoko, D., Widiyono, Y., Purwoko, R. Y., Abdillah, F., & Hermawan, Y. (2025). The Effect of Work-Based Learning on Employability Skills: The Role of Self-Efficacy and Vocational Identity.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4(1), 309-321.
-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Finland(2019). Continuous learning reform, Parliamentary reform of continuous learning. <https://okm.fi/en/continuous-learning-reform>(검색일 2025. 1. 31.).
- Training.com.au(2025). Training Packages in Australia. <https://www.training.com.au/training-packages/>(검색일 2025. 2. 11.).
-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2012). UNESCO guidelines for the recognition, validation and accreditation of the outcomes of non-formal and informal learning. UNESCO.
- Varlamova, J. & Larionova, N. (2020). Labor Productivity in the Digital Era: A Spatial-Temporal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Technology*, 11(6), 1191-1200.
- WEF(2020). The Future of Jobs Report 2020. World Economic Forum.
- WEF(2025). Future of Jobs Report 2025. World Economic Forum.
- Wielgos, D. M., Homburg, C., & Kuehnl, C. (2021). Digital business capability: its

impact on firm and customer performance.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49(4), 762-789.

Yee, L., Chui, M., & Robert, R. (2024). *McKinsey Technology Trends Outlook 2024*. McKinsey Global Institute.

文部科学省(n.d.). 대학·단대·전문학교와 전문직 대학·전문직 단대의 비교(大学·短大·専門学校と専門職大学·専門職短大の比較).

文部科学省(n.d.). 전문직 대학 등의 개요·특색(専門職大学等の概要·特色). [https://www.mext.go.jp/a\\_menu/koutou/senmon/1387235.htm](https://www.mext.go.jp/a_menu/koutou/senmon/1387235.htm)

## 부록

- 부록1 1차 델파이 조사지(중등)
- 부록2 1차 델파이 조사지(고등)
- 부록3 2차 델파이 조사지(중등)
- 부록4 2차 델파이 조사지(고등)
- 부록5 3차 델파이 조사지(중등)
- 부록6 3차 델파이 조사지(고등)



## 부록 1. 1차 델파이 조사지(중등)

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델파이 조사(1차) [중등직업교육 영역]		
「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연구를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발주처	연구진
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발전총괄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팀(이상훈, 최동선, 김중욱, 류지은, 김남희)
<p>1. 본 연구의 목적은 <b>지출생과 인구구조의 변화를 포함하는 사회적·경제적·교육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의 구축을 위한 혁신 로드맵을 탐색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b>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등직업교육(직업계고등학교)과 고등직업교육(전문대학)을 중심으로 ①<b>주요 현안(이슈)</b>, ②<b>이상적 미래상</b>, ③<b>개선 방향성</b>을 탐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④<b>정책 방안</b>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직업교육 현장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마련을 위한 현 상황 진단, 주요 이슈 파악, 직업교육체제 방향 및 정책에 관한 <b>심층 면담</b>을 실시하였습니다.</p> <p>2. 본 델파이 조사는 면담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b>델파이 조사는 총 3차례에 걸쳐서 진행</b>됩니다. 1차 델파이 조사의 주요 내용은 주요 현안(이슈), 이상적 미래상, 개선 방향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마련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개방형 의견 수렴입니다.</p>		
구분	1차 델파이	2차 델파이
주요 현안(이슈)	타당성 검토	수정 사항 검토 / 중요도-시급도 검토
이상적 미래상	타당성 검토	수정 사항 검토
개선 방향성	타당성 검토	수정 사항 검토
정책 방안	개방형 의견 수렴	타당성 검토
		3차 델파이
		실행가능성-효과의 측작성 검토
- 귀하의 응답은 본 연구의 귀중한 정보로 활용될 예정이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 연구책임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훈 (000-0000-0000, 000-000-0000, 0000@krivet.re.kr)		
※ 화신 및 문의처: 김영서(000-000-0000, 0000@krivet.re.kr)		
소속	직급	성함

### I 오늘날 직업교육체제의 주요 현안(이슈)

Q1▶ 오늘날 중등직업교육 운영과 관련한 주요 현안(이슈) 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질문에 따라 해당 칸에 체크(✓) 또는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현안 제목	현안 설명	타당성					수정 보완 의견 (명칭 변경, 설명 수정 등)
			전혀 타당하지 않음 →		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거시적·구조적 현안	직업교육 축소 압력과 지속가능성 위기	기술변화, 지출생 등의 사회적 변화로 직업교육이 무용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직업교육체제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없애자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직업교육 자체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상						
	직업교육의 선도모델 의존과 양극화	미이스티고, 협약형 특성화고 등 일부 성공 사례(선도모델)에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면서 일반 특성화고와의 격차가 커지고, 학교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						
	직업교육의 거점화 전략과 구조적 난제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직업계고를 거점학교 형태로 통합하고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통합 과정에서의 학교 운영, 학과 배치, 물리적 거리, 공·사립 갈등 등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실질적인 운영의 현실성이 낮은 상황						
	직업계고의 계열 불균형과 뿌리산업 위기	학생 모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인기 높은 서비스 계열, 신산업 계열로 학과가 집중 개편되면서, 제조업 등 국가 산업 기반(뿌리산업)을 담당하는 기초기술 인력의 양성이 위축되는 현상						
학교운영·교육과정 현안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직무수행(협약특수직무)에서 보편형(광역중핵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흐름과 직무특수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면서, 교육과정의 목표와 운영 방식에 혼란이 발생 하는 문제							

구분	현안 제목	현안 설명	타당성					수정 보완 의견 (명칭 변경, 설명 수정 등)
			전혀 타당하지 않음 →		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학교운영 교육과정 현안	직업교육과정의 제도적 경직성과 혁신 대응의 한계	NCS 기반의 도제학교와 과정평가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해 학교 교육과정이 과도하게 경직되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신기술 신산업 등 사회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						
	현장실습의 필요성과 파행적 운영의 이중성	현장실습이 학생의 현장적용력 향상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서는 취업률 달성 목적에 치우쳐 형식적이고 파행적으로 이루어져 교육과정을 왜곡하는 이중적 문제						
	학교-기업 협력의 불균형과 직업교육 왜곡	학교와 기업 간 협력 과정에서 학교가 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현장실습이나 도제학교 운영에서 기업의 요구에 끌려가는 불균형적 구조가 형성되어 직업교육 본연의 목적이 왜곡되는 현상						
학교 내부 구성원 현안	직업계고 교사의 역할 과부하와 전문성 침식	기업과의 협력, 진로상담, 학생 생활지도 등 과도하게 다양한 역할이 교사에게 집중되면서 교사의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고, 교사의 본연의 전문성이 침식되는 문제						
	직업교육 진입 학생의 기초역량 약화와 진로선택 왜곡	직업계고에 진학하는 학생의 기초학력 저하와 왜곡된 직업의식(단기노동 선호, 임금격차 회피 등)으로 인해, 취업 준비도와 직업교육 성과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현상						
	심리·사회적 취약 학생 증가와 직업교육 기능 약화	심리적·사회적으로 취약한 학생 비율이 증가하면서 직업교육보다는 생활지도 및 기초적 인성교육에 치중하게 되어, 직업교육 기관으로서의 본래 기능과 정체성이 약화되는 문제						
학생 성장 경로 현안	직업계고의 진학 딜레마: 취업 우선 원칙과 진학 수요 사이의 괴리	직업계고가 '취업 우선 원칙'을 유지하지만, 현실적으로 진학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취업 기능과 진학 지원 사이에서 학교 운영에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는 현상						
	직업계고 학생의 진로설계 부재와 성장경로 단절 문제	직업계고 학생들이 졸업 후 구체적인 진로 목표 없이 사회로 진출하고 있으며, 이후의 전문적 성장 경로와 사회적 인정 기반이 부재하여 지속가능한 진로 설계가 어려운 문제						

Q2▶ 오늘날 중등직업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위 제시한 13가지 외에 주목해야 하는 현안(이슈)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견 작성을 요청 드립니다"

## II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중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

Q3▶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중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 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질문에 따라 해당 칸에 체크(✓) 또는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상	학생 중심의 진로설계와 다양한 성장경로를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중등직업교육					
<b>핵심 키워드</b>	<b>진로 설계 중심</b> • 중등직업교육의 목적을 학생 개개인의 진로를 명확히 설정하고 다양한 사회진출 경로를 확보하도록 돕는 것에 초점진로 미결정 상태를 방지할 맞추는 것	<b>학생 중심성</b> • 취업률, 진학을 등 기업이나 학교 중심의 성과 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의 수요와 성장이 라는 관점에서 직업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하는 것	<b>다양한 사회 진출 경로</b> • 취업과 진학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학생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 다양한 사회진출과 성장 경로를 보장하는 것	<b>경력개발과 장기적 성장</b> • 직업교육을 생들이 장 기적으로 경력을 쌓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사회적 이동성과 개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	<b>교육복지와 다양성 존중</b> • 직업교육을 교육 체제 내에서의 다양성 보장 및 복지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영역으로 인식하는 것	<b>복합적 성과 평가</b> • 직업교육의 성과를 단순한 경력직 지표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성장 사례, 자존감 회복, 심리적 안정 등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

구분	제목	설명	타당성					수정 보완 의견 (명칭 변경, 설명 수정 등)
			전혀 타당하지 않음	→			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미래상	학생 중심의 진로설계와 다양한 성장경로를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중등직업교육							
핵심 키워드	진로 설계 중심	중등직업교육의 목적을 학생 개인의 진로를 명확히 설정하고 다양한 사회진출 경로를 확보하도록 돕는 것에 초점진로 미결정 상태를 방지를 맞추는 것						
	학생 중심성	취업률, 진학률 등 기업이나 학교 중심의 성과 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의 수요와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직업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하는 것						
	다양한 사회진출 경로	취업과 진학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학생의 희망과 적성에 따라 다양한 사회진출과 성장 경로를 보장하는 것						
	경력개발과 장기적 성장	직업교육을 생들이 장기적으로 경력을 쌓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사회적 이동성과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						
	교육복지와 다양성 존중	직업교육을 교육 체계 내에서의 다양성 보장 및 복지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영역으로 인식하는 것						
	복합적 성과 평가	직업교육의 성과를 단순한 계량적 지표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의 성장 사례, 자존감 회복, 심리적 안정 등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						

**Q4▶**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중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과 추가되어야 할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견 작성을 요청 드립니다"

**III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중등직업교육의 개선 방향성**

**Q5▶**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중등직업교육의 개선 방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상	학생 중심의 진로설계와 다양한 성장경로를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중등직업교육					
핵심 키워드	진로 설계 중심	학생 중심성	다양한 사회 진출 경로	경력개발과 장기적 성장	교육복지와 다양성 존중	복합적 성과 평가

개선 방향성	[동등성]	[다양성]	[전문성]	[유연성]	[연계성]
	직업교육이 일반교육 및 학력 중심의 교육과 비교하여 사회적, 제도적으로 동등한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과 사회적 인정 체계 마련	학습자의 다양성 존중과 직업교육 접근성 확대를 위한 직업교육체제 개편  • 다양한 유형의 학습자(일반고 학생, 일반고 학생, 외국인 등)를 확보하고, 학습자의 개별적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직업교육 제공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 직업교육기관의 운영 역량과 전문성을 높여 지역사회 및 산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교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교육성과 제고	학생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적 진로 설계 및 성장경로 다각화  • 직업교육 졸업자들이 사회로 진출 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및 후학습 기회 강화	지속가능한 직업교육 생태계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다층적 연계 및 협력 강화  • 중등직업교육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사회·산업 학교 간 협력을 확대하여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직업교육 생태계 활성화

**Q5-1-①**▶ “[동등성] 직업교육의 동등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향성의 세부 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질문에 따라 해당 칸에 체크(✓) 또는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제목	설명	타당성					수정 보완 의견 (명칭 변경, 설명 수정 등)
			전혀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방향성	[동등성] 직업교육의 동등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직업교육이 일반교육 및 학력 중심의 교육과 비교하여 사회적, 제도적으로 동등한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과 사회적 인정 체계 마련						
하위 요소	직업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직업교육이 정권과 교육감 교체 등 외부적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비전 설정 및 정책 연계성을 강화함						
	학력·경력·자격의 사회적 인정 및 동등성 확보	국가역량체계(KQF)를 활용해 직업교육에서의 학습 결과, 자격, 경력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관리하며, 비학위 전문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확대함						
	직업교육 성장경로 확보 및 사회진출 기회의 균등화	직업교육 이수자가 진학·취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일계 진학 확대 및 교육과정 유연화를 추진하여 사회진출의 다양성을 보장함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성과 인정 강화	직업교육의 성과(임금·복지·승진 등)를 사회적으로 인정받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초·중등 단계에서부터 진로교육을 강화하여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장기적으로 개선함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교육 혁신 학과 지원 강화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직업교육체제가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국가전략 산업 및 뿌리산업 분야의 직업교육 지원 확대	중등과 고등직업교육 및 산업계 간의 연계를 통해 국가 전략 산업 및 뿌리 산업 분야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 투자와 지원을 강화함						

**Q5-1-②**▶ “[동등성] 직업교육의 동등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향성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과 추가되어야 할 하위 요소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견 작성을 요청 드립니다”

**Q5-1-③**▶ “[동등성] 직업교육의 동등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향성에 대해 고려 중인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외 추가되어야 할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정책 방안의 타당성은 2차 델파이에서 검토 예정

“[동등성] 직업교육의 동등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방안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교육법 제정</li> <li>5년 단위 직업교육 발전 기본계획 수립</li> <li>직업계고 비중 확대 정책 추진</li> <li>직업교육 성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 확대</li> <li>국가역량체계(KQF)의 지속 개발 및 적용 확대</li> <li>개인 자격·훈련 교육 경력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 및 활용처 확대</li> <li>직업계고 졸업자의 동일계열 진학 기회 확대(예: 동일계 특별전형 확대: 1.5%→5.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차원의 직업교육 인식 개선 사업 추진</li> <li>초중학교 단계 진로 교육 내실화</li> <li>중학교 교사 대상 직업교육 인식 개선 및 연수 제공</li> <li>중등직업교육 영역 탐색 및 확대</li> <li>뿌리 산업(기반 산업) 분야 직업교육 보호 정책 추진</li> <li>국가 전략 산업분야 인재 양성 장기투자 전략 수립</li> </ul> <p>“의견 작성을 요청 드립니다”</p>

**Q5-2-①▶** "[다양성] 학습자의 다양성 존중과 직업교육 접근성 확대를 위한 직업교육체제 개편" 방향성의 세부 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질문에 따라 해당 칸에 체크(✓) 또는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제목	설명	타당성					수정 보완 의견 (명칭 변경, 설명 수정 등)
			전혀 타당하지 않을 → 매우 타당할					
			①	②	③	④	⑤	
방향성	[다양성] 학습자의 다양성 존중과 직업교육 접근성 확대를 위한 직업교육체제 개편	다양한 유형의 학습자(일반고 학생, 성인학습자, 외국인 등)를 확보하고, 학습자의 개별적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직업교육 제공						
하위 요소	직업교육 학습자의 다양성 확대와 평생직업교육 가능 강화	직업계고가 중등학생뿐 아니라 성인학습자, 고교 미졸업자 등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평생직업교육을 제공하여 직업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						
	일반고 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자의 직업교육 참여 확대	일반고 학생의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내실화하고 직업계고에서 이를 적극 수용하여 더 많은 학생이 실질적 직업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방안						
	외국인 등 특수 학습자 대상 직업교육 기회 확대	외국인 학생이나 다문화가정 학생 등 특수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다양한 학습자의 직업역량 확보를 지원하는 방안						
	소규모 대학과 체계 구축을 통한 다양한 학습 수요 대응	학습자의 다양한 적성과 융합적 역량을 기우기 위해 소규모 학교 내 다양한 학과 운영을 유지하고,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직업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물리적 장애 극복 전략	통학버스 등 물리적 인프라 확충 및 온라인 교육 확대를 통해 직업계고 접근성을 높이고, 온라인 교육을 적극 활용하여 직업교육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방안						

**Q5-2-②▶** "[다양성] 학습자의 다양성 존중과 직업교육 접근성 확대를 위한 직업교육체제 개편" 방향성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과 추가되어야 할 하위 요소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견 작성을 요청 드립니다"

**Q5-2-③▶** "[다양성] 학습자의 다양성 존중과 직업교육 접근성 확대를 위한 직업교육체제 개편" 방향성에 대해 고려 중인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외 추가되어야 할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정책 방안의 타당성은 2차 델파이에서 검토 예정

"[다양성] 학습자의 다양성 존중과 직업교육 접근성 확대를 위한 직업교육체제 개편"을 위한 정책 방안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인학습자 대상의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범 사업 추진</li> <li>일반고 학생 대상 직업교육 위탁교육과정 도입 및 제도화</li> <li>외국인 유학생 대상 직업교육 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 및 내실화</li> <li>소규모 대학과 직업교육 학교체제 마련</li> <li>소규모 직업계고 지원 정책 추진</li> <li>소규모 학교 지원을 위한 지역 단위 직업교육지원센터 설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융합형 특성화 고등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직업계고 유형 마련</li> <li>지역 단위 스쿨버스 운영을 통한 직업계고의 물리적 접근성 제고</li> <li>중등직업교육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보급</li> <li>중등직업교육에서의 온라인 교육 규제 완화</li> </ul> <p>"의견 작성을 요청 드립니다"</p>

**Q5-3-①▶** **“[전문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방향성의 세부 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질문에 따라 해당 칸에 체크(✓) 또는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제목	설명	타당성					수정 보완 의견 (명칭 변경, 설명 수정 등)
			전혀 타당하지 않음 →			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방향성	[전문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직업교육기관의 운영 역량과 전문성을 높여 지역사회 및 산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교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교육성과 제고						
하위 요소	지역 취업 수요 기반의 직업교육 개편을 위한 의사결정 전문성 강화	직업교육의 학과개편이 지역 산업과 취업 수요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실질적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전략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직업교육기관의 내실화를 통한 교육적 전문성 강화	직업교육 선도모델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직업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학교의 교육적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						
	직업교육 전문성을 위한 교원 역량 개발 확대	중등-고등 단계 교사와 교수자의 직업교육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방안						
	직업교육의 전문성 및 혁신성 강화를 위한 탄력적 교육 운영 추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생의 다양한 수요(학급 규모 조정, 맞춤형 교육, 프로젝트형 수업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						

**Q5-3-②▶** **“[전문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방향성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과 추가되어야 할 하위 요소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견 작성을 요청 드립니다\*

**Q5-3-③▶** **“[전문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방향성에 대해 고려 중인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외 추가되어야 할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정책 방안의 타당성은 2차 델파이에서 검토 예정

* [전문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을 위한 정책 방안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교육기관의 시설 및 기자재 현대화를 위한 목적 사업비의 안정적 투입 확대</li> <li>• 장기직무연수,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 교원 역량 개발 추진</li> <li>• 직업교육 재구조화의 기준 명확화 및 의사결정 과정의 전문성 확보(조정기구 신설 등)</li> <li>• 마이스터고 및 협약형 특성화고 등 선도모델의 엄격한 질관리 체계 마련 및 성과 미달 기관의 재구조화 추진</li> <li>• 직업교육기관 내 다양한 유형의 전문가 배치(진로상담 교사, 취약계층 전문상담사, 코디네이터 등)</li> <li>• 탄력적인 학급당 학생 수 운영을 통해 개별화 지도 촉진</li> </ul>	<p>*의견 작성을 요청 드립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CS 기반 교육과정의 자율성 및 유연성을 확대하여 교육기관별 특성화 촉진</li> <li>• 현장실습 유형의 다양화 및 유연한 운영방식 마련(공동실습소, 산업체 견학 등)</li> <li>• 직업계고 교사 대상 전문대학 및 대학 연계 직무연수 프로그램 정례화 및 확대 운영</li> <li>• 전문교과 교사의 부전공 획득 기회 확대 및 규제 완화</li> <li>• 진로전담교사의 취업 연계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운영</li> <li>• 학교 자체 교과서 개발 지원 및 현장 중심 교육과정 개발 운영 지원 강화</li> <li>• 전문교과 교사 대상 진로설계 역량 강화</li> </ul>	

Q5-4-①▶ “[유연성] 학생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적 진로 설계 및 성장경로 다각화” 방향성의 세부 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질문에 따라 해당 칸에 체크(✓) 또는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제목	설명	타당성					수정 보완 의견 (명칭 변경, 설명 수정 등)
			전혀 타당하지 않음	→			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방향성	[유연성] 학생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적 진로 설계 및 성장경로 다각화	직업교육 졸업자들이 사회로 진출 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및 후학습 기회 강화						
하위 요소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 및 성장경로 가시화	학생 개인의 특성과 희망에 맞춰 장기적 성장경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학생들이 미래 직업과 경력을 명확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신취업 후학습 제도의 내실화 및 경로 다양화	신취업 후학습 제도를 강화하고, 재직자 특별전형 등 고등교육 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후학습 경로를 구축하여 평생학습과 경력 개발을 촉진하는 방안						
	고졸자 취업경로 확대 및 안정적 진입과 정착 지원 강화	고졸자의 양질의 취업처를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하며, 사회적 인정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고졸자 취업과 경주의 안정성과 매력도를 높이는 방안						
	다양한 학생 특성에 대응하는 차별화된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학생 특성(진학, 취업, 심리·사회적 취약 등)에 따라 교육과정을 차별화하고 유연하게 운영하여 다양한 학생이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방안						

Q5-4-②▶ “[유연성] 학생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적 진로 설계 및 성장경로 다각화” 방향성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과 추가되어야 할 하위 요소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견 작성을 요청 드립니다\*

Q5-4-③▶ “[유연성] 학생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적 진로 설계 및 성장경로 다각화” 방향성에 대해 고려 중인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외 추가되어야 할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정책 방안의 타당성은 2차 델파이에서 검토 예정

“[유연성] 학생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적 진로 설계 및 성장경로 다각화”을 위한 정책 방안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이수자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 강화</li> <li>· 직업교육을 통한 성장경로 DB축적 및 플랫폼 구축</li> <li>·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li> <li>· 중소기업 재직자의 후학습 참여 지원 강화</li> <li>· 진로선택 학기제 도입</li> <li>· 졸업생 계속지원센터의 전국 단위 확대 운영</li> <li>· 신취업 후학습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후학습 경로 다양성 강화</li> <li>·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졸자에 대한 공공부문 및 우량기업 취업처 발굴 및 취업 연계 지원 확대(MOU 체결 확대)</li> <li>· 고졸 청년 대상 장기적인 사회적 안전망 및 인센티브 제도 강화</li> <li>· 학생 유형 및 진로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 모델 개발 및 적용</li> <li>· 직업계고 학생 대상 직업 인성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li> <li>·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지원 확대</li> <li>· 직업계고 내 심리적 정서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li> </ul> <p>*의견 작성을 요청 드립니다*</p>

340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연구

Q5-5-①▶ **“[연계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 생태계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다층적 연계 및 협력 강화”** 방향성의 세부 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질문에 따라 해당 칸에 체크(✓) 또는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제목	설명	타당성					수정 보완 의견 (명칭 변경, 설명 수정 등)
			전혀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방향성	[연계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 생태계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다층적 연계 및 협력 강화	중고등직업교육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사회·산업·학교 간 협력을 확대하여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직업교육 생태계 활성화						
하위 요소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지자체, 기업)의 역할 강화	지역사회가 학교와 기업 간의 연계를 촉진하고, 기업 참여 및 학생 경주 지원 등을 통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과 책무성을 확대하는 방안						
	직업교육기관의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 및 지역사회 기여 확대	지역의 근간 산업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직업교육기관과 지역 산업 간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직업교육체제 구축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의 연계 강화 및 역할 명확화	중등직업교육(직업계고)과 고등직업교육(전문대학)이 각자의 역할과 전문성을 명확히 하고 협력적 교육과정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						
	직업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직업교육 운영에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직업교육 프로그램(도제학교, 파장평가형 자격 등)의 내실과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						

Q5-5-②▶ **“[연계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 생태계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다층적 연계 및 협력 강화”** 방향성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과 추가되어야 할 하위 요소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견 작성을 요청 드립니다\*

Q5-5-③▶ **“[연계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 생태계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다층적 연계 및 협력 강화”** 방향성에 대해 고려 중인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외 추가되어야 할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정책 방안의 타당성은 2차 델파이에서 검토 예정

[연계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 생태계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다층적 연계 및 협력 강화"을 위한 정책 방안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기업 연계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지자체 주도 취업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li> <li>• 중앙 지역 취업센터 기능 확대 및 활성화</li> <li>• 지역 기반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li> <li>• 고졸 전문대 졸업자의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 복지 지원 확대</li> <li>• 직업계고-전문대학 간 연계 교육과정 확대 (3+1.5, 2+2 모델)</li> <li>• 지역 맞춤형 학과 및 교육과정 개발</li> <li>• 교육부-고용노동부-지자체 간 협력 강화</li> <li>• 고교리점제를 활용한 직업계고-전문대 연계 운영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전략산업 및 뿌리 산업 육성을 위한 직업교육 로드맵 설정 및 지원 체계 구축(인센티브 제공, 산업체 주도형 교육 확대)</li> <li>• 중등과 고등직업교육 간의 명확한 역할 설정 및 협력 모델 구축</li> <li>• 중등-고등 간 시설 교육자원 취업처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li> <li>•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한 고졸 취업 보장형 프로그램 도입</li> <li>• 중등직업교육에서 학습한 성과를 대학에서 인정하는 제도 도입 (학점인정 등)</li> <li>• 심라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및 가족 연계 강화(지역사회 사회복지 인프라 활용)</li> </ul>

부록 2. 1차 델파이 조사지(고등)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델파이 조사(1차) [고등직업교육 영역]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연구를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발주처	연구진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발전총괄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팀(이상훈, 최동선, 김종욱, 류지은, 김남희)
1. 본 연구의 목적은 <b>저출생과 인구구조의 변화를 포함하는 사회적·경제적 교육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의 구축을 위한 혁신 로드맵을 탐색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b>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등직업교육(직업계고등학교)과 고등직업교육(전문대학)을 중심으로 ① <b>주요 현안(이슈)</b> , ② <b>이상적 미래상</b> , ③ <b>개선 방향성</b> 을 탐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④ <b>정책 방안</b> 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직업교육 현장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마련을 위한 현 상황 진단, 주요 이슈 파악, 직업교육체제 방향 및 정책에 관한 <b>심층 면담</b> 을 실시하였습니다.		
2. 본 델파이 조사는 면담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b>델파이 조사는 총 3차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b> 1차 델파이 조사의 주요 내용은 주요 현안(이슈), 이상적 미래상, 개선 방향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마련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개방형 의견 수렴입니다.		
구분	1차 델파이	2차 델파이
주요 현안(이슈)	타당성 검토	수정 사항 검토 / 중요도-시급도 검토
이상적 미래상	타당성 검토	수정 사항 검토
개선 방향성	타당성 검토	수정 사항 검토
정책 방안	개방형 의견 수렴	타당성 검토
실행가능성-효과의 즉각성 검토		
- 귀하의 응답은 본 연구의 귀중한 정보로 활용될 예정이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 연구책임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훈 (000-0000-0000, 000-000-0000, 0000@krivet.re.kr)		
※ 최신 및 문의처: 김영서(000-000-0000, 0000@krivet.re.kr)		
소속	직급	성함

**1 오늘날 직업교육체제의 주요 현안(이슈)**

**Q1** ▶ 오늘날 고등직업교육 운영과 관련한 주요 현안(이슈) 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질문에 따라 해당 칸에 체크(✓) 또는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현안 제목	현안 설명	타당성					수정 보완 의견 (명칭 변경, 설명 수정 등)
			전혀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거시적·구조적 현안	입학자원 감소로 인한 경영난과 교육의 질 하락의 악순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교 재정이 악화되고, 이는 다시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현상						
	전문대학 입학자원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전문대학의 위기 심화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전문대학의 학생 충원이 어렵고,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 전문대학의 경영난과 교육 질 저하가 심화되는 현상						
전문대학 정체성과 고등교육체제 변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 경계 모호화 및 고등교육의 위계화 현상 심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구분이 불명확해지면서, 일반대학에 비해 낮은 사회적 인식과 불균형한 처우가 지속됨에 따라 직업교육의 경쟁력과 전문대학의 고유한 역할이 약화되는 현상						
	비전통적 학습자 및 비학위과정 증가에 따른 전문대학의 정체성 문제	성인학습자와 외국인 유학생 증가로 인해 기존 직업교육의 목적과 방향이 모호해지고, 이로 인해 전문대학 본연의 직업교육 정체성 및 경쟁력이 약화되는 현상						
학교운영·교육과정 현안	전문대학 학과 재구조화의 부정적 영향 및 학과의 경쟁력 약화	일학 자원을 유지하기 위해 단기적 인기 분야로 학과를 개편하면서 전통적인 제조업 등 지역 기반산업의 인력 양성 가능성이 약화되는 문제						
	교육과정의 고도화·전문화 부족과 수준별 학위과정 운영의 난항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과 전문기술석사과정 등 학위의 수준과 연계한 고도화된 직업교육의 성과가 미흡하여, 인력의 질적 성장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						
지역사회 및 학습자 지원 부족	지자체의 전문대학 역할 인식 부족 및 RISE체계 내 전문대학의 소외	RISE체계 내에서 전문대학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초지자체와 전문대학 간 협력 모델이 광역지자체 중심의 RISE 체계 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						

**Q2** ▶ 오늘날 고등직업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위 제시한 7가지 외에 주목해야 하는 현안(이슈)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견 작성을 요청 드립니다”

**II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고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

**Q3▶**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고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 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질문에 따라 해당 칸에 체크(✓) 또는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상		다양한 학습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 기반 맞춤형 고등직업교육				
핵심 키워드	지역 기반 인재육성	평생직업교육 강화	개인 맞춤형 직업교육	고숙련·고수준 인재 양성	직업세계 변화 선제적 대응	사회통합 및 개방성
	지역 산업체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기업 수요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는 것	재직자의 업스킬링(역량 고도화), 리스킬링(재교육)을 포함하여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복지 차원에서 평생학습 제공을 통해 다양한 계층에 직업교육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	다양한 교육 수요자(성인학습자, 외국인학습자 등)의 특성을 고려한 학습자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학습자 요구에 부합하는 직업교육 성과를 창출하는 것	양적 팽창보다 질적 성장을 중시하여, 중소기업 및 국가 전략 산업이 요구하는 고숙련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고급 기술 교육을 강화하여 고등직업교육의 사회적 위상 및 인식을 제고하는 것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기술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교육과정을 신속히 개편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인력을 적시에 양성하여 산업 현장과의 실질적 연계를 강화하는 것	사회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다양한 학습자의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여 건강한 직업인이자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시민 사회의 구축을 지원하는 것

구분	제목	설명	타당성					수정 보완 의견 (명칭 변경, 설명 수정 등)
			전혀 타당하지 않음	→			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미래상	다양한 학습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 기반 맞춤형 고등직업교육							
핵심 키워드	지역 기반 인재육성	지역 산업체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기업 수요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는 것						
	평생직업교육 강화	재직자의 업스킬링(역량 고도화), 리스킬링(재교육)을 포함하여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복지 차원에서 평생학습 제공을 통해 다양한 계층에 직업교육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						
	개인 맞춤형 직업교육	다양한 교육 수요자(성인학습자, 외국인학습자 등)의 특성을 고려한 학습자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학습자 요구에 부합하는 직업교육 성과를 창출하는 것						
	고숙련·고수준 인재 양성	양적 팽창보다 질적 성장을 중시하여, 중소기업 및 국가 전략 산업이 요구하는 고숙련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고급 기술 교육을 강화하여 고등직업교육의 사회적 위상 및 인식을 제고하는 것						
	직업세계 변화 선제적 대응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기술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교육과정을 신속히 개편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인력을 적시에 양성하여 산업 현장과의 실질적 연계를 강화하는 것						
	사회통합 및 개방성	사회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다양한 학습자의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여 건강한 직업인이자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시민 사회의 구축을 지원하는 것						

**Q4▶**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고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과 추가되어야 할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견 작성을 요청 드립니다"

**III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고등직업교육의 개선 방향성**

**Q5▶**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고등직업교육의 개선 방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상		다양한 학습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 기반 맞춤형 고등직업교육				
핵심 키워드	지역 기반 인재육성	평생직업교육 강화	개인 맞춤형 직업교육	고숙련·고수준 인재 양성	직업세계 변화 선제적 대응	사회통합 및 개방성

개선 방향성	[동등성]	[전문성]	[유연성]	[연계성]
	직업교육의 동등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학생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적 진로 설계 및 성장경로 다각화	지속가능한 직업교육 생태계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다층적 연계 및 협력 강화
• 직업교육이 일반교육 및 학력 중심의 교육과 비교하여 사회적, 제도적으로 동등한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과 사회적 인정 체계 마련	• 직업교육기관의 운영 역량과 전문성을 높여 지역사회 및 산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교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교육성과 제고	• 직업교육 졸업자들이 사회로 진출 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및 후학성 기회 강화	• 중·고등직업교육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사회·산업·학교 간 협력을 확대하여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직업교육 생태계 활성화	

Q5-1-①▶ **“[동등성] 직업교육의 동등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향성의 세부 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질문에 따라 해당 칸에 체크(✓) 또는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제목	설명	타당성					수정 보완 의견 (명칭 변경, 설명 수정 등)
			전혀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방향성	[동등성] 직업교육의 동등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직업교육이 일반교육 및 학력 중심의 교육과 비교하여 사회적, 제도적으로 동등한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과 사회적 인정 체계 마련						
하위 요소	직업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직업교육이 정권과 교육감 교체 등 외부적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비전 설정 및 정책 연계성을 강화함						
	학력·경력·자격의 사회적 인정 및 동등성 확보	국가역량체계(KQF)를 활용해 직업교육에서의 학습 결과, 자격, 경력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관리하며, 비학위 전문교육과정 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확대함						
	직업교육 성장경로 확보 및 사회진출 기회의 균등화	직업교육 이수자가 진학·취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일계 진학 확대 및 교육과정 유연화를 추진하여 사회진출의 다양성을 보장함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성과 인정 강화	직업교육의 성과(임금·복지·승진 등)를 사회적으로 인정받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초·중등 단계에서부터 진로교육을 강화하여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장기적으로 개선함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교육 혁신 학과 지원 강화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직업교육체계가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국가전략 산업 및 부러산업 분야의 직업교육 지원 확대	중등과 고등직업교육 및 산업계 간의 연계를 통해 국가 전략 산업 및 부러 산업 분야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 투자와 지원을 강화함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학위구조 및 교육체계 개편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구분과 학위구조를 개선하여 양자 간 학력·학위·자격의 동가성을 확보하고, 고등교육 내에서 직업교육의 위상을 통합적으로 재정립함						
	전문대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재정 지원 확대	전문대학이 직업교육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확대하여 직업교육의 내실화와 지속가능성을 보장함						

Q5-1-②▶ **“[동등성] 직업교육의 동등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향성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과 추가되어야 할 하위 요소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견 작성을 요청 드립니다”

Q5-1-③▶ **“[동등성] 직업교육의 동등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향성에 대해 고려 중인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외 추가되어야 할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정책 방안의 타당성은 2차 델파이에서 검토 예정

“[동등성] 직업교육의 동등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방안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교육법 제정</li> <li>5년 단위 직업교육 발전 기본계획 수립</li> <li>직업교육 성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 확대</li> <li>국가역량체계(KQF)의 지속 개발 및 적용 확대</li> <li>개인 자격·훈련·교육·경력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 및 활용처 확대</li> <li>국가 차원의 직업교육 인식 개선 사업 추진</li> <li>부러 산업(기반 산업) 분야 직업교육 보호 정책 추진</li> </ul>	<p>“의견 작성을 요청 드립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전략 산업분야 인력 양성 청기투자 전략 수립</li> <li>신산업 신기술 분야 선도학과 인프라 구축 지원 강화</li> <li>비학위전문교육과정 인증체계 도입 및 활성화(예: 마이크로 디그리, 마이크로 자격, 학위연계 등)</li> <li>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학력 및 학위 체계 일원화(예: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학사학위)</li> <li>전문대학 학제 제한 개방(전문대학-일반대학 간 학제 일원화)</li> <li>고등교육기관의 직업교육과정의 인증 절차 마련</li> </ul>

344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연구

Q5-2-①▶ “[전문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방향성의 세부 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질문에 따라 해당 칸에 체크(✓) 또는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제목	설명	타당성					수정 보완 의견 (명칭 변경, 설명 수정 등)
			전혀 타당하지 않을 →			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방향성	[전문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직업교육기관의 운영 역량과 전문성을 높여 지역사회 및 산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교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교육성과 개고						
하위 요소	지역-취업 수요 기반의 직업교육 개편을 위한 의사결정 전문성 강화	직업교육의 학과개편이 지역 산업과 취업 수요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실질적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전략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직업교육기관의 내실화를 통한 교육적 전문성 강화	직업교육 선도모델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직업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학교의 교육적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						
	직업교육 전문성을 위한 교원 역량 개발 확대	중등-고등 단계 교사와 교수자의 직업교육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방안						
	직업교육의 전문성 및 혁신성 강화를 위한 탄력적 교육 운영 추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생의 다양한 수요(학급 규모 조정, 맞춤형 교육, 프로젝트형 수업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						

Q5-2-②▶ “[전문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방향성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과 추가되어야 할 하위 요소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견 작성을 요청 드립니다”

Q5-2-③▶ “[전문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방향성에 대해 고려 중인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외 추가되어야 할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정책 방안의 타당성은 2차 델파이에서 검토 예정

“[전문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교육기관의 시설 및 기자재 현대화를 위한 목적 사업비의 안정적 투입 확대</li> <li>장기직무연수,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 교원 역량 개발 추진</li> <li>전문대학 교수진 내 산업체 경력 교수의 비율 확대를 위한 대학-기업 인사교류 제도 도입(사바티컬 및 리버스 사바티컬 활성화)</li> <li>산업체 전문기의 전문대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참여 확대 및 인센티브 지원</li> <li>전문대학 내 외국인 및 성인학습자 대상 주문식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역량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직업교육기관의 학사제도 유연화(예: 3학기제, 집중이수제, 수업연한 식제, 원격교육, 평생학번제 도입 등)</li> <li>대학 내 소단위 전공, 융합학과 및 가상학과 도입을 통한 교육과정 혁신 지원 확대</li> <li>교수학습방법 혁신을 위한 디지털, AI, AR/VR 기반 실습 인프라 구축 및 교수법 전환 지원</li> <li>RPL(학습경험 인정제) 확대로 성인 및 재직자 학습 결과의 공식적 인정체계 구축 강화</li> </ul>

Q5-3-①▶ **“[유연성] 학생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적 진로 설계 및 성장경로 다각화”** 방향성의 세부 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질문에 따라 해당 칸에 체크(✓) 또는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제목	설명	타당성					수정 보완 의견 (명칭 변경, 설명 수정 등)
			전혀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방향성	[유연성] 학생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적 진로 설계 및 성장경로 다각화	직업교육 졸업자들이 사회로 진출 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및 후학습 기회 강화	✓	✓	✓	✓	✓	
하위 요소	다양한 학생 특성에 대응하는 차별화된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학생 특성(진학, 취업, 심리·사회적 취약 등)에 따라 교육과정을 차별화하고 유연하게 운영하여 다양한 학생이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방안	✓	✓	✓	✓	✓	
	성인·외국인 학습자 대상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성인학습자, 외국인학습자 등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학위 및 비학위 과정에 걸쳐 운영하여 직업역량 향상과 지역사회 기여를 지원하는 방안	✓	✓	✓	✓	✓	
	전문대학 체제 다변화 및 학위 체제 고도화	전문대학이 다양한 학습자의 특성과 사회·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과 유형을 확장하고, 학위 체제를 전문학사에서 석·박사 수준까지 확대하여 전문대학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	✓	✓	✓	✓	✓	

Q5-3-②▶ **“[유연성] 학생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적 진로 설계 및 성장경로 다각화”** 방향성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과 추가되어야 할 하위 요소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견 작성을 요청 드립니다”

Q5-3-③▶ **“[유연성] 학생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적 진로 설계 및 성장경로 다각화”** 방향성에 대해 고려 중인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외 추가되어야 할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정책 방안의 타당성은 2차 델파이에서 검토 예정

“[유연성] 학생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적 진로 설계 및 성장경로 다각화”를 위한 정책 방안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이수자의 청주 여건 개선 지원 강화</li> <li>• 직업교육을 통한 성장경로 DB축적 및 플랫폼 구축</li> <li>•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li> <li>• 중소기업 재직자의 후학습 참여 지원 강화</li> <li>• 성인학습자 및 외국인 학습자 대상 개인 맞춤형 직업교육 제공 체계 구축 및 확장(마이스터대학 성인·외국인 전용 과정 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대학 내 비학위 단기 전문직무 과정 확대 및 학위 과정 연계 방안 마련(마이크로 디그리 연계 학위 운영 활성화)</li> <li>• 마이스터대학 운영의 안정적 지원체제 구축</li> <li>• 기술 박사 학위 과정 운영 제도 마련 및 확대(전문대학의 학제 승격 모델 구축)</li> <li>• 기업과 연계한 산업 현장 중심의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 활성화 및 지원체계 마련(산업 석·박사 등)</li> </ul>

“의견 작성을 요청 드립니다”

**Q5-4-①▶** 「연계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 생태계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다층적 연계 및 협력 강화」 방향성의 세부 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질문에 따라 해당 칸에 체크(✓) 또는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제목	설명	타당성					수정 보완 의견 (명칭 변경, 설명 수정 등)
			전혀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방향성	「연계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 생태계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다층적 연계 및 협력 강화	중고등직업교육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사회-산업-학교 간 협력을 확대하여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직업교육 생태계 활성화						
하위 요소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지자체, 기업)의 역할 강화	지역사회가 학교와 기업 간의 연계를 촉진하고, 기업 참여 및 학생 경주 지원 등을 통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과 책무성을 확대하는 방안						
	직업교육기관의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 및 지역사회 기여 확대	지역의 근간 산업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직업교육기관과 지역 산업 간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직업교육체제 구축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의 연계 강화 및 역할 명확화	중등직업교육(직업계고)과 고등직업교육(전문대학)이 각자의 역할과 전문성을 명확히 하고 협력적 교육과정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						
	대학 간(일반대학, 전문대학 등) 수직·수평적 연계를 통한 성장경로 확보	전문대학 간 또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 학점교류, 연합대학체제, 컨소시엄 운영 등 대학 간 수평적·수직적 연계를 활성화하고, 성장경로 연계를 확대하여 학생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Q5-4-②▶** 「연계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 생태계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다층적 연계 및 협력 강화」 방향성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과 추가되어야 할 하위 요소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의견 작성을 요청 드립니다"

**Q5-4-③▶** 「연계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 생태계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다층적 연계 및 협력 강화」 방향성에 대해 고려 중인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외 추가되어야 할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정책 방안의 타당성은 2차 델파이에서 점토 예정

「연계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 생태계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다층적 연계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기업 연계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지자체 주도 취업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li> <li>• 중앙-지역 취업센터 기능 확대 및 활성화</li> <li>• 지역 기반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li> <li>• 고졸 전문대 졸업자의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 복지 지원 확대</li> <li>• 직업계고-전문대학 간 연계 교육과정 확대 (3+1.5, 2+2 모델)</li> <li>• 지역 맞춤형 학과 및 교육과정 개발</li> <li>• 교육부-고용노동부-지자체 간 협력 강화</li> <li>• 고교학점제를 활용한 직업계고-전문대 연계 운영 강화</li> <li>• 지역 전략산업 및 부리 산업 육성을 위한 직업교육 로드맵 설정 및 지원 체계 구축(인센티브 제공, 산업체 주도형 교육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등과 고등직업교육 간의 명확한 역할 설정 및 협력 모델 구축</li> <li>• 중등-고등 간 시설·교육자원 취업처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li> <li>• 일반대학-전문대학 간 학점 교류 및 연계 프로그램 확대</li> <li>• 전문대학과 지역 산업 연계 모델 개발 및 운영 (지자체-전문대-기업 협력)</li> <li>• RISE체계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전문대 교육 지원 확대</li> <li>• 전문대 간 협력 확대 (공동 학위, 학점 교류 등)</li> <li>• 일반대-전문대 연계 모델(커뮤니티칼리지 개념 도입)</li> </ul>

### 부록 3. 2차 델파이 조사지(중등)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델파이 조사(2차) [중등 직업교육 영역]**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연구를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발주처	연구진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발전총괄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팀(이상훈, 최동선, 김종욱, 류지은, 김남희)

1.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생과 인구구조의 변화를 포함하는 사회적·경제적 교육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의 구축을 위한 혁신 로드맵을 탐색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등 직업교육(직업계고등학교)과 고등 직업교육(전문대학)을 중심으로 ①**주요 현안(이슈)**, ②**이상적 미래상**, ③**개선 방향성**을 탐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④**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직업교육 현장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마련을 위한 현 상황 진단, 주요 이슈 파악, 직업교육체제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2. 본 델파이 조사는 면담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델파이 조사는 총 3차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2차 델파이 조사의 주요 내용은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른 수정 사항 검토, 주요 현안(이슈)의 중요도 및 시급도 평정과 함께, 정책방안(안)의 타당성에 의견 수렴입니다.

구분	1차 델파이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주요 현안(이슈)	○ 타당성 검토	수정 사항 검토 / 중요도 및 시급도	실행가능성 및 효과의 측작성 검토
이상적 미래상	○ 타당성 검토	수정 사항 검토	
개선 방향성	○ 타당성 검토	수정 사항 검토	
정책 방안	개발형 의견 수렴	타당성 검토	

- 귀하의 응답은 본 연구의 귀중한 정보로 활용될 예정이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 연구책임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훈 (000-0000-0000, 000-000-0000, 0000@krivet.re.kr)

※ 최신 및 문의처: 김영서(000-000-0000, 0000@krivet.re.kr)

소속	직급	성함

**I 1차 델파이 조사 분석 절차와 기준**

1.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델파이 조사 1차 결과는 다음과 같은 지표를 중심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1) 평균: 응답해주신 타당도에 대한 단순평균
- 2) 표준편차: 응답해주신 타당도의 표준편차
- 3) 긍정률: 선택지 중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에 응답한 비율
- 4) CVR: 전문가 의견의 긍정적 수렴 여부를 파악하는 지표 (기준=.42 이상)
- 5) 합의도: 전문가 의견이 가까이 모여있는 정도(근접성)를 드러내는 지표 (기준=.75 이상)
- 6) 수렴도: 전문가 의견이 일관성 있게 모여있는 정도(일관성)를 드러내는 지표 (기준=.50 이하)

CVR, 합의도, 수렴도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활용하였습니다.

$$CVR = \frac{N_1 - \frac{N}{2}}{\frac{N}{2}}, \text{ 합의도} = 1 - \frac{Q_3 - Q_1}{M_{dn}}, \text{ 수렴도} = \frac{Q_1 - Q_3}{2}$$

여기서,  $N_1$ : 4점 이상 응답한 사람의 수,  $N$ : 전체 응답자 수,  $M_{dn}$ : 중앙값  
 $Q_3$ : 사분위값 중 제3사분위 계수(75%)  
 $Q_1$ : 사분위값 중 제1사분위 계수(25%)

2. 1차 델파이 조사의 결과 중 타당성 지표에 부합하지 않는 요소와 타당성 지표에 부합하더라도 전문가 패널의 의견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이 판단한 요소에 대해 수정하였습니다.
3.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 타당성 지표에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는 요소와 2) 전문가 의견에 따라 수정한 요소 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에 대해서만 검토하게 됩니다.
4.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응답의 편의를 위하여 전체 수정된 안을 제시 후, 검토 필요사항에 관한 문항만 별도로 제시하였습니다.  
 ※본 델파이 조사지에서는 전문가들께서 가장 직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평균'과 '긍정률'만 제시하였습니다.

**오늘날 직업교육체제의 주요 현안(이슈) 수정사항 검토**

▶ 다음은 1차 델파이 조사결과에 따른 중등직업교육 운영 관련 주요 현안(이슈) 수정안입니다.

구분	현안 제목	현안 설명	1차 결과		검토 필요
			평균	공정률	
거시적·구조적 현안	직업교육의 선도도 감소와 지속가능성 위기	기술변화, 저출생 등의 사회적 변화로 직업제고의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직업교육의 규모가 축소되어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현상	3.75	65.0	●
	직업교육의 거점화 전략과 구조적 난제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직업제고를 거점학교 형태로 통합하고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통합 과정에서의 학교 운영, 학과 배치, 물리적 거리, 공·사립 갈등 등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실질적인 운영의 현실성이 낮은 상황	4.35	90.0	×
	직업제고의 인력양성 분야 불균형과 산업수요 미스매칭	학생 모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인기 높은 서비스 및 신산업 분야로 학과 개편이 집중되면서 인력양성 분야 불균형 및 산업수요와의 미스매칭이 심화되는 현상	4.50	90.0	×
학교운영·교육과정 현안	보편적 직무역량 함양 교육과 구체적인 직무기술 함양 교육의 딜레마	직업제고 교육과정을 구체적 직무기술에 기반을 두고 운영하자는 의견과 범용적이고 보편적인 직무역량 함양에 기반을 두고 운영하자는 의견이 대립하면서 교육운영의 목표와 방식에 혼란이 발생하는 현상	4.10	85.0	×
	직업교육과정의 유연성 부족과 산업현장 대응의 한계	직업제고 교육과정이 산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이 부족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또한 현실적 제약을 받는 상황	3.80	70.0	●
	현장실습 운영의 구조적 한계와 교육적 활용 제약	현장실습이 직업교육과정에서 중요한 학습기회로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산학 간 교육과정 정합성 부족, 참여 기업의 인식과 책임 부족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	3.85	60.0	●
학교 내부 구성원 현안	학교-기업 협력의 불균형과 직업교육 왜곡	학교와 기업 간 협력 체계 미흡으로 불균형적 구조가 형성되어 직업교육 본연의 목적이 왜곡되는 현상	4.20	85.0	×
	직업제고 교사의 역할 과부하와 수업 전문성 침식	기업과의 협력, 진로상담, 학생 생활지도 등 다양한 역할이 집중되면서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여 교사의 수업 전문성이 침식되는 문제	4.30	90.0	×
	직업제고 입학행의 누적된 기초학력부진과 학습 결손 심화	직업제고 선도도 감소에 따라 최근 기초학력 부진이 누적된 학생의 진입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직업 교육 성과가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현상	4.55	90.0	×
학생 성장 경로 현안	심리·사회적 취약 학생 증가와 직업교육 기회 약화	심리적·사회적으로 취약한 학생 비율이 증가하면서 직업교육보다는 생활지도 및 기초적 인성교육에 치중하게 되어, 직업교육 기관으로서의 본래 기능과 정체성이 약화되는 문제	4.30	95.0	×
	직업제고의 진화 딜레마: 취업 우선 원칙과 진학 수요 사이의 괴리	직업제고가 '취업 우선 원칙'을 유지하지만, 현실적으로 진학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취업 가능과 진학 지원 사이에서 학교 운영에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는 현상	4.55	95.0	×
	직업제고 학생들의 진로 목표 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후의 전문적 성장 경로와 사회적 인정 기반이 미흡하여 지속가능한 진로 설계가 어려운 문제	직업제고 학생들의 진로 목표 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후의 전문적 성장 경로와 사회적 인정 기반이 미흡하여 지속가능한 진로 설계가 어려운 문제	4.40	90.0	×

Q1 ▶ 중등직업교육 운영과 관련한 주요 현안(이슈)의 수정 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해당 칸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평균	공정률	타당성					
	현안 제목	현안 설명	현안 제목	현안 설명			전혀 타당하지 않음 → 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거시적·구조적 현안	직업교육 축소 압력과 지속가능성 위기	기술변화, 저출생 등의 사회적 변화로 직업교육이 무용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직업교육체제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없애자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직업교육 자체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상	직업교육의 선도도 감소와 지속가능성 위기	기술변화, 저출생 등의 사회적 변화로 직업제고의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직업교육의 규모가 축소되어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현상	3.75	65.0						
학교운영·교육과정 현안	직업교육과정의 제도적 경직성과 혁신 대응의 한계	NCS 기반의 도제학교와 과정평가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해 학교 교육 과정이 과도하게 경직되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신기술·신산업 등 사회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	직업교육과정의 유연성 부족과 산업현장 대응의 한계	직업제고 교육과정이 산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이 부족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또한 현실적 제약을 받는 상황	3.80	70.0						
	현장실습의 필요성과 파행적 운영의 이중성	현장실습이 학생의 현장적응력 향상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서는 취업을 달성 목적에 치우쳐 형식적이고 파행적으로 이루어져 교육과정을 왜곡하는 이중적 문제	현장실습 운영의 구조적 한계와 교육적 활용 제약	현장실습이 직업교육과정에서 중요한 학습기회로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산학 간 교육과정 정합성 부족, 참여 기업의 인식과 책임 부족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	3.85	60.0						

Q2 ▶ 중등직업교육 운영과 관련한 주요 현안(이슈)의 수정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작성을 요청 드립니다"

Q3▶ 이상의 중등직업교육 운영과 관련한 주요 현안(이슈)의 해결이 향후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각각 평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안	상대적 중요도					상대적 시급도								
	현안 해결의 상대적 중요도가 낮음		→			현안 해결의 상대적 중요도가 높음		현안 해결의 상대적 시급도가 낮음			→		현안 해결의 상대적 시급도가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직업교육의 선호도 감소와 지속가능성 위기														
직업교육의 저점화 전략과 구조적 난제														
직업계고의 인력양성 분야 불균형과 산업수요 미스매칭														
보편적 직무역량 함양 교육과 구체적 직무기술 함양 교육의 딜레마														
직업교육과정의 유연성 부족과 산업현장 대응의 한계														
현장실습 운영의 구조적 한계와 교육적 활용 제약														
학교-기업 협력의 불균형과 직업교육 왜곡														
직업계고 교사의 역할 과부하와 수업 전문성 침식														
직업계고 입학생의 누적된 기초학력부진과 학습 결손 심화														
심리·사회적 취약 학생 증가와 직업교육 가능 약화														
직업계고의 진학 딜레마: 취업 우선 원칙과 진학 수요 사이의 괴리														
직업계고 학생의 진로설계 미흡과 성장경로 단절 문제														

### III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중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 수정사항 검토

▶ 다음은 1차 델파이 조사결과에 따른 중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 수정안입니다.

구분	명칭	설명	1차 결과		검토 필요
			평균	공정률	
미래상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 및 직무역량 형성을 중심으로 산업 수요와 연계된 다양한 성장경로를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중등 직업교육	학생이 직무역량 형성과 연계된 진로 설계를 통해 진로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사회진출 경로를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	4.45	90.0	×
핵심 키워드	직무역량 기반 진로 설계 중심	학생이 직무역량 형성과 연계된 진로 설계를 통해 진로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사회진출 경로를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	4.55	90.0	×
	직무 연계형 학생 성장 중심	취업률, 진학률 중심의 외형적 성과에서 벗어나, 학생의 진로 방향과 교육의 종합성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	4.50	90.0	×
	유연한 경로 기반 직업이행 지원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목표에 따라 유연하게 경로를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진출과 성장 경로를 확보하는 것	4.70	95.0	×
	경력 생애설계 및 지속 성장 지원	직업교육을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경력을 쌓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더 나은 일자리와 삶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4.60	95.0	×
	포용적 직업교육 보장체계	교육 체제 내에서 직업교육의 다양성 보장 및 복지 차원에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영역으로 인식하는 것	4.75	100.0	×
	지역사회 협력 기반 공동책임	직업교육의 운영과 성과에 대한 책임을 학교만의 몫으로 제한하지 않고, 산업체·지자체·지역사회가 함께 연계하여 공동으로 책임지는 공동의 시스템 구축을 지향하는 것	4.75	100.0	●

Q1▶ 중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의 수정 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해당 칸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수정안		평균	공정률	타당성					
현안 제목	현안 설명	현안 제목	현안 설명			전혀 타당하지 않음		→			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복합적 성과 평가	직업교육의 성과를 단순한 계량적 지표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의 성장 사례, 자존감 회복, 심리적 안정 등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	<p>직무 연계형 학생 성장 중심과 중복성이 높아 통합하고, 패널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협력 기반 공동책임' 추가</p> <p>지역사회 협력 기반 공동책임</p>	<p>직업교육의 운영과 성과에 대한 책임을 학교만의 몫으로 제한하지 않고, 산업체·지자체·지역사회가 함께 연계하여 공동으로 책임지는 공동의 시스템 구축을 지향하는 것</p>	4.75	100.0						

Q2▶ 중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의 수정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작성을 요청 드립니다"

**IV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중등직업교육의 개선 방향성 수정사항 검토**

▶ 다음은 1차 델파이 조사결과에 따른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중등직업교육의 개선 방향성 수정안입니다.

<b>미래상</b>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 및 직무역량 형성을 중심으로 산업 수요와 연계된 다양한 성장경로를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중등 직업교육					
<b>핵심 키워드</b>	직무역량 기반 진로 설계 중심	직무 연계형 학생 성장 중심	유연한 경로 기반 직업이행 지원	경력 생애설계 및 지속 성장 지원	포용적 직업교육 보장체계	지역사회 협력 기반 공동체구성

개선 방향성	[동등성]	[전문성]	[유연성]	[연계성]
	직업교육의 동등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학생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적 진로 설계 및 학습 경로 다각화	지속가능한 직업교육 생태계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다층적 연계 및 협력 강화
	• 직업교육이 학문 중심의 일반교육과 비교하였을 때 경쟁력 있는 인력을 길러 낼 수 있어 사회제도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체계 마련	• 직업교육기관의 운영 역량과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산업 수요 및 기술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고 학생의 성공적인 진로 성장을 지원	• 직업교육 졸업자들이 사회로 진출 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 경로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및 후속 학습 기회 확대	• 중등-고등 직업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기업-학교 간 협력을 확대하여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 하는 직업교육 생태계 활성화

▶ "[동등성] 직업교육의 동등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향성의 수정안입니다.

구분	명칭	설명	1차 결과 평균	검토 기준	검토 필요
방향성	[동등성] 직업교육의 동등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직업교육이 학문 중심의 일반교육과 비교하였을 때 경쟁력 있는 인력을 길러냄에 있어 사회제도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체계 마련	4.90	100.0	×
하위 요소	직업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직업교육이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비전 수립 및 다양한 주체의 안정적인 참여를 통한 정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함	4.95	100.0	×
	학력-경력-자격의 사회적 인정 및 동등성 확보	국가역량체계(KQF)를 활용해 직업교육에서의 학습 결과, 자격, 경력 등의 인정 및 관리체계를 구축 하고, 비학위 전문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확대함	4.65	100.0	×
	직업교육 성장경로 확보 및 사회진출 기회 확대	직업교육 이수자가 진학취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일계 진학-재직자 진형-지속적인 평생직업교육 참여기회 확대 등을 통해 사회진출의 다양성을 보장함	4.85	100.0	×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성과 인정 강화	직업교육의 성과를 사회적으로 인정(임금-복지-승진 등)방도로 제도를 마련하고, 초-중등 단계에서부터 진로교육을 강화하여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장기적으로 개선함	4.90	100.0	×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교육 혁신 학과 지원 강화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직업교육체제가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4.60	95.0	×
국가전략 산업 및 뿌리산업 분야의 직업교육 지원 확대	국가 전략 산업 및 뿌리 산업 분야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 투자와 지원을 강화함	4.70	100.0	×	

Q1-1▶ "[동등성] 직업교육의 동등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향성 관련 별도 검토 문항은 없습니다.

Q1-2▶ "[동등성] 직업교육의 동등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향성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작성을 요청 드립니다"

▶ "[전문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방향성의 수정안입니다.

구분	명칭	설명	1차 결과		검토 필요
			평균	검정률	
방향성	[전문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직업교육기관의 운영 역량과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산업 수요 및 기술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학생의 성공적인 진로 성장을 지원	4.90	100.0	×
하위 요소	지역-취업 수요 기반의 직업교육 개편 및 운영 전문성 강화	직업교육의 학과개편이 지역 산업과 미래 산업사회 취업 수요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실질적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전략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교육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4.50	95.0	×
	직업교육기관의 내실화를 통한 복합적 교육 지원 기능 강화	직업교육 선도모델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직업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학교의 복합적 교육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4.80	95.0	×
	직업교육 전문성을 위한 교원 역량 개발 기반 마련	교원의 직업교육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방안	4.80	100.0	×
	직업교육의 전문성 및 혁신성 강화를 위한 유연한 교육 운영 추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생 및 산업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	4.75	100.0	×
	소규모 학교의 특성화 및 인력양성 기능 강화	저출생으로 인해 증가하는 직업계고 소규모화에 효과적-효율적 대응하기 위하여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정예화하여 지역 산업과 연계된 전문 인력 양성에 집중하는 방안	4.10	75.0	●

Q2-1▶ “[전문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방향성 수정 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해당 칸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수정안		평균	공정률	타당성				
명칭	설명	명칭	설명			전혀 타당하지 않음 → 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소규모 대학과 체제 구축을 통한 다양한 학습 수요 대응	학습자의 다양한 적성과 융합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소규모 학교 내 다양한 학과 문명을 유지하고,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기존 '다양성' 방향성 삭제로 인한 영역 이동과 더불어, 정예화 접근 필요성에 관한 패널 의견을 반영하여 내용 수정  소규모 학교의 특성화 및 인력양성 기능 강화	자출생으로 인해 증가하는 직업계고 소규모화에 효과적·효율적 대응하기 위하여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정예화하여 지역 산업과 연계된 전문 인력 양성에 집중하는 방안	4.75	75.0					

Q2-2▶ “[전문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방향성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작성을 요청 드립니다”

▶ “[유연성] 학생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적 진로 설계 및 학습 경로 다각화” 방향성의 수정안입니다.

구분	명칭	설명	1차 결과		검토 필요
			평균	공정률	
방향성	[유연성] 학생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적 진로 설계 및 학습 경로 다각화	직업교육 졸업자들이 사회로 진출 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 경로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및 후속 학습 기회 확대	4.85	100.0	×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 및 성장경로 가시화	학생 개인의 특성과 희망에 맞춰 장기적 성장경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학생들이 미래 직업과 경력을 명확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4.90	100.0	×
하위 요소	선취업 후학습 제도의 내실화 및 경로 다양화	선취업 후학습 지원 확대 및 제도를 개선하고, 재직자 특별전형 등 고등교육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후학습 경로를 구축하여 평생학습과 경력개발을 촉진하는 방안	4.75	100.0	×
	고졸자 취업경로 확대 및 안정적 진입과 정착 지원 강화	양질의 고졸 취업처를 공급 및 민간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하며, 사회적 인정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고졸자 취업과 경주의 안정성과 매력도를 높이는 방안	4.90	100.0	×
	학습자 특성과 진로 목표 기반의 유연한 직업교육 체계 구축	학생 개인의 특성과 학습 여건, 진로 목표를 고려하여 유연한 직업교육과정의 맞춤형 이수 경로를 설계하여 자기주도적 성장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4.85	100.0	×
	직업교육 학습자의 다양성 확대와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직업계고가 중등학생뿐 아니라 성인학습자, 고교 미졸업자 등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평생직업교육을 제공하여 직업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	4.40	85.0	●
	직업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접근 여건 개선 강화	통학버스 제공 및 기숙사 확충 등 물리적 인프라 확충과 온라인 교육 활용을 통한 중등 직업교육의 접근성을 향상하는 방안	4.20	75.0	●

Q3-1▶ “[유연성] 학생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적 진로 설계 및 학습 경로 다각화” 방향성 수정 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해당 칸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수정안		평균	공정률	타당성				
명칭	설명	명칭	설명			전혀 타당하지 않음 → 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직업교육 학습자의 다양성 확대와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직업계고가 중등학생뿐 아니라 성인학습자, 고교 미졸업자 등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평생직업교육을 제공하여 직업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	기존 '다양성' 방향성을 삭제하고 '유연성' 영역으로 이동 기존 명칭 및 설명이 타당성 지표에 부합함에 따라 명칭 및 설명은 유지		4.40	85.0					
직업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물리적 경제 극복 전략	통학버스 등 물리적 인프라 확충 및 온라인 교육 확대를 통해 직업계고 접근성을 높이고, 온라인 교육을 적극 활용하여 직업교육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방안	직업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접근 여건 개선 강화	통학버스 제공 및 기숙사 확충 등 물리적 인프라 확충과 온라인 교육 활용을 통한 중등 직업교육의 접근성을 향상하는 방안	4.20	75.0					

Q3-2▶ “[유연성] 학생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적 진로 설계 및 학습 경로 다각화” 방향성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작성을 요청 드립니다”

352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연구

▶ "[연계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 생태계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다층적 연계 및 협력 강화" 방향성의 수정안입니다.

구분	명칭	설명	1차 결과		검토 필요
			평균	균점률	
방향성	[연계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 생태계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다층적 연계 및 협력 강화	중등·고등 직업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기업·학교 간 협력을 확대하여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교육 생태계 활성화	4.90	100.0	x
하위 요소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지자체, 기업)의 역할 강화	학교와 지역 기업 간 연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안정적 취업과 지역 정주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직업교육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	4.85	100.0	x
	직업교육기관의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 및 지역사회 기여 확대	지역 특화 산업, 뿌리 산업 등 인력 수요와 교육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직업교육기관이 민첩하게 대응함으로써 지역 기업, 직업교육기관, 지자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직업교육체제 구축	4.70	100.0	x
	중등 직업교육과 고등 직업교육의 연계 강화 및 역할 명확화	중등 직업교육과 고등 직업교육이 각자의 역할과 전문성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	4.40	90.0	x
	직업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직업교육 운영에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직업교육 프로그램(도제학교, 중기특성학교 및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과점평가형 자격 등)의 내실과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	4.70	100.0	x

Q4-1▶ "[연계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 생태계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다층적 연계 및 협력 강화" 방향성 관련 별도 검토 문항은 없습니다.

Q4-2▶ "[연계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 생태계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다층적 연계 및 협력 강화" 방향성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작성을 요청 드립니다"

**V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정책방안 타당성 평정**

Q1▶ 아래는 중등직업교육의 개선방향인 동등성, 전문성, 유연성, 연계성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정책방안(안)입니다. 각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평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정책방안(안)	타당성				
		전혀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동등성	직업교육법 제정					
	5년 단위 직업교육 발전 기본계획 수립					
	직업교육 성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 확대					
	국가역량체계(KQF)의 지속 개발 및 적용 확대					
	개인 자격·훈련·교육·경력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 및 활용처 확대					
	국가 차원의 직업교육 인식 개선 사업 추진					
	뿌리 산업(기반 산업) 분야 직업교육 보호 정책 추진					
	국가 전략 산업분야 인재 양성 장기투자 전략 수립					
	국가 차원의 직업교육 위원회 설치					
	직업계고 비중 확대 정책 추진					
	직업계고 졸업자의 동일계열 진학 기회 확대(예: 동일계 특별전형 확대: 1.5%→5.0%)					
	초중학교 단계 직업 및 진로 교육 내실화					
전문성	중학교 교사 대상 직업교육 인식 개선 및 연수 제공					
	중등 직업교육의 새로운 영역 탐색 및 확대					
	교원양성 교직과정에 직업교육 교양 과목 신설					
	직업교육기관의 시설 및 기자재 현대화를 위한 목적 사업비의 안정적 투입 확대					
	장기직무연수,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 교원 역량 개발 추진					
	직업교육 재구조화의 기준 명확화 및 의사결정 과정의 전문성 확보(조정기구 신설 등)					
마이스터고 및 협약형 특성학교 등 선도모델의 엄격한 질관리 체계 마련						
직업교육기관 내 다양한 유형의 전문가 배치(진로전담교사, 취약계층 전문상담사, 코디네이터 등)						

구분	정책방안(안)	타당성				
		전혀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유연성	탈력적인 학급당 학생 수 운영을 통해 개별화 지도 촉진					
	NCS 기반 교육과정의 자율성 및 유연성을 확대하여 교육기관별 특성과 촉진					
	현장실습 유형의 다양화 및 유연한 운영방식 마련(공동실습소, 산업체 견학 등)					
	직업계고 교사 대상 전문대학 및 대학 연계 직무연수 프로그램 정례화 및 확대 운영					
	전문교과 교사의 부진공 획득 기회 확대 및 규제 완화					
	산학겸임교사 제도 내실화 및 활성화					
	직업계고 맞춤형 진로진담교사 양성 및 확충					
	진로진담교사의 취업 연계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운영					
	학교 자체 교과서 개발 지원 및 현장 중심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원 강화					
	전문교과 교사 대상 진로설계 역량 강화					
	분야 특화 직업교육을 위한 소규모 학교체제 마련					
	소규모 직업계고 지원 정책 추진					
	소규모 학교 지원을 위한 지역 단위 직업교육지원센터 설립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이수자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 강화					
	직업교육을 통한 성장경로 DB 축적 및 플랫폼 구축					
S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중소기업 재직자의 후학습 참여 지원 강화						
창업교육 강화 및 창업 생태계 기반 마련						
직업계고의 진로선택 학기제(시범)도입						
출연생 계속지원센터의 전국 단위 확대 운영						
선취업 후학습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후학습 경로 다양성 강화						
대입 전형 중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확대						
고졸자에 대한 공공부문 및 우량기업 취업처 발굴 및 취업 연계 지원 확대(MOU 체결 확대)						
고졸 청년 대상 장기적인 사회적 안전망 및 인센티브 제도 강화						

구분	정책방안(안)	타당성				
		전혀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연계성	학생 유형 및 진로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모델 개발 및 적용					
	직업계고 학생 대상 직업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지원 확대					
	직업계고 내 심리·정서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성인학습자 대상의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범 사업 추진					
	일반고 학생 대상 직업교육 위탁교육과정 도입 및 제도화					
	외국인 유학생 대상 직업교육 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 및 내실화					
	융합형 특성과 고등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직업계고 유형 마련					
	지역 단위 스쿨버스 운영을 통한 직업계고의 물리적 접근성 제고					
	중등 직업교육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중등 직업교육에서의 온라인 교육 규제 완화					
	학교-기업 연계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지자체 주도 취업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중앙·지역 취업센터 기능 확대 및 활성화					
	지역 기반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고졸·전문대 졸업자의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확대					
직업계고-전문대학 간 연계 교육과정 확대 (3+1.5, 2+2 모델)						
지역 맞춤형 학과 및 교육과정 개발						
교육부-고용노동부-지자체 간 협력 강화						
교과학점제를 활용한 직업계고-전문대 연계 운영 강화						
지역 전략산업 및 뿌리 산업 육성을 위한 직업교육 로드맵 설정 및 지원 체계 구축(인센티브 제공, 산업체 주도형 교육 확대)						
중등과 고등 직업교육 간의 명확한 역할 설정 및 협력모델 구축						
중등-고등 간 시설·교육자원 취업처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한 고졸 취업 보장형 프로그램 도입						
중등 직업교육에서 학습한 성과를 대학에서 인정하는 제도 도입(학점인정 등)						
심리·사회적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및 가족 연계 강화(지역사회 사회복지 인프라 활용)						

## 부록 4. 2차 델파이 조사지(고등)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델파이 조사(2차) [고등 직업교육 영역]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연구를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발주처	연구진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발전총괄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팀(이상훈, 최동선, 김종욱, 류지은, 김남희)	
<p>1. 본 연구의 목적은 <b>저출생과 인구구조의 변화를 포함하는 사회적·경제적 교육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의 구축을 위한 혁신 로드맵을 탐색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b>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등 직업교육(직업계고등학교)과 고등 직업교육(전문대학)을 중심으로 ①<b>주요 현안(이슈)</b>, ②<b>이상적 미래상</b>, ③<b>개선 방향성</b>을 탐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④<b>정책 방안</b>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직업교육 현장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마련을 위한 현 상황 진단, 주요 이슈 파악, 직업교육체제 방향 및 정책에 관한 <b>심층 면담</b>을 실시하였습니다.</p> <p>2. 본 델파이 조사는 면담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b>델파이 조사는 총 3차례에 걸쳐서 진행</b>됩니다. 2차 델파이 조사의 주요 내용은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른 수정 사항 검토, 주요 현안(이슈)의 중요도 및 시급도 평정과 함께, 정책방안(안)의 타당성에 의견 수렴입니다.</p>			
구분	1차 델파이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주요 현안(이슈)	○ 타당성 검토	수정 사항 검토 / 중요도 및 시급도	○ 타당성 검토
이상적 미래상	○ 타당성 검토	수정 사항 검토	○ 타당성 검토
개선 방향성	○ 타당성 검토	수정 사항 검토	○ 타당성 검토
정책 방안	개발형 의견 수렴	○ 타당성 검토	○ 실행가능성 및 효과의 측작성 검토
- 귀하의 응답은 본 연구의 귀중한 정보로 활용될 예정이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p>※ 연구책임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훈 (000-0000-0000, 000-000-0000, 0000@krivet.re.kr)</p> <p>※ 최신 및 문의처: 김영서(000-000-0000, 0000@krivet.re.kr)</p>			
소속	직급	성함	

### 1차 델파이 조사 분석 절차와 기준

1.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델파이 조사 1차 결과는 다음과 같은 지표들 중심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1) 평균: 응답해주신 타당도에 대한 단순평균
  - 2) 표준편차: 응답해주신 타당도의 표준편차
  - 3) 긍정률: 선택지 중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에 응답한 비율
  - 4) CVR: 전문가 의견의 긍정적 수렴 여부를 파악하는 지표 (기준=.46 이상)
  - 5) 합의도: 전문가 의견이 가까이 모여있는 정도(근접성)를 드러내는 지표 (기준=.75 이상)
  - 6) 수렴도: 전문가 의견이 일관성 있게 모여있는 정도(일관성)를 드러내는 지표 (기준=.50 이하)
- CVR, 합의도, 수렴도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활용하였습니다.

$$CVR = \frac{N_p - \frac{N}{2}}{\frac{N}{2}}, \quad \text{합의도} = 1 - \frac{Q_3 - Q_1}{M_{dn}}, \quad \text{수렴도} = \frac{Q_3 - Q_1}{2}$$

여기서,  $N_p$ : 4점 이상 응답한 사람의 수,  $N$ : 전체 응답자 수,  $M_{dn}$ : 중앙값  
 $Q_3$ : 사분위값 중 제3사분위 계수(75%)  
 $Q_1$ : 사분위값 중 제1사분위 계수(25%)

2. 1차 델파이 조사의 결과 중 타당성 지표에 부합하지 않는 요소와 타당성 지표에 부합하더라도 전문가 패널의 의견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이 판단한 요소에 대해 수정하였습니다.
3.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 타당성 지표에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은 요소와 2) 전문가 의견에 따라 수정한 요소 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에 대해서만 검토하게 됩니다.
4.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응답의 편의를 위하여 전체 수정된 안을 제시 후, 검토 필요사항에 관한 문항만 별도로 제시하였습니다.  
 ※본 델파이 조사지에서는 전문가들께서 가장 직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평균'과 '긍정률'만 제시하였습니다.



356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연구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평균	공정률	타당성				
	현안 제목	현안 설명	현안 제목	현안 설명			전혀 타당하지 않음 → 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지역사회 연계 협력 현안	지자체의 전문대학 역할 인식 부족 및 RISE 체계 내 전문대학의 소외	RISE 체계 내에서 전문대학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초지자체와 전문대학 간 협력 모델이 광역지자체 중심의 RISE 체계 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	RISE 체계의 역할이 제한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현재의 우려의 원인을 전문대학에 대한 인식 부족과 협력체계 미흡임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패럴 의견 반영	RISE 체계가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전문대학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제도적 변경의 미흡으로 인해 지역산업에 기반한 전문대학의 참여와 협력이 제한되는 현상	3.94	58.8					

Q2▶ 고등직업교육 운영과 관련한 주요 현안(이슈)의 수정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작성을 요청 드립니다"

Q3▶ 이상의 고등직업교육 운영과 관련한 주요 현안(이슈)의 해결이 향후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하시는지 평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안	상대적 중요도					상대적 시급도				
	현안 해결의 상대적 중요도가 낮음 → 높음					현안 해결의 상대적 시급도가 낮음 →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입학자원 감소로 인한 경영년과 교육의 질 하락의 막스완										
수직적 진학 선택에 따른 지방 전문대학의 위기 심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 교육영역 중첩 및 고등교육 위계화 현상 심화										
비전통적 학습자 및 비학위과정 증가에 따른 전문대학의 정체성 재정립 요구										
입학 자원 확보 중심의 학과 개편에 따른 지역 산업 인력 양성 가능 약화										
고숙련 직업교육과정의 인식 부족 및 수준별 학위과정 운영의 정착 지연										
RISE 체계 내 전문대학의 역할 인식 부족 및 지역협력 체계의 한계										

III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고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 수정사항 검토

▶ 다음은 1차 델파이 조사결과에 따른 고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 수정안입니다.

구분	명칭	설명	1차 결과		검토 필요
			평균	공정률	
미래상	다양한 학습자(학령인구, 성인학습자, 외국인 등)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산업수요 기반 맞춤형 고등 직업교육		4.44	87.5	×
핵심 키워드	지역 기반 인재 양성	지역 산업체와의 연계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발전과 산업 수요 대응에 기여하는 것	4.71	100.0	×
	평생직업교육 강화	성인학습자의 업스킬링, 리스킬링을 포함하여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배경의 학습자를 위한 평생직업교육을 통해 지역 복지 차원의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	4.65	100.0	×
	학습자 맞춤형 직업교육	다양한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학습자 요구에 부합하는 직업교육 성과를 창출하는 것	4.59	100.0	×
	산업 수요 기반 고숙련 인재 양성	중소기업과 국가 전략 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역량 중심의 고숙련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직업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	4.29	88.2	×
	산업변화 선제 대응	산업과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신산업 분야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적시에 양성하는 것	4.35	88.2	×
	사회통합 및 개방성	사회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다양한 학습자의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여 건강한 직업인이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전한 시민 사회의 구축을 지원하는 것	4.47	100.0	×

Q1▶ 고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의 수정 사항에 대한 별도 검토 문항은 없습니다.

Q2▶ 고등직업교육의 이상적 미래상의 수정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작성을 요청 드립니다"

**IV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고등직업교육의 개선 방향성 수정사항 검토**

▶ 다음은 1차 델파이 조사결과에 따른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고등직업교육의 개선 방향성 수정안입니다.

미래상	다양한 학습자(학령인구, 성인학습자, 외국인 등)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산업수요 기반 맞춤형 고등 직업교육					
핵심 키워드	지역 기반 인재 양성	평생직업교육 강화	학습자 맞춤형 직업교육	산업 수요 기반 고숙련 인재 양성	산업변화 선제 대응	사회통합 및 개방성

개선 방향성	[동등성]	[전문성]	[유연성]	[연계성]
	직업교육의 동등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직업교육이 학문 중심의 일반교육과 비교하였을 때 경쟁력 있는 인력을 길러 낼 수 있도록 사회제도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체계 마련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 직업교육기관의 운영 역량과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산업 수요 및 기술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학생의 성공적인 진로 성장을 지원	학생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적 진로 설계 및 학습 경로 다각화 • 직업교육 졸업자들이 사회로 진출 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 경로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및 후속 학습 기회 확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 생태계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다층적 연계 및 협력 강화 • 중등-고등 직업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기업 학교 간 협력을 확대하여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교육 생태계 활성화

▶ “동등성” 직업교육의 동등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향성의 수정안입니다.

구분	명칭	설명	1차 결과		검토 필요
			평균	공정률	
방향성	[동등성] 직업교육의 동등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직업교육이 학문 중심의 일반교육과 비교하였을 때 경쟁력 있는 인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체계 마련	4.71	94.1	×
	직업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직업교육이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비전 수립 및 다양한 주체의 안정적인 참여를 통한 정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함	4.71	94.1	×
하위 요소	학력·경력·자격의 사회적 인정 및 동등성 확보	국가역량체계(KQF)를 활용해 직업교육에서의 학습 결과, 자격, 경력 등의 인정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비학위 전문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확대함	4.35	88.2	×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성과 인정 강화	직업교육의 성과를 사회적으로 인정(임금복지승진 등)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초·중등 단계에서부터 진로교육을 강화하여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장기적으로 개선함	4.82	100.0	×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교육 혁신 학과 지원 강화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직업교육체제가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4.65	100.0	×
	국가전략 산업 및 뿌리산업 분야의 직업교육 지원 확대	국가 전략 산업 및 뿌리 산업 분야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 투자와 지원을 강화함	4.47	88.2	×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학위구조 및 교육체계 개편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구분과 학위구조를 개선하여 양자 간 학력·학위·자격의 동등성을 확보하고, 고등교육 내에서 직업교육의 위상을 통합적으로 재정립함	4.53	88.2	×
	전문대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재정 지원 확대	전문대학이 직업교육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확대하여 직업교육의 내실화와 지속가능성을 보장함	4.94	100.0	×

Q1-1▶ “동등성” 직업교육의 동등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향성 관련 별도 검토 문항은 없습니다.

Q1-2▶ “동등성” 직업교육의 동등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향성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작성을 요청 드립니다”

▶ “[전문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방향성의 수정안입니다.

구분	명칭	설명	1차 결과		검토 필요
			평균	공정률	
방향성	[전문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직업교육기관의 운영 역량과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산업 수요 및 기술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학생의 성공적인 진로 성장을 지원	4.76	100.0	×
	지역·취업 수요 기반의 직업교육 개편 및 운영 전문성 강화	직업교육의 학과개편이 지역 산업과 미래 산업사회 취업 수요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실질적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전략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교육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4.12	70.6	●
하위 요소	직업교육기관의 내실화를 통한 복합적 교육 지원 기능 강화	직업교육 선도모델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직업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학교의 복합적 교육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4.53	100.0	×
	직업교육 전문성을 위한 교원 역량 개발 기반 마련	교원의 직업교육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방안	4.76	100.0	×
	직업교육의 전문성 및 혁신성 강화를 위한 유연한 교육 운영 추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생 및 산업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	4.59	94.1	×

358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연구

Q2-1▶ “[전문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방향성 수정 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해당 칸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수정안		평균	균형률	타당성				
명칭	설명	명칭	설명			전혀 타당하지 않음 →		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지역 취업 수요 기반의 직업교육 개편을 위한 의사결정 전문성 강화	직업교육의 화과개편이 지역 산업과 취업 수요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실질적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전략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의사결정 전문성의 의미 불분명 및 전문대학의 화과 개편이 지역 산업에만 기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폐널의 의견을 반영하여 명칭 및 설명 수정	지역 취업 수요 기반의 직업교육 개편 및 운영 전문성 강화	4.12	70.6					
		직업교육의 화과개편이 지역 산업과 미래 산업사회 취업 수요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실질적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전략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교육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Q2-2▶ “[전문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방향성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작성을 요청 드립니다”

▶ “[유연성] 학생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적 진로 설계 및 학습 경로 다각화” 방향성의 수정안입니다.

구분	명칭	설명	1차 결과		검토 필요
			평균	균형률	
방향성	[유연성] 학생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적 진로 설계 및 학습 경로 다각화	직업교육 졸업자들이 사회로 진출 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 경로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및 후속 학습 기회 확대	4.50	100.0	×
하위 요소	학습자 특성과 진로 목표 기반의 유연한 직업교육 체계 구축	학생 개인의 특성과 학습 여건, 진로 목표를 고려하여 유연한 직업교육과정의 맞춤형 이수 경로를 설계하여 자기주도적 성장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4.41	94.1	×
	성인-다문화 학습자 대상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성인학습자와 다문화 학습자(외국인, 이주민 등)의 특성에 맞춘 모듈형 직업교육 및 평생학습 기반 과정을 운영하는 방안	4.29	94.1	×
	전문대학 체제 다양화 및 실무중심 학위 체계 고도화	전문대학이 다양한 학습자의 특성과 사회-산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과 유형을 차별화·확장하고, 고숙련 전문인재 양상을 위한 실무중심 학위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	4.24	70.6	●

Q3-1▶ “[유연성] 학생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적 진로 설계 및 학습 경로 다각화” 방향성 수정 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해당 칸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수정안		평균	균형률	타당성				
명칭	설명	명칭	설명			전혀 타당하지 않음 →		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전문대학 체제 다변화 및 학위 체계 고도화	전문대학이 다양한 학습자의 특성과 사회-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과 유형을 확장하고, 학위 체계를 전문학사에서 석·박사 수준까지 확대하여 전문대학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	전문대학의 학위체계 고도화를 위해서는 전문대 교육의 차별성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고, 아직 박사과정을 논의하기 이르다는 폐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전문대학 체제 다양화 및 실무중심 학위 체계 고도화	4.24	70.6					
		전문대학이 다양한 학습자의 특성과 사회-산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과 유형을 차별화·확장하고, 고숙련 전문인재 양상을 위한 실무중심 학위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								

Q3-2▶ “[유연성] 학생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적 진로 설계 및 학습 경로 다각화” 방향성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작성을 요청 드립니다”

▶ “[연계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 생태계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다층적 연계 및 협력 강화” 방향성의 수정안입니다.

구분	명칭	설명	1차 결과		검토 필요
			평균	균형률	
방향성	[연계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 생태계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다층적 연계 및 협력 강화	중등·고등 직업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기업·학교 간 협력을 확대하여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교육 생태계 활성화	4.65	100.0	×
하위 요소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지자체, 기업)의 역할 강화	학교와 지역 기업 간 연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안정적 취업과 지역 정주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직업교육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	4.71	100.0	×
	직업교육기관의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 및 지역사회 기여 확대	지역 특화 산업, 뿌리 산업 등 인력 수요와 교육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직업교육기관이 민첩하게 대응함으로써 지역 기업, 직업교육기관, 지자체가 함께 상상할 수 있는 직업교육체제 구축	4.65	100.0	×
	중등 직업교육과 고등 직업교육의 연계 강화 및 역할 명확화	중등 직업교육과 고등 직업교육이 각자의 역할과 전문성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	4.47	88.2	×
	대학 간(일반대학, 전문대학 등) 수평적·수직적 연계를 통한 성장경로 확보	전문대학 간 또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 학점교류, 연합대학 체제, 컨소시엄 운영 등 대학 간 수평적·수직적 연계를 활성화하고, 성장경로 연계를 확대하여 학생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4.29	82.4	×

Q4-1▶ “[연계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 생태계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다층적 연계 및 협력 강화” 방향성 관련 별도 검토 문항은 없습니다.

Q4-2▶ “[연계성] 지속가능한 직업교육 생태계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다층적 연계 및 협력 강화” 방향성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작성을 요청 드립니다”

**V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정책방안 타당성 평정**

Q1 ▶ 아래는 고등직업교육의 개선방향인 동등성, 전문성, 유연성, 연계성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정책방안(안)입니다. 각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평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정책방안(안)	타당성				
		전혀 타당하지 않음		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동등성	직업교육법 제정					
	5년 단위 직업교육 발전 기본계획 수립					
	직업교육 성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 확대					
	국가역량체계(KQF)의 지속 개발 및 적용 확대					
	개인 자격·훈련·교육·경력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 및 활용처 확대					
	국가 차원의 직업교육 인식 개선 사업 추진					
	부리 산업(기반 산업) 분야 직업교육 보호 정책 추진					
	국가 전략 산업분야 인재 양성 장기투자 전략 수립					
	국가 차원의 직업교육 위원회 설치					
	신산업 신기술 분야 선도학과 인프라 구축 지원 강화					
	비학위전문교육과정 인증체계 도입 및 활성화(예: 마이크로 디그리, 마이크로 자격, 학위연계 등)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학력 및 학위 체계 일원화(예: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학사학위)					
	전문대학 학제 제한 개방(전문대학-일반대학 간 학제 일원화)					
고등교육기관 신규 직업교육과정의 인증 절차 마련						
전문성	직업교육기관의 시설 및 기자재 현대화를 위한 목적 사업비의 안정적 투입 확대					
	장기직무연수,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 교원 역량 개발 추진					
	교원 임금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국고사업 집행 항목 확대 등)					
	전문대학 교수진 내 산업계 경력 교수의 비율 확대를 위한 대학-기업 인사교류 제도 도입(사바티컬 및 리버스 사바티컬 활성화)					
	산업계 전문가의 전문대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참여 확대 및 인센티브 지원					
	전문대학 내 외국인 및 성인학습자 대상 주문식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역량 강화					
	고등직업교육기관의 학사제도 유연화(예: 3학기제, 집중이수제, 수업연한 삭제, 원격교육, 평생학번제 도입 등)					
	대학 내 소단위 전공, 융합학과 및 가상학과 도입을 통한 교육과정 혁신 지원 확대					
	교수학습방법 혁신을 위한 디지털, AI, AR/VR 기반 실습 인프라 구축 및 교수법 전환 지원					
	RPL(학습경험 인정제) 확대로 성인 및 재직자 학습 결과의 공식적 인정체계 구축 강화					
유연성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이수자의 경주 여건 개선 지원 강화					
	직업교육을 통한 성장경로 DB 축적 및 플랫폼 구축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중소기업 재직자의 후학습 참여 지원 강화					
	창업교육 강화 및 창업 생태계 기반 마련					
	성인학습자 및 외국인 학습자 대상 개인 맞춤형 직업교육 제공 체계 구축 및 확장					
	전문대학 내 비학위 단기 전문직무 과정 확대 및 학위과정 연계 방안 마련(마이크로 디그리 연계 학위 운영 활성화)					
	마이스터대학 운영의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					
	전문기술석사과정의 내실화 및 제도적 인정 강화					
	마이스터대학 성인-외국인 전용 과정 개설					
	전문대학 내 진로상담 전문가 및 경력개발상담센터 설치					
	원격 및 블렌디드 학습 과정 활성화					
유연한 모듈형 학습 과정 개발 및 활성화						
연계성	학교-기업 연계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지자체 주도 취업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중앙-지역 취업센터 기능 확대 및 활성화					
	지역 기반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고졸-전문대 졸업자의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확대					
	직업계고-전문대학 간 연계 교육과정 확대 (3+1.5, 2+2 모델)					
	지역 맞춤형 학과 및 교육과정 개발					
	교육부-고용노동부-지자체 간 협력 강화					
	고교학점제를 활용한 직업계고-전문대 연계 운영 강화					
	지역 전략산업 및 부리 산업 육성을 위한 직업교육 로드맵 설정 및 지원 체계 구축(인센티브 제공, 산업체 주도형 교육 확대)					
	중등과 고등 직업교육 간의 명확한 역할 설정 및 협력모델 구축					
	중등-고등 간 시설·교육자원-취업처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일반대학-전문대학 간 학점 교류 및 연계 프로그램 확대					
	전문대학과 지역 산업 연계 모델 개발 및 운영 (지자체-전문대-기업 협력)					
RISE체계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전문대 교육 지원 확대						
전문대 간 협력 확대 (공동 학위, 학점 교류 등)						
일반대-전문대 연계 모델(커뮤니티칼리지 개념 도입)						

## 부록 5. 3차 델파이 조사지(중등)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델파이 조사(3차) [중등 직업교육 영역]**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연구를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발주처	연구진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발전총괄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팀(이상훈, 최동선, 김중욱, 류지은, 김남희)

1.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생과 인구구조의 변화를 포함하는 사회적·경제적 교육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의 구축을 위한 혁신 로드맵을 탐색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등 직업교육(직업계고등학교)과 고등 직업교육(전문대학)을 중심으로 ①**주요 현안(이슈)**, ②**이상적 미래상**, ③**개선 방향성**을 탐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④**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직업교육 현장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마련을 위한 현 상황 진단, 주요 이슈 파악, 직업교육체제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심층 응답**을 실시하였습니다.

2. 본 델파이 조사는 연달아 도출된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델파이 조사는 총 3차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3차 델파이 조사의 주요 내용은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선별된 정책 방안의 효과성 및 실행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 방안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구분	1차 델파이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주요 현안(이슈)	타당성 검토	수정 사항 검토 / 중요도 및 시급도	
이상적 미래상	타당성 검토	수정 사항 검토	
개선 방향성	타당성 검토	수정 사항 검토	
정책 방안	개발형 의견 수렴	타당성 검토	

- 귀하의 응답은 본 연구의 귀중한 정보로 활용될 예정이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 연구책임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훈 (000-0000-0000, 000-000-0000, 0000@krivet.re.kr)

※ 화신 및 문의처: 김영서(000-000-0000, 0000@krivet.re.kr)

소속	직급	성함

### 2차 델파이 조사 분석 절차와 기준

1.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델파이 조사 2차 결과는 다음과 같은 지표를 중심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1) 평균: 응답해주신 타당도에 대한 단순평균
- 2) 표준편차: 응답해주신 타당도의 표준편차
- 3) 긍정률: 선택지 중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에 응답한 비율
- 4) CVR: 전문가 의견의 긍정적 수렴 여부를 파악하는 지표 (기준=.42 이상)
- 5) 합의도: 전문가 의견이 가까이 모여있는 정도(근접성)를 드러내는 지표 (기준=.75 이상)
- 6) 수렴도: 전문가 의견이 일관성 있게 모여있는 정도(일관성)를 드러내는 지표 (기준=.50 이하)

2. 2차 델파이 조사에서 타당성이 낮게 도출된 정책방안(아래) 5개는 탈락하였습니다.

구분	정책방안(안)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균	표준편차	긍정률	CVR (0.42)	합의도 (0.75)	수렴도 (0.50)
동등성	직업계고 비중 확대 정책 추진	3.95	0.86	70.0	0.40	0.50	1.00
전문성	소규모 직업계고 지원 정책 추진	4.15	0.91	75.0	0.50	0.69	0.63
	소규모 학교 지원을 위한 지역 단위 직업교육지원센터 설립	4.15	0.85	70.0	0.40	0.50	1.00
유연성	일반고 학생 대상 직업교육 위탁교육과정 도입 및 제도화	3.90	0.83	70.0	0.40	0.69	0.63
	지역 단위 스쿨버스 운영을 통한 직업계고의 물리적 접근성 제고	4.10	0.83	70.0	0.40	0.50	1.00

2. 3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타당성 기준을 통과한 정책방안의 효과성 및 실행가능성을 검토하여, 정책방안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 효과성: 해당 정책방안이 실행될 때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중등직업교육) 구현에 효과를 발휘하는 정도
- 실행가능성: 해당 정책방안이 오늘날 직업교육체제(중등직업교육)의 현실적 상황에서 실현될 수 있는 정도



Q3 ▶ 아래는 중등직업교육의 개선방향인 **유연성**을 위한 정책방안(안)입니다. 각 방안의 효과성 및 실행가능성에 대해 평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효과성: 해당 정책방안이 실행될 때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중등직업교육) 구현에 효과를 발휘하는 정도
- 실행가능성: 해당 정책방안이 오늘날 직업교육체제(중등직업교육)의 현실적 상황에서 실현될 수 있는 정도

구분	정책방안(안)	2차 타당성 검토 결과		효과성					실행가능성						
		평균	공정률	상대적 효과성 높음	→				상대적 실행가능성 높음	→				상대적 실행가능성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유연성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이수자의 경우 여건 개선 지원 강화	4.70	100.0												
	직업교육을 통한 성장경로 DB 구축 및 플랫폼 구축	4.75	100.0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4.55	100.0												
	중소기업 재직자의 후학습 참여 지원 강화	4.75	100.0												
	창업교육 강화 및 창업 생태계 기반 마련	4.35	90.0												
	직업계고의 진로선택 학기제 (시범)도입	4.00	85.0												
	졸업생 계속지원센터의 전국 단위 확대 운영	4.40	90.0												
	선취업 후학습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후학습 경로 다양성 강화	4.90	100.0												
	대입 전형 중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확대	4.85	100.0												
	고졸자에 대한 공공부문 및 우량기업 취업처 발굴 및 취업 연계 지원 확대(MOU 체결 확대)	4.80	100.0												
	고졸 청년 대상 장기적인 사회적 안전망 및 인센티브 제도 강화	4.85	100.0												
	학생 유형 및 진로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모델 개발 및 적용	4.70	95.0												
	직업계고 학생 대상 직업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4.45	95.0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지원 확대	4.45	90.0												
	직업계고 내 심리-경사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4.75	100.0												
성인학습자 대상의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범 사업 추진	4.10	85.0													
외국인 유학생 대상 직업교육 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 및 내실화	4.20	80.0													
융합형 특성과 고등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직업계고 유형 마련	4.40	85.0													
중등 직업교육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보급	4.15	80.0													
중등 직업교육에서의 온라인 교육 규제 완화	4.15	80.0													

Q4 ▶ 아래는 중등직업교육의 개선방향인 **연계성**을 위한 정책방안(안)입니다. 각 방안의 효과성 및 실행가능성에 대해 평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효과성: 해당 정책방안이 실행될 때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중등직업교육) 구현에 효과를 발휘하는 정도
- 실행가능성: 해당 정책방안이 오늘날 직업교육체제(중등직업교육)의 현실적 상황에서 실현될 수 있는 정도

구분	정책방안(안)	2차 타당성 검토 결과		효과성					실행가능성						
		평균	공정률	상대적 효과성 높음	→				상대적 실행가능성 높음	→				상대적 실행가능성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연계성	학교-기업 연계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지자체 주도 취업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4.85	100.0												
	중앙·지역 취업센터 기능 확대 및 활성화	4.50	95.0												
	지역 기반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4.20	90.0												
	고졸·전문대 졸업자의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확대	4.60	95.0												
	직업계고-전문대학 간 연계 교육과정 확대 (3+1.5, 2+2 모델)	4.45	85.0												
	지역 맞춤형 학과 및 교육과정 개발	4.45	90.0												
	교육부-고용노동부-지자체 간 협력 강화	4.65	100.0												
	고교학점제를 활용한 직업계고-전문대 연계 운영 강화	4.20	80.0												
	지역 전략산업 및 부리 산업 육성을 위한 직업교육 로드맵 설정 및 지원 체계 구축(인센티브 제 공, 산업체 주도형 교육 확대)	4.60	90.0												
	중등과 고등 직업교육 간의 명확한 역할 설정 및 협력모델 구축	4.50	95.0												
	중등-고등 간 시설 교육자원 취업처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4.45	90.0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한 고졸 취업 보장형 프로그램 도입	4.80	100.0												
	중등 직업교육에서 학습한 성과를 대학에서 인정하는 제도 도입 (학점인정 등)	4.55	95.0												
	심리·사회적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및 가족 연계 강화(지역사회 사회복지 인프라 활용)	4.60	95.0												

Q5 ▶ 이상으로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가 종료됩니다.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마련을 위한 추가 의견이 있다면 의견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작성을 요청 드립니다"

부록 6. 3차 델파이 조사지(고등)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델파이 조사(3차) [고등 직업교육 영역]**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연구를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발주처	연구진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발전총괄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팀(이상훈, 최동선, 김종욱, 류지은, 김남희)

1.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생과 인구구조의 변화를 포함하는 사회적·경제적 교육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의 구축을 위한 혁신 로드맵을 탐색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등 직업교육(직업계고등학교)과 고등 직업교육(전문대학)을 중심으로 ①**주요 현안(이슈)**, ②**이상적 미래상**, ③**개선 방향성**을 탐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④**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직업교육 현장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마련을 위한 현 상황 진단, 주요 이슈 파악, 직업교육체제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2. 본 델파이 조사는 면담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델파이 조사는 총 3차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3차 델파이 조사의 주요 내용은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선별된 정책 방안의 효과성 및 실행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 방안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구분	1차 델파이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주요 현안(이슈)	타당성 검토	수정 사항 검토 / 중요도 및 시급도	
이상적 미래상	타당성 검토	수정 사항 검토	
개선 방향성	타당성 검토	수정 사항 검토	
정책 방안	개방형 의견 수렴	타당성 검토	

- 귀하의 응답은 본 연구의 귀중한 정보로 활용될 예정이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 연구책임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훈 (000-0000-0000, 000-000-0000, 0000@krivet.re.kr)

※ 화신 및 문의처: 김영서(000-000-0000, 0000@krivet.re.kr)

소속	직급	성함

**I 2차 델파이 조사 분석 절차와 기준**

1.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델파이 조사 2차 결과는 다음과 같은 지표를 중심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1) 평균: 응답해주신 타당도에 대한 단순평균 / 2) 표준편차: 응답해주신 타당도의 표준편차
- 3) 긍정률: 선택지 중 타당하다, 매우 타당하다에 응답한 비율
- 4) CVR: 전문가 의견의 긍정적 수렴 여부를 파악하는 지표 (기준=.46 이상)
- 5) 합의도: 전문가 의견이 가까이 모여있는 정도(근접성)를 드러내는 지표 (기준=.75 이상)
- 6) 수렴도: 전문가 의견이 일관성 있게 모여있는 정도(일관성)를 드러내는 지표 (기준=.50 이하)

2. 2차 델파이 조사에서 타당성이 낮게 도출된 정책방안(아래) 9개는 탈락하였습니다.

구분	정책방안(안)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평균	표준편차	긍정률	CVR (.46)	합의도 (.75)	수렴도 (.50)
동등성	전문대학 학제 제한 개방(전문대학-일반대학 간 학제 일원화)	3.71	1.02	52.9	0.06	0.50	1.00
	고등교육기관 신규 직업교육과정의 인증 절차 마련	3.59	0.69	58.8	0.18	0.75	0.50
유연성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4.00	0.77	70.6	0.41	0.50	1.00
	창업교육 강화 및 창업 생태계 기반 마련	3.71	0.57	64.7	0.29	0.75	0.50
연계성	마이스터대학 성안·외국인 전용 과정 개설	3.71	0.89	52.9	0.06	0.75	0.50
	지역 기반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3.82	0.78	70.6	0.41	0.75	0.50
	일반대학-전문대학 간 학점 교류 및 연계 프로그램 확대	3.71	0.89	64.7	0.29	0.75	0.50
	전문대 간 협력 확대 (공동 학위, 학점 교류 등)	3.94	0.80	64.7	0.29	0.50	1.00
	일반대-전문대 연계 모델(어류나타릴리지 개념 도입)	3.94	0.80	64.7	0.29	0.50	1.00

2. 3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타당성 기준을 통과한 정책방안의 효과성 및 실행가능성을 검토하여, 정책방안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 효과성: 해당 정책방안이 실행될 때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고등직업교육) 구현에 효과를 발휘하는 정도
- 실행가능성: 해당 정책방안이 오늘날 직업교육체제(고등직업교육)의 현실적 상황에서 실현될 수 있는 정도

**II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를 위한 정책방안 효과성 및 실행가능성 검토**

Q1▶ 아래는 고등직업교육의 개선방향인 **동등성**을 위한 정책방안(안)입니다. 각 방안의 효과성 및 실행가능성에 대해 평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효과성: 해당 정책방안이 실행될 때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고등직업교육) 구현에 효과를 발휘하는 정도
- 실행가능성: 해당 정책방안이 오늘날 직업교육체제(고등직업교육)의 현실적 상황에서 실현될 수 있는 정도

구분	정책방안(안)	2차 타당성 검토 결과		효과성					실행가능성						
		평균	공정률	상대적 효과성	→				상대적 효과성	→				상대적 실행가능성	
				낮음	①	②	③	④	⑤	낮음	①	②	③	④	⑤
동등성	직업교육법 제정	4.41	88.2												
	5년 단위 직업교육 발전 기본계획 수립	4.71	1000												
	직업교육 성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 확대	4.53	1000												
	국가역량체계(KQF)의 지속 개발 및 적용 확대	4.06	76.5												
	개인 자격-훈련-교육-경력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 및 활용처 확대	4.18	94.1												
	국가 차원의 직업교육 인시 개선 사업 추진	4.24	82.4												
	부러 산업(기반 산업) 분야 직업교육 보호 정책 추진	4.12	82.4												
	국가 전략 산업분야 인재 양성 장기투자 전략 수립	4.18	82.4												
	국가 차원의 직업교육 위원회 설치	4.18	76.5												
	신산업 신기술 분야 선도학과 인프라 구축 지원 강화	4.18	82.4												
	비학위전문교육과정 인증체계 도입 및 활성화(예: 마이크로 디그리, 마이크로 자격, 학위연계 등)	4.18	88.2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학력 및 학위 체계 일원화(예: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학사학위)	4.71	94.1												

Q2▶ 아래는 고등직업교육의 개선방향인 **전문성**을 위한 정책방안(안)입니다. 각 방안의 효과성 및 실행가능성에 대해 평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효과성: 해당 정책방안이 실행될 때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고등직업교육) 구현에 효과를 발휘하는 정도
- 실행가능성: 해당 정책방안이 오늘날 직업교육체제(고등직업교육)의 현실적 상황에서 실현될 수 있는 정도

구분	정책방안(안)	2차 타당성 검토 결과		효과성					실행가능성						
		평균	공정률	상대적 효과성	→				상대적 효과성	→				상대적 실행가능성	
				낮음	①	②	③	④	⑤	낮음	①	②	③	④	⑤
전문성	직업교육기관의 시설 및 기자재 현대화를 위한 목적 사업비의 안정적 투입 확대	4.53	94.1												
	장기직무연수,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 교원 역량 개발 추진	4.29	88.2												
	교원 임금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국고사업 집행 항목 확대 등)	4.53	94.1												
	전문대학 교수진 내 산업계 경력 교수의 비율 확대를 위한 대학-기업 인사교류 제도 도입(사바티컬 및 리버스 사바티컬 활성화)	4.18	88.2												
	산업계 전문가의 전문대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참여 확대 및 인센티브 지원	4.24	88.2												
	전문대학 내 외국인 및 성인학습자 대상 주문식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역량 강화	4.06	76.5												
	고등직업교육기관의 학사제도 유연화(예: 3학기제, 집중이수제, 수업연한 삭제, 원격교육, 평생학 변제 도입 등)	4.24	88.2												
	대학 내 소단위 전공, 융합학과 및 가상학과 도입을 통한 교육과정 혁신 지원 확대	4.12	88.2												
	교수학습방법 혁신을 위한 디지털, AI, AR/VR 기반 실습 인프라 구축 및 교수법 전환 지원	4.29	94.1												
	RPL(학습경험 인정제) 확대로 성인 및 재직자 학습 결과의 공식적 인정체계 구축 강화	4.12	88.2												

○

- Q3 ▶ 아래는 고등직업교육의 개선방향인 **유연성**을 위한 정책방안(안)입니다. 각 방안의 효과성 및 실행가능성에 대해 평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효과성: 해당 정책방안이 실행될 때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고등직업교육) 구현에 효과를 발휘하는 정도
  - 실행가능성: 해당 정책방안이 오늘날 직업교육체제(고등직업교육)의 현실적 상황에서 실현될 수 있는 정도

구분	정책방안(안)	2차 타당성 검토 결과		효과성					실행가능성					
		평균	공정률	상대적 효과성 높음	상대적 효과성 → 효과성					상대적 실행가능성 높음	실행가능성 → 실행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유연성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이수자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 강화	4.53	94.1											
	직업교육을 통한 성장경로 DB 축적 및 플랫폼 구축	4.18	88.2											
	중소기업 재직자의 후학습 참여 지원 강화	4.24	82.4											
	성인학습자 및 외국인 학습자 대상 개인 맞춤형 직업교육 제공 체계 구축 및 확장	4.35	94.1											
	전문대학 내 비학위 단기 전문직무 과정 확대 및 학위과정 연계 방안 마련(마이크로 디그리 연계 학위 운영 활성화)	4.29	88.2											
	마이스터대학 운영의 안정적 지원체제 구축	4.35	88.2											
	전문기술석사과정의 내실화 및 제도적 인정 강화	4.24	82.4											
	전문대학 내 진로상담 전문가 및 경력개발상담센터 설치	4.00	76.5											
	원격 및 블렌디드 학습 과정 활성화	4.06	82.4											
	유연한 모듈형 학습 과정 개발 및 활성화	4.18	82.4											

- Q4 ▶ 아래는 고등직업교육의 개선방향인 **연계성**을 위한 정책방안(안)입니다. 각 방안의 효과성 및 실행가능성에 대해 평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효과성: 해당 정책방안이 실행될 때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고등직업교육) 구현에 효과를 발휘하는 정도
  - 실행가능성: 해당 정책방안이 오늘날 직업교육체제(고등직업교육)의 현실적 상황에서 실현될 수 있는 정도

구분	정책방안(안)	2차 타당성 검토 결과		효과성					실행가능성					
		평균	공정률	상대적 효과성 높음	상대적 효과성 → 효과성					상대적 실행가능성 높음	실행가능성 → 실행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연계성	학교-기업 연계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지자체 주도 취업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4.29	88.2											
	중앙-지역 취업센터 기능 확대 및 활성화	4.06	82.4											
	고졸-전문대 졸업자의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확대	4.24	82.4											
	직업계고-전문대학 간 연계 교육과정 확대 (3+1.5, 2+2 모델)	4.41	82.4											
	지역 맞춤형 학과 및 교육과정 개발	4.29	82.4											
	교육부-고용노동부-지자체 간 협력 강화	4.41	88.2											
	고교학점제를 활용한 직업계고-전문대 연계 운영 강화	4.41	94.1											
	지역 전략산업 및 뿌리 산업 육성을 위한 직업교육 로드맵 설정 및 지원 체계 구축(인센티브 제공, 산업체 주도형 교육 확대)	4.29	94.1											
	중등과 고등 직업교육 간의 명확한 역할 설정 및 협력모델 구축	4.18	88.2											
	중등-고등 간 시설-교육자원-취업처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4.06	82.4											
	전문대학과 지역 산업 연계 모델 개발 및 운영 (지자체-전문대-기업 협력)	4.59	100.0											
	RISE체제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전문대 교육 지원 확대	4.71	100.0											

- Q5 ▶ 이상으로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가 종료됩니다.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마련을 위한 추가 의견이 있다면 의견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작성을 요청 드립니다\*



□ 저자약력

- 이상훈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 최동선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종욱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 류지은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 김남희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저출생시대 지속가능한 직업교육체제 연구

- 발 행 연 월 일 2025년 5월 30일 인쇄  
2025년 5월 31일 발행
- 발 행 처 국가교육위원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서울정부청사  
홈페이지: <https://www.ne.go.kr/>  
전 화: (02)2100-3312  
팩 스: (02)2100-3359
- 연 구 기 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 화: (044)415-5000, 5100  
팩 스: (044)415-5200
- 인 쇄 처 (사)한국나눔복지연합회 (02) 2285-5450

---

발행처의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의 무단 복제를 금함.

